

제 4 차 한-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

~한-일 국교정상화 50 주년으로 향하는 미디어의 책임과 역할~

2015 년 3 월

공동 주최: 일본국제문제연구소/한국국제교류재단

후원: 일본외무성/대한민국 외교부

협찬: 주식회사 롯데

서문

본 보고서는 2014년 11월에 실시된 국제회의 「제 4차 한-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으로 향하는 미디어의 책임과 역할」(개최지:서울)의 회의록 및 요지와 각종 자료를 집대성한 것입니다.

5년 동안 개최한다는 계획 아래 본 「한-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가 시작된 2011년부터 약 4년이 경과한 현재, 한일관계는 유감스럽게도 국교정상화 50주년이 가까워옴에 따라 오히려 악화의 일로를 걷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양국의 관계가 이전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보다 수평적인 관계로 이행하고 있는 현재 상황과 의식 사이의 격차가 다양한 대립을 초래하고 있다는, 혹은 한일 양쪽 모두에 보수적인 말과 행동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 상대방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등 다양한 견해가 피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해법에 관해서도 상대국에 대한 양보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된다는 것에서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현상의 해결만 중요하다고 하는 것, 혹은 동북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글로벌한 질서의 변동이라는 국제정세의 파도 속에서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대처해야 되는 과제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내용까지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으며, 외교·학계·사회 차원에서 양국관계의 재구축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양국의 미디어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혹은 어떻게 사태에 관여하고 있는 것일까요. 미디어라는 단어는 흔히 「사회의 빛과 소금」과 같은 의미의 표현과 함께 쓰이며, 「공정」「중립」「불편부당」과 같은 접두어 표현과 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한편 미디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를 둘러싸고 당사자인 미디어 자신이 고뇌하는 구도를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기인식」이 어떠한 것이든지 미디어 자체가 한일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가령 미디어가 객관성이나 균형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들의 생각을 일절 섞지 않고 「날 것의 정보」를 그대로 전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정보의 취사선택·분리·소개라는 과정 그 자체가 미디어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며, 미디어는 사회의 움직임이라는 사이클 속에서 동떨어진 존재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소로서의 미디어가 한일관계의 현재 상황과 향후의 과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사실은 다른 요소들의 행동과 마찬가지로 항상 체크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하여 실시된 제 4차 회의에서는 한일 양국의 주요한 저널리스트와 지식인들이 국교정상화 50주년을 앞둔 현재 상황에 대해 솔직한 의견교환을 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발언자의 이름을 특정하지 않는 「채팅하우스 룰」이 적용되었는데, 그런 회의 모습을 수록한 본 보고서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향후의 한일관계 재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그리고 동시에 「미디어와 한일관계」에 관한 「살아 있는 자료」로 기능해 줄 것을 주최자로서 크게 기원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다망하신 가운데 이번 회의를 위해 모여 주신 참가자 여러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의 원활한 운영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진력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다대한 지원을 해 주신 주식회사 롯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3월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 노가미 요시지

차례

서문.....	i
차례.....	iii
프로그램.....	1
참가자 명단	3
발표 및 토론 요지	7
▶개회사.....	8
▶세션 1:국교정상화 50주년—과거와 미래 조명	8
▶기조연설.....	16
▶세션 2: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한-일 양국의 시각.....	17
▶기조연설.....	24
▶세션 3:양국 언론보도의 현상과 과제.....	25
▶세션 4:총괄토론	33
▶폐회사.....	39
▶세션 5:학생들과의 대화(특별세션).....	39
발표 자료	47
의사록.....	93
▶개회사.....	94
▶세션 1:국교정상화 50주년—과거와 미래 조명	95
▶기조연설.....	117
▶세션 2: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한-일 양국의 시각.....	119
▶기조연설.....	144
▶세션 3:양국 언론보도의 현상과 과제.....	146
▶세션 4:총괄토론	167
▶폐회사.....	181
▶세션 5:학생들과의 대화(특별세션).....	182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발언은 발언자의 개인적 견해에 의거한다. 또한, 본 보고서의 모든 보고자료는 원본/번역판을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회의당일에 배포된 것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단, 보고서의 취지에 따라 발표자명을 삭제했으며 단순한 번역상 오류등에 관해서는 수정을 가하였다.>

제 4 차 한-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

—한-일 국교정상화 50 주년으로 향하는 미디어의 책임과 역할—

2014 년 11 월 25 일(화)-27 일(목)

주최:한국국제교류재단/일본국제문제연구소

프로그램

2014 년 11 월 26 일(수)

09:30 - 09:45 개회식

윤 금진 (한국국제교류재단 교류이사)
NOGAMI Yoshiji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

09:45 - 12:00 세션 1: 국교정상화 50 주년—과거와 미래 조명

한국측 발표 「한-일 국교정상화 50 주년—과거와 미래 조명」

일본측 발표 「일-한 국교정상화 50 주년—과거와 미래 조명」

토론

12:30 - 14:00 오찬회

<기조연설:박 준우(前 대통령 정무수석)>

14: 30 - 17:30 세션 2: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한-일 양국의 시각

일본측 발표 「변화하는 아시아 질서와 한일」

한국측 발표 「동아시아의 정세에 대한 한-일 양국의 시각」

토론

18:00 -20:00 만찬회

<기조연설: BESSHO Koro(주한일본대사)>

2014년 11월 27일(목)

09:30 - 12:30 세션 3: 양국 언론보도의 현상과 과제

한국측 발표 「<산케이신문>의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보도를 둘러싼 한-일의 시각 차이」

일본측 발표 「양국 언론보도의 현상과 과제」

12:30 - 14:00 오찬회

14:30 - 16:00 세션 4: 총괄토론

16:00 - 16:20 폐회사

전 남진
NOGAMI Yoshiji

한국국제교류재단 경영이사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

17:00 - 18:30 세션 5: 학생들과의 대화(특별세션)

한국측 발표 「한일관계와 언론의 자세」

일본측 발표 「미디어는 국경을 넘을 수 있는가?」

19:00 - 20:30 만찬회

※전 세션 비공개(非公開)형식이며, 채텀하우스룰(Chatham House Rule)이 적용되었음.

참가자 명단

※경칭 생략

일본

NOGAMI Yoshiji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
AKITA Hiroyuki	니혼케이자이신문사 논설위원 겸 정치부편집위원
IJIMA Toshiro	일본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IDEISHI Tadashi	NHK 해설주간
OTA Masakatsu	교도통신사 논설위원(논설위원 겸무)
OKONOGI Masao	게이오대학 명예교수
KAZAMA Shin	후지 TV 외신부 편집위원
KANEKO Hidetoshi	마이니치신문 객원논설위원
KIKUCHI Tsutomu	아오야мага쿠인대학 교수/일본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KITAGAWA Manabu	아사히신문사 국제보도부 차장
KUBOTA Ruriko	산케이신문사 편집국 편집위원
KOHARI Susumu	시즈오카현립대학 국제관계학부 교수
SUZUKI Masakatsu	지지프레스 논설위원/전문지 『外交』 편집장
TAKAGI Tetsuo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전무이사 겸 사무국장
MORI Chiharu	요미우리신문 도쿄본사 논설위원
YAKUSHIJI Katsuyuki	도요대학 교수/일본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기조연설자>

BESSHO Koro	주대한민국 일본국특명전권대사
-------------	-----------------

<옵서버>

ONO Keiichi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북동아시아과장
SOMA Hiroyuki	주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 공사/경제부장
IRIE Toyoaki	주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3 등서기관

<담당자>

IIMURA Tomoki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NAKAYAMA Reiko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연구조수
MASUTA Tomoko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연구조수

한국

강 찬호 중앙선데이 정치 에디터(차장)
김 경태 MBC 보도국 국제부장
김 병국 SBS 기획실 심의실 차장
김 혜란 KBS 국제협력부장
김 혜영 KBS 라디오 국제방송팀 PD
김 호섭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김 후란 코리아헤럴드 논설위원
박 승진 MBC 정치부 부장
박 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일본연구소장
신 윤석 뉴스 1 통신 국장
오 영환 중앙일보 논설위원
오 태규 한겨레 논설위원실장
이 미숙 문화일보 국제부장
이 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사
이 원덕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소장
이 하원 TV 조선 부장
이 희욱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 상균 매일경제 기자(前 도쿄 특파원)
조 용래 국민일보 편집인 겸 논설실장
진 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센터 소장
최 현수 국민일보 군사전문기자
하 태원 동아일보 논설위원

황 영식 한국일보 논설실장

<기조연설자>

박 준우 前 대통령 정부수석

<한국국제교류재단 관계자>

윤 금진 한국국제교류재단 교류이사

전 남진 한국국제교류재단 경영이사

송 아영 한국국제교류재단글로벌네트워크팀 대리

발표 및 토론 요지

개회사

윤 금진(한국국제교류재단 교류이사):

제 4 차 한-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는 한-일 국교정상화 50 주년을 앞두고 양국의 상호이해와 협력강화의 필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이 시기에 열린다는 의미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회의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세계 제 3 위의 경제대국이며 한국도 지금은 중견국이 되어 있는 만큼 동북아시아는 물론이고 아시아 및 세계수준에 있어서도 양국에 요구되는 역할의 폭은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장애와 문제에 의해 그러한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아시아지역에서의 원만한 정치적·경제적·문화적인 화합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처럼 양국관계가 점점 정체되고 멀어지고 있는 상황일수록 민간차원의 협력과 교류가 가지는 필요성, 중요성은 점점 늘어 갈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관과 민이 합동으로 「한일 포럼」을 조직하여 이미 22 년이라는 세월을 걸쳐 실천을 계속해 오고 있다. 순수한 민간차원의 협의의 틀인 본 「한-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를 통해 한일관계의 「출구」를 찾는 시도를 계속해 오고 있다. 이틀 간의 회의를 통해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차이를 좁혀서 양국의 우정을 지속하는 데에 있어 격려가 되는 논의가 전개될 수 있도록 참가자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다.

노가미 요시지(일본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

5 년 프로젝트로 진행해 온 「한-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는 내년에 마지막 해를 맞이한다. 때마침 한-일 국교정상화 50 주년, 그리고 제 2 차세계대전 후 70 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에 해당하기도 한다. 그동안 우리들은 일본과 한국 사이의 더욱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솔직한 논의를 계속해 왔다.

한일관계는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매우 중요하고 긴밀한 관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양국의 여론이 차갑게 식어 있다는 점일 것이다. 여론이 식었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정치에도 영향을 줌과 동시에, 그 여론에 큰 영향을 주는 저널리스트 차원에서는 상호이해가 진전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감스럽게도 그것이 좀처럼 여론에 파급되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오늘은 그러한 점을 포함해서 설령 힘든 내용이 되더라도 솔직한 의견교환을 하면서 응어리를 없애고 내년의 한-일 국교정상화 50 주년에는 이 「한-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로서 건설적인 제언을 해 갔으면 한다. 이번 이틀 동안 활발한 논의가 전개될 것을 바라 마지않는다.

세션 1: 「국교정상화 50 주년—과거와 미래 조명」

한국측 발표 「한-일 국교정상화 50 주년—과거와 미래 조명」

한국측 발표자: 여기에서는 다섯 가지 포인트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한일관계의 현 단계를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아시는 바와 같이 2012 년 이후, 한일관계는 최악의 국면에 들어섰다, 혹은 최근 50 년의 양국 역사 중에서 최악의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되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양국 정상들이 서로 만나는 것을 주저하는 상황에 있으며,

국민 차원에서의 호감도도 떨어지고 있다. 또, 일본에서는 「협한」이 일반국민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한편으로 한국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비대칭」 구도도 보인다. 보다 심각한 것은 역시 영토문제·역사마찰의 문제이며, 이것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최대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한일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확산 및 심화하고 있는 역사마찰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것이 최대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지도자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어떻게 전략적으로 문제를 다루느냐에 따라, 또 지식인이나 미디어 관계자가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느냐에 따라 문제의 「빈도」나 「심각도」는 조절할 수 있다. 하물며 역사문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해법」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나 가치를 중시하면서 「미래를 향해」 한일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내년은 「1965년 체제」 50주년, 즉 한일기본조약의 체결로부터 반세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65년 체제의 50년간은 어떻게 통괄될 것인가. 1965년에 이르기까지의 한일 양국의 교섭의 단계를 되돌아보면, 한일회담을 통해 과거사인식 및 역사인식의 깊은 차이, 괴리라는 것이 극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의 문서는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역사문제는 있지만 한국과 일본은 안보이론, 경제이론에 근거하여 기본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른바 우호협력적인 관계를 약속한 것이다.

2010년 이후의 한일관계를 특징짓는 요소로서 지적해야 할 것은 중국의 강대국으로서의 부상일 것이다. 중국이 동아시아의 강력한 세력으로 대두해 옴에 따라 한일관계의 양상은 근본적으로 변했다. 그것은 보다 큰 흐름으로서의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세력의 전이, 파워 트랜지션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또, 이웃나라관계로서의 한일관계 자체도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옮겨가고 있다. 민주주의·시장경제·인권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고, 나아가서는 안전보장이나 경제체제, 시민사회의 영역에 있어서 한일 양국은 「체제수렴」을 하고 있다. 비슷한 기반 위에서 닮은 가치관에 의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이 흐름은 지속되어야 하며, 또 그것이 한일관계의 발전 지속성을 보장하는 공동의 토대가 된다는 시점이 요구된다.

세 번째 포인트로서 한일관계 뿐만 아니라 한일의 역사마찰 그 자체에 대해서도 그 문맥·배경은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냉전의 종언으로 인해 반공연대가 약체화하고, 나아가 2000년대 이후의 파워 트랜지션에 의해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의 기본틀에 변화가 보인다. 그러한 「세력균형의 유동화」 과정에서 한일간 그리고 중일간의 마찰과 갈등은 심각화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국내적인 요인으로 특히 아베 정권이 발족한 이후, 보수 내셔널리즘의 강화가 표면화하여 보수·우경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진보세력은 고령화되고, 우경화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이른바 자적작용의 부분이 약해지고, 나아가 발언력을 잃고 있는 면이 있다. 이러한 구조변화가 한일관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네 번째로는 역사마찰의 원인, 한일관계의 악화에 어떠한 구도가 내포되어 있는가라는 점이다. 특히, 한일관계를 극단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양국 지도층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부재하게 되면서 되돌릴 수 없는 악화가 생기고 있는 것, 또 미디어가 한일관계를 센세이셔널하게 보도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의 일본인식은 「역사수정주의·헌법개정의 움직임·안전보장정책의 변화·영토

정책의 강화」라는 네 개의 이슈를 한 묶음으로 해서 마치 그것들이 하나의 패키지가 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본래라면 이것들은 「나누어서」 인식해야 하는 것이고 대처법도 따로따로 모색해야 한다. 한편, 일본의 한국인식에 대해서는 특히 최근 과거사문제에 대한 「사죄 피로감」이 확대되고 있는 듯하다. 또, 「한국이 중국에 치우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착시」일 뿐이다. 한국의 외교전략을 너무 단순화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며, 객관적인 한국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포인트는 그렇다면 현재의 국면을 어떻게 타개해야 하느냐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먼저 양국의 정상회담을 서둘러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문제로서 정상회담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세 개의 분리」라는 방법이 유효할지도 모른다. 정상회담과 비정상회담의 분리, 역사문제와 경제·안보·문화의 분리, 그리고 「아베=일본」 또는 「아베 정권=일본국민」이라는 도식에서 분리를 뜻한다. 이러한 「분리정책」도 한일관계의 갈등을 완화하고,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견인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본측 발표 「일-한 국교정상화 50주년—과거와 미래 조명」

일본측 발표자: 역사를 거시적으로 보자면, 1965 년의 한-일 국교정상화의 반세기는 「성공담」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안정,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여러 분야의 한일교류가 확대되었다. 이것은 충분히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1 세기에 들어서면서 1965 년에 생긴 한일관계의 토대를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한국측에서 현저하게 보이고 있으며, 그것이 양국관계를 불안정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에 어떠한 한일관계를 목표로 하느냐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분야의 교류를 「정치가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상대국에게 과대한 요구나 과대한 기대를 가져서는 안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위안부문제를 한일관계의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 일본측으로 하자면 위안부였던 분들에 대한 배상문제를 포함해서 1965 년의 한일기본조약 부수협정에서 결착 지었다는 것이 법률적인 입장이지만, 일본측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인도적인 견지에서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들어 수상의 사죄편지를 전하려고 했으며, 보상금도 전달하려고 했다. 그러한 경위는 참작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을 비난하고, 게다가 그것을 이유로 삼아 한일정상회담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한 논리는 일본측에게 있어서는 이해하기가 힘들다.

최근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실망감」이 확산되고 있다. 그 계기가 되는 사건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타케시마 상륙과 그에 잇따른 천황에 대한 발언 등을 꼽을 수 있다. 그 외에도 남수단 PKO 의 한국군부대에서 총탄이 부족하여 일본의 자위대부대에 지원요청이 있었고 일본측은 그것에 응했지만, 한국정부로부터 감사의 뜻의 표명은 없었다. 그리고, 산케이신문의 전 서울지국장이 기소된 건은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공권력행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일본에서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사람들, 한국을 연구하고, 일본인들에게 소개해 온 사람들이 실망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실망감」은 일본의 보수파·진보파를 불문하고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면, 쇼쿠타쿠대학 총장인 와타나베 토시오 교수가 최근 한국에 대해 매우 따끔한 발언을 하셨다. 이것은 10 월 13 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기소된 것을 두고 산케이신문에 기고하신 것으로 「도대체 왜 한국은 이렇게까지 반일적인 것인가. 한마디로

하자면 일본과의 관계에서 한 번 역사청산을 끝내지 않으면 자신의 사지로 똑바로 설 수 없다는 한국민의, 한국의 감각 때문이다. (중략) 역사청산이라는 이를 수 없는 꿈을 계속 쫓고 있는 환상국가에 미래는 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매우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발표자인 나는 이제 막 국회의원이 되었을 당시의 박 근혜 대통령, 한국전쟁 때 장군이었던 백 선엽 씨, 한-일 국교정상화 때의 외무부장관이었던 이 동원 씨 등 많은 한국의 유력인사를 만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듬어 온 궤적에 감동했던 경험이 있다. 한국의 이 50 년의 역사는 일본인을 감동시키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한-일 국교정상화 50 주년이라는 중요한 기념비적인 때를 맞이하여 향후 어떠한 길을 가려고 하는가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양국관계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토론

일본측 참가자: 양국의 관계가 한일 두 나라 사이의 관계와 중국도 포함한 국제관계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진다는 한국측 참가자의 지적은 말씀하신 대로라고 생각한다. 한일관계는 최근 3 년 동안에 현저하게 악화되었다. 그러나, 그 전의 10 년간은 아마 한일 양국의 전후 역사 중 가장 관계가 좋았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월드컵축구를 공동개최하고, 일본에서는 한류붐이 일어났다. 이 낙차는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새삼스럽게 솟는다.

일본과 한국이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루고, 체제가 「공유」된 후에 다시 시련에 직면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양국의 전통적인 문화의 충돌이나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일본의 「우경화한 내셔널리즘」과 한국의 「분단 내셔널리즘」의 충돌이라는 것이 된다. 즉, 대립점으로서의 역사문제와 영토문제가 부상하고 있지만, 보다 큰 문제는 양국이 대등한 입장에 설 수 있게 되었는데도 실은 아직 서로 상당히 큰 사고방식의 차이가 남아 있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닐까. 양국은 이 어려운 시기의 극복을 통해 「상호이해」를 획득해 가야 한다.

또, 경제분야에 있어서 한일 양국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상호의존관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으며, 이제와서 「이혼」 등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긴밀한 관계에 있다. 광역적인 경제통합의 흐름을 생각하더라도 경제적인 협력이 향후의 한일관계를 선도해 가는 존재라고 생각되어진다.

양국에는 새로운 술선행동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냉전시대의 안전보장우선, 경제개발우선이라는 한일 양국의 공동목적은 중요했으며, 오늘날에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또, 그 후의 민주화시대, 혹은 냉전 후 시대의 일본의 과거반성형 술선행동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술선행동과는 다른 제 3 시대의 술선행동이 필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주 일본인들은 한국이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하고 안전보장은 미국에 의존하는 것은 한일 두 나라에 공통되는 구조이다. 양국이 공통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새로운 전략도 보일 것이라고 여겨진다.

한국측 참가자: 한일 양국의 관계가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시기에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과연 그럴까. 1965 년 이후의 한일관계에서 역사인식의 차이로 인해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구도는 계속 존재해 왔으며, 어떤 시기에는 양국 정부가 그것을 관리했고, 또 어떤 시기에는 관리가 약해지는 그러한 정도의 변화가 그때그때마다 있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오늘날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는 종군위안부문제이든 징용공문제이든 한국정부가 역사문제를 앞에 내세워 외교문제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한일관계가 최악의 수준이라고 말들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의 시민사회 차원에서는 반일감정이 높다고는 할 수 없다. 그 부분도 관심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1998 년의 IMF 사태(통화위기) 이후 한국의 롤모델은 특히 경제분야에서는 재패니즈 스탠다드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전환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2000 년대 이후 한국 혹은 일본에게 새로운 옵션으로 등장한 것이 라이징 차이나이다. 중국경제의 중요성이 한국에 큰 영향을 주고, 동시에 중국이라는 사회의 중요성이 한국사회에 인식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을 일본측의 감각으로 보자면 한국이 일본을 버리고 중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실망감」이 나올지도 모르지만, 그것에 「불을 붙인」 요인으로 아베 정권의 역사수정주의가 있으며, 그것이 한국이 중국으로 치우치게 되는 명목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 중국의 순으로 외유를 하고, 일본에는 특사파견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외교기조의 변화에 대해 한국민을 「납득」 시킨 것이 아베 총리의 역사수정주의적인 말과 행동, 예를 들면 「종군위안부의 동원에 강제성은 없었다」와 같은 발언이라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다.

일본측 참가자: 유럽에는 타협을 토대로 한 화해의 노하우가 정착해 온 역사가 있지만, 동아시아에는 아직 그러한 정의의 추구와 화해의 모델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시민사회의 대두, 민주화, 정보화라는 시대의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에서는 타협을 용서하지 않는 「정(情)」이라는 것이 적지 않게 앞에 나오게 되고, 정치가도 시민의 「정」에 영합하고 관용성은 상실되어 간다. 그 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도 크지만, 대외관계에 있어서 정부의 컨트롤 능력은 점점 더 저하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한일 양국에 공통된 문제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시민사회화·민주화·정보화」한 양국이 「합의·화해·타협」을 낳아 가지 않으면 안되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대책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질문으로 「한국이 중국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은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발표내용에 관련해서 한중일의 외무부장관회담 및 정상회의를 박근혜 대통령이 제기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한국의 중국에 대한 접근은 실용적인, 실리주의적인 접근인지, 아니면 그 이외의 어떠한 변화에 의한 것인지 알고 싶다. 즉, 어떠한 전략이 한국에 있는 것인지 한중관계의 전략성에 대한 분석을 조금 더 이야기해 주셨으면 한다.

한국측 참가자:개인적으로는 역시 경제면에서의 중국의 중요성을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미, 한일간의 무역액보다도 한중 쪽이 크기 때문에 중국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한국에는 형성되어 있다. 또, 안전보장면에서의 중국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자면, 한국에 있어 최대의 군사적 위협은 북한이다.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북중관계가 약해지고,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도 줄 것이라고 정책당국자는 생각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것은 한국의 외교전략, 국가전략의 기조 변화가 아니다. 한국이 일본 혹은 미국을 버리고, 중국으로 취우친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일 것이다. 원래 한반도와 중국 사이에는 2000 년의 역사를 토대로 하는 관계가 구축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은 한중일, 한미중의 틀 안에서 외교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취우친다는 것은 조금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측 참가자:진보세력의 고령화 혹은 약체화가 한일관계가 이전의 어느 때보다도 악화하게 된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1965 년 체제를 「계승한」 관료 혹은 정치가, 그리고 저널리스트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가볍게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애매한 형태로 이루어진 결착과 합의를 수정해 가는 노력을 게을리해 온 것은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민주당정권으로 정권교체, 그리고 자민당·아베 정권으로 다시 정권교체가 있었지만, 아베 정권 탄생 후의 일본의 국내정치는 단순히 매과 대 비둘기파라는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의 구도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에 대해서도 같은 상황이다. 즉, 아베 정권에 엿보이는 매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도 많다. 그러한 위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 주셨으면 한다.

1960 년에 작가 노마 히로시, 카메이 카즈이치로 씨 등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에 당시의 진의 부수상 겸 외상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중국인)는 과거의 일은 다 지난 것이라고 하자고 하고, 당신들(일본인)은 일본인으로서 과거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양국 국민은 진정한 우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꾸로 우리들이 일본인을 계속 원망하고, 당신들은 중국인에게 상처를 준 일을 깨끗하게 잊게 된다면, 중일 양국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우호관계를 실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일관계에 있어서도 일본측은 진지함과 겸허함을, 그리고 한국측은 관용의 정신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양국관계를 좋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서로 통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측 참가자:한국에 대한 실망감이 일본국내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은 일본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고 하기 보다는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어도 그다지 그것을 문제시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양국의 지도자층이 한일관계의 개선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느냐 어떠한가라는 것이다. 정치적인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은 현재상황에서는 한일관계는 국제사회를 통해 양국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겉으로 흉내만 내는 정치」와 같은 것이 되게 된다. 국제사회 또는 미국으로부터 지지를 얻어 내기 위해 자기주장을 하고, 상대방을 비판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향후의 한일관계에는 인식의 차이가 더욱 커지게 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정치적인 이익은 더욱 감소하게 된다. 기존의 한일관계의 개념에 근거해 해결책을 생각해도 이와 같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양국관계의 개선을 통해 얻어지는 정치적인 이익이 크지 않고, 따라서 한일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도 강하게 작용하지 않는 현재상황에서 한일정상회담의 개최는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것이다. 오히려 정상회담 없는 한일관계의 정상화, 정상회담을 거치지 않는 관계회복 쪽이 가능성으로서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다. 또, 두 번째로 일본국내에서는 한일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소리가 작다고 느껴지는데, 종래의 한일관계를 복원하자고 하는 의견이 일본에서 앞으로 나올까라는 것이다.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여쭙 보고 싶다.

한국측 발표자:특정한 현안의 해소를 정상회담의 전제로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외교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북한과의 교섭에서 납치문제의 해결 없이 관계개선은 있을 수 없다라는 자세는 일본외교의 손발을 묶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으로

한국외교는 위안부문제 스스로의 손발을 묶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안부문제의 해결은 필요하지만, 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하는 것이지만 위안부문제의 해결 없이는 관계개선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회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측 발표자:일본정부는 일관되게 전제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요구하고 있고, 일본의 신문도 그것을 지지하고 있다. 오히려 걱정인 것은 한국 내의 움직임, 특히 징용공이었던 분들에 관한 재판문제다. 여기에는 일본의 미디어도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1965년 체제의 토대를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불러야 할 중요한 문제로 여기고 있다.

일본측 참가자:2011년, 위안부의 손해배상청구를 한국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중대한 판단을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내렸다. 이 명박 전 대통령이 타케시마에 상륙한 배경에도 이 판결이 있었다고 생각되며,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문제는 위안부문제다」라고 주장하는 배경에도 이 한국정부를 제한하는 헌법위헌판결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2011년을 계기로 한일관계는 질적으로 변화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2013년에는 대법원이 일본기업에 대해 제 2차세계대전시의 징용공의 개인배상청구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것도 역시 사법이 외교에 발을 들여놓은 사례이며, 이 무렵부터 한국에서 한일기본조약이 발효한 1965년 체제의 붕괴론이 들리게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국은 1965년 체제를 어떻게 정리하려고 하고 있는가 의견을 여쭙고 싶다.

일본측 참가자:1965년 체제를 생각해 보면 일본측의 무신경함과 한국측의 응석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아베 정권에서는 무신경한 발언이 튀어나오고, 박근혜 정권으로부터는 응석을 부리는 것 같은 발언이 나온다. 1965년 체제가 성공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역시 어딘가 결함이 있었다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한국측 참가자:예를 들면, 일본은행의 양적완화로 인해 일본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일부 한국기업이 영향을 받더라도 아베노믹스가 실패하면 한국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이 퍼지기 때문에 「성공하지 않으면 우리도 난처하다」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즉, 국가나 민족에 구애받지 않고 이 지역 전체를 어떻게 조화시켜 갈 것인가가 보다 중요한 이슈인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 서는 것이 일본측이 언급한 제 3시대의 솔선행동을 생각하는 데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우리들은 외국보다는 자신의 나라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상대의 나쁜 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자신의 나라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는 쪽이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닐까. 양쪽 참가자로부터 자국의 과제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들어 보고 싶다.

한국측 참가자: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현실주의적인 접근은 실패했으며, 현재 한일 양국의 정책결정자들은 관성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PEC 정상회담 때에 때마침 베이징에 있었기 때문에 「APEC 블루」라고 불렀던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정부가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APEC에 맞추어 폭력적으로 환경을 조정했던 것이고, 지금의 중국이니까 가능했던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도 시민사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가 폭력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좁아지고 있다. 하물며 한국, 일본에 있어서 국가가 상황을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보면 한일 양국 모두 「국가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물들어 있다. 그 부분을 민간의 지적공동체나 공론의 영역에 더 맡겨야 하며, 그렇게 되기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눈높이를 바꾸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한국측 참가자: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실망감」은 한국에 대한 「무신경·무관심」과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일본인이 떠올리는 한국의 이미지가 너무나도 고루하고 지금까지의 한국사회의 움직임이나 동아시아의 변화에 무신경·무관심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랬는데 왜 지금 다를까’라는 실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 부분에서는 일본측에 인식의 공유와 확장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측 참가자:박근혜 정권이 강경한 대일자세를 취하고 있는 이유로 대통령선거를 비롯하여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친일과 박 정희의 딸」이라는 공격을 받는 압박 때문이 아닐까라는 지적이 있었다. 물론 그러한 측면이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박근혜 정권의 대일정책을 반대파에게 보이기 위한 반일 제스처 같은 것으로 경시해 버리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사건처럼 과거에 없었던 사태는 반일파를 배려했다는 식의 요인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이 파고든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측 발표자:먼저 일본측이 지적하신 헌법재판소의 문제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자면, 일본의 한국인식에서 결여된 부분이 바로 이 점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권위주의적인 과거에서 급속히 민주화하였고, 시민사회가 급속히 고양되고 있는 사회이다. 따라서 인권의식이나 민주주의, 법치에 대한 관념이 조금 앞질러 가는 측면이 있다.

최근에는 북한의 인권이 대북정책의 중요한 이슈로 되어 있으며, 한국 행정부의 입장에서 보자면 북한 혹은 일본과의 외교관계에 있어서도, 또 국내통치의 국면에 있어서도, 한국시민사회의 민주화나 인권의식의 고양과 같은 요소를 토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측의 인식이다. 그것이 일본에 있어서 한국이 위안부문제를 과도하게 큰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원인이지 않을까? 즉, 한국사회 및 정치의 민주화의 흐름과 사법이 과거의 권위주의시대와는 다른 방법으로 자기주장을 하게 된 것이 얽혀서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며, 위안부판결은 그 한 가지라고 이해하고 있다. 한국정부나 외교부에 있어 징용공의 문제나 위안부문제에 대한 정책은 유연하면서도 탄력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 있으며, 사법부의 판결이나 대법원의 판결을 흡사 한일관계 파탄의 원인처럼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음으로, 일본에서 최근 표면화하고 있는 보수 내셔널리즘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이다. 아베 정권이 제기하고 있는 원자력정책, 안전보장정책, 역사인식에 관한 입장에 대해 일본국민의 절반은 모두 비판적인 입장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은 높은 지지율로 장기정권을 구축하고 있다. 나는 그 원인의 대부분은 야당의 분열과 지리멸렬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한다. 즉,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을 끌어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아직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정당정치의 현실에 원인이 있다. 그렇게 보면 일본국민 전체가 우경화를 지지하고 있다라든가, 아베 정권의 극단적으로 보이는 노선을 일본국민이 전면적으로 환영하고 있다는 것은 크게 어긋난 일본에 대한 인식일 것이다.

일본측 발표자:일본은 역시 세계의 동향이라는 것을 보고 국가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 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글로벌화 속에서 한국의 정부나 기업 혹은 시민이 과감하게 도전해 성공한 것을 질투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그것을 본받고 일본은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민주화나 산업화에는 깊은 경의를 표하지만, 그 결과 사법이 돌출함에 따라 한일관계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묻고 싶다는 것이 발표자의 입장이며, 그 점에 관한 한국측 발표자의 의견에는 찬성하기 힘들다.

기조연설

박 준우 · 前 대통령 정무수석 :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의 50 년간을 되돌아보면 양국 관계의 절정은 1998 년 10 월의 김대중-오부치 두 정상에 의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발표된 무렵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때까지 금지되어 온 한국에서의 일본문화개방도 실현되었고, 양국 미디어 간에도 편집국장회의, 정치부장회의, 논설위원회 등 각종 대화의 채널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어느 무렵부터인가 양국 미디어 간의 대화의 장은 줄어들었고, 그 탓도 있는지 일부 극단적인 색깔을 띠는 미디어가 선두에 서는 형태로 양국 국민 사이의 전통적인 우의를 손상시키고, 양국관계를 악화시키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한 사실에 마음이 아픈 가운데 이 「한-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 라는 대화의 장은 4 년간이나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한일 양국의 언론인에게 두 가지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한일관계에 관해 보도할 때에는 단순히 양국관계의 차원에 머무르지 말고 동북아시아의 정세, 나아가서는 세계정세의 큰 틀 안에서 이것을 보는 노력을 해 주었으면 하는 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국과 그 국민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이다.

어제 한국의 미디어에 게재된 인터뷰기사에서 교토대학의 오구라 키조 교수는 일본사회의 혐한감정 뿌리에는 한국에 대한 「실망감」, 즉 한국이 중국에 접근하고 중국으로 치우치고 있는 것에 대한 섭섭함과 같은 감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인으로서 일본에서 나온 이와 같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일본에 대해 「인정할 것은 인정」 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 일본인들도 한국에 대한 과도하게 일면적, 일방적인 견해에서 탈피하고, 이 50 여 년 동안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중견국으로서 영향력을 신장시킨 한국의 국력과 한국인의 저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할 시기에 들어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그와 같은 노력을 거듭함에 있어서 미디어의 역할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된다. 단점보다는 장점에 눈을 돌리고, 상대국과 그 국민들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자국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가는 것이 서로 win-win 하는 이익을 손에 넣으면서 국제사회의 존경을 받는 길이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격조 있는 미디어, 나아가서는 격조 있는 나라, 훌륭한 국민의 증거일 것이라고 믿고 있다.

세션 2: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한-일 양국의 시각」

세션 2 사회자:아시아에서는 정치, 경제, 안전보장의 각 분야에서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 정치면에서는 각국의 국내정치가 매우 불안정해진 인상을 받는다. 정권의 기반이 반드시 강하다고는 할 수 없는 가운데 모종의 포퓰리즘, 왜곡된 내셔널리즘이 생기고 있는 곳도 있다.

또, 경제적으로는 아시아에서 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혹은 지역적인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동아시아를 기반으로 하는 큰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움직임이나 TPP 와 같은 더 큰 자유무역협정체결의 움직임도 있다. 그러나, 구미의 경제는 반드시 상태가 좋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아시아의 수출주도 경제성장노선에 어떤 영향을 끼쳐 갈 것인가가 향후의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안전보장은 20 수년 전에 냉전이 끝났을 때 아시아는 앞으로 대립과 경쟁의 시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 즉, 아시아의 장래는 유럽의 과거이며, 냉전에 의해 봉인되어 있던 아시아 고유의 대립이 격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후 20 년 정도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가 이어져 왔지만, 최근에 와서 다양한 대립이 표면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아시아 여러 나라 사이에는 꽤 대규모의 군사력 근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동북아시아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를 포함해서 공통된 움직임이며, 많은 나라에서 해군력, 공군력 등 군사력을 외부로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의 강화가 도모되고 있다. 이것을 가르켜 아시아에 대규모 군비확장경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또, 북한의 핵개발 혹은 미사일개발은 앞으로도 이 지역의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영토 혹은 해양의 권익을 둘러싼 다툼이 격화되어, 동중국해 혹은 남중국해에서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아시아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한편, 그것과는 반대로 냉전 직후에 이야기되었던 “백투더퓨처” 즉, 「아시아의 장래는 유럽의 과거」 라는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수도 있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일본과 한국의 장래에 깊이 관계되는 문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세션을 진행해 가고자 한다.

일본측 발표 「변화하는 아시아 질서와 한일」

일본측 발표자:동아시아 정세를 생각할 때에 한일 두 나라의 관계만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 속에서의 일본과 한국의 진로를 생각한 후에 공통항목 혹은 공통이 아닌 부분을 서로 바라보고,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냐를 생각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대두하였고, 그것으로 인해 당연히 일본이나 중국도 영향을 받게 된다. 미국의 중립적이라고 평가되는 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가 올해 봄에 실시한 조사의 중국과 미국에 대한 각국의 호감도를 보면, 아시아에서는 파키스탄이나 말레이시아가 압도적으로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 그런데, 한국도 인도네시아에 가까운 형태로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져 있다. 참고로 한국은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56%에 대해 미국은 82%로 되어 있고, 일본은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7%에 대해 미국은 66%로 되어 있다. 즉,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미국에 대한 거리감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아시아 각국의 중국에 대한 인상을 비교해 보면 일본과 한국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인식차이는 어떠한 이유에서 생기고 있는 것일까. 요미우리신문과 한국일보가 5 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군사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일본은 중국이 82%, 이어서 북한, 러시아로 되어 있다. 한국은 북한이 1 위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2 위에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본이 랭크되어 있고, 중국이 3 위이다.

이 위협감의 차이는 특별히 일본과 한국의 차이만은 아니다. 중국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아시아의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있는 상황은 아시아 각국에 인식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최대의 위협은 무엇이냐를 물었더니 인도는 파키스탄이라 하고, 태국은 캄보디아라고 하는 등 나라에 따라 크게 달랐다. 따라서, 한일 양국만이 특별한 것이 아니며, 냉전구조가 붕괴되고 중국이 부상하면서 아시아 자체가 다극화하는 흐름 가운데 각국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생기고 있다. 그중에는 극단적으로 인식이 다른 나라도 있으며, 그 하나의 사례가 한일 두 나라라는 것이다.

그러면, 한일 두 나라는 왜 중국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위협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일까. 한미일의 외교당국자와 안전보장 전문가 십수 명에게 질문한 바에 따르면, 꼽은 원인 중에서 가장 많았던 것은 입지조건과 영토문제의 유무였다. 예를 들면 일본은 중국군의 선박이 일본열도를 빠져나가서 오고 가는 입지조건에 있지만, 그런 일이 한국에는 없다.

또, 두 번째로 지적이 많았던 것은 국가의 통일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이다. 한국에게 북한과의 분단상태를 해결하는 것은 최대의 과제 중 하나이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협력을 얻으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야 되는데, 동시에 최종적으로 통일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불가결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사문제이다.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일본과 중국 혹은 한국 사이에 역사문제가 존재하며, 한국도 중국과의 사이에 역사문제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일본이나 중국-일본 사이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다음 네 번째는 중국의존도의 차이, 다섯 번째에는 한일 양국의 경제력 격차 축소와 내셔널리즘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면, 일본과 한국은 어떻게 하면 협력관계를 쌓을 수 있는가. 먼저 일본의 외교안전보장에 있어서의 우선도를 생각하면, 첫 번째가 센카쿠 열도를 비롯한 영토, 두 번째는 중국군의 증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네 번째가 해양의 안전보장, 다섯 번째가 사이버와 우주공간의 위협 순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 발표자가 보는 바로는 한국에 있어서의 우선도는 첫 번째가 북한에 대한 위협의 대응 및 남북통일이고, 두 번째가 영토문제, 그리고 세 번째 이후에 순서를 정하는 것이 어려운데 중국군의 증강이나 사이버, 해양의 안전보장 등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특징을 토대로 하여 협력하기 쉬운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를 정리해 보면, 중국이 경제적·군사적으로 급속히 커지면 커질수록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여지는 줄게 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중에서 가능성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는 해양의 안전보장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역시 경제, 문화교류와 같은 것을 꾸준히 쌓아올려서 관계를 유지해 가야 할 것이다. 결국은 그것이 가장 필요하며 지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측 발표 「동아시아의 정세에 대한 한-일 양국의 시각」

한국측 발표자:한일관계에 관한 논의는 바하의 변주곡처럼 비슷한 이야기가 되풀이되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문제의 해결은 조금도 진전되고 있지 않다. 즉, 동심원을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감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써 사실을 분석하여 문제의 공유로 이어 갔으면 한다.

올해 1 월에 다보스포럼의 기자간담회에서 중일관계를 제 1 차세계대전 전야의 영국과 독일의 관계에 비유하면서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아베총리에게서 튀어나왔다고 영국 Financial Times 의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이것에 유라시아그룹의 이안 브레머 회장이 반응하여 New York Times 에 기사를 썼다. 다보스포럼에서 한 아베 총리의 발언을 바탕으로 해서 「2014 년은 중일관계의 갈등이 글로벌사회에서 가장 우려해야 할 정치경제적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이안 브레머 회장이 3 월에 방한했을 때에 왜 중일관계를 올해 최대의 위험요소로 생각하고 있는냐고 질문해 보았다. 이안 브레머 씨는 일본을 장기불황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것은 아베 총리 외에 아무도 없다고,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훨씬 아베 총리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지만, 다보스포럼에서의 발언에 대해서는 아베 총리는 그런 말은 해서는 안됐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리고 브레머 씨는 미국인은 「역사는 역사, 과거는 과거」 라고 생각한다, 아시아에서도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혹은 역사문제나 종교문제는 당시자들이 마주치는 곳에서 꺼낼 화제는 아니며, 어차피 결론은 나지 않는 것이니까 긴 안목에서 풀어 가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인터뷰어로서 공감했으며, 제 3 자의 눈을 통해 인식의 차이를 깨닫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감했다.

또, 3 월에는 헤이그에서 한미일정상회담이 오바마 대통령의 주도로 실현되었다. 그러나, 결국 대일 이미지는 호전되지 않았고, 한일관계에 진전은 나타나지 않았다. 미국도 자국의 입장이나 의도가 있으니까 완전히 중립적인 중재자는 되지 못했고, 한일 두 나라의 입장이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 안전보장과 같은 가치의 공통항목을 강조해서 중재하는 방법도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한계를 초래한 것은 아베 총리의 지나치게 강한 역사수정주의에 있다고 생각된다.

바로 며칠 전에 열린 중일정상회담에 관해 한국미디어에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거는 아베 총리에 대해 눈을 감고 듣는 시진핑 주석」 과 같은 식으로 보도되었다. 중국과의 관계개선이 없는 이상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수는 없다. 아베 총리가 역사수정주의를 시정하지 않는 이상 일본이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데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한일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역시 위안부문제이다. 일본에서는 아사히신문이 보도한 요시다증언이 왜곡된 것이라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며칠 전 파킨슨 병으로 돌아가신 레인 에번스 전 미하원의원이 제의한 위안부문제 결의안은 2007 년에 미하원에서 채택되었으며, 에번스 의원 뒤를 잇는 형태로 마이크 혼다 미하원의원이 위안부문제의 공론화에 힘쓰고 있다. 즉, 위안부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평가가 정착하고 있다. 미국의 일본통 대표주자격인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 부장관도 이 문제는 UN 도 인정한 여성의 인권문제이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미일동맹에도 상처가 생길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10 월에는 미국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래리 닉쉬 씨가 마이니치신문의 인터뷰에 응하면서 일본은 요시다증언이 왜곡된 것인 이상 위안부의 강제성은 입증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까지 비약시키고 있는데, 자신이 2007 년에 하원에서 결의안을 작성했을 때에는 요시다증언은 참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의안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발언을 했다. 이처럼 미일동맹의 하나의 축인 미국의 지식인의 이야기에 공통되는 것은 위안부에 대한 진실을 부정하면 한일관계는 물론이며 미일관계에도 균열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내년의 한-일 국교정상화 50 주년, 그리고 한국독립 70 주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자면, 위안부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일보의 김 영희 대기가 8 월 1 일자 지면에 기고한 칼럼에 공감한다. 그 글에는 이 명박 정권 말기에 당시의 사사에 켄이치로 외무사무차관으로부터 문제해결을 위한 세 가지 항목의 제안이 있었다는 일화가 다시 소개되어 있다. 일본의 총리가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인도주의의 관점에서 배상을 실시하며, 주한일본대사가 위안부들을 만나 사죄함과 동시에 그것을 전달한다는 방식을 통해 양국이 위안부문제라는 전쟁시에 있었던 여성의 인권문제를 해결한다. 그것이 일본에게 있어서도 큰 이익을 초래하는 합리적인 길이 아닐까라는 주장이다. 이 점에 완전히 동감한다.

또, 야스쿠니 신사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존 케리 국무장관과 얼마 전에 사임한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2+2 회의를 위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야스쿠니 신사를 명확하게 피하고 대안시설인 치도리가후치 전몰자 묘원을 방문했다. 이것은 일본측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일 것이다. 야스쿠니 신사측의 설명은 한 번 합사된 것은 분사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대체시설을 만들어서 다른 외국·문명국의 지도자가 방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독도 및 북방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은 독도나 북방영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해서 하나에 집중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토문제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도 공개되어 있고, 학계에서도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본측의 전략적인 판단이 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토론

일본측 참가자: 옛날에 관공서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때 선배로부터 들은 이야기 중에 좋은 약정문서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문서가 아니라 거의 완벽하면서도 한두 군데는 어느 쪽도 아닌 중간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 최고의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합의라는 것은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해관계의 조정을 하고, 서로가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점을 찾아야만이 절충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며칠 전에 열렸던 중일정상회담의 전제가 된 네 항목의 합의문서에도 실은 어느 쪽도 아닌 중간적인 부분이 남아 있으며, 각각의 외교당국이 높은 차원에서 조정한 사실이 엿보였다. 그리고, 한일기본조약도 역시 1965 년 당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조약이라는 것은 영원이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맺었을 때에는 예상치 못했던 사정의 변경도 필요해진다. 그러므로, 한일관계의 기본으로서 새로운 국제적인 약속이 있어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다만 그때에 어느 쪽이 옳다, 옳지 않다라는 논의를 시작할 순간에 교섭이 결렬될 것이라는 것도 확신하고 있다.

일본측 참가자: 한국측이 보고자료 내용 안에서 한일관계를 냉전기, 탈냉전기, 미중 2 강체제(G2)로 넘어가는 이행기라는 세 개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흥미 깊었다. 「G2」란 중국이 「신형대국관계」라고 부르는 것을 말하는데, 이 단어는 국제적으로

정착되어 있지는 않다. 「G2 시대」를 「신냉전」이나 「냉전과 같은」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중국이 이야기하는 「뉴노멀」에 해당한다. 중국이 대국으로서 행동할 때 주목해야할 것은 G2 에서 전개되는 이론이 19 세기형의 「강한 자가 차지한다」라는 이론이며, 「모두가 같이 사용한다」라는 이론은 아닌 듯하다는 점이다.

시진핑 정권은 방공식별권의 설정을 비롯하여 국토의 선긋기에 집착하고 있다. 그 결과 일어나는 것은 분쟁이다. 아시아지역에는 대국만이 아닌 많은 작은 나라들도 있으며, G2 체제가 될수록 지역분쟁은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게다가 중국은 한국의 중군위안부문제외교를 지원하는 형태로 「중국의 중군위안부문제」를 내세우고 있다. 거기에는 역시 중국의 국제전략이 있으며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퇴시키는 것이 큰 전략목표로 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측 참가자:한국측의 발표에 미국이 보는 한일관계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데, 미국인과 논의할 때 자주 느끼는 것은 역사문제에 관해서는 한국에 동정적이면서 일본에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미국의 견해이다. 하지만 역사수정주의에 비판적인 견해도 있지만, 그것을 금방 안보문제에 결부시키는 것에는 반대라는 견해가 그 이상으로 많은 것처럼도 느껴진다. 미국의 시각을 보다 균형 있게 파악하기 위해 참고로 발언했다.

일본측의 발표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2 항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갈등적인 것으로 볼지 혹은 협조적인 것으로 볼지, 이 점에서 한국과 일본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냉전시대의 미-소관계처럼 전개해 간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중국은 미국의 국채를 8,000 억 달러나 보유하고 있듯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중 두 나라는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제적인 상호의존도가 높은 미중 두 나라를 갈등적인 관계로 볼 수 있을까. 또, 시진핑이 미국에 며칠간 머물면서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한 지도자층과 깊이 토의하는 모습을 보면 미중관계는 일본이 보는 것만큼 대립적이지는 않다. 이 점에 관해 일본측의 의견을 들어 보고 싶다.

일본측 참가자:한일 양쪽의 발언을 듣고 각각의 인식에 큰 차가 있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대의 인상을 받았다. 예를 들면 1965 년 체제가 타협의 산물이라는 인식은 양국공통이었다. 또, 중국이 초대국으로서 대두하고 있다는 인식도 같았다. 즉, 컵 속에 물이 절반이나 들어 있다고 생각하느냐, 절반이 비어 있다고 생각하느냐의 차이이며, 표현은 달라도 컵에 절반 들어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남은 절반을 어떻게 채워 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이전 발언에 한국측 참가자가 「국가의 속박에서 벗어나 보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완전히 동감하는 바이다. 「나는 일본의 저널리스트이니까 이렇게 인식한다」라고 해 버리면 어떤 일도 그 이상 깊이를 더해 갈 수 없다. 지도를 뒤집고, 국적에서도 일단 벗어나 남은 절반을 어떻게 채울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측 참가자:현재 중국은 남중국해의 존슨 산호초에 활주로를 건설하고 있다. 여기에 레이더가 배치되면 남중국해의 통제권은 완전히 중국이 가지게 된다. 그리고, 중국의 ADIZ(방공식별권)의 인식으로는 거기를 통과하는 모든 선박이나 비행기는 중국측에 통보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남중국해의 항공의 자유, 항해의 자유는 어디까지 지켜질

것인가. 매우 위험한 이야기이다. 한국은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다. 또, 시진핑 주석이 최근 끄집어낸 「바다의 실크로드」 구상에 대해 한국의 해상수송로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한국측 참가자: 지적인 대로 해당지역은 한국에 있어서 해상수송로 즉, 원유나 무역의 통로이므로, 스프래틀리 군도에 인공섬을 만드는 움직임에 관해서는 한국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 또, 중국의 적극적인 해양진출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는 한국의 관심대상이며, 해양진출만이 아니라 접근저지·지역억지(A2/AD)와 같은 해군의 전략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다.

올해 미국의 CSIS 와 중앙일보사가 공동으로 아시아태평양의 11 개 나라의 전략엘리트인 지식인 150 명 및 한국의 전략적 지도자 150 명을 대상으로 지역의 현재상황에 관한 앙케이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미국이 10 년 후에도 계속 강대한 나라일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도 많았으며, 게다가 10 년 후에 중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3% 뿐이었다. 즉, 한국의 전략적인 지식층은 중국의 미래에 대해 거리를 두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965 년 체제는 한국에서도 강고하며 그것이 재고되는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현재상황을 그대로 방치해 뒤도 좋은 것이 아니라 한일관계에서 상호전략적인 가치를 새로이 창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환경분야, 특히 재생가능한 클린에너지 등을 축으로 하는, 말하자면 한일 양국의 Green alliance 등도 협력분야로 유망하다. 또, 일본의 저출산고령화를 위한 대처도 한국으로서는 배울 바가 많을 것이다.

내년 6 월의 국교정상화 50 주년을 앞두고, 한일 양국이 현안문제를 파고들어서 높은 차원에서 조정하는 작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양국정상회담이나 1998 년의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새로운 버전처럼 상징적인 것이 실현되면 50 주년은 결실이 많은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측 참가자: 역사문제는 분명히 중요하며, 일본으로서도 힘껏 문제와 씨름해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작업은 숙연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동시에 지금 놓여진 동아시아의 전략환경을 제대로 분석 및 인식한 후에 일종의 역사문제와 안보문제의 전략적인 분리를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또, 중국의 움직임이 염려되는 가운데 힘으로 현재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법치와 국제법을 중시하는 win-win 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동아시아의 전략적 안정, 게임의 규칙과 같은 논의는 역시 한미일이 중심이 되어 진행해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측 참가자: 최근 미국의 자료나 유력인사의 발언 등을 보면 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이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은 미중관계라는 이야기를 자주 볼 수 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 또, 한국측 발표자가 「아베 리스크」를 지적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정치가가 어떤 발언을 하든지 풀뿌리 차원의 교류가 이만큼 활발해진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한일관계에 큰 영향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고민이 생기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고 싶다.

한국측 발표자: 한국측 참가자로부터 미국이라고 해도 다 같지는 않고 종합적으로 보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중국쪽 편을

드는 사고방식을 하고, 공화당은 미일동맹의 강화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은 나 자신의 경험에서도 수긍되는 바이다.

또, 남중국해의 움직임에 대해 한국미디어의 취재범위는 반드시 높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개인적으로도 주시해 가고 싶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강압적인 군사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해상수송로를 유지하는 것과 같은 부담을 견뎌 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미국 CFR(외교문제평의회)의 월터 러셀 미드 씨가 중국 당국자에게 가령 G2 라고 한다면 그것에 걸맞는 부담, 미군이 치르고 있는 것과 같은 질서유지의 부담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중국측의 대답은 「그런 능력도 의지도 없다」 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아시아지역 해상에서 미국 주도의 질서는 21 세기 중반 정도까지는 지금의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측 발표자:미중관계의 장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했을 때 「미중관계는 아시아전략의 핵심이며 가장 중요하다」 고 발언했다. 이것은 일본정부도 인정하는 바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중요」 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가장 우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 2위의 GDP에 인구도 많으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나라라고 하는 뜻일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서로의 경제의존도가 깊다고 하더라도 미중의 대립은 전체적으로는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의 창설 등 중국은 경제력을 이용하여 미국 주도의 경제질서에 도전하려고 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성장은 반드시 축복만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사이버문제도 있다. 앞으로 중국이 경제력이 붙으면 붙을수록 미국의 경제적인 이익은 늘겠지만 마찰도 동시에 증가해 갈 것이다.

「왜 미국은 한일관계를 이렇게까지 염려하느냐」 라고 미국인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것은 「위안부문제나 야스쿠니 참배문제에는 미국도 반발하고 있다」 라는 것이다. 야스쿠니 신사에 미국과 싸운 A 급 전범의 위패가 있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실은 그것은 하나의 이유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가장 큰 이유는 역사문제로 한일 두 나라가 대립하면 한국전쟁으로 인해 미국이 유지한 38 선 이남의 한반도의 세력권, 즉 한국이 중국에 침식되어 버릴 수 있다는 지정학적인 위협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한국측 참가자:한일 두 나라 사이의 집합적인 인식의 차이에 대해 여러 번 언급되었지만, 그중에 일본측이 이해하기 힘들어 한 것 중 하나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인식인 것 같다. 한국과 중국은 한국전쟁에서 싸운 사이이며, 그것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보다도 나중에 일어난, 현재와 더 가까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중국에 친근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반일감정은 수습되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생길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한 번 나쁜 관계를 경험한 후에 중국의 지배이데올로기에 동화되어 중국보다도 중국적인 사고양식을 가짐에 따라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규정해 왔다는 역사적인 전통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또,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둘러싼 분쟁이 종종 이야기되고, 영토문제도 그 일환으로 자리매김되어 지고 있는 듯하지만, 그러한 주도권을 추구하는 것이 국가의 습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도권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 지금까지의 중심국가, 중간국가, 주변국가와 같은 순위매김이 아니라 장기적인 역할분담이나 정치적·문화적 분업이라는 새로운 체계를 향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서 그 목표로

바람직한 형태를 생각해 보는 것이 보다 발전성 있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한국측 참가자:일본의 중세역사가 아미노 요시히코 씨가 쓰신 『「일본」이란 무엇인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다. 그 앞부분에는 거꾸로 한 동북아시아 지도가 게재되어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내해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내용이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읽고 나는 한일관계가 직면하고 있는 단기적인 문제는 일단 접어 두고 큰 그림을 그려 보아야 된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즉, 눈앞의 한일관계, 동아시아만을 보지 말고 사고의 폭을 200 년 정도 넓혀 보면 어떨까. 그리고, 4 반세기만 지나면 2040 년, 아편전쟁 발발 후 200 년을 맞이한다. 그때의 국제질서, 국제관계와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한일관계를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일본측 참가자:역사문제와 전략을 분리해야 될 시기에 와 있다는 지적에 관해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역사문제와 전략에는 각각 기민한 작업이 요구된다.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일본은 해양국가이고, 한국은 대륙과 연결된 반도국가인 것처럼 지정학적으로 다르다. 그 때문에 각자 전략을 생각할 때 차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 안에서 전략론을 전개하고, 같은 비전을 공유해 가는 매우 힘든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그 과정에 있어서 역사인식문제는 「다루기 까다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인식문제라는 이름 아래 역사문제가 전략론에 혼입되지 않도록 핑장이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은 혼입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높으므로 주의하면서 안전보장에 관한 논의를 해야 한다.

세션 2 사회자:아시아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 이외의 나라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지역에는 미중 외에도 유력한 나라가 많이 있으며, 이러한 나라들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진행해 가는냐가 아시아의 장래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물론 일본과 한국도 유력한 나라이며, 미중관계에 끌려다니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본과 한국이 앞으로 공동으로 해야 할 일은 많다. 아시아의 국제관계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온 것과는 다른 국제관계의 형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세션을 매듭 짓고자 한다.

기조연설

벧쇼 코로 · 주대한민국 일본국 특명전권대사 :

대사로 한국에 부임하고 2 년 정도 경과됐다. 부임하기 위해 김포공항에 도착한 직후에 먼저 한일 양국 미디어의 취재를 받았는데, 두 가지 정도의 포부를 이야기한 것을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다. 첫 번째로 한일관계는 일본에 있어서나 한국에 있어서나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 또, 그것 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는 일본과 한국 사이에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상호이해가 필요하다. 나도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의 여러 곳을 직접 찾아가서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항상 생각하고 계시는 분, 또 자신 나름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분이 한일 양쪽에 매우 많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서울과 도쿄에서 매년 개최되는 「한일교류축제」는 관객이 하루에 5 만 명에 달한 사실도 매우 기뻐지만, 무엇보다 감격한 것은 대회운영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을 때 천 명 이상의 한국 젊은이들이 나서 준 것이다. 이러한 젊은 세대에 큰 가능성을 느끼고 있다. 또, 아베 총리가 창설한 JENESYS 라는 청소년 교류제도를 이용해서 고등학생교류를 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있으며, 그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한 여대생으로부터는 「어른들이 말하는 것은 그대로 믿을 수가 없지만, 교류에 참가한 한국인이나 일본인 친구들과 토론을 하면 자신 나름의 생각을 할 수 있고, 자신 나름의 결론이 나온다」 라는 코멘트를 들었던 것도 잘 기억하고 있다. 이 「믿을 수 없는 어른」 중에는 당연히 나 자신도 포함되는 것이라 매우 뼈아픈 기억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타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고, 자신의 힘으로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을 느꼈다.

대학 간에도 독특한 교류가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큐슈대학과 부산대학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학생 50 명씩이 10 일간 정도 서로의 캠퍼스에서 체재한다. 즉, 한일 두 나라의 학생 100 명이 함께 생활하고, 수업을 받고, 사회체험을 하는 프로젝트이다. 학생들은 프로젝트기간이 끝나고 헤어질 때에는 서로 껴안고 울면서 이별을 아쉬워하고 재회를 약속하게 된다고 한다. 또, 국가 간의 관계가 복잡한 가운데에서도 지방의 교류는 진전되고 있으며, 자매도시관계를 맺는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양국 간의 힘든 분위기를 좋은 방향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디어의 힘이 불가결하다. 좋은 뉴스가 될 일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임일지도 모르지만, 미디어가 전해 주지 않으면 국민들은 알 수가 없다. 또, 일본이나 한국 같은 민주주의국가에서 미디어는 언론의 자유 아래에서 정권을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정부가 미디어에 대해 반론할 기회는 주어져야 하겠지만, 또한 미디어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한일 양국의 국민 사이에는 서로가 자신에게 있어 중요하고 소중히 해야 할 존재라는 의식이 너무나도 희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귀찮다, 골치 아프니까 언급하지 말고 있자, 자신이 행동하는 것은 그만두자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일본과 한국과의 사이에는 「좋은 이야기」도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서로에게 어떤 공통이익이 있을까를 양국 국민에게 꼭 제기해 주었으면 한다.

세션 3: 「양국 언론보도의 현상과 과제」

한국측 발표 「<산케이신문>의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보도를 둘러싼 한-일의 시각 차이」

한국측 발표자: 때마침 오늘 서울지방법원에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첫 공판이 열리고 있는데, 미디어의 존재방식에 대해 깊이 파고든 논의가 되었으면 한다.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11 월 12 일에 베이징에서 미중정상회담을 했을 때 기자와의 일문일답이 있었다. 중국 정상은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일문일답에 응하는 일은 전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일문일답에서 언론인으로서 주목해야 할 사건이 있었다. 미국의 New York Times 기자가 「중국지도층의 부패를 보도한 특파원에 대해 중국정부가 취재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라고 질문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문제를 만든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라는 내용의 답을 했다. 취재비자의 연장을 거부한

책임은 중국정부가 아니라 중국의 법을 무시한 신문사에게 있다라는 취지였다.

이 일에 대해 다음 날 New York Times 는 사실에서 New York Times 가 중국에 대한 비판의 논조를 바꾸는 일은 없다고 표명했지만, 그 요지는 「시진핑 주석은 해외의 매스컴이 중국에 대해 비우호적, 논쟁적인 기사를 실으면 처벌을 받게된다고 경고했다. 본지는 중국이든 미국이든, 또 어느 나라든 정부의 요구에 맞추어 기사를 쓸 마음은 없다. 기자들에게 정부가 원하는 기사를 쓰라고 요구하는 것은 권력자와 무언가를 숨기고 싶어 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일 밖에 되지 않는다. 스스로를 세계의 지도국으로 생각하는 자신에 찬 정부라면 진실의 취재와 비판을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언론갈등의 사례를 소개하는 이유는 한국과 일본에서도 바로 비슷한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산케이신문에 의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일곱 시간」 보도를 둘러싼 문제이다. 이 경우는 조금 전의 미중 두 나라의 사례처럼 언론의 자유란 과연 무엇인가, 언론의 자유는 다른 나라의 제도·문화·감정에서 완전히 독립적일 수 있는가, 또 보도를 둘러싼 의견대립이나 갈등을 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사건의 경위를 되돌아보면, 8 월 11 일 검찰이 산케이신문의 카토 지국장을 출국금지시키고, 10 월 4 일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다. 이것에 대해 산케이신문사는 사장 명의의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미국 국무성의 쟈 사키 보도관도 염려를 표명했다. 일본정부는 10 월 9 일, 관방장관이 한국정부에 대해 언론의 자유에 대한 법의 집행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고 언급했고, 10 월 10 일 산케이신문은 김 진태 검찰청장관과 김 남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취지의 항의문을 제출했다. 각국의 주요 미디어도 기소에 관한 뉴스를 크게 보도하면서 관심을 표명했다. 그 논조의 대부분은 기소에 대해 비판적인 것이었다. 그 후 10 월 31 일, 검찰은 카토 지국장이 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밀회상대로 암시한 정 윤희 씨가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대통령이 아닌 다른 인물과 만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극단적인 대통령 지지세력을 제외하면 한국에서는 이 기사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에 대해 무리한 법집행이라는 공통인식을 가지고 있다. 해외의 시선은 더 신랄해서 국경없는 기자회, 서울외신기자클럽, Wall street Journal, 아사히신문이 제기하고 있듯이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에 대한 침해와 탄압이라는 견해인데, 한국의 언론에서도 매체의 성격·성향과는 상관없이 산케이신문 기사의 품질에는 문제가 있었고 명예훼손의 여지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도에 대한 형사처벌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자세가 일반적이다.

산케이신문의 「공백의 일곱 시간」 보도와 이에 대해 검찰이 명예훼손혐의로 한 기소는 한일관계가 냉각화하고 있는 상황과 함께 한일관계를 미디어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악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사안이 한일양국 언론계의 발전, 그리고 한일관계의 전반적인인 관계개선에 악영향만을 초래하고 있느냐 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교훈을 얻느냐에 따라서는 보다 좋은 관계형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할 포인트, 이번 사건에서 얻어야 할 교훈으로서 다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로 양국의 보도기관이 상대국의 민감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국내의 사안보다도 더 신중하고 숙고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 둘째로 보도에 다소 결함이 있더라도 그것은 언론계나 학계와 같은 시민사회, 즉 여론의 판단에 맡겨야 하며,

사법당국이 나서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세제는 이 사건이 양국에게 고품질의 품격 있는 언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자유와 사법의 관여의 한계선은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나라로서 세계로부터도 인정받고 있다. 그 양국의 언론이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의 강화라는 면에서 생각하고 토론하는 것은 양국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의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반드시 공헌할 것이다.

일본측 발표 「양국 언론보도의 현상과 과제」

일본측 발표자:최근에 다른 곳에서 본 단어 중에 「규탄저널리즘」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한일 양국의 저널리즘에는 이러한 부분이 매우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정말로 이대로 좋은가라는 질문을 이 자리를 빌어서 던져 보고 싶다.

올해 상반기, 일본에서는 원전사고를 둘러싼 기사가 연일 지면을 장식했다. 발단은 아사히신문의 기사로 동일본대지진 발생 나흘 후, 후쿠시마 제 1 원전에 있었던 90%(650 명)의 직원이 당시의 요시다 소장의 대기명령을 위반하고 10km 떨어진 제 2 원전으로 도망을 갔다는 내용이었다. 이른바 요시다 조서를 둘러싼 내용으로 결국은 그것이 오보라는 결론이 나서 아사히신문의 사장이 사임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이것에 대해 호세대학의 오쿠 타케노리 씨는 마이니치신문에서 「문제의 뿌리에 규탄저널리즘이라는 선입관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지적하고 있다. 먼저 「규탄해야 될 대상으로 도쿄전력」이 있고, 아사히신문의 기자는 어딘가에 규탄할 재료는 없을가라는 시점으로 요시다 조서에 착목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조서의 진술 일부분만을 잘라 내 「가지 마라」라는 명령이었다라고 멋대로 해석해서 기사를 써 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일본측은 「도쿄전력」을 「한국」으로 바꿔 놓고, 또 한국측은 「도쿄전력」이라는 부분을 「일본」이나 「일본정부」로 바꿔 놓고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나는 이것과 비슷한 구도의 기사가 많이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즉, 「규탄저널리즘」이라는 단어는 한일 양국의 보도에서 꽤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앞서 언급한 오쿠 타케노리 씨는 이러한 「규탄을 전제로 하는」 자세가 프로 저널리스트에게 불가결한 「사물의 도리」라는 감각을 잃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것도 올해의 저널리즘에서 큰 화제가 된 아사히신문의 위안부보도에 대해 언급하고 싶다. 애초부터 아사히신문은 「과거의 역사」를 규탄해야 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도 보인다. 아사히신문이 8 월에 위안부보도의 점검 기사를 낸 후에 이것을 비판하는 보도가 타사에서 많이 나왔다. 일례로 요미우리신문은 4 일간 연재형식으로 상세한 비판 기사를 게재했는데, 이것도 요미우리신문 안에 「규탄해야 될 대상으로 아사히신문」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여겨지는 점이다.

한편, 한국의 신문에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 올해의 사례로는 「롯데호텔에서 주한일본대사관 주최의 자위대창설기념일 파티가 개최될 예정이다」라는 뉴스를 동아일보가 1 면의 준 톱기사로 다루었다. 이 파티는 매년 정례행사인데 왜 올해에 한해서 이런 곳에 실는가. 이것도 아마 「규탄해야 할 대상으로 일본정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상상된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모든 미디어에서는 「규탄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아베」가 최신 트렌드처럼 되어 있다.

이처럼 「규탄저널리즘」이 양국관계에 있어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지 않으며, 결과적으로는 독자가 신문에서 멀어지고, 미디어에서 멀어지는 현상만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실제로는 일본정부나 한국정부나 우호를 위한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으며, 정부 이상으로 일반시민들이 노력하고 있는 바도 있다. 미디어는 그와 같은 노력이야말로 차분하게 보도해 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들은 양국 미디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것에 대해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말과 행동의 결과에 책임이 따른다는 자각이 어느 정도 있느냐라는 것이다. 진보·우파를 불문하고 어떤 입장이더라도 보도에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다.

또, 일본과 한국은 서로 외국이고, 상대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의문을 느낀다. 오구라 키조 교수의 지적에 따르면, 일본은 법실증주의적이고 반준법적인 행위에 대해 생리적으로 혐오를 느낀다고 한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기묘한 사법판단을 보면 일본인들은 이것을 이상하다고 느낀다. 한편, 한국은 반대로 도덕지향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아무리 법적으로 해결한다고 해도 그래도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느끼며, 그러한 일본의 방식에 혐오감을 안게 된다.

이 지적은 중요하다. 특히 일본의 미디어는 도덕적인 지향을 가지는 한국사회를 반준법적이라고 지나치게 규탄하고 있지는 않을까. ‘반대도 진실이다’ (일견 정반대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본질은 같다는 뜻)라는 일본의 관용표현이 있는데, 한국미디어는 법실증주의적인 정서가 강한 일본사회를 도덕적인 기준만으로 지나치게 규탄하고 있지는 않을까. 즉, 상대방의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결론으로는 7 월의 마이니치신문에 실린 기사 「양국의 소리 없는 소리를 들어라」에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한 논의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헤이트 스피치만이 아니라 친한적인 것도 있으며, 그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토론

한국측 참가자:과잉하게 비판적인 보도에 관한 지적이 있었는데, 역시 칭찬보다도 비판의 기사 쪽이 눈길을 끌고, 사람들에게 잘 읽히므로, 그러한 논조가 많아지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의 사례 중에서 리틀리그의 월드시리즈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다.

한국과 일본이 준결승에서 맞붙었고 한국이 결승에 진출해 최종적으로는 우승을 했는데, 결승전에는 일본의 선수들도 응원하러 와 주었고, 한국대표단의 유니폼을 입고 열렬한 응원을 보내 주었다. 이 일은 한국의 거의 모든 미디어가 다루었다. 「어른들보다도 아이들 쪽이 더 낫다」 「이런 마음으로 한일관계를 쌓아 가면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닐까」 「문제는 어른들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보도가 이루어진 일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컸다.

미디어의 보도는 그 당시의 양국관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일본정부의 헌법해석에 대해 양국관계가 양호하면 일본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다는 보도가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양국관계가 최악에 가까운 상태에서는 거의 모든 신문이 의심의 눈을 가지고 이것을 보도한 것이다. 하지만 집단적 자위권은 주권국가의 권리이며, 일본도 예외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던 것은 어느 보도에서나 공통되었다.

일본측 참가자:아사히신문은 8 월 5~6 일에 걸쳐 위안부문제에 관한 요시다증언에 대해

오보를 인정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그전에는 후쿠시마 제 1 원전사고의 이른바 요시다 조서를 둘러싼 오보도 드러나면서 이 두 가지 큰 오보로 인해 당시의 키무라 사장은 사임함과 동시에 제 3 자를 통한 검증위원회가 마련되어 현재도 지식인들에 의한 검증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이 위안부보도에서는 요시다증언의 첫 보도가 1982년에 있었던 후 32년간에 걸쳐 오보가 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큰 문제였다.

실은 1989년 8월 14일자의 제주신문에서 요시다증언이 허위라는 사실이 검증되고 보도되었다. 그 제주신문을 발단으로 해서 다시 검증이 이루어졌다면 강제연행에 관한 논조나 그 후의 일본의 논조도 바뀌었을 것이다. 이 일은 정확성을 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얼마나 커지는가를 시사하고 있다.

조금 전에 「규탄저널리즘」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아사히신문이 큰 비판을 받고 있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자사의 기업 저널리즘의 주장을 앞세우기 위해 기사를 정정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점이다. 이 아사히신문의 경우의 교훈은 의심이 가는 오보를 계속하면 신문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며, 그리고 수정할 경우에는 진지한 태도로 속이지 말고 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사히신문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가 자문자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일본은 악전고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보도의 신뢰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일본측 참가자:산케이신문의 경우에 문제가 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발언하고자 한다. 일본에서는 특정비밀보호법이 12월 10일에 시행된다. 이 법의 최대문제는 「부당한 취재」가 벌칙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명예훼손과도 관련되는 부분이며 명예훼손의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에 이 규정이 타당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실은 명예훼손의 경우, 일본에는 특례가 있다.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이 끊임없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미디어가 위축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공공성이 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죄에 묻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의 균형에 대해 한국의 상황을 알고 싶다.

일본측 발표에서 「규탄저널리즘」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나는 저널리스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감시라고 생각한다. 권력감시를 하지 않는 미디어는 단순한 정보산업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저널리즘이 그냥 「규탄저널리즘」으로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권력감시의 기능을 정당하게 다할 것이냐. 이 양자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싶다.

그것은 즉, 「권력감시를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바꿔 말할 수 있으며,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널리즘의 가장 근본적인 사명은 역시 권력에 의한 정책의 집행이나 결정을 「보다 좋은 것」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디어는 보다 좋은 정책의 집행, 만인의 생존권이 보다 잘 행사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조금 전의 발표에서는 법적인 측면을 준수하는 일본미디어와 도덕적 측면을 중시하는 한국미디어의 특징의 차이가 논해졌다. 이 양자를 견비한 「사물의 도리」와 「합리」의 개념이 권력감시를 해 가는 데에 있어서 특히 중요할 것이다.

한국측 참가자: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칼럼을 둘러싼 이번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나는 Washington Post 지의 기자였던 돈 오버도퍼 씨의 말이 떠올랐다. 권력자에게 불리한 기사라고 그것을 명예훼손으로 규제하고, 위축시키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건은 기사의 공정성이나 품위라는 부분에서 균형이 결여되어 있고, 지금까지

산케이신문이 써 온 많은 기사에 대해 누적된 「피로도」의 반영으로 기소에까지 이른 것처럼 여겨진다. 이러한 기사의 공정성이라는 점에 관해 일본측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일본측 참가자:내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미디어는 자신들이 특별취급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다. 이번 문제는 대통령이라는 권력 스스로가 명예훼손사안에 대해 기소라는 공권력을 행사한 경우이며, 그것이 억제적이지 않았던 것은 비판되어도 마땅할 것이다. 게다가 그것이 정치목적에 이용되었다면, 역시 언론의 자유에 대한 권력의 횡포이며, 비판되어도 마땅하다. 하지만, 미디어 혹은 외국미디어니까 가볍게 봐 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론이다.

한일 양국에 있어서 미디어는 언론인이라는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 본래 미디어는 권력을 감시하는 입장이며, 권력에서 멀리 떨어진 입장에 있어야 하는데 자신들이 권력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특별대우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 산케이신문의 문제에 대한 일본이나 한국 미디어의 보도를 보더라도 그러한 미디어의 우월감, 특별대우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확신과 같은 것이 여러 곳에서 보이는데, 그것은 매우 슬픈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측 참가자:일본의 신문에서 자주 이야기되어져 온 것은 서로가 감싸주고 있다는 비판이다. 규탄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지만, 문제에 관해서는 서로 비판하는 균형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또 스스로를 반성하는 자계의 자세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 기소에 대한 반응으로 일본에서 보여진 현상은 한국의 군사정권시대에 있었던 보도의 기억이 되살아난 일일 것이다. 예를 들면 1973년에 김 대중 씨가 도쿄도내의 호텔에서 납치되었을 때에 한국당국의 관여에 대해 쓴 신문의 서울지국은 폐쇄당했으며, 지국원은 추방되었다. 이번 건은 민주화되고 한참 시간이 지난 한국에서 다시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었다.

일본측 참가자:아사히신문의 일련의 오보문제에 대한 반응이 일방적인 공격이 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물론 비판은 있어야 마땅하겠지만, 일부 주간지는 「국적(國賊)」이라는 단어를 써 가면서 비판하는 등 일제히 아사히신문을 맹비난하는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과연 그것이 건전한 언론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한편 한국으로 눈을 돌리면, 아베 정권의 이른바 우경화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일 양국 언론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서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 무서움을 우리들은 인식해야 한다.

보도의 결과를 책임진다는 문제에 대해, 예를 들면 아랍의 봄이나 시리아내전 등 중동을 취재해 보면 실은 처참한 자폭테러현장 바로 옆에서도 평상시처럼 꽃집에서는 꽃을 팔고 있거나, 카페나 간식거리를 파는 포장마차가 영업하는 광경을 보게 된다. 그러나 기사를 쓸 때에는 아무래도 처참한 현장, 불쌍한 희생자 같은 곳에 초점을 맞추어 글을 쓸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중동은 무섭고 위험한 곳」이라는 이미지만 독자에게 심어 주게 된다. 이 점에 대해 나는 매우 고민하면서 기자활동을 해 왔는데 이것을 영원한 과제로 제기해 두고 싶다.

한국측 참가자:조금 전에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 한국에는 신문방송편집협회, 기자협회, 언론조합이라는 세 개의 단체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신문협회가 전체를 커버하는 기구로 되어 있다. 그 신문협회는 특정비밀보호법에 관한 의견서를 작년에 한 번 냈을 뿐이다. 일본의 미디어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추구하고, 정부를 비판해 왔는지 조금 더 문제를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기소문제에 관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부터 화제에 오르고 있는 자기검증이다. 공익성·공공성·진실성의 세 요건으로 기소 유무가 판단되어야 하는 것은 한일 두 나라의 법에 공통되는 것이며, 산케이신문의 기사를 자기검증하는 것은 아무런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내가 근무하는 회사는 자위대의 기념행사 등의 뉴스는 신중한 입장을 취해서 다루지 않았지만, 한일 양국의 민간교류뉴스는 많이 보도하고 있다. 예를 들면, 4월에 있었던 세월호 침몰사고 후에 일본의 고등학생들이 사고희생자 지원을 위해 모금활동을 했다는 정보제공을 받고, 기사로 게재했다. 이처럼 민간교류도 여러 가지 보도하고 있으며, 반드시 규탄 일변도의 보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일 두 나라 사이의 문제는 특히 신중하게, 여유를 가지고 보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한일 양국은 좋고 싫음에 상관없이 서로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수 없는 이웃관계이며, 지정학적인 운명공동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관계를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조금 더 폭넓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교정상화 50주년에 잘되지 않았다면, 51주년에 하면 된다. 그러한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는 시각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측 참가자: 위안부보도를 아사히신문이 취소한 것에 관해서는 오보인 이상 더 빨리 취소를 하든가 사죄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자의 입장에서 특별히 아사히신문을 비난하는 보도를 보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를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그리고, 아사히신문이 취소했으니까 문제는 끝났다, 혹은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결론이 나오는 것에 관해서는 모종의 두려움을 느낀다. 즉, 신문사끼리의 경쟁이 너무나 심해진 결과로 논의 그 자체가 왜곡되어 버리는 것을 독자로서 걱정하고 있다. 권력과 거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감시하면서 보도의 「내용」으로 승부할 것을 명심해 주었으면 한다.

한국측 참가자: 한국에서 언론보도에 관한 명예훼손의 적용은 노 무현 정권기부터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것들은 형사사건으로 되는 부류의 것은 아니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산케이신문의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같지만, 민사상의 명예훼손 부분이 심각한 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형사고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명예훼손의 판정 자체가 어렵고, 시간이 걸릴 것이 예상되므로, 관계자의 부담도 클 것이라는 것이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생각한다.

일본측 참가자로부터 한국의 언론의 자유에 관한 의견이 있었는데, 만약 「언론의 자유」를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로 해석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에는 무한한 자유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권력의 이행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민간분야에서 한국의 정치권력에 필적하는 힘을 가지는 인물도 있다. 그러한 권력에 대한 감시,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 나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언론의 자유를 생각했을 때에 이것이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측 참가자: 일본의 미디어는 역시 전쟁을 일으킨 책임의 일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만주사변 현지에 특파원을 보냈고, 판매부수경쟁으로 인해

기사가 점점 과격해진 면이 있다. 현재도 어떤 의미에서는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판매부수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 과격한 보도내용이 되는 원인의 일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대해서는 서로 감싸고도는 것은 말도 안되지만, 역시 경쟁은 지면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연하자면 이 건 때문에 아사히신문을 구독하지 않게 된 사람은 대신에 요미우리나 마이니치, 닛케이나 산케이신문을 구독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 자체를 구독하지 않게 되어 버린다. 즉, 신문 자체가 신뢰를 잃고 있다는 뜻에서 자신들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미디어의 역할은 권력의 감시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큰 틀 안에서 찬성하지만, 독자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자신들이 권력이 있는 위치에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단순히 비판만 하고 비전이 없는 야당과 같은 존재가 되어 버릴 것이다. 가령 원전에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것인가라는 설명을 보도해야 하며, 원전에 반대한다면 어떻게 에너지를 확보할 것인가 미디어로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측 참가자: 지금의 언론보도가 놓여진 환경은 인터넷사회라는 시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인터넷사회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발언수단을 가진 1억 일본인구가 모두 저널리스트, 나쁘게 얘기하자면 모두 파파라치와 같은 세계다. 그 사회적 영향으로 「규탄저널리즘」이 나온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백이나 흑이나, 정의의 편이나 악한이나라는 단정 뿐만 아니라, 역시 직업인으로서의 저널리스트 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바른 언론은 전개할 수 없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미에서의 비판정신이 필요하며, 그것을 유지시키는 것은 결국 견식과 양식, 그리고 하나의 인간으로서, 저널리스트로서의 사명감일 것이다.

한국측 발표자: 2003년에 기사의 표절과 날조가 드러난 제이슨 블레이 사건으로 인해 New York Times 에서는 옴부즈맨 기능과 체크시스템을 강화했다.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도 월 1회 정도 시민이 기사를 검증하고, 그 모습을 신문의 거의 한 면을 써서 공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미디어에서 기사의 오보체크는 소극적이며, 일본 쪽이 앞서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명예훼손문제에 관해서 한국에 특례조항은 없지만, 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같은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한일 두 나라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된다.

저널리스트는 같은 배에 타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즉, 권력을 감시하는 일이든 좋은 기사를 쓰는 일이든 거기에 저널리스트로서 관여한다는 의미에서는 같은 배를 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일종의 「동료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즉, 한국의 저널리스트라든가, 일본의 저널리스트라든가, 어디 신문사 기자라는 소속보다도 「어떻게 하면 저널리즘이 독자에게 사랑받을까」라는 시점을 가지고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일본측 발표자: 「같은 배를 탄 사이」라는 표현은 나도 실감하고 있다. 한일 양국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에 한일 양측 모두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많이 있으며, 모르는 일도 많다. 그 배경에 역사문제나 영토문제를 끄는 저널리즘이 각국의 내셔널리즘과 긴밀하게 결부된 결과, 저널리즘 혹은 일부 연구자는 나라의 위신을 걸고 사태를 생각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역시 어느 나라의 저널리즘이라는 감각이 너무 강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것이 사물에 대한 냉정한 사고나 해결을 방해하는 편견이 되어서 사회 전체가 매우

압력을 느끼게 된다.

예를 들면 전문가가 한일관계에 대해 신문사로부터 코멘트를 요구받을 경우, 그 신문의 주요 독자층의 기대에 맞지 않는 코멘트를 하면 그것을 비판하는 이메일이나 우편물, 전화가 직장은 물론 자택에까지 오게 된다. 각 신문이 각각의 주장을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것 이외의 견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다. 또, 독자는 항상 의도한 것을 100%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독하는 경우도 많다. 일부분만을 들어내서 읽으려고 한 결과, 의도와는 정반대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압력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그와 같은 구조가 생기고 있는 것도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다.

세션 4: 「총괄토론」

일본측 사회자:총괄토론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의 논의에 참가한 감상을 이야기하고 싶다. 이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는 지금의 한일 양국의 상황을 참작하면 서로 충돌하는 논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 「한-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라는 방식의 효과인지 거의 같은 멤버로 여러 번 회의를 실시해 옴에 따라 매우 좋은 의미에서 논의가 성숙되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냉점함도 느껴졌다.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에서 자주 쓰이는 유행어를 흉내내자면, 이와 같은 비교적 냉정한 형태에서 성숙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한일관계라는 것이 뉴노멀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뉴노멀의 문제점으로서의 일종의 차분한 거리감이 있지만, 현안사항을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 열의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큰 추진력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순이 있는 것 같다.

또, 정치나 안전보장상황을 생각했을 때에 아무래도 중일관계가 한일관계에 짙게 투영되고 있 것처럼 보인다. 중일관계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마치 줄리어스 시저의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느낌이 일본측에 있는 듯하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이 아시아태평양이라는 큰 지역의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그러한 대응이 보이기 때문에 일본측에 욕구불만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이 모순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유라시아그룹의 이안 브레머가 올해 1월 흥미로운 리포트를 발표했다. 「올해의 10대 위험」이라는 리포트인데, 2014년에 예상되는 10개의 큰 위험 중에서 그들이 첫 번째로 꼽은 것은 「동맹국의 위기」라는 테마였다. 그것에 따르면 일본, 영국, 이스라엘과 같은 미국에 있어서 Tier-1(중핵적인 동맹국)은 올해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Tier-2, 즉 이안 브레머가 이야기하는 한국, 호주 등의 동맹국은 아마 미국이 내정상의 이유와 기타 이유로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가운데 중국으로 이행해 간다는 내용이였다.

이처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 속에서 한일관계를 어떻게 인식해 갈 것인가라는 시점은 중요하며, 이것은 단순히 내년의 국교정상화 50주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직면할 수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오늘 아침의 Wall Street Journal 등에 크게 보도되고 있듯이 예를 들면 고고도 미사일 방위시스템(THAAD)의 한국배치와 같은 문제도 표면화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향후의 동맹관계, 안전보장관계, 일본과 한국과의 지정학적인 위치의 차이, 경제적인 입장의 차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조절」해 갈 것인가. 또, 일본과 한국 사이에 GSOMIA(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와 같은 협정에 합의하지 못한

바와 같은 상황의 영향이 향후 어떻게 확산되어 갈 것인가. 그러한 점도 중장기적인 한일관계를 생각했을 때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한국측 사회자: 양국의 언론미디어를 접하고 느낀 감상을 문제제기로 대신하고 싶다. 먼저 첫 번째는 한일관계에 좋은 영향을 주는 보도는 어려운 것인가라는 것이다. 지금 한국과 일본에서 보도되고 있는 뉴스를 보면 긍정적인 뉴스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측에서 좋은 뉴스도 전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그것이 작은 소리라는 것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지면을 크게 장식하는 것은 역시 부정적인 뉴스 뿐이다.

특히 정치외교분야에 있어서 그러한 현상이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나온 부정적인 기사를 실는 주간지 관계자에게 왜 부정적인 기사를 쓰는지 이유를 물어 본 적이 있다. 그때 돌아온 답은 대개 「부정적인 기사를 쓰는 쪽이 팔리기 때문이다」라는 안이한 것이었다. 과연 저널리스트는 그러한 가치판단의 기준을 직접적으로 변화시켜도 되는 것일까.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은 언론의 본질에 맞지 않는 것일까.

두 번째는 오전의 세션에서도 논의되었던 「언론의 자기검증」이라는 문제에 관해서이다. 양국의 미디어를 접하고 느낀 것은 균형을 유지하기보다는 한쪽으로만 몰아가는 경향이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양국의 불신감이 조장되고 매우 과민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현저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아사히신문은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했지만, 기사를 철회한 후에도 계속 맹비난을 받고 있다. 이것은 「언론의 자기검증」에 비추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자정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미디어 간의 경쟁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양상은 공정성을 보장한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까. 제 3 자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려되는 바이다.

조금 전에 「품격 있는 언론」이라는 표현, 또 프로 저널리스트의 모습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실은 언론만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도 품격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최근의 한국에서는 종합채널이라는 장르의 방송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훌륭한 학자는 저런 프로그램에 나가서는 안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한 영향 때문인지 신문기자 등에게 「그 기사내용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느냐?」고 물으면 「그 내용은 이미 인터넷에 나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주요 신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 지금은 그런 시대다」라는 답이 돌아와서 놀란 적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가십성의 기사가 어느새 「정설」인 것처럼 되어 버린다. 아마 산케이신문 건도 산케이 자체의 잘못보다는 찌라시에 실릴 법한 내용이 지면에 게재된 것에 보다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이야기되고 있다는 초조함, 다른 미디어에 뒤처져서는 안된다는 초조함, 쓸 수 있는 소재는 써야 한다는 초조감이며, 조금 전의 「여유 있는 미디어」라는 표현과는 정반대의 초조함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이미 옛날이야기가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때로는 침묵도 하고, 또 침묵하는 방법을 아는 언론·보도기관이라는 것이 실은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이 아닐까라고 느껴진다. 빠짐없이 모든 것을 전하는 것도 언론의 역할이지만, 동시에 non-decision making(무의사결정)의 입장에서 침묵을 통해 방치하는 것도 보도기관의 역할이 아닐까. 오늘날 그것은 실현불가능한 꿈·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일본측 참가자:과거 30 년 동안에 일본의 신문사 내에서 상업주의는 꽤 진행되었다. 그 배경에 있는 것은 전체적인 경영기반의 약체화와 신문기자에 대한 관리통제의 강화라고 생각한다. 판매수입과 광고수입의 비율은 예전에는 50:50 이었지만, 지금은 20%대까지 광고수입이 저하되었다. 판매수입도 부수감소 따라 저하되었으며, 사원수도 감소하고 있다. 1980 년대까지의 경영과 저널리즘이 예상대로 움직이던 시대는 끝났고, 많은 적든 경영이 저널리즘에 우선되는 구조로 되었다. 그것에 맞추어서 무엇이 보도되고, 어떠한 진로를 가질까가 외적 요인에 의해 규정되는 부분이 확대되고 있다. 이 문제는 향후에도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된다.

신문사가 가지는 당파성이라는 것은 물론 유럽의 신문을 보더라도 존재하고 있으며, 일괄적으로 부정해야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 기자 개인에 대한 공격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저널리스트는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교과서에 적혀 있는 것이 과연 실제로도 그런가라는 것이다. 당파성을 전제로 한 위에서 신문이라는 매스미디어가 가지는 포럼성이나 제언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느낀다.

특히 한국 참가자에게 물어 보고 싶은 것은 글로벌화시대에 있어서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이다. 이번 산케이신문의 문제는 대통령이 어떻고라기보다도 세계에서 보면 언론의 자유나 기본적 인권문제에서의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비판이 나온 것이다. 저널리즘의 세계, 혹은 위안부문제로 상징되는 듯한 여론과 글로벌 스탠다드의 관계성을 어떻게 정리해 갈 것인가가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일본측 참가자:나는 한일기본조약체제라는 것이 그렇게 엄격하고 짜임새 있는 것이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한일기본조약은 국교도 없는 단계에서부터 일본과 한국이 서로의 주장을 펼치면서 겨우 힘들게 만들어 낸 타협의 산물이며, 그것을 화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 아닐까. 그 타협에는 애매한 부분도 있으며, 뒤로 미루어진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타케시마 문제는 일본측은 뒤로 미룬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측은 원래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일기본조약체제는 원래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첫걸음일 것이다.

내가 한국에 있었던 무렵 한국의 친구들로부터 들은 이야기 중에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은 「한일조약을 맺은 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본은 한마디도 사죄해 주지 않았다. 한마디 정도는 사과해 줘도 좋지 않았을까」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다. 것처럼 일본의 합법정당론과 한국의 불법부당론의 대립은 한일기본조약체제 아래에서 계속 이어져 왔다.

그러나 1995 년의 무라야마담화에서 그것은 합법이었지만 정당하지는 않았더라는 이른바 「합법부당론」으로 일본측은 전환했다고 생각한다. 즉 한일조약에 대한 모종의 수정 혹은 보충이 이루어진 것이며, 그결과로 김 대중-오부치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가능해진 것이다.

한일기본조약체제를 생각할 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의견이 일치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점 부분에서 합법이나 부당이나라는 논쟁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고, 그것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결에 반영되고 있다.

한국의 전통은 도덕이나 정의, 정당성 등을 중시하는 문화이며, 만약 틀리다면 정정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일본의 문화는 문언이 중요하고, 그것이 도덕적으로 바른지 어떤지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 그와 같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격하게 논의하는 것은 아마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것보다도 오히려 그 사이에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일 두 나라가 새로운 관계를 구축한다면 그 내용에 무엇이 담겨야 되고 우리들 사이에 있는 공통분모는 무엇인지를 찾아야 할 것이다. 혹은 공통과제라도 좋다. 그러한 눈으로 본다면 한일 두 나라 사이에는 공통되는 사항이 매우 많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한국측 참가자: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일본측의 말끝마다 보이는 중국에 대한 혐오감 내지는 공포감과 같은 것이다. 중국에 대한 맹비난이 사전에 들었던 것보다도 훨씬 강하고, 과대하게 중국을 두려워하며, 중국을 지나치게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시진핑 주석과는 이미 5~6 회 회담했는데 오바마 대통령과는 2~3 회밖에 회담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역시 「중국으로 치우친다는 이론」을 과잉하게 강조하는 경향은 시정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일본은 왜 그와 같이 중국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그러한 생각의 배경을 물어 보고 싶다.

또, 일본측으로부터는 반드시 2012년 8월의 이명박 대통령 독도방문이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한편으로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북방영토를 방문했을 때에 비판을 하지 않았던 것은 이중잣대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여쭙고 싶다.

일본측 참가자: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북방영토를 방문했을 때 일본정부는 물론 강하게 항의했지만, 결국 러시아는 대국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만큼은 강하게 나가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 역시 한국은 일본에 있어서 우호국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호국의 대통령이 타케시마에 간 것에 대한 실망도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현재는 중국이나 미국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나 북한문제에서는 중국과 협력하고, 그러면서도 한미동맹을 유지하여 안전보장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잘 균형을 취하면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중국이 보다 강대하게 되고 미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졌을 때인 언젠가에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 필요를 강용받게 된다면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설립을 중국은 검토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것에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은 굳이 이야기하자면 중국으로부터 어느 편인지 밝히려는 압력이 하나하나 어젠다로서 던져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측 참가자:산케이신문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백의 일급 시간」에 관해 쓰는 것 자체는 특별히 비난받을 일이 아니며, 기사로 다루기에 충분한 소재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과연 그 제재가 기사가 되는 과정에서 기자 자신이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사를 썼는가이다.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가. 시대적인 배경에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냉전의 종결, 한국의 경제성장, 한국의 민주화에 따라 그때까지 억압되고 있던 과거사 해결을 언급하지 않는 1965년의 기본조약, 평등이 결여된 조약이라는 불만에 대한 문제제기를 표면화시켰다는 기본적인 흐름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일기본조약은 체결 후에도 여러 가지 수정·보충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어업협정의 재체결, 코노담화와 무라야마담화의 발표, 1998년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등이 사실상 한일기본조약을 부가적으로 개선해 온 노력의

일환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현안사항을 개선해 가는 것도 1965년 체제의 보장이 되지 않을까.

중국과 미국, 어느 쪽인가 한쪽의 선택을 강요받았을 때에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의 상황에서 한국은 당연히 미국을 선택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에서는 일반적이며, 지식인들도 이 점에서 균형을 잃고 있지는 않다. 음식보다도 생명이 소중한 것이다. 한미동맹은 한국에 있어서 최후의 안전판이며, 중국에 접근하는 데에 있어서 기반으로 되어 있기도 하다. 한국이 중국 편이냐 아니냐를 둘러싸고 감정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양국 간의 현안사항에 집중하는 쪽이 생산적이다.

일본측 참가자:미국이 향후 동아시아지역에서 빠져 나가는 일은 기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된다.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번영과 안전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일본이나 한국과도 함께 해 가기를 바란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10시간 정도 시진핑 주석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원래 작년 캘리포니아에서 8시간 정도 개최된 미중회담의 답방이며, 시간이 긴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8시간, 베이징에서 10시간 이야기를 나누는 결과, 서로의 가치관의 차이도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된다. 중국과 미국의 가치관의 차이는 지도자가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자유주의경제이며, 민주주의이며, 보도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이다. 우리들은 향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어 갈 원칙부분의 차이를 의식하면서 사물을 생각해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일본측 참가자:최근 홍콩에서 학생들이 데모를 일으켰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홍콩은 33년 후에 중국에 완전히 반환되는데, 그때까지 민주시스템을 만들어 두고 싶다는 의사표시였다. 또 봄에는 대만에서도 학생들이 입법원을 점거하는 과격한 행동을 했는데, 그 뿌리에 있는 것, 즉 중국에 먹혀 버릴 것 같은 경제협정은 안된다는 이야기였다. 한편, 지금 중국의 주변국은 한국도 포함해서 경쟁적으로 중국으로 기울고 있다. 이것은 당연히 경제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에 가장 가까운 이웃들은 No 라고 하면서 도망을 친다. 거기에는 역시 체제의 문제가 있다.

왜 중국을 그렇게까지 두려워하는 것일까. 그것은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위기를 보면 알 수 있다. 러시아는 특수권익권이라는 개념을 끄집어 내서 지금까지 독립해 있던 우크라이나 동부를 병합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보면, 우크라이나는 중국에 있어서 한국 혹은 대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중국이 이야기하는 뉴노멀에는 「대국에는 지금까지 전후의 질서로 그어진 선을 다시 그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함의가 있는데, 그것은 즉 「중국은 대국이 됐으니까 큰 영토를 취해도 좋다」라는 것이다. 중국은 지금은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국이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은 청나라 체제, 청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세력권을 자신들의 영토로 설정하고 있다.

홍콩이나 대만의 데모를 보면, 같은 민족이지만 체제의 차이는 이렇게까지 사람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구나라고 느끼게 되고,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멀리하고 싶다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은 체제나 가치관의 차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중국이 경제성장을 계속하는 가운데 그 체제가 「우리 규칙을 따르라」라는 무서운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에 일본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

한국측 참가자:장래 어딘가의 국면에서 중국과 미국 중 어느 쪽인가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실제로 한국에 있어 고민의 씨앗이 되고 있다. 물론 현시점에서는 동맹국인 미국을 택하겠지만, 이미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이나 THAAD 를 둘러싸고도 국내의 의견은 나누어져 있다. 미국과 중국 중 어느 쪽에 붙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그때」가 됐을 때에 고민할 일이고 미리 고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본측 참가자: 좋은 기사를 작성하려면 가장 기초적으로 해야 할 일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을 모아서 구도를 만들고, 그때까지 자신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구조를 변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1965 년체제에 관해 자신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은 병합조약이 유효하다든가 무효하다든가 거기까지 다시 문제로 삼는 논의가 되어 버리면 그것은 매우 비생산적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이 징용공문제의 판결에서 신닛테츠스미킨에게 배상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은 법률적인 논의에서 이상하다고 하는 것만이 아니다. 1965 년에 체결된 협정과 조약에 의거하여 일본이 지원하고 당시의 한국인들의 엄청난 노력에 의해 포항제철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신닛테츠의 관계자들도 헌신적으로 협력한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경위까지도 부정해 버리는 것이 될 수 있어서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측 참가자: 미중관계에 대한 일본의 견해에는 속되게 비유하자면 남편의 바람을 의심하는 부인과 같은 구석이 있다. 미국과 중국이 오래 이야기를 하면 혹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하며, 미국과 중국이 얘기가 잘 되지 않으면 남편은 괜찮다고 안심하는 듯한 기묘한 반응이 미디어에서도 많이 보인다. 그와 같은 습성에서 이제 슬슬 졸업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또, 아시아의 국제관계는 중국이 이대로 대국화하고 미국이 쇠퇴한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 속설에 휘둘리지 말고 현실을 잘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

한국측 참가자: 한일 양국은 아직도 제로섬적인 발상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특히 미디어의 보도는 항상 어느 쪽이 잘못되어 있다는 발상이 질게 나타나 있으며, 특히 중국의 견해가 과대평가에 빠져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중국에 접근하면 일본과는 멀어지고 한미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단순한 사고방식은 버려야 할 것이다. 또, 정상회담을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일본측은 결국 정상회담을 하지 못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뒤집어 이야기하자면 한국측은 아베 총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상대방의 탓으로 하는 사고가 상태화, 고착화되면서 만들어진 「상식」이 보도에도 투영되고, 국민여론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실에 근거한 다면적인 보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측 참가자: 한일 양국의 미디어는 서로 「각도」를 붙여서 반한과 반일을 등에 업고 보도해야 한다는 압력을 느끼면서 일상을 보내게 되었다. 나는 옳은데 너는 옳지 않다라고 언쟁하고 있으면 끝나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양국에게 좋은 기사를 써 갈 것이냐라는 공통의 과제를 가지게 된 것을 이번 논의를 통해 인식할 수 있었다.

한국측 사회자: 조금 전에 일본측으로부터 문화적인 차이, 역사적·전통적인 차이에 관한 지적이 있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항상 강대국에 둘러싸여 대국에 대항하면서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역사가 있다. 즉, 이웃 대국에 무릎을 꿇은 순간 목이 잘려 버리기 때문에 싸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던 한국이었기 때문에 소리 높여 주장하는 것이라는 측면을 역사적인 전통에서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또, 한국은 분단국가이고 미국과 동맹국가라는 사실을 잊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한미동맹관계가 강하기 때문에 일본과 문제를 일으켜도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다는 발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새우가 아니라 돌고래와 같은 존재라는 것도 인식해 주었으면 한다.

한국은 네 개의 대국에 둘러싸인 약소국이며,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의 이미지가 오랫동안 한국인의 뇌리에 새겨져 왔다. 그러나 나는 한국은 이제 19 세기말의 힘없이 외국 사이에서 꼼짝달싹도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고래까지는 아니더라도 돌고래 정도로까지는 성장한 나라로서 인식한다면 일본측이 제기한 가치관의 공유문제도 풀리고 「함께 바다를 헤엄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폐회사

전 남진(한국국제교류재단 경영이사):

한일 두 나라 사이에는 역사적인 경위가 있고, 그로 인해 다양한 문제도 경험하고 있다. 서로 이웃하고 있는 관계인 만큼 부담을 느끼고 상대방을 보는 눈은 복잡한 것이 될 수 밖에 없다. 그것을 미디어가 픽업해서 전달하는 구조가 양국관계에는 작동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 메커니즘에 주요 요인으로 관여하는 미디어의 역할은 한일관계에 있어서 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한-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는 실로 그와 같은 기본인식 아래 한일 두 나라의 저널리스트 여러분이 다양한 현안에 관해 의견교환을 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장으로서 기획되었다. 4 회째가 되는 이번 회의가 그와 같은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면 주최자로서 이 이상의 기쁨은 없을 것이다.

노가미 요시지(일본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

제 4 차 한-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는 과격한 논의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매우 성숙한 논의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50 주년에는 양국이 공동으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될지, 그 후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지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명확히 하고 의견을 수렴시켜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는 작업이야말로 중요하다.

세션 5: 「학생들과의 대화」 (특별세션)

한국측 사회자:본 세션에 참가한 것을 환영하며 솔직한 의견을 들려 주었으면 한다.

일본측 사회자:이 세션에서는 회의 전체와 마찬가지로 발언자의 비밀을 보증하는 채팅하우스 룰이 적용된다. 평상시 생활이나 공부 중에 느낀 것을 이야기해 주었으면 한다. 또 그결과로 양국의 출석자들 사이에 공통이해가 깊어지면 회의 전체의 이익도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측 발표 「한일관계와 언론의 자세」

한국측 발표자: 내년은 한일기본조약, 국교정상화 50 주년에 해당하는 해이다. 기념비적인 해답게 성대하게 축하하고 싶지만, 한일관계는 그다지 좋다고는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며,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정상회담도 하지 않았다. 한일관계는 우리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냉각화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작용되던 「북원력」도 효과가 없고, 경제관계에도 조금씩 그늘이 생기고, 양국 국민의 상호방문도 감소하고 있다.

양국의 상호인식이 악화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가 역사문제이다. 한국은 일본이 제대로 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문제시하며, 또 일본은 한국이 너무 과거사에 집착하고 있는 것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요컨대 현안과 인식의 차이가 서로에게 작용하여 양국관계 전체를 나쁜 방향으로 끌여가는 구도가 생기고 있다.

언론은 사회를 보는 창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언론은 무조건적으로 창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회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창의리가 흐르거나 휘어져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한국언론이 일본을 볼 때 그 창에 깨끗한 유리가 끼워져 있느냐라는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예를 들면 불필요하게 가치관이 포함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자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일례를 들면, 일본에 대해 「군사대국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도록 하자는 것인데, 기사나 사설에서 배제하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 또, 「보수화」는 객관적인 인식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워딩을 정리하는 실천을 하고 있으며, 중립적이지 않은 표현을 과장해서 쓰는 것이 조금씩 줄고 있다.

또 정확하지 않은, 혹은 왜곡된 보도가 나돌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미디어환경의 변화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뉴스의 첫 보도를 접하는 사람이 14%에 불과하다는 자료가 있다. 특히 젊은 세대는 SNS 나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일이 많다. 그 문제점으로는 정보가 도는 과정에서 자신의 시각이 대폭적으로 좁혀져 버리는 부분이 있다. 재빨리 편리하게 정보를 접하고 있다는 것은 실은 제 3 자의 관점을 경유해서 좁아진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것이다.

「젊은이들을 위한 대일보도의 사용설명서」라는 이름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다. 즉, 한일 양국의 미래를 짚어질 젊은이들이 이처럼 기울어진 시각, 왜곡된 관점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이다. 실은 노력을 하면 현재의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균형잡힌 관점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

먼저 첫 번째로 정보와 관점의 자원이 되는 정보원을 다양하게 가져 주기를 바란다. SNS 를 통해 날라들어 온 짧은 뉴스는 신문과 대조해서 보아야 한다. 또, 한마디로 신문이라고 해도 한국의 신문은 다양하기 때문에 적어도 두 종류에서 세 종류는 보아야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경험이다.

다음으로 거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일본의 교도통신 등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일본의 신문도 봐 주었으면 한다. 역시 입장이 다른 신문을 여러 개 대조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는 편중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역사에 대해 겸허하라는 것이다. 여전히 한일 두 나라는 역사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자국·자신의 민족에 대한 긍지, 자부심을 역사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고가 흐르고 있다. 성공한 역사건 실패한 역사건 각각에는 교훈이 있다. 성공이나 실패를 불문하고 역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며, 무리하게 자신의 시각에 맞추어 비틀 필요는 없는 것이다. 역사를 있는 그대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때 한국은 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는가, 어떤 과정을 거쳐 독립했는가, 그것을 나열해 놓고 봐 보자는 것이다.

일본이건 한국이건 과거의 일은 지금의 젊은이들이 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른들이 한 것이다. 거기에 얽매이기에는 젊은이들은 너무나도 젊고, 해야 할 일도 많다. 그리고, 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은 젊은이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길지 않다는 것도 부연해 두고 싶다.

일본측 발표 「미디어는 국경을 넘을 수 있는가?」

일본측 발표자: 「미디어는 국경을 넘을 수 있을까?」라는 테마로 이야기해 보고 싶다. 반기문 UN 사무총장, 그리고 세계은행의 김 용 총재는 두 사람 다 한국 출신이며,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활약을 하고 있다. 그리고, 김 총재는 미국 국적의 미국인이다. 다음으로 청색 발광 다이오드를 발명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나카무라 슈지 씨는 일본 출신이지만 국적은 미국이다. 그리고, 콜롬비아대학의 교수로 오래 재직했던 도날드 킨 씨는 동일본 대지진 후에 일본 국적을 취득해서 일본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미디어에 국적은 있는 것일까. 한일 양국 미디어의 보도를 보면, 일본의 미디어는 한일 두 나라 사이에 현안이 되어 있는 섬의 이름을 독도가 아니라 타케시마로 부르고,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사를 쓰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미디어는 섬의 이름을 타케시마가 아닌 독도로 부르며,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이 침략하려고 하고 있다고 글을 쓰고 있다. 왜 일본 미디어는 그렇게 주장하고, 한국 미디어는 그와 같은 기사를 써야 하는가.

EU 를 설립하여 통합의 길을 걷고 있는 유럽에서는 1980 년에 유럽의회에 제출된 빌헬름 한이 쓴 「한 리포트」가 유럽 방송의 미래를 결정짓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다했다고 얘기되고 있다. 이 「한 리포트」의 내용을 받아들여서 1982 년에 유리콘(Eurikon)이라는 실험방송이 시작되었고, 다섯 개의 나라가 1 주일씩 돌아가면서 방송하는 것에 성공을 거두었다.

이 실험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는 유로파(Europa)라는 위성방송이 1985~86 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때에 참가한 것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였다. 그리고 1989 년, 유럽위원회에서 「국경 없는 TV 지령」이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어느 나라에 있더라도 유럽공동체(EC) 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모든 가맹국의 방송을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국경 없는 TV 지령」에 의해 유럽에서는 TV 의 국경초월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얘기되고 있다. 그리고 1993 년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본방송인 유로뉴스(Euro News)가 출범하게 되었다. 프랑스의 리용에 본부를 두고 10 개의 방송국이 자금을 각출하여 13 개의 언어로 TV 방송을 하고 있다.

왜 이러한 일을 유럽은 했느냐. 하나는 이 1980 년대가 끝날 무렵 바로 그때 위성방송이 시작되었다는 배경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럽의 통합이라는 정치적인 동기부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유로뉴스가 시작된 1993 년은 바로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발효되었고 EU 가 설립된 해였다.

동아시아지역에서 같은 것을 실현해 볼 수 없을까라는 것이 나의 꿈이다. EU 처럼 지역통합은 아직 훗날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일본과 한국의 신문·TV 를 예로 들자면, 서로 기사를 교환교류, 혹은 프로그램이나 기사의 교환, TV 로 이야기하자면

공동제작과 같은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 유로뉴스처럼 「아시아뉴스」가 동아시아에서 실현된다면 언어는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영어의 4개 언어면 된다.

물론 실제로 미디어가 국경을 초월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지만 미디어가 국경을 뛰어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간단하게 국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 즉, 독자나 시청자들은 국경을 간단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다. 일본에 있으면 한국미디어의 신문이나 TV 보도를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볼 수가 있다. 이것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유명한 프랑스의 세균학자인 루이스 파스퇴르는 「과학에 국경은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라는 말을 남겼다. 국경을 넘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나라를 배반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나라의 아이덴티티를 버리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고,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지키고, 문화를 소중히 하면서 국경을 넘는 것이 미디어의 세계 혹은 미디어를 사용하는 젊은이들도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그에 따라서 상호이해가 깊어지는 것을 기대해 본다.

토론

한국인 학생 1:어떻게 하면 자신의 주체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을지 고민하던 차였기 때문에 특히 한국측 발표에 강한 인상을 받았다. 실은 어제 시바 료타로의 한국 인식에 대한 양극화된 관점에 관해 리포트를 썼는데, 시바 료타로에 대한 한국 학자들의 평가가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거기에 자신 나름의 의견을 담는 것이 힘들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나타내 준 것에 감사드리고 싶다.

나는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일본측 발표자에게 글로벌화에 대해 질문하고 싶다. 향후의 글로벌화에서는 국경 자체가 없어지고, 세계시민이라고 불려야 할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들이 활약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반 기문 사무총장처럼 자신의 국적보다도 세계시민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진 기자들이 함께 하는 미디어가 생기는 날도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금 더 상세하게 아시아뉴스의 탄생에 대한 전망을 들려주셨으면 한다.

일본측 발표자:동아시아에서 EU 같은 것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는 FTA 와 같은 경제통합도 필요할 것이고, 장래적으로는 안전보장을 포함한 정치통합도 요구될 것이다. 현재의 동아시아의 상황을 생각하면 아직 꿈의 또 꿈의 단계인지도 모르겠지만, 아시아에서는 공동되는 역사와 문화, 아이덴티티가 있다. 그것을 잘 공유해 간 결과 아시아뉴스가 탄생한다면 그것은 훌륭한 일일 것이다. 「동아시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다. 한국인으로서의 긍지, 문화, 역사를 소중히 하면서 동아시아인 혹은 세계시민으로서 살아 가는 양쪽을 실현할 수는 없을까라는 것이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이다.

한국인 학생 2:신문 또는 뉴스 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에서 SNS 를 통해 주고받는 일반시민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중에는 일본의 인터넷 우익처럼 극단적인 의견도 있어서 그것이 한일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도 들었다. 그러한 대중의 의견을 한일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처가 필요한지 알고 싶다.

일본측 발표자: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참고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정보를 토대로 판단하여 자신의 생각을 결정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보를 어떻게 선별해서 흡수할지, 혹은 차단해 갈 것인지는 각자의 책임에 맡겨져 있다. 힘든 작업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해 갈 수 밖에 없다.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양국관계를 악화시키는 극단적인 의견을 극복해 가는 것이 한일관계를 아래에서 지탱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한국인 학생 3:한일관계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적한 아시안 파라독스(Asian Paradox)의 패턴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 양국의 상호의존도가 날로 깊어지는 한편으로 군사·외교상의 갈등은 첨예화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소프트파워나 네트워크 거버넌스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활동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다행이라고 느끼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위에서도 나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역사와 영토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향후 이 부분이 큰 갈등의 요인으로 계속되리라 생각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사회나 미디어는 어떠한 실천을 해야 할 것인가.

일본측 참가자:바로 그 아시아 파라독스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 양국 국민, 혹은 정치가들 사이에서 보다 깊이 이해된다면 쌍방의 공통이해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 「돌파구」로써 재해의 공동관리와 같은 실질적 혹은 상징적인 분야에 목표를 정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일본측 참가자:일본의 젊은이들은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너무나도 역사를 모른다. 그러한 상황의 책임은 물론 정부에 있으며, 미디어에도 있으며, 연구·교육기관에도 있지만, 역시 젊은 세대가 과거의 역사와 현대의 일본을 더 이해하려고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인 학생 4:한국의 젊은이들은 한국의 신문도 잘 읽지 않기 때문에 하물며 일본의 신문을 읽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의 아이디어로 NAVER 라는 포털사이트의 뉴스스탠드라는 코너에 직접 기사를 싣거나 링크를 걸거나 해서 일본의 신문도 읽을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한국측 사회자:NAVER 의 뉴스스탠드에는 일본의 지지통신이 기사를 싣고 있는 것 같지만 일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향후에 기대하고 싶다.

한국인 학생 5:온라인 매체라는 것은 클릭수, 즉 구독율을 높이기 위해 자주 자극적인 타이틀을 붙이고 있다. 사진도 동영상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미디어측에서는 무언가 자정노력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

한국측 발표자:분명히 온라인에서 클릭수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부정확한 방법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최근에 온라인뉴스 사이트의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선정적이고 낚시성이 있는 기사는 일절 내지 않도록 방침이 개정되었는데, 다른 대형 신문사에서도 비슷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본래라면 자주규제 뿐만 아니라 법적인 규제도 필요하지만 아직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한국측 참가자: 젊은 세대는 꼭 지면으로 된 신문을 읽어 주었으면 한다. 신문이 어떤 뉴스를 화제로 삼아서, 또 어떤 식으로 다루는지는 인터넷신문을 통해서도 제대로 알 수 없으며, 또한 얻을 수 없는 지식도 많다. 인터넷신문에는 싸구려 기사나 낚시성이 농후한 기사가 많은데, 그것에 대해 불평을 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이 「정품」을 사용하고 무엇이 싸구려 모조품이고 무엇이 진짜인가를 스스로 판별할 수 있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측 사회자: 나도 동감한다. 정보의 홍수라는 것은 실은 정보가 없는 것과도 같다. 매체마다 근본적인 성격이 다르며, 지면구성이나 기사의 내용 이전에 제도권 속에서 미디어와 그 이외라는 분류에 관해서도 젊은이들이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일본인 학생 1: 발표 중에 국가 간의 사이가 나쁜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민간의 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이 있었다. 나는 민간끼리는 한일 두 나라가 좋은 관계를 쌓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거꾸로 그와 같은 시민차원의 활동이 국가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해 본다.

한국인 학생 6: 한일 양국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한 교류활동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체험한 것에 비추어서도 미디어에서는 민간교류나 학생 간의 활동이 그다지 보도되지 않는다. 그러한 활동의 대부분이 단기적이라는 점이 다루어지지 않는 이유일지도 모르겠지만, 거꾸로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미디어의 응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교류활동과 미디어 양쪽이 어떠한 노력을 하면 좋을지 알고 싶다.

한국측 발표자: 먼저 시민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정부 간의 관계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라는 질문에 관해서인데, 민간교류는 「기초」이며 그것이 두텁고 튼튼해짐에 따라 정부 간의 관계가 다소 악화되더라도 그것을 원래의 위치로 되돌리는 「복원력」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민간의 교류활동이 왜 보도되지 않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러한 교류가 한일 간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신문은 지면, 방송은 시간이라는 제약 안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보다 중대한 다른 사안을 다루게 되는 선택과정의 결과라고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한국측 사회자: 예를 들면 1998 년에 있었던 김 대중-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행동계획에는 한일 두 나라 간의 청소년교류 혹은 일본의 이공계 대학에 한국인 학생의 영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청소년 혹은 도시 간의 활발한 교류활동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한일 두 나라의 정부관계가 양호하지 않은 오늘날에도 그 영향이 전체에 파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하나하나의 활동이 신문에서 다루어지지 않을 만큼 작은 것이더라도 그 의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측 사회자: 회의 참가자 전원이 젊은 세대들이 한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고, 각자의

입장에서 업무에 임할 것을 약속했으면 한다. 그리고, 학생참가자들도 오늘 있었던 세션의 경험을 향후의 경험에 잘 살려 주었으면 한다.

발표 자료

세션 1: 「국교정상화 50 주년—과거와 미래 조명」

한-일 국교정상화 50 주년—과거와 미래 조명

I. 한일관계의 현주소

2012년 이래 한일관계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양국의 정상은 서로 대면조차 꺼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양국 국민의 서로에 대한 호감도도 거의 밑바닥에 와 있다. 역사인식을 둘러싼 대립은 역사쟁점을 넘어서 안보, 외교, 경제, 문화의 영역으로까지 걸잡을 수 없는 속도로 점차 확산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2015년은 한일국교가 정상화 된지 50 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로서 한편으로 반세기 한일관계사를 성찰하고 향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한일관계의 미래의 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2015년은 일본의 조선통치에서 해방된 70 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한국의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최근 불거진 일본과의 역사마찰에 주목하면서 2015년의 의미를 일본 제국주의로부터의 탈 식민 해방 70 주년에 초점을 맞추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과연 2015년은 한일 50 주년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해방 70 주년이 될 것인가? 지금 우리는 기로에 서 있다.

한일관계에서 역사(영토) 마찰 문제는 여전히 미래지향적 양국관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옥죄는 최대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점차 확산, 심화되고 있는 역사/영토 마찰 문제를 어떻게 다뤄나갈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이야말로 급무가 되고 있다. 당분간 한일관계에서 역사(영토) 문제를 둘러싼 외교적 마찰과 갈등은 반복되고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일 간의 역사/영토 마찰은 지도자의 리더십과 전략적 대응 노력 그리고 지식인이나 미디어의 역할 여하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 빈도와 심도가 조절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한일 간 역사마찰의 발생 원인은 한일 양측에 공히 존재한다. 먼저 일본 측의 원인은 한일관계에서 과거사, 영토 문제가 갖는 이슈의 중요성이나 민감성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무관심, 무신경 한데서 찾을 수 있는 반면, 한국 측은 지나치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고 과잉 대응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일본은 과거사 문제나 독도 관련 움직임이 한국의 대일관계나 대일정서에 얼마나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과연 어느 정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일본의 지도자들은 독도 문제나 과거사 문제가 지닌 폭발성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거나 아니면 심각성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도문제나 과거사 문제가 가져올 한일관계의 파장에 대해 일본 지도층은 무신경하거나 무관심한 대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일부 지도자들은 헌법문제, 자위대문제, 대북정책, 중국정책 등을 계기로 심화되고 있는 일본 우경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과거사 갈등이나 영토문제를 부채질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인다. 일부 우익단체나 보수적 색채의 미디어는 한국과의 역사마찰을 선동하고 자극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이후 일본의 우익세력이나 우익적 성향의 각종 미디어는 공공연하게 한국에 대한 악의적인 언행을 일삼고 있다. 이른바 코리아 타운에서의 재특회(재일교포의 특권을 저지하는 모임)의 활동은 헤이트 스피치를 넘어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역사마찰 격화의 한국 측 요인으로서는 과잉 대응의 구조와 대중 영합주의를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신문, 방송 등 한국의 미디어는 일본의 역사인식, 안전보장, 영토분쟁,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된 움직임을 아베 정권의 위협한 우경화 노선이라는 단순한 틀로 재단하여 대대적으로 비난 보도하고 있다. 사실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분쟁, 역사교과서 문제 등의 과거사 갈등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외교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과거사나 독도와 관련된 이슈는 늘 한국에서는 매우 민감한 이슈가 되고 초강경 대일정책을 불러일으킨다. 정권에 따라서 다소의 강약 차이는 존재하지만 어느 정권도 일본과의 역사마찰이 발생하면 강경한 대응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존재한다.

한일의 역사인식을 둘러싼 근본적 차이나 독도문제에 관한 상반된 입장과 최근 아베 정부의 박근혜 정부의 갈등상황을 고려할 때 당분간 양국 간의 외교적 대립과 마찰의 빈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이러한 마찰을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나 해법은 단기적으로 볼 때 존재하지 않는다. 독도, 역사 마찰이 격화되면 될수록 실효성 있는 해법이 제시되기는커녕 양국 간 국민감정의 충돌만을 초래하여 양국관계 전반에 악영향이 파급되는 사태를 막을 수 없게 될 것은 자명하다.

역사마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인 일본의 겸허한 태도와 피해자인 한국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관용적 태도가 요청된다. 더불어 한일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미래지향적인 관점이다. 무엇보다도 한국과 일본은 기본적인 가치와 보편적 규범을 공유하는 국가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가치와 규범의 공유야말로 한일관계와 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공동번영을 지향하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서서 본고에서는 한일 간 역사/영토 마찰의 빈발 배경을 구조적인 관점에서 살펴본 후, 이어서 2012년 말 아베 정권의 출범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는 한일관계의 악화 현상에 대한 원인진단을 시도한다. 또 현재의 한일관계를 타개하고 개선하기 위해 무엇이 요구되고 있는지를 실천론적인 입장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II. 한일관계 ‘65년 체제’ 50년의 총괄

1. 한일회담과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한일회담은 양국 간에 존재하는 과거사 인식의 깊은 괴리를 극복하고 새로운 우호협력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교섭이었다. 그러나 14년간의 마라톤 교섭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과거사 인식의 근본적인 차이는 좁혀질 수가 없었다. 35년간의 식민통치를 원천적으로 불법, 부당한 것으로 보는 한국 측의 인식과 그것을 적법하고 합당한 것으로 보는 일본 측의 인식이 외교협상을 통해 근접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이처럼 과거 일본의 조선통치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현격한 인식 차로 말미암아 이 교섭은 심각한 갈등과 대립을 겪은 후에야 타결될 수밖에 없었다.

14년간의 회담 전개과정에는 다음의 두 가지의 상반된 힘이 지속적으로 작용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즉, 회담을 타결로 이끌어 가는 힘은 안보 논리와 경제 논리에 의해 주어졌다. 안보 논리와 경제 논리가 한일관계의 구심력으로 작용하여 교섭의 타결을 촉진시켰다. 반면 과거사 청산 논리는 회담을 대립과 갈등으로 끌고 가는 힘으로 작용하였다. 교섭을 결렬의 방향으로 끌고 가는 원심적인 힘의 원천은 과거사 청산의 논리에 의해 주어졌다.

냉전체제와 연계된 안보논리는 한편으로 전후 냉전체제하에서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라는 형태로 작용해 왔다. 즉, 미국은 회담의 개시 단계에부터 타결 시점에 이르기까지 한일회담의 타결을 위해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애당초 한일 양국을 회담의 테이블에

않힌 것이 다름 아닌 미국이었으며 나아가 반복되는 회담의 중단과 결렬사태를 회담재개와 타결로 이끌어가기 위해 때로는 배후에서, 때로는 표면적인 압력을 가한 것도 미국이었다. 일본 측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회담타결의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 것은 안보적 고려였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조선은 일본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비수”라는 인식은 명치유신 이래 일본의 한반도 정책에 흐르고 있는 일관된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박 정권 또한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국이 희구하는 한일국교 정상화를 달성할 필요성을 느꼈다.

안보논리와 더불어 두 번째의 에너지 공급원은 경제논리였다고 생각된다. 경제논리가 회담타결의 주요한 추진력으로 작용했다는 점은 1950 년대에 담보를 면치 못하던 한일교섭이 1960 년대 들어서 급격하게 타협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사실을 보아도 명백하다. 사실 1950 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일 경제관계는 미국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것에 불과했으며 상대를 경제적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만큼 긴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1960 년대에 접어들면서 양국의 경제적 여건은 크게 달라졌다. 특히 한국의 경우 1950 년대 말부터 미국으로부터의 원조가 양적으로 크게 삭감되는 한편 질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되면서 그로 인한 경제적 침체와 불황이 심각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미국은 전후 대소전략의 일환으로 천문학적인 숫자의 경제 원조를 서유럽을 비롯한 동맹국에 쏟아 넣은 결과 달러의 과도한 방출로 인한 후유증에 직면하게 되었다. 미국은 1950 년대 말부터 달러방위라는 명목 하에 동맹국에 대한 경제 원조를 대폭으로 감축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도 그 예외는 아니었다. 또 케네디 정권이 들어선 이후부터는 원조의 성격이 소비재 위주의 무상 원조방식에서 개발을 지원하는 차관 형 원조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되자 한국으로는 대미 의존 형 경제체질을 탈피하여 자립적인 산업화의 기반을 구축하여 본격적인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때마침 1961 년 5 월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는 정권의 제일목표로서 조국의 근대화와 경제개발을 내걸고 야심찬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본과 기술의 부족에 직면하여 고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곤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박 정권이 구상한 것이 다름 아닌 대일 관계의 타결노선이었다. 박 정권은 만약 대일회담이 타결된다면 상당한 액수의 청구권 자금이 들어올 것이고 더 나아가 일본과의 경제관계가 정상화된다면 다량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경제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고 계산한 것이다.

더욱이 미국은 박 정권에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스스로의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도록 권유하는 한편, 대일회담의 타결을 통해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일본으로부터 도입하도록 강력한 압력을 행사하였다. 미국은 박 정권이 대일회담의 타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경제 원조를 중단 내지 삭감할 것이라는 압박을 가했다.

한편 일본의 경우도 회담타결의 기운이 무르익기 시작한 1960 년대로 접어들면서 한일관계를 경제적인 각도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입장과 다를 바가 없었다. 안보투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물러난 기시 정권의 뒤를 이어 등장한 이케다 정권은 될 수 있으면 국내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안보 정치적 쟁점을 회피하고 그 대신 정치의 중심축을 경제로 옮겨놓는 쪽으로 정치노선을 설정했다. 이케다 수상이 야심적인 정책으로 내놓은 ‘소득배증계획’이야말로 이케다 정치노선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한일회담의 최대 난제였던 재산청구권 문제가 이케다 정권하에서 경제협력방식에 의해 타결되었다는 점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이케다 수상은 한일회담의 본질을 경제문제라고 인식하고 대한관계를 경제외교의 일환으로 풀어 나가려고 시도하였다. 즉, 이케다

정권은 청구권 문제의 본질이 과거사의 청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제적 이해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케다 정권이 청구권의 해결방안으로 고안해낸 것이 경제협력방식이었다. 경제협력방식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한국의 청구권 요구를 명목과 지불의 둘로 나누어 지불 액수에서는 한국의 요구에 최대한 접근하고 명목에 관해서는 사죄와 보상의 의미를 배제하는 대신 경제협력의 의미를 부여한다. 둘째, 한국에 일본의 공업제품과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장래 한국에 대한 경제 진출의 토대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경제협력방식의 요체는 지불의 방식을 자본이 아닌 공업제품과 용역으로 한다는 데 있었다. 경제협력방식은 전후 일본이 인도네시아, 버마, 필리핀,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전후처리에도 적용했던 방식이었다. 일본은 이러한 전후처리의 방식을 오히려 동남아시아에 대한 경제 진출을 적극화하는 토대로 활용해 왔다. 일본은 한국에게도 이 방식을 적용시키고자 의도했던 것이다. 경제협력방식이 채용된다면 일본으로서도 결코 경제적으로 손해 볼 것이 없으며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본의 계산이었다. 이처럼 한일회담의 타결은 냉전적 상황과 그에 기반을 둔 안보논리 및 경제논리에 의해서 촉진되었을 뿐 정작 회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사 청산의 논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한일회담의 타결과 한일조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정상적인 한일관계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남아있는 것은 회담타결에 있어서 과거사 처리문제가 유보된 채 안보와 경제논리에 입각한 편의적인 해결만으로도모였기 때문이다. 결국 지루하고도 긴 교섭을 통해 양국 정부가 도달한 해법은 과거사 청산 문제에 대한 정면 돌파를 회피하고 유보하는 선에서 타협을 모색한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타협은 한일기본조약의 비준국회에서 가장 극명하게 표출되었다. 즉, 한일 양국 정부는 비준국회에서 한일회담의 최대 초점이 되었던 청구권 문제와 과거인식 문제에 관해서 전혀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다.

한국병합 조약에 관해서 한국정부는 ‘이미 무효이다’라는 규정을 ‘당초부터 원천적으로 무효였다’라고 해석한데 대하여 일본정부는 ‘지금은 무효이나 당시는 유효하고 합법적이었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일본이 한국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유상, 무상의 자금지불명목에 대해 한국정부는 ‘과거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해석한 데 반해서, 일본정부는 어디까지나 청구권과는 관계없이 ‘한국의 경제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협력’이라고 해석하였다. 과거 청산이라는 핵심문제에 관해서 한일 양국의 이와 같은 상반된 해석은 한일조약이 얼마나 본래의 모습과 괴리된 일그러진 전후 처리였는가를 스스로 말해주고 있다 할 것이다.

2. 한일수교 50년의 조망

1965년 국교가 정상화된 이래 한일관계의 역사를 조망해보면 시대 변천에 따라 한일관계의 성격이 변화무쌍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론적인 차원에서 한일관계의 존재방식을 종속변수로 놓고 생각해 보면, 그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대체로 동북아시아 국제시스템과 양국의 파워 관계 그리고 양국의 국내체제가 될 것이다.¹

¹ 전후 한일관계에 대한 분석 틀에 관한 기존 논의는 이하를 참고. 이원덕 「구조전환기의 한일관계: 쟁점과 과제」 장달중. 오코노기마사오 『전후 한일관계의 전개』(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5); 최상용, 이원덕, 이면우 『탈냉전기 한일관계의 쟁점』(집문당, 1998); Koh, Byung Chul, *Between Discord And Cooperation: Japan and The Two Koreas*(Yonsei University Press, 2007); 木宮正史 「日韓關係の力学と展望: 冷戦期のダイナミズムと脱冷戦期における構造変容」, 金慶珠, 李元徳 編 『日韓の共通認識: 日本は韓国にとって何なのか?』(東海大学出版会, 2007)

물론 한일관계의 존재방식은 이러한 구조적 변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구조적 변수와 더불어 한일 양국 정부 지도자의 리더십의 발휘 양상과 리더십의 발휘를 가능케 하는 국내정치의 역학(여론 포함) 또한 한일관계의 성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보면 한일관계의 존재방식은 한편으로 국제시스템, 양국의 파워 관계, 양국의 국내체제라는 각 수준의 구조적 요소에 의해 제약을 받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양국정부 지도자의 리더십이라는 행동적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

(표-1)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요소

동북아 국제 체제	일본 국내체제	한국 국내체제	양국의 역학 관계
냉전 (1965-1989)	자민당 1 당 우위 체제 (55 년 체제)	개발독재·권위주의 체제	수직적 관계 · 비대칭
탈냉전 (1990-2009)	자민당 중심의 연립체제	민주화 · 다원주의화로 이행	수직적 관계에서 상대적인 수평화로
미중 양강 체제로 이행 (2010-?)	민주당 · 자민당 중심 에서 자민당 우위로 복귀	양당 체제 (민주주의 · 시민사회 활성화)	상대적 균등화

위의 표는 한일 간 국교가 정상화된 1965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한일관계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수를 대략적으로 정리해 본 것이다.

먼저 제1시기는 1965년부터 1989년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한일관계가 냉전체제의 강력한 영향권 속에 존재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하여 정치 안보, 경제적 결속을 강화시켜 나갔다. 소련-중국-북한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공산진영의 북방 삼각동맹과 대결하기 위해 한일 양국은 자유주의 진영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려는 미국과의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추구했다. 이 시기는 한일관계에서 반공 연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양국 간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 대립은 최대한 억제되었고 수면 하에 잠복될 수밖에 없었다.³

제2시기는 1990년 이후의 시기로 이 기간 동안 한일관계는 냉전질서의 해체로 인해 반공에 기반 한 결속력이 급속도로 이완되었다. 그 동안 잠복되었던 역사-영토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표면 위로 분출됨으로써 양국 간의 역사마찰이 격화되었다. 한국의 정치사회 민주화와 한일 간 파워 격차의 축소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국의 강경한 대일정책을 추동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역사마찰을 심화시켰다. 한편 이 시기를 거치면서 한일 양국 간에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양국 관계라는 인식도 강화되었으며

²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소 이외의 정치 리더십의 역할에 주목한 연구로는 김호섭, 「한일관계 형성에 있어서 정치 리더십의 역할」 『일본연구논총』 Vol.29(2009년 여름)를 참조.

³ 냉전시기 한일관계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Lee, Chong-Sik *Japan and Korea: the Political Dimension*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85); Cha, Victor, D., *Alignment Despite Antagonism: the United States-Korea-Japan Security Triangle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시민사회 간 교류는 더욱 활성화 되었다.

제3시기는 대체로 2010년 이후의 시기로 이 시기를 통해 한일관계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2010년을 전후하여 한일관계를 규정하는 구조적인 요소에 커다란 변화가 도래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경우에 따라서는 수 년 동안 급격하게 단기적으로 진행되었다기보다는 냉전체제의 붕괴 이래 1990년대부터 장기적인 시간 축 속에서 지속되어 온 추세적인 변화로도 볼 수 있다.

21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바야흐로 미중 양강 구도로 급속도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즉, 21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대적인 힘의 저하 속에서도 여전히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 빠른 속도로 강대국으로 대두하는 있는 중국, 양국 중심으로 새롭게 짜여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0년의 2분기 통계에 따르면 국민총생산(GDP) 규모에서 중국이 일본을 앞지르는 역전 현상이 벌어졌고⁴ 이후 중일 간 경제규모의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는 거시적으로 보면 중국이 120년 전 청일전쟁에 패배한 이래 일본을 경제 규모에서 앞지른 매우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장기적인 세계사의 관점에서 보면 19세기 후반과 20세기에 걸친 150년이라는 기간은 어쩌면 예외의 시대였는지도 모른다. 이 예외의 시대 150년 간 중국은 근대화에 실패하여 세계 열강국가에게 굴종을 강요당하며 강대국의 지위를 박탈당한 반면, 일본은 20세기의 전반기에는 군사대국으로, 그 후반기에는 경제대국으로서 위용을 떨쳤다.⁵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 일본은 심각한 재정적자, 성장 동력의 상대적 상실, 고령화-저출산으로 상징되는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힘의 상대적 저하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본은 예외의 150년을 경과하여 본래의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⁶

1990년대 이후 한일 이국 간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점차 이동하게 된 점 또한 양국관계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한국을 지배하던 80년대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한일관계는 전형적인 약소국과 강대국 간의 비대칭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가령 과거사 문제만 하더라도 이 시기 한국정부는 대일관계 악화가 초래할 악영향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과거사 쟁점이 핫 이슈로 부각되는 것을 꺼려하여 일본에 문제제기 자체를 억제하거나 혹은 문제가 되더라도 이를 조기에 수습하고자 노력했었다. 당시 한국정부는 과거사 문제보다 일본과의 안보적 협력이나 경제협력을 획득하는 일에 외교적 우선순위를 두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당시 한국정부는 북한과의 첨예한 군사적 대결구도 하에서 주요우방국인

⁴ 2010년 2분기(4~6월),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처음으로 중국에 역전돼 세계 2위 경제대국 자리를 중국에게 내줬다. 이는 일본이 1968년 독일(당시 서독)을 제치고 세계 2위에 오른 지 42년 만이다.

⁵ 앵거스 매디슨의 역사통계에 따르면 구매력 기준으로 보았을 때 1820년 당시에도 중국은 세계 GDP의 32.9%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계하고 있다. 한편 2030년에는 중국이 23.8%의 지분을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일본은 3.6%만을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Angus Maddison, "Shares of the Rich and the Rest in the World Economy: Income Divergence Between Nations 1820-2030" *Asian Economy Policy Review*, 2008(3); 田中明彦 지음, 이원덕 역 『포스트 크라이스의 세계』(일조각, 2010) pp.76-79

⁶ 2010년을 계기로 중국이 국내총생산액 규모에서 일본을 능가하게 된 현상을 두고 일본이 주도한 동북아의 근대사는 서서히 막을 내리고 중국이 군림하는 새로운 동북아의 현대사가 개막되었다고 진단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전개를 동북아시아의 복원 혹은 전근대 국제질서로의 복귀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일본과의 우호 협력관계를 해칠 수 있는 대일행동을 자제하는 자세를 취했다.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자본과 기술에 의존하는 바도 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래 한국은 꾸준한 고도경제 성장을 추진한 결과 마침내 선진경제국으로 도약했으며 한편으로 80년대 후반 이래 정치사회적 민주화의 성과도 착실하게 달성하였다. 특히 1990년대 한국의 OECD가입은 한국이 비로소 선진국의 일원으로 진입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여겨졌다. 이후 한국은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를 통해 정치적 민주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경제적으로도 명실 공히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 한국의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성장은 더욱 가속화 되어 2010년 마침내 G20의 일원이 됨으로써 세계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처럼 한국이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룩함에 따라 한국 국민들은 국력신장을 바탕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수평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1990년대 이후 한일 양국 간 관계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가치를 공유하는 양국관계로 발전하였다는 사실은 향후 한일관계의 기본성격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의 의미를 지닌다.⁷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은 군부 권위주의 체제를 타파하고 민주화를 착실하게 달성시킨 결과, 선거에 의한 수차례의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룩함으로써 민주주의적인 정치체제를 안착시켰다. 기본적인 인권은 놀라울 정도로 신장되었으며 사회경제적인 다원화, 자유화도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 이로써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기본적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와 규범을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선진 민주국가로 발돋움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뤄진 한일의 가치체계 및 규범의 수렴 현상은 양국의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의 굳건한 토대가 되고 있다.

안보적 차원에서 보면 양국은 전후 줄곧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안전보장 정책의 중핵으로 삼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냉전체제 하에서 한국과 일본은 공히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 국가로 취급되었으며 냉전이 해체된 이후에도 미국에게 있어 한국과 일본이 지니는 군사 전략적 가치는 여전히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미국과의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각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시스템의 담보를 보장하는 체제 안전판으로서 간주되고 있으며 대외적 군사위협으로부터 평화와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벽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일 양국은 경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양국은 전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경제 질서 속에서 국가주도형 발전 국가 모델을 지향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양국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키움으로써 공산품의 해외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을 꾀하는 국가발전 전략을 취해 왔다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양국은 급속하게 글로벌화 하는 세계경제에 적응하기 위해 개방과 경쟁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는 국가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점에서도 큰 차이는 없다.

민주와 자율의 가치에 기반을 둔 시민사회가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 또한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이 지니는 중요한 유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양국의 시민사회는 정부 간 관계 못지않게 90년대 이후 매우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 간 시민사회의 교류 기반은 국익을 넘어선 인권, 평화, 환경, 인간 안전보장 등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임은

⁷ 오코노기 마사오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평: 체제마찰에서 의식공유로」, 장달중, 오코노기 마사오 『전후 한일관계의 전개』(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5)

말할 나위도 없다. 특히 근년 들어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 간 교류는 엄청난 폭과 속도로 발전되고 있는데 이는 향후 한일양국의 국익을 넘어선 보편적 규범과 가치의 공유 기반이 획기적으로 넓어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한일양국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안전보장, 경제체제, 시민사회 등 제반 영역에서의 체제 수렴현상 또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왔음이 확인된다. 이는 향후에도 한일관계의 지속적인 우호 협력적 발전의 가능성을 담보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은 규모와 질적 수준이라는 양면에서 볼 때 정치적 민주주의와 선진적인 시장경제, 자유로운 시민사회를 지니고 있는 동아시아의 핵심적인 양국 관계라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III. 한일 역사마찰의 구조적 배경

한일관계의 최대 갈등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독도, 역사인식을 둘러싼 마찰은 경험적으로 볼 때, 그 빈도와 심도의 양 측면에서 1990년대 이후 한층 격화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도 수그러들기는커녕 더욱 증폭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일관계가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보다 크게 작용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냉전종결에 따라 한일관계의 갈등 요소는 오히려 증폭되었다. 냉전시기 한일 간의 결속을 강화시켰던 요인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하에서의 반공 연대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냉전체제 하에서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대 공산권 봉쇄전략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국제정세 하에서 한일 간의 독도 및 역사인식을 둘러싼 갈등은 잠복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냉전체제의 붕괴로 그 동안 잠재되어 있던 민족주의적 갈등 요소는 여과 없이 표면으로 분출하게 되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동북아 지역의 국제체제는 큰 지각변동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른바 국제정치이론에서 말하는 힘의 전이(Power Transition)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강대국으로서의 급부상과 일본의 상대적 힘의 쇠퇴 그리고 한국의 미들 파워로서의 등장이 그것이다. 바야흐로 동북아지역에는 미중 양강 구도가 서서히 등장하고 있고 이는 한일관계의 성격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어떤 의미에서 2012년 이후 격심한 한일, 중일 간의 대립과 마찰이 벌어진 것은 동북아지역의 세력권이 현상과 더불어 한중이 각국에서 일어난 정권교체가 동시 진행하면서 나타난 이른바 세력균형의 유동화에서 그 구조적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일 양국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한일 간에는 정치인, 경제인의 인적 채널 및 네트워크에서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90년대 이후 양국의 잦은 정권 변동과 정치인의 세대교체에 의해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형성 유지되어 왔던 정치인 간의 비공식 인맥관계는 단절되었다. 1965년 국교수립 후 한일 정치인 간에는 수많은 공식, 비공식적 채널이 잦은 회합이나 긴밀한 의견교환을 통해 민감한 정치현안이나 갈등 사안은 막후에서 조정, 타협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는 점차 약화되었고 2000년대 이후에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거나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 정치인 간의 교류나 접촉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갈등 발생 시 문제해결 능력은 급격하게 떨어졌다. 한일관계는 더 이상 특수한 관계가 아닌 보통의 이국 간 관계로 변화되었고 이에 따라 양국 간 현안은 정치인들보다는 외무관료의 손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정치인의 네트워크가 약화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시민사회, 지방자치체, 기업 차원의 교류는 폭발적으로 증대했다. 이처럼

한일관계가 보통의 관계로 변화되면서 갈등을 수습하고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정치적 메카니즘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셋째, 한일 간의 이국 간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점차 이동하고 있다는 점 또한 양국관계를 이완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1960년대 이래 한국은 꾸준한 고도경제 성장을 추진한 결과 마침내 선진경제로 도약했으며 한편으로 80년대 후반 이래 정치사회적 민주화의 성과도 착실하게 달성하였다. 1990년대 한국의 OECD 가입은 한국이 선진국의 일원으로 진입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단시일 내에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룩함에 따라 국민들은 국력신장을 바탕으로 한 보다 당당한 외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강화되었다.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한국을 지배하던 시대만 하더라도 한일 간의 역사문제가 뜨거운 외교 쟁점으로 등장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한국정부는 대일관계 악화가 초래할 악영향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과거사 문제가 핫 이슈로 부각되는 것을 꺼려하여 문제제기 자체를 억제하거나 혹시 문제가 되더라도 이를 조기에 수습하고자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정부는 북한과의 침예한 군사적 대결구조 하에서 주요한 우방인 일본과의 우호 협력관계를 해칠 수 있는 대일행동을 자제하는 자세를 취했다. 산업화와 고도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자본과 기술에 의존하는 바가 컸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일본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일본의 보수정치세력과 한국의 집권층이 밀접한 인적 유착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 또한 관용적인 대일태도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한국 국력의 신장과 사회 정치의 민주화가 동시 진행되면서 대일 자세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민주화 이후 한국정부는 폭발적으로 표출되는 국민들의 대일 감정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 대일감정을 활용한 강성 대일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민주화와 정치권의 세대교체에 따라 그 영향력이 강화된 한국의 젊은 세대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강렬한 민족주의적 정서를 표출하며 대일정책에 있어서 강경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넷째, 일본국내적 요인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90년대 후반 이후 일본의 정치적 지형은 보수 내셔널리즘이 날로 강화되는 일로를 걸어온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에서는 이제 평화헌법 개정론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으며 자위대의 보통 군대화 움직임 또한 당연한 변화로 인식되고 있다. 수상 및 각료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비판 움직임도 상당히 무뎠다. 국민의 역사인식도 2000년대 이후 점차 보수적인 방향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현 주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마디로 평화국가로부터 군사적 보통국가로의 탈바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일본국민은 큰 저항 없이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보수우경화 경향은 세대교체에 의해서 영향 받은 바 큰 것으로 이해된다. 전후세대 정치인들은 미일동맹 중심의 강성 외교안보 정책의 추진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 중국 등에 대한 근린 외교는 그 비중이 약화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독도문제나 역사마찰 로 인한 한일관계의 악화는 이들에게 그다지 심각한 외교현안이 되지 못한다. 전후세대 일본인들은 과거 역사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일반적으로 과거 식민통치와 침략의 아시아에 대한 침략역사에 대한 속죄의식을 지니고 있지 않다. 따라서 영토문제나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과 행동을 취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이러한 경향은 민주당 정권 초기 2년간 잠시 주춤했으나 2012년 아베 정권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정점에 달한 느낌이다. 2012년의 가을 중의원 선거에서의 아베 신조가 이끄는 자민당의 압승과 2013년 여름 참의원에서의 자민당의 승리는 일본정계를 사실상 우파 보수 세력 일색으로 변화시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간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견제

역할을 담당했던 이른바 진보-리버설 세력은 고령화, 약체화되었고 야당은 지리멸렬하였다. 게다가 정계의 이러한 우경화 추세에 대해 일정한 비판과 자정기능을 수행해 왔던 시민사회 세력도 매우 약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우익적인 성향의 정치지도자들이 정계의 전면에서 등장하여 역사 퇴행적인 언행의 릴레이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군국주의 일본의 침략과 지배의 역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이 이에 대해 극단적인 경계와 우려를 지니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IV. 역사마찰의 원인 진단

최근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필자는 한마디로 양국 지도층 간의 소통 부재와 양국의 미디어 보도를 경유하여 나타난 국민 레벨의 극단적인 상호인식의 확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필자가 보기에 한일관계의 극단적인 악화는 존재론적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인식론적인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여기에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인식론의 횡행 속에서 양국의 외교정책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전략적인 관점이 무시되거나 전략적인 사고 그 자체의 영역이 점차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한마디로 아베 총리가 지배하는 일본이 위협한 우경화의 길로 치닫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국인의 이러한 인식에 불을 당긴 것은 2012 년의 자민당 총재 선거와 중의원 선거에서의 아베 자신의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고노담화 철회 가능성을 언급하였고 일본 정부의 반성-사죄론적인 자세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무라야마 담화를 수정하여 2015 년 새로운 역사담화를 내놓겠다고 발언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는 일본의 전후 정치에서 조심스럽게 다뤄져 왔던 헌법개정, 안전보장 정책의 전환을 선거 공약으로 내놓고 이른바 전후 체제로부의 탈각, 일본을 되찾자는 슬로건을 속속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의 미디어는 일제히 아베 정권 등장 그 자체를 매우 위협한 조짐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아베가 이끄는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감을 부추기는 언설을 쏟아내었다.

마치 이러한 인식을 확인이라도 해 주듯이 2013 년 일본의 정계에서는 문제발언이 속출하였다. 아베 총리의 침략전쟁 정의 발언, 하시모토 시장의 위안부 발언, 아소 부총리의 나치식 개헌 발언 등이 이어졌고 마침내 12 월에는 내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단행하였다. 더욱이 2014 년 6 월 고노담화의 검증결과 발표는, 그렇지 않아도 아베정권의 역사인식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컸던 한국 국민을 더더욱 격분시키기에 충분했다. 설상가상으로 아베 정부는 일본국민의 과반수에 가까운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헌법해석의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일련의 조치를 서두르고 있다. 일본판 NSC 의 창설에 이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가능케 하는 일련의 정책 전환 움직임이 가속화됨에 따라⁸ 한국의 아베 정부에 대한 인식은 경계론을 넘어 위협론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역사 수정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아베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에 대해 한국 국민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⁸ 이러한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전후 보수적 정치세력이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이른바 군사적 보통국가로의 행보로 이해된다. 또 한편으로는 급부상하는 중국과의 센카쿠 충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나름의 대응의 측면과 더불어 힘의 상대적 쇠퇴 속에서 아시아로의 회귀를 추구하는 미국과의 동맹관계의 재조정이라는 틀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물론 이러한 한국의 일본 인식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한국의 대일인식의 배경에는 식민통치의 암울했던 기억이 여전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편견과 선입견이 앞서게 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한국의 일본 인식에는 아베 총리의 정치적인 DNA 를 우익적인 것으로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파악하고 있는 특징이 보인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에서는 아베 총리가 주도하는 역사관련 행보,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 안전보장 정책의 전환 시도 그리고 영토정책을 우경화라는 프리즘을 통해 하나의 위험한 패키지로 보는 경향이 농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수상과의 정상회담을 꺼리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한국 미디어 및 국민들의 일본 인식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일본의 한국인식에도 지나친 단순화와 객관성의 결여라는 문제가 존재한다. 일본의 한국인식이 최근 급속하게 부정적으로 기울게 된 것은 아마도 2012 년 여름 이명박 대통령의 전격적인 독도방문과 천황사죄 발언 그리고 일본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저평가 발언이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고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2011 년 8 월) 대법원의 판결(2012년 5월) 이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압박이 가중되고 징용징병 피해자의 잇따른 보상 요구 움직임이 한국 국내에서 표면화되면서 일본사회 일각에서는 일종의 한국에 대한 사죄피로 현상 내지 혐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인식의 이면에는 최근 한국이 경제, 산업, 문화, 스포츠 등 몇몇 분야에서 일본의 강력한 경쟁국, 경합 상대로 등장하게 됨에 따라 과거 수직적이었던 양국관계가 수평적인 것으로 바뀐 것에 대한 인식의 부적응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사회에는 바야흐로 미들 파워 한국의 대두를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불편하게 느끼는 정서가 서서히 표면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본의 부정적 한국 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마도 한국의 중국 경사론일 것이다. 특히 이러한 인식이 강화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박 정부 수뇌부의 일련의 외교행보 및 대일발언에서 비롯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전제되지 않은 한,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가 곤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발언한 바 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미국, 중국, 유럽의 주요 국가와이 정상 외교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공공연하게 일본의 역사인식을 비판한 것에 대한 불쾌감이 확산되었다.

또한 역대 대통령과는 달리 박 대통령은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고 더욱이 일본보다는 중국을 중시하는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이른바 일본경시 내지 일본 이탈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인식이 일본사회 전체에 만연하게 된 것이다. 일본의 미디어와 우익계 잡지는 한국의 이러한 대중 경사 경향을 마치 한국이 과거의 사대주의 외교로 회귀하고 있는 것인 양 묘사하는 논조로 보도하는 경향조차 보이고 있다. 말하자면 박근혜의 대중외교를 한국이 중국에 달라붙어 일본을 사사건건 비난하는 모양새로 비아냥거리는 인식조차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대중인식은 한 마디로 중국 위협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은 그 위험한 중국을 너무도 모르고 순진하게 보고 있다는 사고방식이 일본사회에 횡행하고 있다. 최근 센카쿠를 둘러싼 중일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일본인들은 중국을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고도 경제성장과 정치군사 대국화를 달성했지만 그 내면에는 사회경제적 격차, 정치적 독재와 부정부패, 민족문제, 버블경제 등 많은 모순과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한국은 그러한 중국에 대한 경계는커녕 역사인식 문제

등에서 일종의 반일연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인식이 일본의 험한 정서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⁹ 이러한 일본의 우려는 2014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및 정상 간의 역사인식에 문제에 관한 공감 형성 및 언급에 의해 더욱 첨예화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최근 1년 반 사이에 극단적인 경향으로 치닫고 있는 양국 간의 상호인식은 상당부분 상대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양국의 뒤틀린 상호인식이 점차 수그러들기는커녕 시간이 경과하면서 더욱 악순환의 길을 걷고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양국 미디어의 편향적인 보도 경향과 더불어 양국 정치지도자 간의 의사 소통과 직접 대화의 부재가 그것이다.

V. 역사마찰의 해법 모색

최근의 비정상적인 한일관계 악화를 극복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조기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당장 공식방문에 의한 정상회담 개최가 어렵다면 지난 북경 APEC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한중일 정상회담의 장을 빌어서라도 양국 정상이 대면하는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만약 이렇게 해서라도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이 자리에서 양 정상은 ①아베 정부의 기존의 역사인식 및 역사 정책의 계승 입장의 명백한 확인 ②양국 관계의 긴급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징용공 보상 문제에 대한 해결 원칙에 대한 합의 도출 ③한일 간 미래 협력의 방향 설정에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 정부는 주요 현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차원의 협상에 박차를 가하여 한-일 국교정상화 50년을 맞이하는 2015년 중에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1998>을 한층 업그레이드 한 형태로 <21세기 한일 신시대 선언 2015>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최근 한일관계의 최대 난관이라고 할 수 있는 위안부 문제 및 전후 보상 문제의 두 현안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접근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통해 두 문제에 관한 정부 차원의 대체적인 타결 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물론 협상을 통해 타결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양국 정부는 공히 각각 국내에서 야당과 시민사회를 포함한 국민의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어느 정도의 합의가 도출되면 이 합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

둘째, 양국의 합의 하에 가칭 <한일 역사 화해를 위한 추진하는 새로운 공동기구>를 조직하여 2015년 6월까지 두 가지 핵심 문제의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기존의 한일 역사공동위원회가 역사학자들에 의한 공동의 역사연구 조직이었다면 여기서 제안하는 공동기구는 보다 확장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정책 입안적 성격을 띤 기구가 될 것이다. 이 기구에는 한국의 경우 역사학, 정치학, 한일관계 등 분야의 전문가는 물론, 정대협과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 그리고 변호사 단체, 현재,

⁹ 박근혜 정부의 중국 중시 외교는 실제로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체질이나 북한과 연관된 안보적 현실, 역사적, 지정학적인 요소를 고려할 때 오히려 당연하고도 실용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 중시 외교는 반드시 일본 경시를 의미하지 않으며 한국의 대중, 대일외교는 양자택일의 문제라고 할 수 없다. 한국의 외교 전략에서 보면 한미동맹과 더불어 한중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 한일 우호협력 관계는 필수불가결한 대외관계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이 추천하는 법조계 인사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각계각층의 관계자, 전문가가 골고루 광범위하게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국장급 협의를 통한 타결안 도출 방식이든 공동기구에 의한 합의안 도출방식이든 기한 내에 양국 정부와 국민 모두가 박수갈채를 보낼 수 있는 해법이 출현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훌륭한 결론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좁은 국익이나 국내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양국 및 동아시아의 진정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입장에 서서 민간, 시민사회, 학계의 인사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지혜와 총의를 모으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된다.

양국의 역사마찰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국 최고 지도자 간의 암묵적인 합의와 공동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즉, 양국의 지도자 스스로가 역사 마찰로 인해 양국관계가 훼손되고 국민감정이 악화되는 것이 양국의 국가 이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확고할 때 역사마찰을 진정시키기 위한 공동 노력에 나서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 지도자 간의 신뢰와 그에 기반 한 대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VI. 맺음말

한일 양국이 맞이하고 21 세기 신시대는 냉전시기의 양극화나 탈냉전 시기의 다극화 시대가 아닌 복합화의 시대이다. 한일 양국이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공동으로 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공생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다. 신시대 한일관계는 미중 양강 구도로 재편되는 동아시아 국제체제 속에서 양국이 기본적 가치와 규범의 공유를 기반으로 하여 전 분야에 걸쳐 모든 행위자가 전면적인 협력의 추구를 요구하고 있다.

신시대 복합공생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한일 양국은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는 한편 향후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신시대의 한일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국은 미래지향적 자세로 임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 양국의 역사에 대한 공동의 인식기반의 확립을 위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즉, 한일관계에서 과거와 미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를 완전히 망각한 미래 설계도 있을 수 없고 과거에만 집착하는 미래 설계도 안 된다. 따라서 한일 신시대는 역사에 대한 직시와 깊은 성찰에서 출발하여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한일 신시대는 동아시아 국가 간의 관계를 국익 경쟁이나 세력균형의 전통적인 구도를 넘어서 보다 네트워크적인 세계정치의 시각에서 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일 양국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은 기존의 한미일 관계를 강화함은 물론 한중일의 우호협력 관계와도 배치되거나 모순되지 않는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한일 협력의 심화야말로 점차 도래하고 있는 미중 양강 시대의 생존 전략일 수밖에 없다. 즉, 한일관계의 심화, 발전은 대미, 대중관계의 강화와 선순환 관계에 있고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셋째, 한일 신시대는 한일협력의 방향을 기존의 양자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고에서 탈피하여 양자는 물론이고 한반도, 동아시아지역, 글로벌 영역에 걸친 한일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한일 신시대는 공간적으로 한반도, 동아시아, 글로벌 질서를 총체적으로 조망하는 관점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미래의 한일관계는 과거에 비해 훨씬 확장된 공간에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일 신시대의 협력은 한일 양국관계는 물론이고 한반도 차원, 동아시아 지역차원, 글로벌 영역의 네 공간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한다.

넷째, 한일 신시대는 정치-안보-경제 이슈 중심의 과거 패러다임을 넘어서서 21 세기와 함께 빠르게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문화, 환경, 정보지식, 과학기술 분야의 한일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일협력의 주체는 국가 뿐 아니라 시민사회, 대학을 비롯한 지식계, 기업과 지방자치체 등의 전 방위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한일,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 및 공생에 매우 중요하다.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신 한일관계 파트너십 공동선언 10주년 기념 심포지움-회상, 현안 그리고 비전』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2008
- 김호섭 「한일관계 형성에 있어서 정치 리더십의 역할」 『일본연구논총』 Vol.29, 2009년 여름
- 오코노기 마사오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평: 체제마찰에서 의식공유로」 오코노기 마사오, 장달중 『전후 한일관계의 전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5
- 이원덕 「한일과거사 갈등의 구조와 해법모색」, 김영작, 이원덕 엮음 『일본은 한국에게 무엇인가』 한울아카데미, 2006
- , 「구조전환기의 한일관계: 쟁점과 과제」 오코노기 마사오, 장달중 『전후한일관계의 전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5
- , 「한일관계 새로운 100년을 향해」 이원덕, 정재정, 남기정, 하영선 4인 대담, 『일본공간』 제8호,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0
- , 「신시대 한일관계의 구축을 향하여」 『한일신시대 공동연구 논문집: 한일신시대와 공생복합 네트워크』 한울, 2012
- 외교통상부 『김대중 대통령 일본 공식방문 결과(공동선언, 연설문 등 주요기록)』, 1998
- 정재정 「한일여론 지도자 심포지움」 『한일관계의 과거와 미래 100년의 성찰』 동북아역사재단, 2010
- 최상용, 이원덕, 이면우 『탈냉전기 한일관계의 쟁점』, 집문당, 1998
- 한일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 『「한일신시대」를 위한 제언: 공생을 위한 복합네트워크의 구축』 2010, 10
- 田中明彦 지음, 이원덕 역 『포스트 크라이스의 세계』 일조각, 2010
- 木宮正史 「日韓關係の力学と展望: 冷戦期のダイナミズムと脱冷戦期における構造変容」, 金慶珠, 李元徳 編 『日韓の共通認識: 日本は韓国にとって何なのか?』 東海大学出版会, 2007
- 木宮正史 『東アジア共同体と日韓關係』 東京大学大学院現代韓国研究センター主催 『国際会議: 東アジア共同体と日韓の知的交流』 2010年
- Cha, Victor, D., *Alignment Despite Antagonism: the United States-Korea-Japan Security Triangle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 Koh, Byung Chul, *Between Discord And Cooperation: Japan and The Two Koreas*, Yonsei University Press, 2007
- Lee, Chong-Sik *Japan and Korea: the Political Deimension*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885);
- Maddison, Angus "Shares of the Rich and the Rest in the World Economy: Income Divergence Between Nations 1820-2030" *Asian Economy Policy Review*, 2008. 3

「일-한 국교정상화 50주년-과거와 미래 조명」

1) 서두에

- ▽한국 세월호 침몰사고라는 비극. 사고가 정치 쟁점화됨. 보수 대 진보의 격심한 대립
- ▽일본 아베수상이 중의원 해산. 총선으로. 아베노믹스 등 아베정권의 정책 추진력이 더 탄력을 받을 것인가.
- ▽한일관계
초점인 한일정상회담은 아직 실현되지 않고. 일본측은 전제조건 없는 개최를 하자고 하나, 박근혜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의 진전이 회담의 전제조건이라는 자세를 견지

2) 주장하고자 하는 요점

- ▽1965년의 한-일 국교정상화와 그 후 반세기 동안을 거시적으로 보면, 성공스토리였다. 지역의 안정에 공헌.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 여러 분야에서 한일관계 확대.
- ▽21세기 들어 1965년에 만들어진 한일관계의 토대를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한국측에서 두드러짐. 이것이 한일관계를 불안정하게 함.
- ▽향후 어떤 한일관계를 지향하는가. 여러 분야에서 현실적인 교류를 발전시키고 싶다. 정치가 이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 국가에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지나친 기대를 갖지 않는 것이 좋다.

3) 「50주년」의 효용

- ▽일본(한국) 국민이 한국(일본)을, 그리고 양국관계를 생각하는 계기.

4) 1965년의 국교정상화 재방문

-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내각과 박정희 정권의 업적
- ▽1961년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대통령이 적극적.
- ▽한일합병조약의 합법성을 두고 대립. 외교교섭으로 타결됨.
- ▽청구권 협정(위안부 문제,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문제와 관련)
-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 공문(독도문제와 관련)
- ▽일본, 한국에서도 강한 반대. 한국에서는 박정희대통령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학생들의 반대 운동. 일본에서는 사회당=친북한이 반대.

5) 한일 관계를 생각할 때의 매듭점

- ▽1987년 한국 민주화. 정치에 대한 여론의 영향력 증대.
- 1980년대까지는 어려운 문제가 부상해도 엘리트(정치가, 관료, 경제인)가 한일관계를 관리할 수 있었으나 차츰 어려워졌다.
- ▽김영삼정권
 - 역사 재정립
 - 북한 핵문제에 한미일이 대처
- ▽김대중정권
 - 1998년 한일공동성명=한일관계의 하나의 정점
- ▽21세기
 - 일본에서 한류붐

- 노무현정권 위안부문제는 1965 년의 청구권 협정으로는 미해결이다, 라고 주장.
- 2011 년(이명박정권 때) 한국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문제에 한국 정부의 행동을 요구.
- 2012 년(이명박정권 때)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소송에서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
- 일본에서 ‘혐한’서적, ‘혐한’ 기사가 증가, 헤이트 스피치(혐한 발언).

6)1980 년대 말 이후의 세계적인 조류의 변화와 한일관계

- ▽1989 년 베를린 장벽 붕괴, 동서 냉전 종식.
- ▽글로벌화의 진전
- ▽IT 화
- ▽여성의 인권에 대한 관심 고조
- ▽일본은 경제 침체(‘잃어버린 20 년’). 한국은 글로벌화를 기회로 포착
- ▽중국의 부상
- ▽한국 경제에서 일본의 중요성이 저하

7)정통성을 둘러싼 한국 내에서의 논란

- ▽한일합병이 불법이라는 한국의 입장.
- ▽한국에서는 박정희대통령의 업적을 자국의 역사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박정희정권은 정통성이 있었는가—라는 문제가 아직 미해결인 듯. 박정희가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결단한 한-일 국교정상화. 타협도 필요했다. 이제 와서 그것을 수정하는가. 한-일 국교정상화 때문에 가능했던 한일 교류와 협력의 축적은 어떻게 되는가.
- 박정희의 평가는 보수 대 좌파의 쟁점.
- ▽박정희정권의 정통성을 둘러싼 논란은 원칙적으로 한국 국내 문제. 국제적인 결정(일본과의 1965 년의 국교정상화)에 파급시켜서는 안 된다.

8)일본의 최근 경향

- ▽주목할 점은, 일본에서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던 사람, 한국의 정치·경제·사상을 진지하게 연구했던 사람들의 발언에 일정한 경향이 보인다. 한마디로 한국에 대한 실망.
- 박정희정권의 업적을 조기에 인정한 사람
- 리버럴파
- ▽일본측의 실망
- 한국이 발전하므로써 일본과 한국은 대등한 파트너로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 ▽한국의 과거사문제에 관한 고집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최대공약수적인 설명이 있었다. 예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의 역사」 이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일본에서 확산.
- 역사적인 관점에서 설명. 주자학, 소중화(小中華) 사상, 일본에 대한 전통적인 우월감, 건국 경위.
- 지정학적인 설명
- 한국은 ‘법치’가 아니라는 논의.

9)미래를 향한 논의를 위해서

- ▽한일 정부간의 관계가 악화되도 활발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기업, 연극 등)
- ▽협력할 수 있는(해야 할) 분야는 많다.(환경, 올림픽 등)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은 더 이상 한일을 이어주는 끈이 아닌가.

▽남북통일의 가능성

▽과거사 문제가 다른 여러 분야의 교류·협력의 장애가 되지 않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

▽유럽 통합을 단순히 아시아의 미래의 모델로 삼을 수는 없다.

세션 2: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한일 양국의 시각」

「변화하는 아시아 질서와 한일」

(1)미중 사이에서 흔들리는 아시아국가 ~ 한일의 입지에도 차이

중국의 부상과 함께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미국 주도 질서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움직임으로 친미권과 친중권의 각축이 격화되고 있다.

<미중에 대한 호감도 (favorable view) >

	중국	미국
파키스탄	78	14
말레이시아	74	51
태국	72	73
인도네시아	66	59
한국	56	82
필리핀	38	92
인도	31	55
베트남	16	76
일본	7	66
(미국)	35	

출처: Spring 2014 Global Attitudes Survey

미국의 우방이거나 미국과 안전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 중에도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미국을 상회하는 국가가 있다. (태국, 파키스탄 등)

일본과 한국의 대중 거리감에도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일본의 8 배이다.

요미우리신문과 한국일보의 공동조사(5 월 실시)에서, ‘중요해질 나라’ 설문에서 일본은미국(74%) 이 1 위,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 46-47%로 거의 비슷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을 신뢰할 수 있는가 >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중국	92	5
한국	57	37
말레이시아	54	21
태국	52	22
파키스탄	38	7
인도네시아	36	37
필리핀	32	47
필리핀	31	49
인도	13	25
일본	6	87

출처: 동상

특히 흥미로운 것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신뢰도의 결과다. 중국 이외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나라는 한국. 대중 호감도 1 위인 파키스탄보다 높다.

이에 대해 일본은 현저한 최하위이다. 뿌리깊은 불신감을 엿볼 수 있다. 한국의 시진핑주석에 대한 신뢰도는 일본의 거의 10 배이다.

<아베수상은 신뢰할 수 있는가>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베트남	65	9
일본	58	40
말레이시아	57	19
필리핀	55	25
태국	53	19
미국	49	35
인도네시아	46	28
파키스탄	25	12
인도	21	16
중국	15	70
한국	5	9

출처: 동상

예외도 있으나 대체로 시진핑 주석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나라일수록 아베수상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 단, 인도나 말레이시아와 같은 예외도 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여기에서도 일본과 한국의 괴리다. 일본에서의 신뢰도가 높은 것은 예상 범위 내이지만, 한국에서의 신뢰도는 5%로 중국보다 낮고, 한 자리수인 나라는 한국 뿐이고, 최하위였다.

(2)한일, 전략의 방향성에서도 차이 ~ 미소냉전 종식으로 심화되는 골

일본과 한국은 대중관 뿐만 아니라, 위협인식에서도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양국의 입지나 역사에 더해져 통일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과 그런 문제가 없는 일본과의 차이로 인한 것 같다.

요미우리신문과 한국일보의 공동여론조사(5월 실시)에서 군사적인 위협을 느끼는 나라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군사적인 위협을 느끼는 나라는?>

	1 위	2 위	3 위
일본	중국 82	북한 79	러시아 61
한국	북한 79	일본 41	중국 36

출처: 2014년 6월 7일 요미우리신문 조간

유사한 경향은 아사히신문이 올해 2-3 월에 실시한 한중일 여론조사에서도 명백했다.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질문에, 일본은 ①영토문제 ②중국의 군사력 ③한반도 정세였다. 한국은 ①영토문제 ②한반도 정세 ③일본의 군사력이었다.

또한 아래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아시아 전체를 보면, 위협 인식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 미소 냉전 중에는 아시아 국가의 위협인식은 ‘미국’ ‘소련’ 중에서 어느 한 쪽으로 집약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미국의 힘이 쇠퇴하고 중국의 상대적인 힘이 강해지면 각 국가의 입장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최대의 위협>

	최대의 위협
중국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북한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미국
파키스탄	미국
필리핀	중국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미국)	러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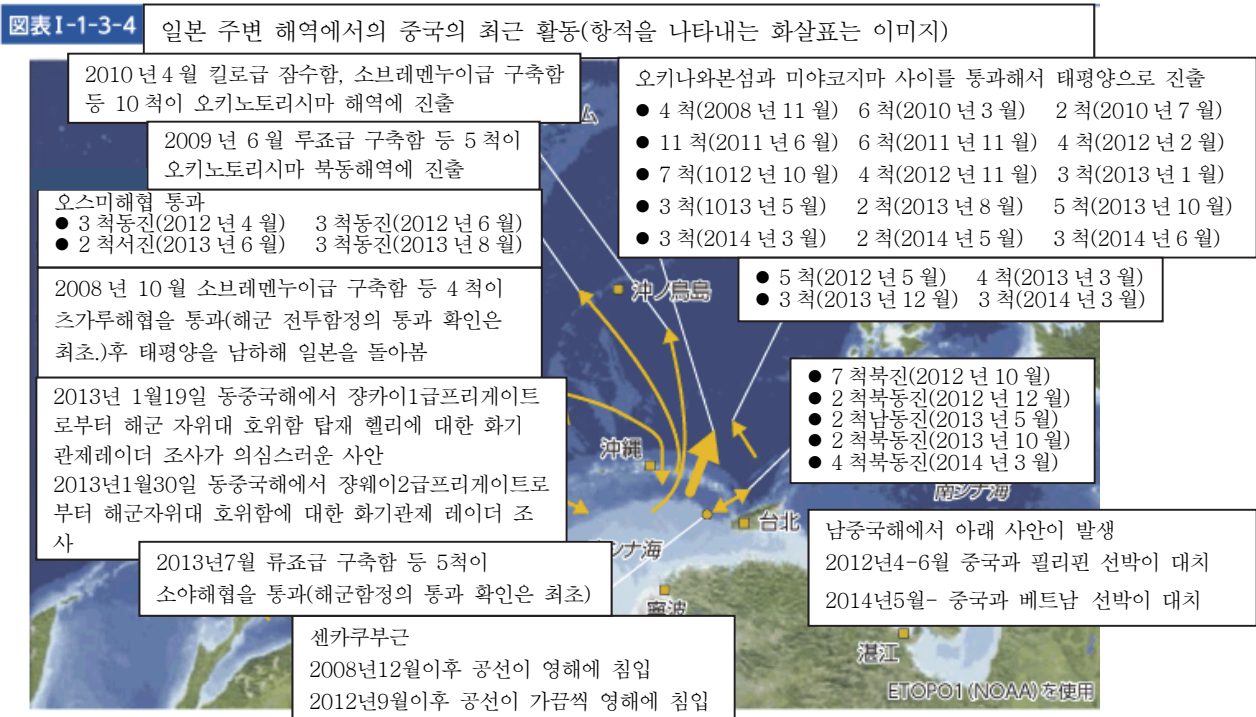
출처: Spring 2014 Global Attitudes Survey, Pew Research Center

(3) 한일의 대중관 및 위협인식의 차이의 원인은 무엇인가

① 입지 조건과 영토문제

일본에는 3 개의 영토 문제(센카쿠열도, 북방영토, 竹島(한국명 : 독도))가 있다. 이 가운데서 센카쿠열도에서는 중국 배의 영해 침범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나아가 일본의 남서군도는 중국군이 해양으로 진출하는 길목이어서, 중국 함대가 자주 통과한다. 이런 입지 조건 때문에 중국에 대한 경계감이 고조되어 있다. 핵,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도 심각한 위협이지만,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으므로 한국만큼 절박하지 않다.

한편 한국은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당연히 위협 수준도 높다. 중국과는 일본처럼 심각한 영토 대립 문제가 없다. 중국 어선이 한국 근해로 접근하는 문제는 있지만, 중국 해군의 진출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입지는 아니다.(이하 도표, 2014 년 방위백서에서)



② 국가통일 문제의 유무

한국에게는 남북 통일 문제가 가장 큰 과제다.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공조가 필수적인데 북한의 후원자인 중국과의 협력도 불가결하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에게 미국과 중국 모두 국가 목표(남북통일) 달성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이다.

한편 일본에는 한국이 안고 있는 통일문제는 없다. 따라서 일본에는 중국과 파트너십을 맺어야 할 필연성이 한국만큼 절박하지 않다.

③ 과거사 문제

중국과 한국은 공히 일본과 과거사 문제가 있다. 특히 한일은 위안부 문제가 원인이 되어 아베수상과 박대통령의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7월 방한 시, 과거사문제에서 공조하자고 한국측에 제의했다는 보도도 있다. 한국은 이 문제에서 중국과 드러내고 연계하는 것에는 신중한 태도이다.

④ 경제의 대중 의존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수출이 50%를 차지하는데, 중국에 25%를 수출한다. 직접투자를 받아 들이는 규모도 중국의 비중이 높다. 작년 1-9 월에 받아들인 투자액은 신고 기준으로 전년대비 38% 증가. 미국이 6% 증가. 일본은 17% 감소했는데, 중국의 투자는 3 배 이상 증가했다. 관광에서도 중국인 관광객(작년)이 전체의 35%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 일본 수출의 대중 의존도는 약 18%로, 한국만큼 크지 않다. 중국의 대일 투자도 증가 추세이기는 하지만, GDP에서 차지하는 대내 투자잔액의 비율은 3.7%(12년 시점)로 그다지 크지 않다.

⑤ 기타

일본과 중국의 GDP 역전. 삼성전자의 약진 등 한국 산업력에 대한 자신감. 한일 양국의 국내 사정으로 인한 내셔널리즘 등...

(4)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하면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가

① 일본의 외교, 안전보장의 우선도

1 위	센카쿠열도→	경비 강화, 미국과 결속 확인
1 위	중국군의 증강→	미일동맹 강화
3 위	북한의 위협→	한미일 연계, MD 강화
4 위	해양 안보→	미국, 호주, ASEAN 과 연계 강화
5 위	사이버/우주→	미국 혹은 EU 와 연계

일본에게는 센카쿠열도 영해에 중국 배가 빈번하게 와서 주권을 위협당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사태다. 이와 비슷한 수준의 과제가 중국군의 증강이다. 장기적으로는 이 쪽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3 위는 북한에 대한 대응이고, 뒤를 이어 해양의 안전보장(남중국해 문제 등), 사이버, 우주가 뒤를 잇는다. 모든 과제에서 일본과 미국과의 협력강화가 전제가 된다.

② 한국의 외교, 안전보장의 우선도

1 위	북한의 위협→	한미(일) 연계
	남북통일→	중국, 미국과 연계
2 위	영토(독도?)→	경비 강화, 국제 여론 대책
3 위?	중국군의 증강→	한미, 한중 관계 강화?
4 위?	사이버/우주→	미국 등 각국과 연계
5 위?	해양 보안→	미국 등 각국과 연계?

한국에게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그리고 장래 남북통일이 가장 중요도가 높다. 전자에 관해서는 한미(일)의 연계가 관건이 되는데, 통일에서는 미중 양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일본이 들어갈 여지는 작다. 중국군의 증강에 대비하는 데 있어, 일본처럼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기울지 어떨지는 불투명하다. 한국은 주한미군이 대북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환영하지만, 대중용으로 사용되는 것에는 신중하다는 견해도 있다.

③ 한일간에 협력하기 쉬운 분야, 그렇지 않은 분야

중국군의 증강	△→×
북한의 위협	○? △?
남북통일	×→△
해양 안보	△
사이버/우주	○

한일이 협력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대중전략의 차이다. 중국과 육지로 닿아있고 통일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은 일본 수준으로 중국과 대립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 경제적인 대중의존도도 높다. 한편 일본은 미국과 손잡고 중국군의 증강에 대항하는 노선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한일의 대중전략은 거의 역행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다.

그러므로 한일이 협력하기 쉬운 분야는 이런 차이점이 별로 장애가 되지 않는 문제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북핵, 북한 미사일, 사이버, 우주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협력에서도 중국 요인은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외교, 안보분야에서의 한일 협력은 어느 정도 현실적인 시각을 필요로 한다.

상호간에 이익을 보기 쉬운 무역, 투자에서 중국도 포함해서 한중일 협력으로 시작하는 등 이런 신뢰관계를 이어가면서 외교, 안보 협력의 여지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의 정세에 대한 한일 양국의 시각

1. 중일 갈등, 2014 글로벌 정치경제 리스크로 부상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1 월 중·일 관계를 1 차대전 전야의 영·독 관계에 비유하면서 충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현재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그만큼 위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뉴욕타임스 엔드류 소킨 기자에 따르면 1 월 다보스포럼에서도 중·일 갈등은 2014 년 우려할 만한 정치·경제 리스크로 꼽혔다. 중·일 갈등이 본격화한 것은 양국간의 경제적 위상이 바뀐 2010 년부터다. 이후 센카쿠 열도를 중심으로 한 중일영토갈등이 본격화했고, 이것이 역사전쟁으로 번지는 형국이다.

◆에зра 보겔(Ezra Vogel, 84) 하버드대 명예교수 인터뷰

Q= 한·중·일 간 과거사 문제가 전면화하고 있는데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A=“한·중·일 3 국의 현 상황은 위태롭습니다. 뭔가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중국이 고전인 삼국지를 보면 상황이 극단으로 치달은 뒤 뭔가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한·중·일 3 국의 리더들이 이런 상황을 잘 감안해 조만간 문제를 풀었으면 합니다.”

Q=과거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중 간에 역사동맹기류가 뚜렷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A=“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해 아주 화가 난 상태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국가적 이해관계도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나빠지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한·미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하면 한·미 관계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최근의 한·일 관계를 우려합니다. 또한 요즘 들어 중국이 일본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 그런 경향이 지속되면 아마도 언젠가 한국에도 그런 압력을 가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아마도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의 압력을 이겨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국면을 아주 엄밀하게 봐야 합니다.”

◆이언 브레머(Ian Bremmer) 유라시아 그룹 회장 인터뷰

Q=1 월 다보스포럼에서 중·일 간의 영토갈등이 올해 최악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새롭게 부상했다고 지적했는데 그렇게 규정한 이유는 뭔가.

A=“아베 총리가 다보스 포럼에서 중·일 관계를 1914 년 제 1 차 세계대전 전야의 영·독 관계에 비유해 논란이 됐다.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총리가 할 말은 아니었다. 일본은 강력한 외교정책의 플레이어가 되고 싶어 하고 군사력을 키우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그가 그렇게 얘기한 것을 개인적으로 이해는 한다. 시진핑(習近平) 시대 중국은 공격적으로 군비를 증강하고 있고 동중국해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일본은 그런 중국에 대해 걱정하는 게 사실이다.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중국의 고위 인사는 아베 총리의 연설을 듣고 “동아시아의 문제야는 북한의 김정은과 일본의 아베”라고 말해 많이 놀랐다.”

Q. 한중일 지도자가 모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해 어려운 상태다.

A=“한국과 일본, 중국 지도자는 모두 이 문제에 있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 내가 다보스포럼에서도 말했지만 과거사 문제와 종교 문제는 제기해 봤자 풀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 여기서 멈춰야 한다. 들춰낼수록 재난이다. 그 대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할지 생각해야 한다.”

2. 중국 주도의 역사전쟁 전면화

중국전략, 일본을 비판하며 한국과 역사동맹 통해 한미동맹 이완시키겠다는 전략

(1) 중국정부, 난징대학살기념관에 이어 731 부대 전시시설을 역사교육장으로 확장

중국 정부는 1 월 베이징외신기자단을 라오닝(遼寧)성 선양(瀋陽) 인근의 만주사변 기념 9·18 역사박물관으로 초대할 데 이어 난징(南京)대학살 기념관 초청행사도 했다. 아베 측근들이 “난징대학살은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하자 난징대학살에 대한 대대적인 국제홍보전에 돌입한 것이다.

하얼빈(哈爾濱) 시는 이미 지난 1982 년 731 부대가 생체실험을 했던 장소에 전시관을 만들어 역사교육 현장으로 활용해왔는데 최근 수집한 문물 1740 점을 더 전시하기 위해 신관을 확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여기서 더 나아가 중국당국은 11 월 들어 731 부대 유적지를 ‘4A’급 관광지로 지정했다. 중국에서는 각 관광지를 볼거리, 역사적 의미 등을 기준은 1A 에서 5A 까지 등급을 나눠 관리하고 있는데 731 부대를 4A 급으로 분류한 것은 더 철저하게 유적지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올해 40 만 명이 넘는 국내외 관람객이 하얼빈 731 부대 유적을 찾았다.

(2) 중국, 하얼빈역 안중근 기념관 설립

안중근 의사 기념관은 중국 하얼빈역에 지난 1 월 세워졌다. 이곳은 지난 1909 년 10 월 26 일 안중근 의사가 초대 조선통감을 지냈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사살한 곳이다. 안중근 의사 기념관은 2013 년 6 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의 '하얼빈역 내 안중근 의사 의거현장 기념표지석 설치' 요청에 중국 측이 호응해 추진됐으며 지난 1 월 19 일 개관했다.

(3) 중국당국, 일본전범 45 명의 자술서 공개, 7 월 3 일부터 8 월 16 일까지 하루 1 건씩 공개 ([http:// china.huanqiu.com/special/ribenZFhzigong/index.html](http://china.huanqiu.com/special/ribenZFhzigong/index.html))

◆사단장 출신의 스즈키 게이쿠(鈴木啓久)= “5470 명의 중국인을 살해..임신부 배를 갈랐다” “공기주입 살인을 실험했다” “생매장 등을 통해 집단 학살했다”

◆사단장 출신 후지타 시게루(藤田茂)= “살인은 용기를 키운다”며 포로들을 상대로 실제 총검술을 연습했다.

◆경무지도관 출신의 오노 다이치(大野泰治)= “1935 년 8 월 20 여 명의 중국인을 잡았다. 때리고 물을 먹여 고문했다. 항일사상이 농후하다는 이유로 그중 2 명을 동료가 죽였다. 머리를 잘라 끊이면서 ‘하얼빈에서 뇌수랑 먹으면 좋다는 약을 보내와 그중 하나를 먹었다”

◆헌병 분대장 출신인 가시와바 유키치(柏葉勇一)=“노동력을 상실한 인부를 화로에 넣어 살해했다”

3. 미국의 투트랙 접근-한일 갈등 속 과거사와 안보문제 선별대응

위안부문제에 대해선 여성인권문제로 접근하며 한국쪽 입장 지지,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역할 증대를 지지하며 일본쪽 입장을 견지하고있다.

(1)미, 한일정상회담 중재 (3 월 25 일)

3 월 25 일 핵안보정상회의 개최지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미일 3 자정상회담이 열렸다. 오바마 대통령이 주최하는 형식으로 헤이그 시내 미국 대사관저에서 열린 이날 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 등 3 국 정상은 북핵 및 핵비확산 문제에 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로써 비록 3 자회담 형태이기는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일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마주해 대화를 나눴다. 3 국 정상은 '핵의 평화적 이용과 비확산'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의 취지에 걸맞게 북핵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2013 년 한-일 저널리스트 도쿄회의 때 오코노기 마사오 교수는 미국의 중재에 의한 캠프데이비드식 한일협상을 제안한바 있음. 헤이그 3 자회담은 미국의 한일과거사 중재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의미.

(2)오바마 대통령의 불편한 일본국빈방문(4 월 23~25 일)

오바마 대통령은 4 월 23 일 방일, 아베 총리와 비공식 만찬을 가진데 이어 4 월 24 일 정상회담후 메이지(明治)신궁 방문했고 왕궁에서의 만찬도 했다.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하루 앞두고 아베내각의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총무상과 일본 의원 146 명이 22 일 오전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했고 아베 총리는 공물을 봉납해 미국을 불편하게 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공인이 아닌) 사인(私人)의 입장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아베 총리의) 공물 봉납이 24 일의 미·일 정상회담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뉴욕타임스(NYT)는 21 일 아베 총리의 이 같은 행동은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비판

4. 동북아 불안정 속 한중일 과상적 갈등 가능성

(1) 중일관계, 정상회담은 했지만 갈등 지속될 것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총리가 지난 11 월 10 일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관계 개선에 합의했지만, 중국인들의 반일감정은 별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포털사이트 쿠크닷컴(QQ.com)은 지난 11 월 14~15 일 인터넷에서 약 20 만 명을 대상으로 '아베 총리의 최근 방중이 중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주제로 한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신화통신의 여론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본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누리꾼 83%(17 만명 이상)는 "매우 싫다"고 대답했고 14%는 "관심 없다"고 응답했다. 3%만이 "호감을 갖고 있다"는 반응을 했다.

(2)일본의 위안부문제 부인하면,미일동맹 균열 이어 미일역사전쟁 비화가능성

레인 에번스(Lane Evans, 1951~2014. 11)전 미하원의원이 1999 년 미하원에 위안부 결의안을 처음 제안한 이후 위안부 문제는 전쟁기 여성인권문제라는 시각으로 받아들여지고있다. 일부 강제성 없었다는 아사히 신문 기사 계기로 이를 부인하려 들 경우 더욱더 곤란한 지경 처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지난 3 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미·일 안보세미나에서도 “군 위안부 문제는 여성 인권문제”라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일 동맹에도 신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래리 닉쉬(Larry Niksch)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연구원, 전의회조사국(CRS) 연구원. =“오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고노 담화는 역사적으로 가장 정확한 내용이며 2007 년 결의안 작성 때 강제 동원의 증거를 담은 다섯쪽 분량 자료 요약본을 의회에 제출했다”면서 “아사히신문이 '제주도에서 여성들을 강제 연행했다'고 인터뷰한 이른바 요시다 증언을 오보라고 철회했는데, 사실 요시다 증언은 (결의안 통과와 관련해) 당시 하원의 정서나 현재 결의안의 상태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민디 코틀러(Mindy Kotler) 아시아폴리시포인트(APP) 소장=11 월 15 일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글‘위안부와 일본의 전쟁에 대한 진실’(The Comfort Women and Japan's War on Truth) 에서

아베 총리의 일본 정부가 진행 중인 위안부 관련 역사 왜곡 작업을 소개하면서 국제사회가 이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 그는 국제사회가 나서서 일본의 역사 왜곡을 막아야 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아베 정부의 역사부인 노력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 미국은 여성의 권리 보장이 미국 외교정책의 근간이라는 점을 일본에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 세상의 절반은 여성인데, 아베정부가 위안부 문제 부인할수록 세상의 절반을 적으로 돌리는 결과 낳을 것이라는게 코틀러의 주장 .

(3) 한일, 내년 독립 70 주년 ,수교 50 주년, 무엇을 해야하나

첫째, 최소한 위안부 문제는 털고 가자.=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위안부 문제,사사에 모델이 답이다’(중앙일보 8 월 1 일=이명박 정부말기 노다 정부의 외무차관 사사에 겐이치로, 3 개항 제시. 일본총리가 공식 사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인도주의적명목 배상, 주한일본대사가 위안부 피해자 방문해 총리 사죄문 낭독한다.)

둘째, 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 문명국리더들이 할 일 아니다. 대안시절 만들어라

셋째, 독도문제, 센카쿠와 북방 4 도 문제와 완전 다른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관련됐다는 것 모두다 안다. 일본측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한다.

-참고-

‘아베의 길, 일본의 길’(문화일보, 뉴스와 시각,2014.2.26)

“중국의 과도한 역사·영토 드라이브는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에 위압적이다.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내해로 삼으려는 시진핑의 대국주의적 발상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그러한 중국의 드라이브에 원인을 제공하는 세력은 바로 극우 아베 진영이다. 이제 일본은 아베 세력이 추구하는 길이 21 세기 일본이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리더국가로 나가는 길과 부합하는 것인지 자문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 늦기 전에 아베 정권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각자도생의 외교시대’(문화일보 뉴스와시각 2014. 4.28)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4 월 24 일 미·일 정상회담 기자회견 말미에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는 국가를 위해 스러진 이들의 명복을 빌기 위한 것”이라며 강변했을 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표정은 굳어졌다.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오찬을 취소하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미국은 그간 일본 측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자제를 촉구해왔다. 존 케리 국무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지난해 10 월 방일 때 지도리가후치(千鳥ヶ淵) 전몰자묘원에 참배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야스쿠니 반대론을 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의 면전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궤변을 늘어놓은 것은 미국 주도의 전후 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4 월 25 일 서울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 때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의 정당성 주장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아베 총리도 공정하고 정직한 역사인식의 중요성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식으로 점잖게 답변했다.”

오바마의 ‘아베 리스크’(문화일보 뉴스와시각 2014. 2. 5)

“중·일 간 지역 패권 갈등이 군사 충돌로 비화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선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중국의 팽팽 패권주의와 일본의 국수적 우경화를 제어할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지 않을 경우 중·일 관계는 다보스포럼의 전망대로 올해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최악의 리스크가 될 것이다.

중·일 갈등 속에 끼인 한국은 역사 문제에 있어 중국과 연대해 일본에 맞서게 되는 국면으로 내몰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중근 의사 표지석 설립을 요청한 데 대해 시진핑 주석이 70 평짜리 기념관으로 통 크게 화답하면서 한·중 역사 연대는 힘을 받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아베 정권의 행태를 묵인할 경우, 중국적으로 한국의 국민 정서를 중국 쪽으로 밀어붙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한·중 역사동맹의 형성은 한·미동맹을 뿌리에서부터 뒤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럴 경우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리벨런싱 정책은 물론, 미국의 외교전략은 근저에서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아베 총리는 이제 리스크가 되고 있는 셈이다.”

세션3: 「양국 언론보도의 현상과 과제」

<산케이신문>의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 시간’ 보도를 둘러싼 한일의 시각 차이

<서론>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11 월 12 일 베이징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한 뒤 양국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했다. 중국의 정상이 기자회견 뒤 일문일답을 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미국 쪽이 물밑에서 오랫동안 작업을 해서 이뤄낸 성과라고 한다.

그런데 일문일답 과정에서 언론인들이 주목할 만한 일이 벌어졌다. 미국 <뉴욕타임스> 기자가 중국 정부가 중국 지도층의 부정축재 등을 보도한 뉴욕타임스 특파원 등에 대해 취재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처음엔 답변을 피하다가 막판에 ‘문제를 만든 사람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취재비자 연장 거부의 책임이 중국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법, 제도를 무시한 해당 신문사에 있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다음날 사설을 통해 뉴욕타임스가 중국에 대한 비판 논조를 바꾸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시 주석은 해외 언론이 (중국에 대해) 비우호적이거나 논쟁적인 기사를 내보내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든, 미국이든, 어떤 나라든 정부의 요구에 맞춰 기사를 쓸 생각이 없다. 기자들에게 정부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써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권력자와 무언가 감출 게 있는 사람만 보호할 뿐이다. 자신을 세계의 지도국이라 생각하는 자신감 있는 정부라면 진실된 취재와 비판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한-일 저널리스트 포럼에서 미-중 간에 벌어지고 있는 언론 갈등을 소개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지금 두 나라 사이의 언론, 정부 간에 쟁점, 논란이 되고 있는 산케이신문의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 시간 보도’가 바로 그것이다.

이 보도는 미-중 간의 사례에서 보이는 것처럼, 한일 두 나라 사이에서 △언론자유란 무엇인가 △언론의 자유는 다른 나라의 제도나 문화, 감정과 전적으로 독립적으로 향유될 수 있는가 △보도를 둘러싼 이견이나 갈등을 올바르게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와 같은 중요하고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본론>

그럼 지금부터 한일 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산케이 보도가 나오게 된 경과와 배경, 논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산케이 보도를 둘러싼 논란의 경과

산케이신문의 가토 가쓰야 서울 지국장이 쓴 문제의 기사(‘박근혜 대통령은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 8 월 3 일 산케이신문 온라인판)가 나기 전에 <조선일보>의 최보식 선임기자가 이미 7 월 18 일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이란 제목의 칼럼을 통해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다. 가토 지국장은 최 기자의 칼럼과 증권가의 찌라시를 토대로 자신의 해석을 덧붙여 위의 기사를 내보냈고, 이에 대해 청와대와 외교부의 비판적 반응, 시민단체의 고발, 출국금지 및 수사, 기소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게 이 사건의 대체적인 경과이다.

일목요연하게 일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 월 18 일 조선일보, 최보식 선임기자의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 칼럼 게재

△8 월 3 일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의 칼럼 온라인판에 게재. 청와대 고위 관계자 불쾌감 표시하며 민형사상 대응 방침 밝혀

△8 월 6~7 일 독도사랑회 등 보수 단체, 가토 지국장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

△8 월 7 일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 “민형사상 물을 수 있는 책임을 강경하게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추궁하겠다. 시작을 안 했으면 안 했지 하겠다고 한 이상 책임을 끝까지 묻는 게 중요하다”고 발언

△8 월 9 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 미얀마 아세안지역포럼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과 회담 때 “산케이가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인용해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이웃나라 국가원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 전달. 기시다 외상은 “한일 양국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보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주시하고 있다”고 의견 밝힘

△8 월 11 일 검찰, 가토 지국장 출국금지 및 수사 착수

△10 월 8 일, 검찰 가토 지국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산케이신문 사장 명의의 항의 성명 발표. 쟈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 “이 수사를 초기부터 주시해왔다. 알다시피 우리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지지하고 매년 내는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관련 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말함

△10 월 9 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한국 정부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최대한 존중돼야 할 언론의 자유에 대한 법 집행은 최대한 억제적이어야 한다”고 발언

△10 월 10 일, 산케이신문 김진태 검찰총장과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취지의 항의문 제출. <아사히신문> 등 일본 신문 들 사설 통해 ‘보도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권이 힘으로 팔을 비트는 폭거’ 등 일제히 비판. 국경없는 기자회, 서울외신기자클럽도 일제히 비판 성명.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가디언> <에이피> 등 세계 주요언론도 일제히 기소 사실을 주요뉴스로 보도

△10 월 16 일, 외교부 대변인과 일본 특파원이 질의응답 중 ‘한국에 언론자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런 게 언론자유 아니고 무엇이냐’며 공방

△10 월 31 일 검찰, 정윤희씨 세월호 참사 당일 역술인 이 아무개씨 만났다고 확인

2. 보도 내용을 둘러싼 논점

산케이신문의 보도를 둘러싼 논점은 크게 이 보도가 저널리즘의 원칙에 맞는 것인가, 이 보도에 대해 사법의 칼을 들이대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두 가지로 나뉜다. 저널리즘의 영역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보도와 애초 조선일보 보도의 차이는 없는가, 보도에 결점은 없는가 하는 점이 제기된다. 형사처벌의 영역에 있어서는 검찰의 기소가 언론탄압인가 아닌가에 집중되어 있다.

먼저 산케이 보도와 조선일보 보도는 차이점이 없는가부터 살펴보자. 이는 기소의 공평성, 외국 특과원에 대한 편파적 탄압과 관련이 있다.

일본을 비롯한 일부 세계 언론단체는 산케이 보도와 조선일보의 보도가 조선일보를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산케이 지국장만 기소한 것은 산케이신문이 한국에 대해 비판적 기사를 쓰고 있는 데 대한 보복이라는 것이다. ‘국경없는 기자회’도 9월 8일 발표한 성명에서 산케이 기사는 조선일보 기사의 정보에 근거하고 있지만 조선일보는 고발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 쪽 논자들의 주장은 다르다. 산케이 기사는 조선일보 외에 증권가 소식통을 인용하고 있으면 조선일보에서 쓰지 않은 ‘남녀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홍천 게이오대 교수가 11월 5일 한국기자협회보에 쓴 <산케이신문과 일본 언론의 오해>라는 칼럼을 보면, 이 교수가 두 기사를 출처를 가린 채 일본 학생들에게 읽어보게 한 뒤 비교하는 과제를 제출하게 했더니 52 명의 학생 중 74%의 학생이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한다. 21%만 같은 취지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74%의 학생은 조선에 대해 “떠돌고 있는 풍문을 가지고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한 것”이라고 한 반면, 산케이에 대해선 “스캔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풍문이 발생한 경위에 대해서는 기술이 없다”고 차이점을 지적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에서 가장 문제로 삼고 있는 것도 산케이가 독신 여성 대통령의 가장 약점일 수도 있는 ‘남성과의 관계’ 운운의 단어를 쓴 것은 악의적이라는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둘째는 기사의 완성도와 관련한 문제이다. 산케이의 가토 지국장은 기소가 된 뒤인 10월 18일 발간된 <한겨레>와 가진 장문의 서면 인터뷰에서 자신의 기사는 뉴스가 아니라 칼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실 취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만일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점을 취재 부족이라고 하는 비판이 있다면 요점이 빗나갔다고 생각한다. 이번 칼럼을 대통령을 둘러싼 소문에 대해 소문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한국에서의 일종의 사회현상으로 해석해 ‘진위불명의 소문’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칼럼이므로 뉴스와 달리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로 들린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의 기자들과 학자들은 기사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도쿄특과원을 지낸 조선일보 박정훈 부국장은 2가지 점에서 완성도의 문제를 지적했다.(10월 3일, <그래도 산케이 지국장을 처벌해서는 안 될 이유> 칼럼) 하나는 문제의 기사가 일본이 최근 비급 언론들이 한국의 비방하는 기사를 양산하는 흐름 속에서 “세월호 사고 날 박 대통령의 행적을 교묘하게 ‘스캔들’로 연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하나는 이후 수사에서도 드러났듯이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많은 한국의 필자들은 가토 지국장이 이런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런 지적에는 일본 쪽 언론인도 동조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아사히신문 주필을 지낸 와카미야 요시부미는 10월 23일 자 동아일보 칼럼 ‘명예훼손 기손로 훼손되는 명예’라는 글에서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앞세워 싸우기에는 그 기사가 너무 한심한데, 한국 정부의 기소로 묘한 전개가 돼 버렸다는 일본 기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썼다. 즉, 기사의 완성도와 관련해서는 대립축이 ‘산케이 대

비 산케이'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세째, 이 기사를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극단적인 박 대통령 지지세력을 제외하고는 무리한 법 집행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

가장 원론적인 것은 '국경없는 기자회', 서울 외신기자클럽, <월스트리트저널>, <아사히신문> 등이 제기하고 있듯이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에 대한 침해와 탄압이라는 시각이다.

한국 언론들도 성향과 관계없이 대체로 산케이 기사의 질에는 문제가 있고 명예훼손의 여지도 있지만 그래도 보도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자세를 보였다. 한겨레는 8 월 21 일자 사설에서 '산케이 보도도, 검찰 수사도 다 '나라 망신'이다'고 했고, 동아일보(10 월 13 일 심규선 칼럼 '산케이 전 서울지국장 기소는 패착이다')와 조선일보(10 월 3 일, 박정훈 칼럼 '그래도 산케이 지국장을 처벌해선 안 되는 이유')도 형사처벌에는 반대론을 폈다.

다만 한국 쪽이 산케이나 일본 쪽에 흥분해 문제를 삼은 것은 산케이 기소를 기회로 일본 쪽이 '한국을 언론 자유도 없는 나라'로 몰고 가려는 태도였다. '국가원수에 대한 일본의 이중적 태도'(10 월 13 일 조선일보 차학봉 도쿄 특파원), '언론자유로 포장된 가토의 궤변(10 월 11 일 중앙일보 도쿄 총국장)의 기사가 대표적이다. 일본도 천황 등의 특정 사안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면서 마치 한국이 산케이 보도에 대한 기소 하나로 언론 탄압국인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결론 및 과제>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산케이의 '7 시간 보도'와 이에 대한 검찰의 명예훼손 기소는 한일관계가 냉각된 상황과 맞물리면서 한일관계를 언론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 사안이 한일 언론계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 한일관계의 전반적인 관계 개선을 위해 반드시 나쁜 영향을 준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첫째, 이번 사건은 양국의 보도 기관이 상대국의 예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내 사안보다 더욱 신중하고 숙고하는 자세로 접근해야 된다는 점을 보여줬다.

둘째, 이 사건은 보도가 다소 결함이 있더라도 언론계나 학계 등 시민사회의 비판에 맡겨야지 사법당국이 나서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화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세째, 양국에 모두 질 높고 품격 있는 언론은 무엇인가, 언론의 자유와 사법의 관여의 한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기회를 마련해 줬다.

세계에서 가장 언론의 자유가 잘 보장된다는 미국에서 언론자유를 지탱하는 토대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된 수정헌법 제1 조이다.

<미국 수정 헌법 제1 조>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

미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언론이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향유하는 나라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두 나라 언론이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강화라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토론해 보는 것은 양국뿐 아니라 동아시아, 세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발제가 이런 논의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겠다.

「양국 언론보도의 현상과 과제」

1. 「규탄 저널리즘」 이대로 괜찮은가?

1) 9 월 11 일, 아사히(朝日)신문사는 도쿄전력(東京電力) 후쿠시마 제 1 원전의 요시다 마사오(吉田昌郎) 전 소장이 정부의 사고조사 검증위원회에서 진술한 청취결과서(요시다 조서=보도 당시는 미공개였다)에 관한 2014 년 5 월 20 일자 기사를 취소하고 사과했다.

〈입수한 요시다조서에 의하면, 동일본대지진 나흘 후인 2011 년 3 월 15 일, 제 1 원전에 있던 직원의 9 할에 달하는 약 650 명이 요시다 전소장의 대기명령을 어기고 10 킬로 남쪽에 위치한 제 2 원전으로 철수했다. 그 중에는 사고 대응을 지휘해야 하는 부장 과장급 사원도 있었고, 도쿄전력의 내규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사히신문』 2014 년 5 월 20 일자)

2) 오쿠 다케노리(奥武則)호세이(法政)대학교수--〈문제의 바탕에는 「규탄 저널리즘」 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마이니치신문』 2014 년 10 월 1 일자)

① 「규탄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도쿄전력」 이 먼저 존재했다→② 아사히신문 기자들은 「그런 재료가 어디 없을까」 라는 시각에서 「요시다조서」 를 검토했다→③ 「전체」 를 보지 않고, 「2F (니 에프=후쿠시마 제 2 원전) 로 가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 는 요시다 씨의 「한마디 말」 에 매달렸다.

〈「규탄해야 한다」 는 마음이 앞선 자세가 전문 저널리스트에게 필수적인 「도리」 감각의 상실로 이어진 것이다〉

3) 「규탄해야 한다」 는 마음이 앞선 자세는 일본과 한국 양국관계의 언론 보도에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

※ 『아사히신문』 ~ 「위안부를 제주도에서 강제 연행했다」 는 요시다 세이지씨의 증언을 둘러싼 오보(1982 년 9 월 2 일자 등 16 개 기사)→ 「규탄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역사」 ?

※ 『요미우리신문』 ~ 〈검증 아사히 「위안부」 보도〉 (2014 년 8 월 28 일-31 일자), 전단지 「위안부 보도 요미우리신문은 어떻게 보도했는가」 대량 배포(8 월 말-9 월 초 무렵) → 「규탄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아사히신문」 ?

※ 『동아일보』 ~ 주한 일본대사관 주최 자위대 창설기념 행사(해마다 개최하는 연례행사)와 관련해서 〈국내 정-관-재계 500 명에게 초청장 “한국 국민정서 외면한 처사” 지적〉 (2014 년 7 월 10 일자)라는 커다란 제목으로 1 면에 행사 전날 보도→ 「규탄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일본 정부」 ?

※ 한국의 각 미디어→ 「규탄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아베 (安倍) 」, 일본의 각 미디어(주로 주간지)→ 「규탄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박근혜」, 각각 많은 사례가 있다.

4) 「규탄해야 한다」 는 일부 보도에서 볼 수 있는 특징→ 조사 부족의 보도, 사실 관계가 잘못된 보도, 어떤 상황과 현상을 과장한 침소봉대한 보도, 상투적인 말귀나 불필요한 수식어가 붙은 보도, 내셔널리즘을 굳이 자극하는 보도, 보도에 의한 결과 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보도, 수용자의 지배적인 의견과의 합치를 겨냥한 의제 설정 기능(the agenda-setting function)을 주도하는 보도, 판에 박힌 형식의 보도, 일본과 한국의 양국관계에 관한 언론보도에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다.

5) 「규탄 저널리즘」 은 양국관계에 정말로 유익한가? 결과적으로 시민의 「미디어 이탈」 (특히 「신문 이탈」)을 초래하지는 않았는가? 미디어에게도 유익한가?

2.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냉정하게 보도했는가?

1) 한국 국회 외통위, 「고노담화 훼손 규탄 결의안 채택」(2014년 6월 30일), 박근혜대통령 「日 고노담화 검증, 신뢰 저버리는 일」(7월 20일), 국회, 「日 고노담화 검증·집단 자위권 규탄 결의안 채택」(9월 30일)

→그렇다면 고노담화(1994년 8월 4일) 발표 당시, 한국의 미디어는 호의적으로 보도했는가?
[예]

※ <「정신대」 사과 “작은 진전”> <”책임 회피용 미온 조치”> (『경향신문』 1994년 8월 5일자)

※ <’위안부’ 전체 실상 규명에 미흡> (『한겨레신문』 1994년 8월 5일자)

* 「작은 진전」은 한국의 미디어가 일본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사용한다. <日王 발언으로 본 변화 「과거」 사과 작은 진전> (『동아일보』 1994년 3월 25일자)

2) 한국의 미디어는 「사과하는 일본」을 인정하기 싫은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의 언론 보도가 현재 일본의 「협한」 감정의 원천임을 부정할 수 없다. (2000년에 한국 미디어의 온라인 일본어판이 등장→한국 언론이 있는 그대로 일본에 상륙).

* 고이즈미(小泉) 방한의 경우(2001년 10월 15일, 참고로 당시의 외무사무차관은 노가미 요시지(野上義二)씨)

역사교과서 문제,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 콩치조업 문제로 긴장된 양국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주 목적이며, 일본측이 강력하게 요구했고, 미국 동시다발테러 등 국제 정세의 변화 등으로 김대중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고이즈미수상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것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반성하고 사죄의 마음」이라고 구 서대문형무소에서 표명했다.

[예]

※ 당시의 한국의 각 신문(2001년 10월 16일자)~ <日 과거사 언급 진전없어> (『동아일보』), <고이즈미 방한 왜 했나 (중략) 정부가 왜 그의 방한을 수락했는지 국민으로선 납득하기 어렵다> (『중앙일보』), <대사(臺詞)를 남겼을 뿐. (중략) ‘반성과 사과의 노선’과 ‘왜곡과 참배의 노선’을 기회주의적으로 병행하겠다는 속셈의 재확인> (『조선일보』), <양국관계를 복원하는 데는 실패했다> (『한국일보』), <‘외교 쇼’로 끝났다> (『문화일보』).

3) 일본 미디어는 눈치 보지 않고 한국에 대한 불신을 주장하는 논조가 눈에 띄게 되었다(「협한」 확산).

[예]

※ 『요미우리신문』 2013년 11월 30일자

<일본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에게 식민지 지배의 「사과」를 표명했다. 국교 정상화에 앞서 1965년에 발표된 한일공동코뮤니케에는, 「과거의 관계는 유감스럽고 깊이 반성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전후 50년인 1995년 8월 15일에는 당시의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수상이 담화를 발표하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국가에 대해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명했다. (중략) 「한국은 움직이는 골대(moving goalpost)이다」 일본 정부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골대가 움직여서 쏠이 안 들어 간다」는 뜻으로, 관계 개선을 하려 하면 요구가 자꾸 늘어나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을 비유한 것이다> (「정치의 현장」 얼어 붙은 일한(11) 한국에 대한 양보 「비생산적이다」)

※ 일본의 대부분의 미디어 2014년 10월 9일 이후

<산케이신문의 카토타즈야(加藤達也)전 서울지국장이, 박근혜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이번 불구속 기소는 국제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조치다. 보도 내용에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박대통령은 「공인 중의 공인」이며, 반론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징벌적으로 공권력을 발동하는 것은 언론 자유를 소홀히 여기는 일이다〉(『마이니치신문』 2014년 10월 10일자, 사설 「산케이 기자 기소, 한국의 법치 감각을 우려한다」)

4)일본 미디어도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회주의적으로 보도한다.

[예]

※ 『아사히신문』의 경우~아시아여성기금을 둘러싼 보도

2014년: 〈위안부 문제 귀중한 여성기금의 정신〉(2014년 10월 19일자, 사설)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고 후세에 올바르게 전하며, 까닭 없는 폭력 등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관한 여러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일체로 만들어진 「아시아여성기금」이 전 위안부에게 보상금을 전할 때, 역대 수상은 이와 같은 글이 담긴 편지를 같이 전했습니다. 역사인식을 둘러싼 대립을 넘어, 화해를 향한 걸음을 내딛겠다는 정치의 뜻을 느낄 수 있습니다〉(2014년 8월 5일자, 편집담당 스기우라 노부유키(杉浦信之) 「위안부 문제의 본질」)

1994-95년: 〈본론을 벗어난 민간기금의 「위로금」〉(1994년 8월 30일자,논단), 〈전 위안부에 대한 민간기금 구상의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1995년 3월 18일자), 〈「회색 결착」강행 처리〉〈「이치에 맞지 않는 돈」전 위안부〉〈「개인 보상」으로 대립, 여당 3당〉(6월 15일자), 〈전 위안부에 대한 민간 기금에 반대〉(6월 21일자, 의견란), 〈「민간 기금은 받아 들일 수 없다」전 위안부들이 도쿄에서 시위행진〉(7월 4일자), 〈「위안부」기금 사업의 근본적인 재검토를〉(7월 17일자, 논단),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에 시민단체가 항의 행동〉(7월 19일자)

3.양국의 미디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1)미디어는 「스스로의 말과 행동에는 결과 책임이 따른다」는 자각을 가지고 있는가.

미디어가 세상의 부조리나 권력의 잘못을 문제 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민주사회에서는 각각의 미디어가 다른 관점에서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각 미디어가 보다 더 리버럴하거나 더 우파적이거나 하는 편집 색채가 있는 것도 좋다. 그러나 보도로 인한 결과책임도 따른다. 이것은 리버럴한 미디어도 우파적인 미디어도 마찬가지이다.

2)미디어는 일본과 한국 사회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가.

오구라 키조(小倉紀藏) 교토대학 교수에 의하면 양국 사회의 분류는, 「보고: 일본의 시민과 한국의 시민은 어떻게 다른가」(現代韓國朝鮮학회 연구대회, 2014년 11월 8일)에서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 법실증주의적인 정신세계→반(反)준법적인 행위에 대해 생리적인 혐오감

한국: 도덕지향적인 정신세계→반(反)도덕적인 행위에 대해 생리적인 혐오감〉

일본의 미디어는 도덕지향적인 정신세계(한국 사회)를 반 준법적인 행위라고 지나치게 「규탄」하는 것은 아닌가? 한국의 미디어는 법실증주의적인 정신세계(일본 사회)를 반도덕적인 행위라고 지나치게 「규탄」하는 것은 아닐까?

3)미디어는 양국의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움직임을 더 보도해야 하지 않을까?

2014년 10월 21일 서울에서 「문학은 개인의 통로」라는 한일 작가 문학낭독회가 열렸다. 양국의 인기 작가 정이현(鄭梨賢)씨, 츠지하라 노보루(辻原登)씨. 에쿠니 카오리(江國香織)씨가

참가했다. 『동아일보』(2014년 10월 22일자)는 <일본어 낭독에 귀 열고 눈으론 한글 따라 읽으며 ‘문학 소통’> 이라고 크게 보도했다. 일본 미디어는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2013년 12월 15일에도 요코하마에서 같은 작가들이 비슷한 행사를 가졌으나, NHK의 전국 뉴스(2013년 12월 15일 20시 45분)와 『동아일보』(2013년 12월 16일자)가 보도했다.

일본 신문(특히 지방지)에는, <음악을 통해 한일우호를>(『슈니치(中日)신문』 토카이 본사판 2014년 9월 19일자, 「젊은이 발언」란, 17세 여고생의 투고), <「한류」로 관계 개선을 기대>(『니이가타(新潟)일보』 2014년 11월 9일자, 「창」란, 46세 주부 투고)와 같은 친한적인 투고가 종종 실린다. 한국 신문에서는 친일적인 투고는 보기 어렵다.

주한 일본대사관의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가 장소를 변경해야만 했을 때는, 『마이니치신문』(2014년 7월 26일)이 <이 일에 관해서 한국 내에서 비판 의견이 많다. 서울에서 예정되어 있던 일본의 인기 만화 「ONE PIECE」 특별전도 일부 여론의 반발로 중지 위기에 놓였으나, 법원은 계약대로 개최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얼마 전에는 한국의 유력 신문이 일본 정부에 대해 지나치게 강경한 외무 관료를 강하게 비판한 일도 있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전해지는 비판은 종종 과도하게 일방적일 때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사리에 맞고 온화한 견해를 가진 사람도 결코 적지 않다>(사설 「일한관계 양국의 들리지 않는 소리도 들어야」)라고 강조했다.

세션 5: 「학생들과의 대화」 (특별 세션)

한일관계와 언론의 자세

1. 한일관계의 현재와 언론의 책임

내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50 주년입니다. 그런데도 현재의 한일관계가 1965 년 이래 최악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다소 과장되긴 했지만, 양국 관계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취임 이래 아직 한 번도 정상회담을 갖지 못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둘이 만나 이런저런 현안에 대해 이야기해서, 타협할 것은 타협하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다음으로 합의를 미루는 정상적 정치관계와는 판판입니다. 이런 비정상적 정치관계의 영향은 한동안 제한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음을 담은 것은 양국 정상과 외교 당국에 그쳤을 뿐, 민간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는 여전히 활발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양자 관계가 그렇듯, 한일 양국의 정치관계 악화가 장기적으로 이어지자 민간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을 찾는 일본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급격한 엔저가 주된 배경이지만, 한국에 대한 일본 국민의 친밀감이 식은 것도 한 요인입니다.

올 5~6 월에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일본 시민단체인 ‘겐론(言論) NPO’가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에서 일본 응답자의 20.5%가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반면, 54.4%가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각각 31.1%, 37.3%였던 것과 비교하면 일본 국민의 대한(對韓) 인식이 나빠졌는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한국 응답자의 17.5%가 일본에 좋은 인상을 가진 반면 70.9%가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각각 12.2%, 76.6%에 비하면 오히려 개선된 셈이지만, 지난해가 워낙 나쁜 상태였음을 생각하면 개선됐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일본에 대해 아예 무심해진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상대국에 대한 인상이 나쁜 이유로 양국민 모두 ‘역사 문제’를 들었다는 점입니다. 한국 응답자들은 76.8%가 ‘식민지 침탈의 역사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아서’를 들었고, 일본 응답자들은 73.9%가 ‘역사문제 등으로 일본을 계속 비판해서’를 들었습니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한국 국민의 인식은 해묵은 것입니다. 반면 부단한 과거사 반성 요구에 대한 일본 국민의 피로감 내지 반작용은 예상 외로 커서 EAI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구도 야스시(工藤泰志) 겐론 NPO 대표는 “국민 감정이나 상대국 인식이 언론 보도에 의존하면서 확대·조장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은 세상을 보는 창이기에 당연한 말입니다. 언론이라는 그 창에 먼지가 끼었거나 유리면이 매끄럽지 않고 울퉁불퉁하다면 그를 통해 세상을 보는 국민의 인식이 온전하기 어렵습니다. 양국관계가 악화한 책임에서 양국 언론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2. 한일관계에서의 기억의 윤색

올 초여름 서울의 한 지식인 모임에서 이런 농담이 한동안 웃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베 총리는 보기와 달리 대단히 정교한 전략적 사고를 한다. 그가 고노 담화 수정 가능성을

거론하지 않았다면 한국에서 어떻게 고노 담화가 지금처럼 값지게 재평가될 수 있었겠는가! ” 참석자들은 한일관계에 관심이 많고, 각각의 분야에서 일본에 대한 이해가 깊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말이 웃음을 자아낸 것은 참석자 모두 1993년 8월 4일 고노 담화 발표 당시 한국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했던 사실을 까맣게 잊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다음날부터 한국의 주요 신문은 1면 스트레이트와 수개면의 관련 해설 기사, 사설로 고노 담화를 크게 다루었습니다.

여성인권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 온 한겨레신문은 정치면 해설기사에서 《미야자와 기이치 내각의 퇴진 하루 전인 4일 발표된 중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조사결과는 지난해 7월의 1차 발표 때 없었던 동원의 강제성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진전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일보가 《고노 장관은 ‘위안부의 모집은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관여했으며 감언·강압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한 경우가 많았고, 더욱이 관헌이 직접 이에 가담한 일도 있었음이 밝혀졌다’고 표현했다. 또 한반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항목을 마련해 당시 식민지 상태 하에서의 피해상황을 부각한 것도 한국의 입장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8월 6일자 세계일보의 사설은 더욱 놀랍습니다. 고노 담화를 평가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긍정적 수용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의 공언대로 피해보상을 떠맡아야 할 한국 정부의 책무를 지적했습니다. 지금은 흉내 낼 엄두조차 하기 어려운 시각(視角)입니다.

《한일 양국의 과거사를 풀기 위한 일본정부의 지금까지의 자세는 분명히 성실한 것이 아니었다. 과거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를 깨끗이 씻어 낸 뒤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자는 것보다는 우월주의에 젖어있고 타산에 얽매인 인상이 짙었다. 이러한 종전의 자세에 비하면 자민당 정권 마지막 날 발표된 담화문은 진일보한 것이다. 그리고 새로 출범할 비자민 연립정부 주역들은 과거청산의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는가. 무엇보다 먼저 과거의 피압박·피지배의 입장에서 가졌던 감정에서부터 벗어나자는 것이다. 양국의 과거사 해결에 임할 때 「일본은 우리를 유린한 침략자」라는 분노를 앞세워 이에 대한 배상부터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도 이제는 일본과 대등한 경쟁국 입장이며 인접국으로서의 우호관계도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새로운 관계를 열어가는 데 너무 과거사에만 매달리는 것은 진취적 자세라 할 수 없다.

김영삼 대통령이 이미 밝혔던 「정신대」 문제에 대한 입장표명은 일본정부의 이번 발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고, 이것은 한일 양국의 앞으로의 관계에 시사하는 바 크다. 김 대통령은 일본정부에 대해 피해보상보다는 진실규명에 성의를 다해야 할 것을 촉구했었다. 국민들은 김 대통령이 도덕적 우위론을 주장했을 때 시의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중략) 한편 한국정부는 「정신대」 피해자 보상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

고노 담화 발표 당시 한국 언론의 적극적 평가와 수용 자세를 한국의 일본 전문가들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게 됐으니 일반 국민들이야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개인적 기억이든 한 사회의 집단적 기억이든, 그 이후의 사건에 따라 얼마든지 윤색됩니다. 또한 이런 기억의 윤색 현상이야말로 현재 한일관계 악화의 주된 요인입니다. 아울러 그런 현상이 일반국민은 물론이고 앞의 예에서 보듯 지식사회까지 침습한 사실은 특별한 우려를 자아냅니다.

그동안 일본 이해(理解)에 앞장섰던 한국의 지식인, 한국 이해에 앞장섰던 일본의 지식인은 비록 숫자로는 적었지만 양국관계의 중요한 안전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이 입을 모아 내어온 목소리는 대중의 잠재의식에 파고 들어가 상대국에 대한 극단적 반감의 표출을 제약했습니다. 요즘 들어 언론인을 비롯한 일본의 지한파, 한국의 지일파 지식인 사이에서도

내부 분화가 일어나 전체적으로 양국 지식사회의 안전판 역할이 의심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재의 한일관계 전개 양상에서 가장 걱정스럽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3. 사실과 진실

한국 언론의 기억 윤색, 기억 상실은 다방면에서 두드러집니다. 여야의 정치논쟁의 상당 부분이 180 도 달라진 과거와 현재의 태도를 따지는 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언론 전체 또는 언론사 저마다의 보도 자세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그때의 정치상황이나 국민 정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그나마 과거에는 국민 정서가 신문과 방송 등 전통 미디어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언론과 국민 정서는 일정한 상호작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국민 정서에 맞춘 보도 자세를 취하더라도 그 변화의 속도와 폭은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과 SNS의 발달, 각종 방송(지상파, 케이블, IPTV 등)의 ‘뉴스버라이어티쇼’의 확대에 따라 그런 상호작용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점점 많은 국민이 신문기사나 방송뉴스가 아니라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첫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을 좌우하는 논평이나 해설성 정보의 소비에서는 이런 편식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1990년대 중반 일본 TV에 연예인들이 지식인들과 나란히 나와서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마구잡이 의견을 쏟아내는 걸 보고 많이 놀랐는데 이제는 국내에서도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신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여전히 커서 그런 예능 감각의 정보·관점 취득이 제한적인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무제한 상황입니다. 국민을 이분하는 정치적 태도와 곧바로 연결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미 정보를 알고 있고, 나름대로의 시각까지 가진 여론공중(輿論公衆)의 인식을 수정하려는 자세보다는 그에 맞추고 동조하려는 자세가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의 환경변화는 통신기술 발달의 당연한 귀결은 아닙니다. 문화적 토양의 영향도 큼니다. 루스 베네딕트가 《국화와 칼》에서 짚었던 ‘위계(Hierarchy)’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이 지금도 그대로일 리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전통사회의 신분질서가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기능 분화에 대한 인정으로 변용했다고 볼 때 한국인은 좀처럼 그 각각의 고유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누구나 무엇이 될 수 있다는 의식 때문입니다. 과거 전통사회에서 문학과 철학 전문가들이 관료로서 행정을 전담했고, 의료·천문 기술자조차도 문철사(文哲史) 준전문가들이 담당했던 역사경험이 문화인자(meme)로 이어져 내려온 때문인지, 좀처럼 사회적 기능분화를 온전히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국민 모두가 때로는 스포츠 전문가가 되고, 때로는 정치평론가가 됩니다. 통신기술 발달은 마음은 꿀떡같았어도 마땅한 기회가 없었던 대중에 누구나 언론인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언론환경의 부정적 영향이 집중적으로 드러난 것이 대일 담론입니다. 오래전부터 한국에는 북한과 일본이라는 무조건적 비난 대상이 있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대북 인식이 크게 수정되고 분화한 뒤에 남은 비난대상은 일본뿐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의 역사반성을 수시로 확인해 빌미를 주지 않았다면 어찌면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는 아베 정부는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한국의 대일 감정을 부추겨 왔습니다. 한국 언론은 이런 대중정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고, 한국 정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한국 언론의 대일 보도 태도가 이런 외부적 상황에만 종속된 것은 아닙니다. 일본 언론이 ‘사실’을 중시한다면 한국 언론은 ‘진실’을 중시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비단 언론뿐만 아니라 한국인 전반의 의식성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 언론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히는 한국 신문의 기사 가운데 ‘~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취재원을 밝히기 곤란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전체적 분위기로 보아 흐름은 분명한데도 핵심 관계자들이 사실 확인을 해주지 않을 때 이렇게 씁니다. 엄밀하게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핵심관계자가 직접 확인해주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분명한 ‘미확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론계는 물론이고 독자 어느 누구도 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부분적 사실보다는 전체적 진실이 중요하다는 의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뒷받침하는 역사적 경험도 있습니다. 권위주의 시절 정권의 언론탄압으로 ‘사실’의 전달은 어려웠고, 설사 관계자들이 사실이라고 확인해 주더라도 나중에는 거짓말로 드러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형식적으로 확인된 사실’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정권 비판이란 ‘진실’을 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신군부에 의해 강제로 정계은퇴를 당한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83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3주년을 맞아 단식투쟁에 돌입했을 때 한국 언론은 이를 ‘제야인사 식사 문제’ 등의 암호 같은 표현으로 기사화, 독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낸 것이 좋은 예입니다. ‘사실’과는 거리가 아득한 기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암호는 오랫동안 신문기사의 행간(行間)을 읽는 버릇이 든 한국 독자에게 진실을 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4. 먼지를 닦아 내고 유리창의 굴곡을 없애자

그 동안 한일 양국 언론인 사이에는 많은 얘기가 오갔습니다. 양국의 민족주의의 ‘적대적 공생’ 양상, 양국 언론의 ‘캐치볼’ 현상 등 문제의 배경이 지적됐습니다. 또한 한국언론이 고민 없이 써온 ‘망언(妄言)’이나 ‘군국주의’ 등의 표현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같이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같은 한자어의 어감이 다른 것이 적지 않고, 일본이 한국에 비해 고유어 표현을 즐겨 쓰는 바람에 빚어지는 오해도 적지 않습니다. 가령 1995년 무라야마 담화의 ‘오와비’라는 표현을 두고 한국에서는 <‘샤자이(謝罪)’에 비해 반성의 강도가 약하다>는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4월 29일 서울에서 열린 심포지엄 ‘위안부 문제, 제 3의 목소리’에서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는 과거 아시아여성기금이 한국에서 실패한 요인의 하나로 최종적으로 ‘국민적 보상(償い)’으로 성격이 결정되기에 앞선 일본 언론의 ‘미마이킹(見舞金)’ 보도가 한국에 ‘위로금’으로 번역돼 소개된 점을 들었습니다. 당시 ‘쓰구나이(償い)’는 영어로는 원래의 ‘배상, 속죄’의 뜻을 살려 ‘어톤먼트(atonement)’로 번역됐더니 여성기금 사업에 대한 네덜란드나 필리핀의 태도와 ‘위로금’으로 받아들인 한국의 태도가 커다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의 지적은 직접 여성기금에 참여한 당사자의 변명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정부나 언론이 언어표현에 신중해야 함을 일깨웠습니다.

한국 언론의 창에 덕지덕지 앉은 먼지의 대부분은 지나치게 단정적인 말과 글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체제 아래 ‘선명하다는 것,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한국언론의 보편적 가치일 수 있었지만 민주화 이후의 사회변화와 세계화에 따라 일종의 시대착오적 가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적과 동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잘잘못을 자로 잰 듯 정확하게 가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인간 본연의 특성 때문인지 한국 언론은 그동안 써오던 선명한 표현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일 보도가 전형적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 언론의 대일보도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과제는 신중한 언어표현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적절한 언어 선택이 어려울 때는 선명한 표현보다는 오히려 흐릿한 표현에 기대는 것이 낫습니다. 실은 지난해 말부터 도쿄특파원 경험자가 중심이 된 한국 언론계 간부들의 모임에서 더 이상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그 1 차적 결과는 앞의 위안부 심포지엄을 주최한 ‘동아시아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민족감정의 ‘적대적 공생’이나 ‘캐치볼’현상을 제약하기 위한 언론사 내부의 자율규제도 작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평소에 전혀 눈길을 주지 않았던 일본의 석간 타블로이드 신문이나 대중 주간지의 한국 비판 기사를 일부 한국 언론이 그대로 전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감정 발산형 기사는 신문과 방송이 전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인터넷이나 모바일 공간에 넘칩니다. 그런 기사를 전통미디어가 인용하는 것은 일종의 인지(認知), 또는 승인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기에 여전히 차단해야 합니다. 최근 한국언론은 국민의 대일 감정을 자극할 만한 보도를 삼가자는 묵시적 합의에 조금씩 접근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창, 특히 대일보도의 창에 끼었던 때를 벗기고, 왜곡된 유리면을 평평하게 고르는 작업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5. 청년들을 위한 ‘대일 보도 사용설명서’

한일 양국의 미래를 떠맡을 청년들만이라도 이런 양국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에 밀려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만 주의하면 현재의 언론지형에서도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 정보와 관점의 소스(Source)를 다양하게 하십시오. 특히 SNS 를 통해 날아든 소식과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정규 신문·방송을 통해 크로스 체크하기 전까지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신문이나 방송 보도도 한 신문, 한 방송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의외로 똑 같은 소식을 다른 각도에서 다루는 예가 많습니다. 또한 보도 방향은 비슷해도, 비난의 강도나 근거가 서로 다릅니다.

셋째, 같은 뉴스에 대한 상대국 언론의 시각도 가능하면 확인하십시오. 굳이 상대국 언어에 능통하지 않아도 어지간한 보도는 인터넷에 즉각 번역돼 실리고, 아예 상대국 언어로 보도하는 ‘한국어판’ ‘일본어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6. 역사에 겸허하자

마지막으로 역사에 대한 겸허한 자세를 권합니다. 역사의 자궁심은 진실을 가리거나 비틀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양쪽이 상대의 자궁심을 해치면서까지 스스로의 역사에 자궁심을 가지려는 태도는 대체로 잘못된 것입니다. 젊은 세대는 과거의 잘못에서 기본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이를 특권으로 여기고 구세대의 일방적, 민족주의적 역사 인식에서 발을 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디어는 국경을 넘을 수 있는가?」

(1) 두 명의 “한국인”과 두 명의 “일본인”

본론에 들어 가기 전에 두 명의 “한국인” 두 명의 “일본인”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반기문씨, 제 8 대 유엔 사무총장이자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다른 한 명은 짐 김용씨. 세계은행 제 12 대 총재이며 에이즈나 결핵 등 공중위생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이기도 하다. 두 사람 다 지금은 미국을 거점으로 국제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는 두 명의 “일본인”. 한 명은 나카무라 슈지(中村修二)씨. LED(청색발광다이오드) 제조법 발명자로서 2014 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또 한 명은 도널드 킨(鬼怒鳴門 Donald Lawrence Keene)씨. 오랫동안 콜롬비아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고 일본문학과 일본문화 연구의 제일인자로 꼽힌다.

이 네 명을 “한국인” “일본인”이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다. 반기문씨는 한국인이지만, 짐 김용씨는 미국국적을 가진 미국인(한국계 미국인), 나카무라 슈지씨도 미국 국적의 미국인(일본계 미국인), 도널드 킨씨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국적을 취득해서 일본에 영주한 일본인(미국계 일본인)이다.

애나 미 앨러슬레우(Anna Mee Allerslev)씨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시장(고용 · 사회통합 담당), 플뢰르 펠르랭(Fleur Pellerin)씨는 한국계로는 최초로 프랑스의 장관(중소기업, 이노베이션, 디지털 경제 담당)에 취임했다. 두 사람 모두 한국에서 출생했으나 한국 국적은 아니다.

스즈키 무사시(鈴木武蔵)는 인천 아시안게임에도 출전한 일본의 프로 축구 선수이다. 어머니는 일본인이지만 아버지는 자메이카인이다. 스모의 제 68 대 요코즈나인 아사쇼류(朝青龍)의 본명은 도루스렌 다그와도루지(Dolgosurengiin Dagvadori)이고 국적은 몽골이다.

일본인, 한국인이란 무엇인가?

(2) 미디어의 국적은

미디어는 어떻게? 미디어에 국적이 있을까?

일본의 대표적인 미디어 중에서 NHK(일본방송협회), 니혼테레비, 니혼케이자이신문에는 회사 이름에 ‘일본’이라는 글자가 들어간다. 일본 국내에 거점을 두고 일본 독자와 시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일본 미디어」(일본계 미디어)라고 하지만, 「일본 국적의 미디어」라는 뜻은 아니다. 일본 미디어는 일본 국적을 갖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일본에 사는 외국인, 해외에 살고 있는 일본인이나 외국인도 대상으로 한다. 한국 미디어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왜 일본 미디어는 「竹島(한국명: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 하고, 한국 미디어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는 없다」고 하는가?

(3) 미디어는 국익의 대변자인가?

최근의 한일관계를 반영해서인지, 최근 양국의 미디어에 마치 정부의 대변인 듯한 논조가 매우 많아진 것 같다. 산케이신문사의 카토 전 지국장 관련 보도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일본 미디어는 다같이 ‘언론 탄압이다’라고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한국의 미디어는 ‘국가 원수에 대한 모욕’이라고 산케이신문을 공격한다. 언론의 자유, 개인의 명예나 존엄이라는 보편적인 가치와 관련된 사건인데, 왜 일본 미디어와 한국 미디어의 보도는 이렇게까지 대조적이고 확립적인가.

미디어는 국익의 대변자가 아니다. 민주주의사회에서 미디어에게는, 국익을 대표해서

국적조항의 속박을 받는 공무원등과는 다른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닐까.

(4) 범유럽방송의 시도

미디어는 국경을 넘을 수 없을까, 여러가지 모순과 갈등 속에서도 통합의 길을 걷는 유럽의 예를 소개하고자 한다.

다음은 1980년 유럽의회에 당시 서독에서 선출된 빌헬름 한(Wilhelm Hahn)의원이 제출한 보고서(Hahn Report)의 한 부분이다.

“오늘날의 사회에서 정보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며, 유럽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여론을 형성하는 도구는 미디어이며, 그 중에서도 시각과 청각 모두에 호소하는 통신수단인 TV는 가장 중요하다”

한(Hahn)의 보고서에 의해서, 1982년 EBU(유럽방송연합)의 프로젝트로서, 「유리콘(Eurikon)」이라는 위성채널 실험방송이 실시되었다. 실험에는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독일의 5개 방송국이 참가해서,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방송을 했다. ‘유럽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유럽인으로서의 문화와 정체성을 공유한다’는 목적이었다. 재원이나 사용 언어, 뉴스 취급 방법 등 여러가지 과제는 있었으나 실험은 일단 성공리에 마쳤고, 실험결과에 입각해서 1985년에는 「유로파(Europa)」라는 실용방송이 시작되었다.

1989년 유럽위원회는 ‘어느 나라에 있던 EC 역내에 사는 사람은 모든 가맹국의 방송을 자유롭게 볼 수 있다. 다른 가맹국에서도 같은 방송을 할 수 있다’라는 「국경없는 TV 지령(Television without Frontiers Directive)」라는 룰을 제정했다. 이 지령에 의해서 역내 미디어의 국경 넘기가 가속화되었고, 1993년에는 10개국의 방송국이 출자해서 EBU가 운영하는 유로뉴스가 시작되었다. 방송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그리스어, 러시아어, 폴란드어, 우크라이나어, 터키어, 아랍어, 페르시아어 총 13개이며, 거점이 있는 리용에서 전세계를 향해서 뉴스와 정보 프로그램이 방송된다. 미국의 CNN, 중동의 알자지라에 대항해서 유럽이 발신하는 뉴스를 세계에 내보내고자 하는 시도다.

한(Hahn) 보고서에서 시작해서 Eurikon, Europa 를 거쳐 유로뉴스로 발전한 범유럽방송의 시도는, 위성방송의 보급이라는 방송 기술의 진전과 유럽통합이라는 정치적인 움직임과 연동되어 있다. 유로뉴스가 마스트리히트조약이 발효되는 해에 개국한 것은 상징적이라 할 수 있다.

(5) 동아시아의 미디어 상황

냉전구조가 잔존하는 동아시아에서 EU 와 같은 공동체의 실현은 먼 장래의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미 한일 미디어 사이에서도, 인재 교류, 소재와 프로그램 교환, 공동 제작과 같은 연계나 협력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로뉴스는 13개의 언어로 필요로 하지만, 아시아뉴스가 만들어 진다면, 일본어, 한국·조선어, 중국어, 영어까지 해도 4개 언어만으로 충분하다.

선구적인 사례로, 2013년 11월에 창간된 「테소로」를 소개하고자 한다. 서울신문이 일본어로 발행하는 무료 타블로이드신문으로, 창간한지 일년 남짓하다. 11월호 특집은 「한국의 온라인 우익 ‘일베」, 일베의 실태에 대한 흥미로운 리포트를 소개했다. 이 밖에도 베이징 APEC 의 전망과 중국 외교, 한일관계에 대한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인터뷰와 같은 딱딱한 기사뿐만 아니라, 서울의 유명 맛 집의 소고기 요리 등 생활에 밀착한 일상적인 정보도 실려 있다.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일본인 기자와 한국인 기자가 다른 각도에서 분석하는 참신한 시도도 있다. 일본 미디어도 아니고 한국 미디어도 아닌 “국경을 초월한 미디어”의 시도로서 평가할 만하다.

(6) 국경을 넘는 미디어 이용자

미디어가 국경을 넘으려면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 지역 통합이 진행된 유럽에서조차 다양한 과제가 있다. 그러나 시민은 보다 자유롭게 국경을 넘을 수 있다. 한국 미디어의 기사는 인터넷으로 일본에서도 일본어로 읽을 수 있다. 반대로 가능하다. 상대국의 보도에 반발해서 증오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측면도 있으나, 일본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 미디어를 통해서 竹島·독도 문제에 대해 공부하고, 한국에 사는 사람이 일본 미디어를 통해서 위안부 문제에 관한 논설을 읽을 수도 있다. 양국 국민이 국경을 넘음으로써 찬동은 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의견이나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상호이해가 아닐까.

마지막으로 19 세기 프랑스의 세균학자 루이 파스퇴르(Louis Pasteur)의 말을 소개한다.

“과학에 국경은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

앞부분뿐 아니라 뒷부분도 중요하다. 국경을 넘는 것은 조국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일본인으로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소중히 하면서, 글로벌한 관점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시민, 그리고 상호 이해를 위한 도구로서의 미디어의 역할에 기대한다.(끝)

참고문헌 : 『TV 는 국경을 넘었는가~유럽 통합과 방송』 河村雅隆 브론즈 2014 년
Richard Collins “From Satellite to Single Market” London Routledge, 1998
Ingrid Nitsche “Broadcasting in the European Union” T.M.C.Asser Press, 2001

의사록

개회사

(한국국제교류재단 관계자):그러면, 시간이 되었으므로 「한-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출석자 여러분은 입장하셔서 착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한일 동시통역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어는 1 번, 일본어는 2 번을 이용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일 양국에 있어 다사다난했던 2014 년이 저물어 가는 이 시기에 양국의 여론을 대표하는 저널리스트 여러분, 그리고 관련 분야에 조예가 깊은 지식인 여러분을 모시고 제 4 차 「한-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의 개최에 이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고 생각합니다. 또한, 끝까지 알차고 의미 있는 회의가 되도록 여러분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4차 「한-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를 시작하면서 개회 인사말을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윤 금진 이사님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윤 금진(한국국제교류재단 교류이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이사를 맡고 있는 윤 금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존경하는 노가미 요시지 일본국제문제연구소의 소장님, 그리고 참석하신 한일 양국의 출석자 여러분, 양국의 미디어를 대표하는 선생님 여러분을 만나 뵈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쁘고 또한 영광스럽고 생각합니다. 2014 년의 제 4 차 「한-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에 출석하시기 위해 일본에서 한국을 찾아와 주신 모든 일본측 대표단 여러분에게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다망하신 가운데 모여 주신 한국측 대표단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한-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일본국제문제연구소의 공동주최, 한국외교부 및 일본외무성의 후원 아래 2011 년부터 한일 양국을 오가는 형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는 저희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추진하는 대표적인 지식공공외교사업의 하나이며, 간판에도 적혀 있듯이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한-일 국교정상화 50 주년을 앞두고 양국의 상호이해와 협력강화의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이 시기에 개최된다는 의미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회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은 세계 제 3 위 경제대국이며, 한국도 지금은 중견국이 되어 있는 만큼 동북아시아는 물론 아시아 및 세계적으로 양국에 요구되는 역할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장애와 문제로 인해 그와 같은 우리들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아시아지역에서 원만한 정치적·경제적·문화적인 화합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처럼 양국관계가 조금 정체되고 소원해져 있는 상황일수록 민간차원의 협력과 교류가 가지는 필요성, 중요성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저희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는 관과 민이 합동으로 한일 양자 포럼인 「한일 포럼」을 조직하여 이미 22 년이라는 긴 세월을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순수한 민간차원에서의 협의의 틀인 이 「한-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를 통해 한일관계의 「출구」를 모색하는 시도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 「한-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는 양국의 언론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 계신 분들을 맞이하여 한일 양국이 직면해 있는 다양한 문제에 관해 솔직하고 진솔한, 그러면서도 냉정하고 균형 잡힌 의견교환을 통해 문제를 풀어 가는 중요한 장입니다. 내년의,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한-일 국교정상화 50 주년을 맞이함에 있어 여러분의 균형잡힌 관점과 발전적인 제안을 통해 양국의 과거와 미래를 비추고 새로운 한일 두 나라의 협력관계가 모색될 것, 그리고 미디어 및 지식인들의 입장에서 참가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중요한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이들 간의 회의를 통해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차이를 좁혀 양국의 우정을 지속함에 있어서 격려가 될 수 있는 논의가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일 양국의 협력은 물론이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을 실천해 가기 위한 뛰어난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간단하게나마 이상으로 먼저 주최측 인사를 마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관계자): 윤 금진 이사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함께 「한-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를 주최하시는 일본국제문제연구소의 노가미 요시지 이사장님으로부터도 개회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탁드립니다.

노가미 요시지(일본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 윤 금진 이사님, 한국측 저널리스트 여러분, 그리고

일본에서 찾아오신 일본인 저널리스트 여러분, 이번 제 4 차 「한-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에 참가해 주신 것에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회의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 한국국제교류재단께서 진력해 주신 것에 대해,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관계자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윤 이사님으로부터도 지적이 있었지만, 이번 이 회의는 「한-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라는 5 년간 프로젝트의 네 번째에 해당합니다. 내년이 그 마지막 해이며 매마침 일한 국교정상화 50년, 그리고 제2차세계대전 종료로부터 70년이라는 역사적인 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본과 한국 사이의 더욱 원활한 의사소통이라는 목적을 위해 본 프로그램을 지속해 온 것이었는데, 여기에 출석해 주신 일한 양국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본 회의에 참가해 주시고 있는 분들입니다. 물론 이 분야를 대표하는 분들인 만큼 그 이전부터도 서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하지만, 이러한 구성의 면에서도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보다 솔직한 형태로 흥금을 털어놓고 여러 이야기, 일한 양국의 여러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일한 양국의 관계는 따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매우 중요하고 긴밀한 관계이지만, 한편으로 현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중에 우리들이 특히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후에 발표 중에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양국 각 나라의 여론이 식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론이 식어 가고 있다는 것은 그것 만으로도 정치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 그러면 그 여론에 대해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진 여기에 모이신 저널리스트 여러분에게 시선을 돌려 보면 이러한 수준의 상호이해가 진전되고 있는 한편 유감스럽게도 그것이 좀처럼 여론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한 부분도 꼭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매우 신기하게도 도쿄에서 열린 제 1 차 「한-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는 비교적 평온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 열린 제 2 차 회의는 꽤 내용이 격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일본의 치바에서 열린 제 3 차 회의는 비교적 조용했는데 왜인지 일본에서 할 때는 비교적 평온하고 서울에서 하면 꽤 격해지는 사이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으로 가자면 이번에는 매우 어려운 세션이 되고 내년의 일본에서 열리는 「최종회」는 매우 조용하게 끝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물론 「역사가 반복」될지 어떨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또, 서로 사양하느라고 하고 싶은 말도 하지 않고 조용하게 끝내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일입니다. 저로서는 설령 냉엄하더라도 가능한 솔직한 의견교환을 하고 응어리를 없애 가는 것, 그리고 내년의 일한 국교정상화 50 주년이 되었을 때에는 이 「한-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도 무언가 최종적으로 건설적인 제언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도 앞으로 이틀 동안의 회의를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가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더 이번 회의의 참가자 여러분, 그리고 회의개최 및 설치운영 과정에서 진력해 주신 한국국제교류재단, 일본국제문제연구소의 사무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관계자):노가미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참가자 전원이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개회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양국 대표단 여러분, 회의장 앞으로 모여 주십시오.

(사진촬영)

(한국국제교류재단 관계자):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제 1 세션 「국교정상화 50 주년—과거와 미래 조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션 사회자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세션 1: 「국교정상화 50 주년—과거와 미래 조명」

세션 1 사회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작스레 죄송하지만 제 1 세션의 사회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이 「한-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에 참가하신 분도 많아서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오늘과 내일 이 회의에서 이야기되는 논의에 대해서는 채텀하우스 룰(Chatham House Rule)이 적용되므로 「발언자의 비밀」을 엄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룰이 지켜짐에 따라 문자 그대로 솔직한, 흥금을 털어놓은 토론도 가능해지므로, 이 점에 대해 여러분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바입니다.

그러면, 제 1 세션은 오전 내내 즉 12 시 반에 시작되는 점심시간 전까지 계속되는데, 지금까지는 정각대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먼저 커피브레이크까지인 45 분 정도를 이용해 발표자 두 분에게 프레젠테이션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한국측, 그 다음에 일본측의 순서로 부탁드립니다. 미리 배부한 발표자료를 보면 한국측의 자료가 조금 분량이 많아서 어쩌면 약간 발언이 길어질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두 분께서 45 분간이라는 시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한국측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한-일 국교정상화 50 주년—과거와 미래 조명」

한국측 발표자: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때가 때라서 그런지 한일관계에 대한 학회나 회의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많고, 그러한 학회나 회의를 돌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 담아 내고 싶은 것이 늘어나서 제출한 발표자료가 방대해진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발표자료는 되도록 간략하게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먼저 이 점을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께서 배려도 해 주셨지만 요점을 짚으면서 20 분 이내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 발표자료에서는 포인트로 다섯 가지를 꼽고 있는데 본문은 나중에 봐 주시는 것으로 하고 이 다섯 가지에 대해 구두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한일관계의 현단계를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아시는 바와 같이 2012 년 이후, 한일관계는 최악의 국면에 들어섰다, 혹은 최근 50 년의 한일관계 역사에서 최악의 상태라고 자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의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일종의 속임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일관계가 차갑게 식어 있는 것은 부정하기 힘든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양국의 정상이 서로 만나는 것을 주저하는 듯한 상황이니까요. 또한, 조금 전에 노가미 이사장님으로부터도 지적이 있었지만, 국민 차원에서의 호감도도 떨어지고 게다가 일본에서는 「혐한」이 일반국민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한편 한국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라는 식의 「비대칭」 구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심각한 것은 역시 영토문제·역사갈등의 문제로 이것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최대의 요인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일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확산, 심화되고 있는 역사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최중요 과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일 간에는 이러한 역사갈등이라는 「여건」이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도자가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어떻게 전략적으로 문제를 다루느냐, 또—오늘 이곳에 모여 있는 분도 포함하여—지식인이나 미디어 관계자가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느냐에 따라 문제의 「빈도」나 「심각도」는 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한일관계의 과행성은 피하기 힘든 구조적인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전략적 접근의 여하에 따라 상당 부분 역사갈등의 정도·심도·빈도는 조정 가능한 것이라는 관점에 서서 문제를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역사문제라는 것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나 가치를 존중하면서 「미래를 향해」 한일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가야 할 것일가를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로 내년은 「1965 년 체제」의 50 주년, 즉 한일기본조약의 체결로부터 반세기가 되는 해입니다. 그렇다면 이 65 년체제의 50 년을 총괄한다면 어떤 일이 되는가, 이 점을 발표자료의 제 2 장에 담았습니다. 먼저 1965 년에 이르기까지의 한일회담, 한일 양국의 교섭단계를 되돌아보면 이 한일회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 즉 35 년간의 식민통치에 대한 인식의 괴리를 어떻게 극복하고, 또 그와 같은 인식의 차이를 어떻게 화해로 이끌어 갈 것인가를 모색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일회담을 통해 이와 같은 과거사인식 및 역사인식의 깊은 간격과 괴리라는 것이 극복된 적은 없었습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 1965 년의 한일기본조약의 문서라는 것은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이었다. 근본적인 역사문제에 대한 해결보다는 해결하지 못한 채로 미봉적인 타결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미봉책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안보이론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의 냉전체제 아래 한국과 일본은 안전보장면에서 미국과 협력해 가는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일조약의 타결에 있어 구심력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가 경제이론입니다. 일본으로부터 경제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었던 당시 박 정희 정권의 상황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일본의 이케다 하야토 정권은 일본경제를 해외로 확대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나아가서는 미국에서도 한일 양국의 경제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양국 간에 역사문제는

있었지만 한국과 일본은 안보이론, 경제이론에 입각하여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이른바 우호협력적인 관계를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이 65년 체제의 전신(前身), 그리고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1965년 이후의 50년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의가 가능할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발표자료 중에 간략한 표로 정리한 것을 실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보아 주셨으면 하는데 1965년부터 2015년까지의 한일관계의 50년을 정리하자면—물론 이론(異論)의 여지도 있겠지만,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단순화하였습니다—대략 세 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1시기는 냉전체제 아래에 한일관계가 존재했던 시기입니다. 이때는 북방삼각관계, 즉 중국·소련·북한의 공산진영과 대결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미국이라는 후견인을 두고 관계를 맺는 한미일의 관계가 다져집니다. 즉, 반공연대라는 것이 이 시기에는 중요했기 때문에 양국 간의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이나 대립은 최대한 억제되고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 냉전체제 아래의 한일관계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냉전체제가 해체되어 가는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2시기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역사갈등의 여러 요소가 분출해 가는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었습니다. 한국측을 살펴보자면 대일정책에 민족주의적인 정서를 앞세우는 것 같은 움직임이 나타난 즉, 그때까지 억눌려 있는 정서가 한꺼번에 분출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가능해진 배경에는 냉전구조의 해체와 더불어 한국 내의 변화, 정치 및 사회의 민주화가 있었던 사실도 부정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제3시기. 이것은 2010년대가 해당되겠는데 이 2010년 이후의 한일관계를 특징짓는 요소를 꼽는다면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중국이 강대국으로서 부상한 것일 것입니다. 중국이 강대국으로서 동아시아의 강력한 세력으로 대두해 오며 따라 한일관계의 양상이 근본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즉, 프레임 쪽에 변화가 생긴 것인데, 이것은 보다 큰 흐름으로서의 동북아시아에서의 세력이전, 파워트랜지션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나라 관계로서의 한일관계 그 자체도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것도 이 시기—즉, 현재의 한일관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아 버리면, 혹은 한일 간의 대립은 시간과 함께 깊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대립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보는 각도를 바꾸면 이들 요소는 한일 두 나라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것임과 동시에 한일 양국이 강력한 공통의 기반을 가지고 이해관계를 공유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민주주의·시장경제·인권이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나아가 안전보장과 경제체제, 시민사회의 영역에서는 한일 양국은 「체제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기반 위에 있고 게다가 닮은 가치관에 의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흐름은 지속되어야 하며, 그것이 한일관계의 발전지속성을 담보하는 공동의 토대가 된다고 하는 시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포인트로 옮겨 가겠습니다. 그것은 한일관계만이 아니라 한일 두 나라의 역사갈등 그 자체에 대해서도 그 문맥과 배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냉전의 종식에 따라 반공연대라는 것이 매우 약화되고, 나아가 2000년대 이후의 이른바 파워트랜지션에 따라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의 기본프레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력균형의 유동화」라는 것이 되겠는데, 그 유동화의 과정에 한일 양국 간, 그리고 중일 간의 마찰과 갈등이 심각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일 양국 간에는 정치, 경제, 혹은 언론분야에 이르기까지 이전에는 두터운 인적 네트워크와 채널이 존재하고 있었고, 한 번 갈등이 일어나도 그러한 것들이 조정 혹은 해결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두터운 인적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특수한 것이므로 과거에는 특수한 관계였던 것, 그러한 것이 사라져 버린 지금은 일상적인 「보통의 양국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한일관계가 과거의 「대국」과 「소국」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상대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라고 불러야 할 것으로 변하고 있고, 그것이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이전에는 대일관계의 악화가 초래될 것이라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과거사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관리하는 입장을 취해 왔지만, 최근에는 그러한 신중함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신중해야 함의 필요성을 이전 만큼 느끼지 않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일본은 일본대로 상대적 중견국가라고도 해야 될 존재가 된 한국을 어려운,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조적인 변화 중 하나입니다.

나아가 일본의 국내적인 요인으로 2000년대 이후도 그랬지만, 특히 아베정권이 출범한 이후 보수국가주의가 강화되는 경향이 표면화되고 있고, 종종 얘기되고 있는 보수·우경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지적해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세대교체의 영향도 여기에 작용하고 있어서 전후세대의 일본인은 과거의 속박, 과거사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지려고 하고, 과거의 식민통치나 침략의 역사에 대해 이전 세대처럼 강한 속죄의식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인식문제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발언하고, 주변에 거리낌 없이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일본국내에서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추가하자면 이른바 진보세력이 고령화되면서 우경화에 대한 비판적 의견, 이른바 자정작용의 부분이 약화되고, 그에 따라 더욱 발언력을 잃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 반작용으로 젊은 세대의 매우 직접적인 언행이 더욱더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변화가 한일관계를 더욱 어려운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 이것을 세 번째 포인트로 들고 싶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역사갈등의 원인, 한일관계의 악화에 어떠한 구도가 내포되어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방금 네 가지 구조적 요인을 꼽아 보았지만, 저는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만이 오늘날의 한일관계를 초래했다고 보면 조금 초점이 어긋나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한일관계를 극단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다음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양국 지도층 사이의 소통(커뮤니케이션) 부재로 인해 한일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악화가 생기고 있다는 점. 즉, 한일관계의 악화에 의해 지도층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단절되어 버렸다는 측면 이상으로 거꾸로 최고지도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결여가 한일관계의 악화를 초래한 측면이 강하며, 이것이 하나의 패러독스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어가 한일관계에 대해 센세이셔널하게 보도하는 것이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요인이 되어 있다는 점. 물론 이 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양국 국민차원에서 상대국에 대한 인식, 즉 호감도는 이전에 비해 확실히 악화되어 있고 그 책임의 일부분은 미디어에게도 있다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한마디로 미디어라고 해도 주류에서 비주류, 혹은 물거품 같은 곳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대체로 충동적인 보도, 혹은 사실관계에서 동떨어진 정보의 유통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역시 미디어 전체에 얼마간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한일관계가 여기까지 악화한 것을 존재론적인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인가, 혹은 인식론적인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저는 존재론보다도 인식론 부분이 강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즉, 쌍방의 인식이 극단적으로 변화한 것, 그리고 그와 같은 극단적인 인식이 보편화한 것, 이것이 결국 최대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대방에 대한 전략적인 견해, 상대방의 중요성을 전략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사고가 결여되어 버렸습니다. 그러한 인식론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전략적 사고의 부재에 따라 더욱 문제가 악화되어 있다는 것이 저의 「진단」입니다.

여기에서 강조해 두고 싶은 것은 한국의 일본인식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으며, 또 일본의 한국인식도 두드러지게 단순화되어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일본인식에는 크게 역사수정주의·헌법개정 의 움직임·안전보장정책의 변화·영토정책의 강화라는 4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것을 한데 묶어서 마치 그것들이 하나의 패키지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베정권이 주도하는 보수·우경화정책 패키지라는 틀을 머리 속에 설정하여 그 속에 이 네 가지를 적용시키고, 이것은 일본이 위협한 방향으로 향하려는 현상이 아닐까라는 경계론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들 이슈는 각각 성격도 다르며, 이론도 원인도 틀립니다. 그러므로, 본래라면 이러한 것들은 「분리해서」 파악해야 하는 것이며, 각각에 대한 대처법도 따로따로 모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한국인식에 관해 보면, 특히 최근에는 한국 사법부의 판단이 화제가 된 일도 있고 해서 과거사문제에 대한 이른바 「사죄 피로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견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존재를 거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게다가 한국에 막연한 두려움의 감각을 느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 인상이 듭니다. 일본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사회심리학적으로 개방적인 태도보다 내향적인 자세로 국제관계를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에 대해 이와 같은 고정관념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가장 극단적인 소산의 하나가 이른바 「한국의 중국편중론」으로 한국이 대륙의 중국과 한편이 되어 행동하고 있는, 즉 일본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고 있다는 식으로 국제정세를 보는 것인데, 한국입장으로 하자면 이것은 분명히 「착시」이고 한국의 외교전략을

너무나 단순화하여 파악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일본의 한국인식도 객관적인 한국의 현실과는 괴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상을 토대로 하여 현재의 국면을 어떻게 타파해야 하는가. 이것이 마지막 포인트가 되겠는데, 저는 양국의 정상회담을—한국의 국내여론에는 해서는 안된다, 필요 없다라는 소리가 많지만—즉시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동아시아 3 국의 외교에서 정상회담이 가지는 의미와 비중이 크다는 점도 있으며, 또 정상끼리 만남으로 해서 적어도 의미 있는 합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합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아베정권에 대한 불신감은 한국에도 중국에도 있으며, 거기에는 아베 총리 자신에게 약간 모순된 말과 행동이 보이는 것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냉정하게 아베 총리의 발언을 보자면 위안부문제에 대해 사죄하는 입장을 되풀이해서 보이고 있고, 코노담화를 계승한다고 국회토론에서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무라야마담화의 정신도 계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아베 총리가 스스로의 발언으로도 혹은 공동성명의 형태로도 지금까지의 일본정부의 역사정책의 틀을 계승하고 지킨다는 합의를 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양국의 현안인 위안부문제와 징용공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 즉시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전문가 혹은 당국자 간에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문제해결을 지향해야 한다는 합의는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합의를 정상회담을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이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일 양국이 21 세기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협력하고, 어떠한 관계를 구축할 것인가. 그러한 비전에 관한 합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에 관한 합의를 이끌 수 있는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한일 양국의 정상회담이 어렵다고 한다면 한중일 정상회담을 거쳐 한일 정상회담으로 이어 가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문제로 정상회담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차선책으로 「세 가지 분리」라는 방법이 유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정상회담과 비정상회담의 분리. 한국에서는 이 「비정상회담」이라는 아이디어가 유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체면이 신경 쓰여서 정상끼리 못 만나는 것 같은 상황을 피한자는 것입니다. 또, 역사문제와 경제·안보·문화의 분리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아베=일본」 또는 「아베정권=일본국민」이라는 도식에서 벗어나 보는 분리도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차선책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분리정책」을 해 보는 것도 한일관계의 갈등을 완화하고,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조금 주어진 시간을 초과해 버렸는데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세션 1 사회자: 감사합니다. 과거 50 년간, 그리고 현재의 문제와 그 뿌리에 있는 원인, 그리고 그 처방에 이르기까지 잘 정리해서 발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토론부분은 커피브레이크 후에 가지기로 하고 휴식시간까지의 시간을 이용해서 일본측의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일-한 국교정상화 50 주년—과거와 미래 조명」

일본측 발표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앓은 채로 발표드리는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한-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가 시작된 것은 2011 년,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난 해였습니다. 그때 회의에서 일본의 기자가 이런 발언을 했었다고 기억하는데 한국기자가 재해지에 가서 쓰는 보도는 특징이 있다. 그것은 정이 넘치고 심정적인 친근함이 투영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3 년이 흘렀고 올해는 한국에서 세월호 침몰이라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어서 작게나마 보답을 했으면 하고 올해 8 월 서울에 갔을 때에 시간을 만들어 서울시청 앞에 설치되어 있던 분향소에 가서 세월호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야기가 약간 탈선해 버려서 죄송한데 이 자리를 빌어서 짧게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주위를 돌아보는 버릇이 들어서 그런지 사고의 책임추궁을 요구하는 데모가 열리기도 하고, TV 와 신문에서 사고를 둘러싼 여야당의 격한 대립 모습 등도 눈에 띄고, 한국의 보수 대 좌파 대립이 얼마나 뿌리가 깊고 격한지를 느꼈습니다. 혹은 오늘 발표 중에 언급할 한국 내의 상황과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그러면 저에게 주어진 테마는 과거와 미래 조명, 일한 국교정상화 50 주년입니다. 어떻게 발표를

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는데, 여기에서는 과거를 조금 되돌아보면서 이야기해 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소도구」로써 과거의 일본 신문에서 박정희시대에 관한 기사를 몇 가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본어를 모르시는 분도 낱짜를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실 수 있는 큰 사건입니다.

(이하, 스크린에 신문기사를 영사하면서) 첫 번째 장은 쿠데타 때의 기사입니다.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체크해 본 바에 따르면 박 정희라는 이름이 이 신문에 등장한 것은 이것이 최초입니다. 여기에서는 서울의 사령관으로 작게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이쪽은 국교정상화를 직전에 둔 한국측의 이 동원 전 외무부 장관과 일본측의 시이나 에츠사부로 외상이 만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기사에서 「타케시마」라는 타이틀이 있는 것을 눈치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드디어 국교정상화 기본조약이 체결되었다는 기사입니다. 굉장히 큰 사진인데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지면을 만들었구나라고 놀라면서 봤습니다.

박정희시대에도 일한관계의 위기는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이 1973년에 있었던 김 대중 납치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는 박 정희 대통령에 대한 저격과 육 영수 여사가 사망하는 매우 슬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범인이 일본인이라는 보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속보에서는 제일교포로 밝혀졌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후에 있었던 반일데모의 극심함은 오늘날로는 상상하기 힘든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서울의 일본대사관에 데모대가 침입하여 옥상의 국기, 즉 일장기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런 회고가 있습니다. 당시의 한국에 있어서 일본은 그만큼 큰 존재였기 때문에 반일감정은 그만큼 격렬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옛날 신문이 아니고 훨씬 이후가 되겠는데 1998년의 기사입니다. 이것은 왜 1998년이나 하면 기사에도 50이라는 글자가 보이지만, 한국건국 50년을 기념하여 시리즈의 기획물을 연재한 것입니다. 50년 역사의 주요인물을 인터뷰한 것으로 포항제철의 회장을 맡았던 박 태준 씨가 등장하여 당시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서없이 돌아본 후에 국교정상화 이야기로 되돌아가고자 합니다. 자료 4 번의 마지막에 적어 두었는데 여기에서 먼저 말해 두고 싶은 것은 양국에서 매우 반대가 심했다는 것입니다. 양국 정치지도자의 결단으로 타협점을 찾아 각각의 국내반대론을 극복하여 성립시킨 합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 일한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도 없고, 조금 전에 한국측 선생님이 보충해 주셨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는 것으로 끝내겠는데, 자료 5 번에도 있듯이 일한관계에 있어 큰 변화로서 한국이 민주화한 것이 큰 분기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 에 몇 가지 포인트를 꼽았는데 80년대말부터는 세계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냉전시대가 끝나고 글로벌화에 박차가 가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글로벌화를 기회로 살려 비약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 저는 일본은 글로벌화를 위한 대응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한국경제에 있어 일본의 중요성은 저하되고, 한편으로 중국의 존재감은 대두되었다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선 서론이 되겠는데 제가 이번 발표에서 주장하고 싶은 포인트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자료 2 에 적혀 있는데 1965년 일한 국교정상화와 그 후의 반세기를 거시적으로 본다면 이 정상화는 「성공담」이었다는 점입니다. 지역의 안정에 공헌하였고,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였고, 여러 분야의 일한교류가 확대되었다. 이것은 충분히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21 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65년에 만들어진 일한관계의 토대를 변경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한국측에 뚜렷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양국관계를 불안정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향후 어떤 일한관계를 지향할 것인가라는 문제제기입니다. 미리 결론을 내 버렸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것을 정치가 방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국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거나 지나친 기대를 품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러면 토대체 왜 65년에 만들어진 토대를 한국에서 뒤흔드는 움직임이 있는 것일까.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이 7 번입니다. 여기에서 서두의 대립이라는 말이 관계해 오는데 박 정희 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평가, 이것이 한국에서는 아직 결말이 나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그중에는 박 정희 정권에 정통성이 있었느냐 아니냐에서부터 논의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 정희 대통령이 현실적인 판단으로 결단하여 국교정상화가 가능해진 것이므로 분명 그것은 타협의 산물이었고, 반드시 「만장일치」는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후에 이 정상화를 통해 가능해진 교류, 협력이 여기까지 쌓여져 온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와서 수정하느냐라는 것이

저 개인의 감상이기는 하지만 이 국교정상화에 대한 결단도 포함해서 박 정희 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평가에 결착이 나지 않은 배경에는 역시 한국의 보수 대 좌파의 대립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국의 국내문제일 것인데 그것을 국제문제인 일본과의 관계에 파급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박 근혜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박 근혜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좌파로부터 「친일 박 정희의 딸」이라고 공격받은 일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 정희 정권의 인권침해에 대해 사죄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즉, 박 근혜 대통령에게 있어서 박 정희 대통령의 딸이라는 사실은 최대의 정치적 자산이면서 동시에 공격을 받는 재료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박 근혜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냉엄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 근혜 대통령은 위안부문제를 일한관계의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측에서 보자면 과거 위안부이었던 분들에 대한 보상문제를 포함해서 1965 년의 일한기본조약 부수협정에서 결착지었다는 것이 법률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본측에서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인도적인 견지에서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들어 수상의 사과를 담은 편지를 전하려고 했고, 또한 보상금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받은 한국의 위안부이었던 분들도 수십 명 계십니다. 그러한 경위에 근거하지 않거나, 혹은 근거하지 않기로 한 것처럼 박 근혜 대통령이 일본을 비난한다면 일본측으로서는 이해가 안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일본에 대해 생각하는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왜 그것을 이유로 일한정상회담을 거부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근래에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실망감이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기가 된 사건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한국측 발표에도 있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타케시마에 간 것, 그것에 이어 천황폐하에 대한 발언, 그리고 박 근혜 대통령이 제 3 국에서 일본을 역사문제로 비난한 것 등등입니다. 혹은 남수단 PKO 의 한국 군부대에서 총탄이 부족하여 일본자위대부대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그것에 일본자위대가 응했지만, 한국정부로부터는 감사의 뜻을 표명하는 일이 없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케이신문의 전 서울지국장이 기소된 사건. 저도 문필업을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입장이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기소에 대해서는 이것은 민주주의국가에 어울리지 않는 공권력행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자신이 생각하는 바는 접어 두고 이야기를 조금 전의 「실망감」으로 돌리자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일본에서 일한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사람, 한국을 연구하고 일본인에게 소개해 온 사람이 실망감을 안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런 실망감이 일본의 보수파, 진보파를 불문하고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명만 실제 사례를 들자면, 예를 들면 쇼쿠타쿠 대학 총장인 와타나베 토시오 교수입니다. 아시아경제 전문가로 민주화 이전 시기부터 한국경제의 성공가능성을 인정한 선견지명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이 분이 80 년대에 내신 책을 보면 일한 양국에 진정한 파트너십과 신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제언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와타나베 씨가 최근 한국에 대해 매우 따끔한 발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10 월 13 일에 산케이신문에 한 기고글—이것은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기소된 사실에 대해 쓰신 것입니다—인용하면 「도대체 왜 한국은 이렇게까지 반일적인 것일까. 한마디로 하자면 일본과의 관계에서 한 번 역사청산을 끝내지 않으면 자신의 사지로 똑바로 설 수 없다는 한국민의, 한국의 감각 때문이다. (중략) 역사청산이라는 이를 수 없는 꿈을 계속 쫓고 있는 환상국가에 미래는 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을 읽으면 저로서도 일찌기 와타나베 씨가 쓴 한국에 대한 이해가 넘치는 저서, 그리고 그것에서 자신이 배워 온 것 등을 생각하면 모종의 감회에 잠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과 인연을 맺은지 20 년 가까이 되었고 여러 책과 기사를 읽어 왔습니다. 제가 많은 것을 배웠다고 느끼는 뛰어난 저자들, 혹은 관료들이 한국에 실망하고 있다는 것을 최근 실감하게 되면서 부끄러운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으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끌어 맞추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 자신도 지금까지 한국의 여러 사람을 만났고, 인터뷰도 했고, 이야기도 들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막 국회의원이 된 당시의 박 근혜 대통령, 60 년대의 학생운동지도자로 후에 정치가가 된 이 기택 씨, 조선전쟁때의 장군이었던 백 선엽 씨, 일한 국교정상화 때 외무부 장관이었던 이 동원 씨, 한국 최초의 내각 문교부 장관이었던 안 호상 씨, 그리고 한겨레신문을 만든 분 중 한 분인 권 근술 씨, 일본에서도 유명한 가수 조 용필 씨.

이러한 분들은 직업도 다르고, 정치적인 색깔을 나누자면 입장도 각각 다르지만, 모두 나라를

위해,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점을 한결같이 강조하셨고, 그 발자취, 걸어온 길을 살펴보고 매우 감동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50년 역사, 건국으로부터 50년의 역사는 우리 일본인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역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를 생각하자면 일한국교정상화 50년이라는 것은 중요한 시점이지만, 일본과 한국이 어떠한 길을 걸어 왔는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으려고 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것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양국관계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지만... 특히 「실망」이라는 단어를 약간 마구잡이로 묶어서 표현했지만, 실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떠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부분, 이것에 대해서는 내일의 세션에서도 언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저의 발언은 일단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자료내용에서 상당히 멀리 와 버려서 통역하시는 분들에게 부담을 드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션 1 사회자: 감사합니다. 두 분이 각각 조금 성격이 다른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한국측 선생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무색무취라고 할까 매우 차분한 내용이었고, 일본측 선생님은 확실하게 대비가 드러나는 내용의 이야기로 토론의 사전준비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보람이 있게 회의장의 여러분으로부터도 발언하고 싶다는 마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커피브레이크를 가지고 각자 충분히 생각을 정리한 후에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5분 후에 재개하겠습니다.

토론

세션 1 사회자: 그러면 세션을 재개하겠습니다. 건물 전체가 금연이라서 「담배휴식」을 하신 분은 멀리까지 갔다 오시느라 불편하셨을텐데 소정의 시간 내에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자유토론입니다. 조금 전의 발표에 대한 질문, 비판, 혹은 자신의 의견 등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자신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라고 솔직하게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이 회의의 방침은 「기탄없는 의견교환」입니다. 그러면 이름표를 세운 순으로 그쪽 일본측 선생님부터, 다음에 한국측 선생님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본측 참가자: 감사합니다. 두 분의 발표를 듣고 역시 무언가 한 마디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측의 발표는 매우 균형 있고 많은 점에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측 발표는 마음이 담겼다고 할까요, 심정에 호소하는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하신 일본인의 심정이라는 부분, 예전에는 한국에 심취해 있었던 분들이 오히려 지금은 험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렸다는 지적은 확실히 그렇다고 생각하며, 한편으로 우리들은 그 동안 무엇을 해왔나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일한 양국의 직접적인 두 나라 간의 관계와 그리고 중국도 포함한 국제관계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한국측의 지적은 말씀하신 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일한관계가 나빠졌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상황변화가 겹쳐지면서 한꺼번에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양국 간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최근 3년간의 변화는 현저했습니다. 내년 2015년이 일한조약 50주년이므로 10년 단위로 잘라 보면, 최근 10년간은 그다지 관계가 좋지 않았고, 특히 마지막 3년 간이 그랬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 10년 간이라는 것은 아마 일한 양국의 전후 역사상 가장 관계가 좋았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월드컵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일본에서 한류붐이 일어났던 그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새삼스럽게 이 흐름, 격차는 도대체 무엇인가, 왜 이렇게 되었는데가라는 의문이 새롭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자신이 이러한 사태를 못 예측했던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일본과 한국이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룬 후에 체제를 공유하고, 그 결과 의식공유를 향해 발전해 갈 것이라는 식으로 약간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2005년, 약 10년 전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무렵부터 일한 양국이 빠져거렸던 부분이 있었지만, 조금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닐까, 혹은 그렇게 되어 주었으면 한다는 메시지를 담아서 그 당시에는 발언하거나 글을 썼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아무래도 그렇지는 않은 듯하다는 식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체제가 「공유」된 후 또 한 번의 시련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즉, 일본과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충돌이나 한국의 「분단국가주의」와 일본의-한국식으로 말하자면-「우경화한 국가주의」의 충돌 등등, 국가주의라든가 전통문화의 충돌이라는 국면에 우리들은 지금 직면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대립점은 역사문제, 혹은 영토문제 등등 개개의 이슈로서 부상하고 있지만, 보다 큰 문제는 양국이 대등한 입장에 서게 되었으나 실은 서로 간에 아직 상당히 큰 사고방식의 차이가 남아 있는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이유를 알았다고 해서 즉각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최소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상호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호이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전에도 여러 곳에서 되풀이되어 오고 있어서 「상투적 표현」이 되어 버렸지만, 실은 일한 양국 간에는 상호이해와 「뒤로 미루기」가 마구 섞여 있는 듯한 부분이 있어서 발표 중에 언급한 「타협」을 반복하는 한편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즉 문자 그대로의 상호이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함에 따라 우리는 상호이해라는 것을 획득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감상의 첫 번째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점은 여기에 출석해 있는 분들의 면면이 그래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가 소홀히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경제분야에서 우리는 매우 큰 진전을 해왔고, 지금은 정치가 아무리 문제가 있더라도 경제적인 면에서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상호의존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선진적인 상호의존관계가 생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제 서울에 오는 비행기 안에서 옆에 앉았던 일본의 비즈니스맨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분은 일본의 부품산업으로 비즈니스를 하시고 있는데 제품을 팔러 간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물건을 팔고 있는 쪽의 입장이나 부품산업이나 소재산업 쪽에서는 지금은 한국과의 관계는 전혀 나쁘지 않다, 오히려 좋다, 정치에는 전혀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특히 전자부품산업, 이것은 한국이 일본의 주요고객인 분야라서 완성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 쪽에서는, 혹은 라이벌관계로 상대를 인식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이상으로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즉, 한 개의 제품을 만드는 데에 있어 일본과 한국이 공동으로 만들어 내는 것과 같은 분업체제입니다. 이것은 매우 복잡하고 선진적인 분업체제이며, 실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른바 「이혼」 등은 생각할 수도 없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제 3 국에서 자원개발이나 인프라개발, 인프라투자, 인프라건설에서 일한 양국이 협력하는 경우도 매우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적인 경제통합인데요. 일중환 세 나라의 FTA 교섭이야 말로 담보 상태인데, 다양한 형태로 광역적인 경제통합이 형성되어 있고 일본과 한국이 같은 경제산업구조를 가진 나라라는 것을 살려서 같은 곳에서 이익을 낳고 있는 그러한 구도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것은 매우 단순한 것으로 전후의 경제발전 과정 속에서 우리들은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진 국가를 만들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 경쟁도 하지만 총체적으로는 협력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구조가 있는 이상 저는 경제적인 협력이라는 것이 앞으로의 일한관계를 선도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출선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냉전시대에는 안전보장이 우선되었고, 앞으로는 경제개발이 우선이라는 일한 양국의 공동목적, 이것은 확실히 중요한 목적이고 오늘날에도 명맥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므로 거기에서 완전히 회귀하는 일은 웬만해서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 그 후의 민주화시대, 혹은 냉전 후 시대의 일본이 과거에 대해 반성을 표명하기에 이른 국제협조, 과거반성형의 출선, 이것도 매우 중요한 출선으로 이것도 버릴 수 없는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 목적과는 다른 제 3 의 시대의 앞으로의 공동목적이라는 것이 필요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일본과 한국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과거시대에 향수를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쨌든 눈앞의 사태는 실망을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쉽습니다. 저는 그러한 세대의 한 사람이니까 이 점은 잘 이해가 되고 저 자신이 자주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3 의 시기에 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서 무엇이 우리의 공통분모이고, 무엇을 중심으로 삼아 협력해 가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일본과 한국의 전략적 입장은 한국측 발표자가 말씀하셨듯이 매우 가까운 내용입니다. 흔히 일본인은 한국이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말하지만, 그러나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면서 안전보장은 미국에 의존하는 점은 정도의 차는 있지만 일한 양국에 공통되는 구조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즉, 정도의 차는 있더라도 일본도 같은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0 보 도망친 사람이 100 보 도망친 사람을 비웃는 「오십보백보」 같은 생각에

빠지기 보다는 오히려 양국이 공통의 입장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새로운 전략도 보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세션 1 사회자:그러면 한국측 분도... 이 세션이 끝난 후에도 논의는 이어질 것이고 또 논의의 시작이기도 하니까 길게 발언하셔도 좋습니다.

한국측 참가자: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두 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측 발표자 선생님이 지금 한일관계가 국교정상화 후 최악의 시기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 과연 그럴까라는 점에 관해. 또, 두 번째는 일본측의 발표에 대한 코멘트 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1965년 이후의 한일관계에서 역사인식문제의 차이에 따라 외교적으로 한일관계가 악화한다는 구도는 계속 존재하고 있었고, 어느 시기에는 양국정부가 그것을 관리하고, 또 어느 시기에는 관리라는 부분이 약화되는 식으로 그 정도의 변화가 그때그때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측의 발표 중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냉전시대에는 안전보장상의 위협에 대처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이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한일관계가 파국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가 되어 왔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보다 자세하게 냉전시대를 봐 보면 그중에서 한일관계가 매우 악화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냉전시대이기 때문이라는 요소만이 이 관리와 비관리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보다 큰 요소로서 한국의 민주화라는 것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위주의시대의 한국에서는 1960년대, 그리고 70년대와 반일테모 뿐만 아니라 학생테모, 시민들의 테모가 다수 있었지만, 권위주의정부가 그것을 억압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보면 한일관계가 분쟁화되는 것을 저지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일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데 중국 국내의 반일 움직임을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억제하려고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완전히 억제할 수는 없어서 중일관계의 악화로 표면화되는 측면도 있겠지요.

다른 한편으로 민주화 이후 오늘날의 박근혜 정권기에 있어서는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즉, 한일관계 악화의 배경에 정부가 전면에서 서서 역사문제를 외교분쟁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한국사회, 시민사회 혹은 학생들 사이에서 반일 분위기가 조장되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상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회적 분위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저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한 분위기를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공위안부문제이든 정용공문제이든 한국정부가 보다 선두에 선 형태로—일본측 발표에도 있었지만—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또 제 3국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해서 역사문제를 외교문제화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민주화 이후의 특징을 이와 같이 파악할 때—조금 전에 저널리즘의 책임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극단적인 주장을 정부가 수렴하여 확대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고, 이 점에 관해서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한일관계가 최악의 수준이라고 했지만, 현실문제로서 시민사회 차원에서는 한국사회에서의 반일감정이 높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 즉 한국을 찾아온 일본인이 피해를 입는다는가, 일본어를 쓰거나 일본노래를 부른다는가 하면 공격을 받는다는가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현실, 이 부분에 시선을 돌려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일본측의 발표에 있었던 키워드 「실망감」에 관해서입니다. 일본에서 최근 확산되게 된 실망감 즉 친한파라고 할까요, 일본의 지식인으로 한국을 사랑한 사람들이 「배신당했다라는」 감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발표자 본인께서도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지적으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인식의 불균형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발표 중에 강조하셨던 것은 한국의 산업화시대에 일본이 경제적으로 크게 공헌했다는 점이었는데, 분명히 그것은 사실이고 1965년 이후의 한국 경제성장에 일본이 끼친 영향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더 감사해야 하는데 그런데도 감사의 마음을 보이는 일이 적다라는 견해도 자연스럽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구조적인 변화에 의해 한국경제에 있어서의 일본경제의 위상과 중요성은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다. 즉,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다는 것으로 여기에 인식의 불균형이 생기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첨언하자면, 구조의 변화라는 것은 특별히 경제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일본사회 자체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도 이전과 비교하면 약해지고 있고 이것도 배경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화시대에는 경제발전을 위한 모델로서 일본경제가 목표였거나 혹은 일본사회가 한국에게는 발전모델이었습니다. 거의 무조건적으로 일본의 방식을 따라하는 것이 득책이고, 그것이 「발전」으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일본의 세계적 경쟁력을 보고 한국이 이른바 세컨드 재패니즈 모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분명히 한국사회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고방식이 결정적으로 무너진 계기가 된 것은 1998 년의 IMF 사태(통화위기)였습니다. 그 후 한국의 롤모델은 「일본모델」에서 「글로벌모델」로 바뀐 것입니다. 그 시기부터 한국에서는 특히 경제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단어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야 된다, 그것만이 한국이 살 길이다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전에 별도로 재패니즈 스탠다드라는 단어가 쓰여졌던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때 재패니즈 스탠다드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로의 전환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로벌화를 위한 대처가 한일 양국이 달랐다는 언급이 일본측 발표 중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전반적인 분위기가 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 년대 이후, 한국 혹은 일본에게 새로운 옵션으로 등장한 것이 떠오르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의 중요성, 중국경제의 중요성, 그것이 한국에 큰 영향을 주었고, 동시에 중국이라는 사회의 중요성이 한국의 지식인, 한국사회에 인식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일본측의 감각으로 인식한다면 한국이 일본을 버리고 중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실망감이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불을 지핀」 요인으로 아베정권의 역사수정주의가 있었다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역사수정주의가 한국이 중국 쪽으로 치우치는 명목으로 작용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외교의 기조에 큰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그때까지 대통령 취임 후의 방문국으로는 먼저 미국, 그 다음이 일본이라는 순서를 택하는 것이 통례였던 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중국의 순서로 외유를 하고, 일본에는 특사파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교기조에 대한 변화의 설명으로 한국민을 매우 「납득」 시킨 것이 아베 총리의 역사수정주의적인 말과 행동, 예를 들면 중군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은 없었다라고 한 발언이었던 것입니다. 일본측 발표자는 중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정부가 쏟아 온 노력에 관해 강조하셨지만, 그것과 상반되는 것 같은 말과 행동을 아베 총리가 한 것, 이것이 한국정부의 외교기조의 전환이라는 변화에 이유를 부여하는 식으로 한국민을 「납득」 시킨 것, 이러한 부분을 지적해 두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얘기가 길어져 버렸는데 이상입니다.

세션 1 사회자: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코멘트 사이에 거수하신 분이 있으므로 그 순서대로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쪽 일본측 선생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일본측 참가자: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측 발표에 대해 코멘트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발표가 매우 잘 정리되어 있어서 참고가 되었는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일본측으로부터 코멘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경제라는 요인을 생각했을 때에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다, 경제가 잘 안정되어 있을 때에는 어느 나라나 대외정책이라는 것은 일종의 관용성을 가지지만, 경제가 잘 굴러가지 않을 때에는 그것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적으로 선진국은 거의 모두 거액의 정부채무와 저성장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고, 그 시기에 국가주의 혹은 우파정당의 대두가 공통되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일한 양국에 있어서도 그러한 요인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일본에 있어서 야당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자민당의 보수에 대해 혁신정당·좌익정당이 야당이었는데, 지금은 자민당보다도 「오른쪽」에 야당이 있다는 식으로 야당의 정의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 욕구불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나라도 많은 적든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각국이 자국민의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자국의 정의」를 추구하고 그 실현을 목표로 삼게 되면, 예를 들면 양국 간의 관계에서는 합의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점에 유럽과 아시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거기에 타협이라는 것을 토대로 한 화해의 노하우가 정착해 온 역사가 있는 한편, 동아시아에서는 그러한 정의의 추구하고 화해라는 모델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또, 이러한 상황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시민사회의 대두, 혹은 민주화, 그리고 정보화라는 시대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에서는 타협이라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정(情)」이라는

것이 적지 않게 전면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정치가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민의 「정」에 영합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관용성은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도 크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어 버리면 대외관계에서는 정부의 조절능력은 더욱더 저하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구조는 일한 양국에 공통된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므로, 그러한 관점에서라도 시민사회화, 민주주의화, 정보화한 양국이 어떻게 해서 합의, 화해, 타협을 낳아 갈까라는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책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족이 되겠는데, 진보세력이 일본국내에서는 고령화하고, 약체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 자신은 진보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데—고령인지 어떤지는 별도로 하더라도—이 점에 대해 조금 언급해 두고 싶습니다. 일본에는 여론잡지가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 진보계의 잡지는 매우 불리한 상태입니다. 진보적인 의견을 게재하더라도 중요한 판매부수가 따라주지 않아서 휴간하는 잡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외교문제에 관해 진보적인 주장과 발언이라는 것은 인기를 모으지 못합니다. 비즈니스적으로 성립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수주의라든가 역사에 관한 것은 비즈니스적으로도 성립되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령화 여부에 상관없이 진보계 입장의 사람들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장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 연구자들을 포함해서 진보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의견을 말할 장이 없어지고 있다는 느낌은 듭니다. 첨언하자면 지금 일본정치에서 가장 진보적인 사람들이 누구냐고 하면 실은 한국측에서 우경화하고 있다는 지적을 종종 하는 자민당의 아베정권과 연립하여 한편을 이루는 파트너인 공명당입니다. 이쪽의 움직임에도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야기를 되돌려서 다음 질문을 하겠는데, 조금 전에 한국측의 코멘트 중에도 있었던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한국이 중국 쪽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비판은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라는 식으로 발표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박근혜정권이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증시하고 있는 것은 실용주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데올로기적인 배경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전략이 있는지. 이 점에 관한 한국의 정책결정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좀처럼 잘 보이지 않아서, 특히 현재의 정권에 대해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얼마 전 일중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한국의 미디어에서는 한국이 뒤처지게 될 것이라는 반응이 넘쳐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반응인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후에 일중한 세 나라의 외상회담 및 정상회의를 박근혜 대통령이 제기했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고, 그러한 의견들이 조금 자리를 잡아 왔다고 여겨졌는데, 이러한 것은 제게는 전략의 결여에 기인한 「흔들림」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전략이 한국에 있는가라는 것과 중한관계라는 것의 전략성에 대한 분석을 조금 더 여쭙어 볼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션 1 사회자: 한국측에 질문이 되겠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즉, 한국의 중국에 대한 접근은 실용주의적인 접근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외의 어떠한 변화에 의한 것인지. 또, 중장기적인 대중국전략은 무엇인지라는 것이었는데...예, 말씀하십시오.

한국측 참가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정부에 가까운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서 개인적인 생각, 관찰자로서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은 역시 경제적인 중국의 중요성이고 이것은 한국에 있어 압도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통계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한국의 약 1 조 달러 무역액 중 23~25%가 대중국무역에 의한 것입니다. 한미, 한일 간의 무역액보다도 한중 간의 무역액이 큰 것입니다. 그만큼 중국과의 경제는 압도적인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합의도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안전보장면에서의 중국의 중요성에 대해 일본의 학자분들은 의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듯한데 한국입장으로 하자면 자국에 있어서 가장 큰 군사적 위협은 북한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위협을 줄이는 것, 혹은 북한의 영향력을 꺾는 것이야말로 한국의 안전보장에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북중관계가 약해지고, 북중관계가 약해지면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도 줄 것이라고 아마 정책당국자는 이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한국의 외교전략, 국가전략의 기초변화인가, 즉 한국이 일본을 버리고 또는 미국을 버리고 중국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것인가라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한반도와 중국 사이에는 2000 년의 역사가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반도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서 단일민족, 단일문화를 가지는 국가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와 같은 경험은 한국에 공통되고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험을 근거로 중국과의 관계도 맺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점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한중일이라는 틀, 그리고 한미중이라는 틀 속에서도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중국에 치우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완전한 균형이라는 것은 이상론이고, 제가 보는 바 중국과의 관계강화는 한국사회 또는 한국의 국가전략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없고 한국에 있어 플러스가 되는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기존의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저도 그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에게는 일본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의 균형을 취하는 전략이 필요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그것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힘든 것이 한국 내에서의 일반적인 견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하는 데에 있어서 아베 정권의 말과 행동이 장애물 중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언급된 한국측의 발언으로도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이 되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질문자 선생님과 이 후에 이야기를 나눌 기회도 있을테니까 그때 이야기를 더 하고 싶습니다.

세션 1 사회자: 그러면 순서대로 하면 다음도 일본측이네요. 부탁드립니다.

일본측 참가자: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측 발표에 대해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데 우선 귀중한 발표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측 선생님이 매우 냉철한 분석과 객관적인 분석을 정리하셨고, 중장기적인 일한관계의 지금까지의 역사를 정리하셔서 공부되는 바가 컸습니다. 또, 일본측의 발표도 우리들이 공유하고 있는 의문의 정곡을 찔러서 지적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한국측 발표자에게 지금 나온 한국의 중국편향론에 대해 물어 보고 싶었는데, 오후의 세션에서 안전보장에 관해 다루도록 되어 있으니 이 화제에 대해서는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한관계 그 자체에 관한 코멘트가 되겠는데, 저는 진보세력의 고령화 혹은 약체화가 일한관계를 지금까지 없었던 악화된 것으로 하고 있는 하나의 요인이 아닐까라고 보기만 한다면 조금 단순화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일한 양쪽의 발표에도 있었던 내용이지만, 일한 국교정상화 때의 박 정희 대통령의 판단이라는 것, 이에 대해서는—인권억압 등 박 정희 대통령에 대해 세상의 평판과 상반되는 다양한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역시 냉전시대에 대국인 미국과 소련 사이에 조선반도, 혹은 일본이 놓여진 상황, 게다가 그러한 나라에서 정치가로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배경을 잘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한계라는 것을 잘 살핀 후에 판단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 정희 대통령 뿐만 아니라 일본측 보수정치가에도 공통된 인식이었다고 생각하는데, 합의는 잠정적인 것으로 후세 혹은 미래에 희망 혹은 가능성을 맡긴다는 의미도 숨겨져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과정을 거쳐 성립된 1965 년체제를 「계승한」 관료 혹은 정치가, 그리고 저널리스트에 일종의 어리광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애매한 형태로 이루어진 결탁 및 합의라는 것을 수정해 가는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즉, 설령 시대적배경, 반공연대라는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보수정치가가 현실적인 판단 아래 주장을 접근시켜 합의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인식해 둘 필요가 있고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물여 그리고 그 후 일한관계를 유지 혹은 개선하려고 해온 것은 오히려 보수파의 정치가이고, 그 점에서는 단순한 진보세력의 사람들에게는 생각지도 못할 만큼의 노력을 해온 것입니다. 또, 게다가 여기에서 「진보세력=좌파세력」이라고는 반드시 말할 수 없는 일본의 상황이나 진보세력이 오히려 국수주의자이거나 하는 한국의 상황이 얽혀 있어서 더더욱 복잡해지는 것인데, 어쨌든 일한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해 온 것은 진보세력으로 그 사람들이 고령화하고 약체화했기 때문에 일한관계가 더 악화된 것이다와 같은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본에서는 민주당정권으로 정권교체, 그리고 자민당·아베 정권으로 다시 정권교체가 있었는데, 아베 정권이 탄생한 이후의 일본 국내정치 상황은 단순히 매과 대 비둘기파라는 이념적인 차원의 구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예를 들면 여론조사에서 아베 정권에 높은 지지가 모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잠재적인 아베 정치 비판이라고도 불러야 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일본의 정권이 단기, 단기로 끝나

왔지만, 역시 외교안보라는 것은 장기적인 전략 위에서 생각해야 하고, 그러므로 우선은 정권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있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경제에 대해서도 같은 이론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아베 총리의 때파적인 때때로 엿보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꽤 비판이 많다는 상황, 그렇지만 그러한 위에서의 지지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분석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한관계를 생각하는 데에 있어서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므로 일중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중 국교정상화는 1972년에 있었고 이미 4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 과정에서는 일한관계와 마찬가지로 일본이 세계대전의 피해를 입힌 사실을 쌍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옛날에 주중대사를 하신 타니노 사쿠타로 씨가 발언을—근래의 일중관계를 염두에 두고 일중 양국은 국교정상화의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 가야 한다는 제언의 일부입니다—하셨습니다. 중국의 유덕유·전 문화차관이 회고록에서 1960년에 작가 노마 히로시, 카메이 카츠이치로 등이 방중했을 때에 당시의 진의 부수상 겸 외상이—상하이시장을 거쳐 외교부 부장, 부총리 등을 역임하고 문화대혁명 때의 4인조와 정면으로 싸운 소수의 정치가 중 한 명인데—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과거의 일은 다 지난 것이라고 하자고 말하고, 당신들은 일본인으로서 과거는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렇다면 양국 인민은 진정한 우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들은 일본인을 계속 원망하고, 일본인은 중국인에게 상처를 준 일을 깨끗하게 잊게 된다면 일중 양국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우호관계를 실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점은 일한관계에 대해서도 해당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한국측 발표에서는 건설적인 제언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역시 설령 그러한 공동기축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마법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을 없으며 그것을 구성하는 구성원, 즉 사람이 어떤 마음, 혹은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가가 중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측은 진지함과 겸허함, 그리고 한국측은 관용의 정신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의식하지 않으면 이 일한관계를 좋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서로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의 코멘트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션 1 사회자: 그러면 한국측에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측 참가자: 감사합니다. 저도 한일관계에 관한 여러 회의에 출석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같은 이야기가 되풀이되는 경향이 보여지며, 그것만이 아니라 쟁점에 관해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의가 그러한 흐름 속에 묻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먼저 이야기해 두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본측의 발표에 있었던 한국에 대한 실망감, 그러한 일본국내의 분위기에 관해 보충해 드리고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은 일본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고 하기 보다는 일본이라는 존재를 무시하고 있다는 부분이 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즉,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 데에 비해 한국측은 그다지 그것을 문제시하고 있지 않거나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러면 안된다, 문제다라는 차원에서 논의를 끝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게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러한 상황을 개선함에 있어서 양국의 지도자층이 어떠한 이점을 느끼고 있는가, 즉 그들이 정치적인 한일관계의 개선에 따라 정치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입니다. 개인으로서의 박근혜 대통령, 아베 총리를 생각한다면 한일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객관적으로 국내정치에서 자신에게 어느 정도의 정치적 이익을 줄 것이냐라고 하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정치적인 이익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 현재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한 사정이 있으므로 한일관계는 국제사회를 통해 양국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겉으로 흉내만 내는 정치」와 같은 것이 되어 버립니다. 국제사회 또는 미국으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 자기주장을 하고, 상대를 비판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의 한일관계는 인식의 차이가 더더욱 커지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정치적인 이익도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이 있으니까 한일관계는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존의 한일관계의 개념, 한일관계의 인식으로 무언가 해결책을 생각하거나 제안해서는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베 총리가 앞서 중의원 해산을 결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총선거가 치루어지게 되겠지만, 아베 총리의 입장에서는 한일관계를 개선함에 따라 정치적 이익이 생기느냐라는 것을

당연히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지지를 상승에 도움이 되고 장기적인 정권유지에 일한관계가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어떠한 형태로든 한일관계는 개선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은 어떠한지. 이 경우에는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이 주장하는 입장을 아베 총리가 그대로 받들인다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일부러 한일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했을 때에 무언가 이익이 있느냐 하면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의 인식은 이러하며 이것을 토대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발표하신 두 분도 그랬지만 현재 많은 사람들이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저도 동감하지만, 한편으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양국관계의 개선에 따라 얻어지는 정치적인 이익이 크지 않고, 따라서 한일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도 강하게 작용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얼마나 의미를 갖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정상회담이 없는 한일관계의 정상화라고나 할까, 정상회담을 거치지 않는 관계회복이라는 형태 쪽이 가능성으로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측의 움직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은 먼저 다국 간의 틀을 통해 한중일의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외교관계자도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이전보다도 활발하게, 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측도 특사를 보내기도 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과연 「바람직하지 않은」 것일까요. 즉, 물론 최선은 아니지만 이러한 현실, 정상회담의 실현이 어려운 것이 뻔히 보이는데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기만 하면 좋을까요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상회담은 최선의 선택일 것이고 그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 현재 상황은 이러니까 그것은 그것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한일관계에서는 한일 쌍방의 국제관계를 보는 인식, 또 역사를 보는 인식 등 인식의 차이라는 것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에 비해 한일관계의 복원력, 또 한일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소리는 너무 작습니다. 이 점에서는 한국보다도 일본쪽이 심각하고, 한국에서는 매스컴에서도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든가, 한일관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외교부의 자세를 비판하는 의견이 최근 많이 보이는데, 일본 내에서는 그러한 소리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한일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소리라는 점에서는—저는 일본의 신문을 평상시부터 자주 읽고 있는데—일본측의 소리가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일관계를 개선하거나 혹은 종래의 한일관계를 복원하려고 하는 소리, 그것이 일본에서 앞으로 나올지, 또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션 1 사회자: 두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양 발표자가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한국측 발표자가 답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회답은 일본측 발표자에게 부탁드립니다.

한국측 발표자: 그러면 첫 번째 정상회담에 관해 짧게 답하겠습니다. 저 자신은 발표 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하고 관계개선의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사자, 즉 양국정상의 의도나 판단—특히 자신에게 정치적 이익이 될 것인가의 여부—으로 그것을 실현시키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도 동의합니다. 또, 그 결과로서 정상회담 없는 정상화가—한국어로는 「정상회담 없는 정상화」로 같은 발음이라 재미있는 표현이 되는데—진행될 것이라는 진단에도 특히 이론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 보충해 두고 싶은 것은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특정한 현안의 해소를 전제로 한다는 것은 외교의 방법으로서 매우 좋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은 북한과의 교섭에서 납치문제의 해결 없는 관계개선은 없다라는 자세를 십 년 이상이나 계속하고 있는데, 저는 그 자세가 일본외교의 손발을 묶고 있는 것이고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납치문제라는 이슈에 일본외교가 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과 비슷한 것을 한국외교에서도 느끼는 것입니다. 한국외교는 위안부문제로 자신의 손발을 얽매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위안부문제는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는 입구론적인 접근과 출구론적인 접근이라는 선택이 있을 수 있는 것이며, 저는 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바른 방향이고, 위안부문제의 해결 없이는 관계개선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역사원리주의적이라고나 할까요, 그것에 무슨 이익이 있는가라는 식으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션 1 사회자: 두 번째 질문은 한일관계의 복원력에 관한 것으로, 특히 미디어가 전하는 것을 보면 일본쪽의 정상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 발언이 그다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측 발표자: 한국측의 지적에서는 일본측에서 정상회담을 요구하는 소리가 작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먼저 일본정부의 입장은 일관되게 전제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요구했고,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한 일본의 신문은 제가 찬찬이 읽고 있는 전국지에 관해 말하자면 그것을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 쪽이 좋다고 주장하는 신문은 없다고 말씀드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은 과연 하는 쪽이 좋을지 어떨지라는 점에 관련해 언급하고 싶은데, 한국측의 발표자료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간의 관계악화가 여러 방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이 있는 한편으로 일본측에서 지적이 있었듯이 일한관계의 악화와는 관계없이 활발하게 교류에 협력하고 있는 분야도 있는 식으로 관계악화의 정도는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혹은 분야라는 분류방법도 너무 커서 예를 들면 경제분야에서도 어느 기업은 활발하게 교류하고, 어느 기업은 관계가 끊기는 일도 있겠지요. 그리고 저는 일본의 신문을 보고 느끼게 된 것인데 연극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굉장히 활발한 것 같습니다. 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정상끼리 만나지 않는다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역시 전체적인 분위기를 나쁘게 하고 있는 부분은 확실히 있다고 생각하므로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라도 만나는 쪽이 좋다, 적어도 그러한 의미에서의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일본의 애니메이션-『원피스』였던가요. 저희 집 아이도 좋아하는데-전람회를 하려고 했더니 전시장 측에서 거절했다는 일도 있었는데, 그러한 것은 분위기가 나쁘니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역시 문화교류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그러한 「분위기」 개선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솔직히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징용공이었던 분에 관한 재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1965 년의 국교정상화시에 해결했던 문제가 한국의 사법에 따라 다시 미해결이라는 것으로 되어서 일본의 기업에 배상을 요구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중에 최고재판소가 최종적인 판단을 내림에 따라 이것은 한국의 미디어는 그다지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일본의 미디어는 매우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는 한국에서 1965 년 한일협정체제의 토대를 바꾸는 것과 같은 움직임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그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기사에 포항제철소를 만든 박 태준 씨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거기에 박 태준 씨는 어떻게 포항제철소를 만들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일본의 야하타제철소의 사장이었던 이나야마 요시히로 씨에게 기술협력을 부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하타제철소는 그 후 신닛테츠가 되었는데 기술협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 태준 씨는 박 정희 대통령에게 돈이 필요하니까 일한 국교정상화에서 받은 자금을 쓰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역사의 축적을 부정하는 듯한 판결이 나오면 일본의 반응은 매우 냉엄한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션 1 사회자: 그러면 그 다음은 거수를 한 순서라서 일본측부터 부탁드립니다.

일본측 참가자: 여러분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자 두 분의 매우 대조적이면서도 냉정하고 그리고 정열적인 내용의 발언과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두 분이 발표하신 내용의 공통되는 점에 대해 코멘트와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일본측 발표자가 1965 년의 토대라는 이야기를 했고, 분명히 한국측 발표자 선생님은 65 년부터 90 년까지의 냉전시대, 냉전 후, 그리고 2010 년부터 현재라는 분류법으로 시기구분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점에 관해서인데 2010 년을 2011 년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해에 헌법재판소가 위안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한국정부가 이것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다, 위헌이다라는 큰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역시 현재의

위안부문제에 뿌리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에서는 매우 불가사의한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인데 삼권분립의 민주주의국가에서 국내법이 외교에—개입한다고 하면 표현이 지나칠지 모르지만—매우 큰 영향을 준다. 그것도 상대국이 아닌 자국의 정부를 옹매는 것으로 문제를 첨예화시키는 새로운 수법이 등장한 것이 실로 이때였던 것입니다. 이 명박 전 대통령이 타케시마에 상륙한 배경에도 이 판결이 있었다라고 이해하고 있으며,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는 위안부문제라는 식으로 계속 주장하고 계신 배경에도 이 한국정부를 제한하고 있는 헌법위헌판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역시 이 2011년에 일한관계는 질적인 변화를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모종의 정치적 해결에 의한 복원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매우 관계가 나쁜 때가 있어도 그 후에 무언가 타협점을 발견하여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정경이 분리되지 않은 형태로 복원되었고, 그에 따라 일한관계의 우호관계가 어느 정도 유지되어 왔던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2011년의 위헌판결이 있고, 나아가 2013년에는 최고재판소인 대법원이 일본기업에 대해 전쟁시 징용공의 개인배상을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고재판소의 판결이라서 크기도 하지만, 역시 이것도 국내법으로 일본기업에 대한 이러한 판결을 낸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법이 외교에 받을 들여 놓은 사례라고 보아야 하며 말씀드린 것과 같은 복원력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일한관계의 질적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때부터 한국 속에서 1965년 체제에 대한 일한기본조약체제가 붕괴를 향하고 있는 것 같은 일종의 붕괴론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단순히 과거를 부정한다고 하기보다는 더 미래지향적으로 이러한 주장이 나온 것이 꽤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것은 1965년 체제는 너무 오래되었다, 한국은 변화했다, 따라서 일한 양국은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일본은 그 추세에 반대하여 저항하고 있다...와 같은 사고방식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965년 체제를 대전제로 하여 다양한 문제에 관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했다는 일본의 입장은 한국에게는 「오래된」 것이고, 한국의 현재의 국민감정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러니까 이것은 개선해야 한다라는 사고방식이 나온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드리는 질문인데 1965년 체제에 대한 그러한 이론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사고방식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은 한국 국내의 문제니까 한국 국내에서 정리를 해야 한다는 발언이 한국측으로부터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좀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한국정부로서는 물론 1965년 체제를 전제로 하고 있으니 예를 들면 2015년을 일한 국교정상화 50년으로 기념할 것인가. 아니면 광복 70년 쪽에 비중을 둘 것인가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감정적으로는 한국 내의 분위기는 광복 70년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은 그 1965년 체제가 어떤 식으로 정리되려고 하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이것에 대해 학계라도 좋고, 아니면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상관없으니 이것에 대해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국교정상화 50년을 어떻게 집약할지라는 부분까지 이야기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그것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세션 1 사회자: 질문과 회답이라는 흐름이 계속되면 시간이 다 되어 버리니까 한차례 발언을 듣고 나서 통합해도 좋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다음 분 발언해 주십시오.

일본측 참가자: 감사합니다. 조금 전 한국측 분이 일본에서는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 분위기가 식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조금 조사해 보았더니 10월 21일의 산케이신문과 후지 TV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49%가 「서두르는 편이 좋다」, 47%는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였습니다. 뭐 반반이라는 것으로 이것은 동시에 그다지 여론이 고조되지 않았다고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감각, 신문의 논조 이외의 여러 가지 잡담 중에서 얻어진 감각으로는 굳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야기할 필요는 없조라는 분위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금 전에 나온 1965년 체제의 이야기에 관해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측 발표자로부터는 최근 50년간은 성공담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도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하고 지금 한국의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다시 고증해 보자는 이야기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이 법적으로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 65년 체제를 생각해 보고 느낀 것은 일본측의 무신경함과 한국측의 응석, 이것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아베 정권에서도 매우 무신경한 발언이 나오고, 박근혜 정권으로부터도 매우 응석을 부리는 발언이 일본에 대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측의 응석이라는 것으로 이야기하자면, 일본정부가 과거의 문제에 대해 청산한다는 조치를 취하면 한국미디어는 「작은 전진」이라는 보도를 많이 씁니다. 일본으로서는 큰 결단을 한 것인데 한국측으로 하자면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라는 뉘앙스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틀이라는 것은 과연 성공했었냐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체제공유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그랬었고 또 경제면에서도 서로 이익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좀처럼 의식공유로는 갈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아마 1965년 체제는 성공담이기는 했겠지만, 역시 어딘가 결함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은 지난 주에 일본에 있었던 어느 학회를 방청했을 때에 이러한 것이 1965년 체제의 교훈이 아닐까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일본이 북조선과 국교정상화조약을 맺을 때에 살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965년의 기본조약을 맺을 때에는 일본이나 한국 모두 국내적으로 매우 반대가 있었지만 타협했다. 그렇지만 다음에 북조선과 맺을 때에는 일본국민과 북조선인민, 미디어나 인민, 정부 모두가 만장일치의 박수 속에서 조약을 맺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되어서 그러한 사고방식도 있겠다라고 흥미 깊게 생각했기 때문에 1965년 체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코멘트를 하였습니다.

세션 1 사회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국측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한국측 참가자: 감사합니다. 흐름을 중단해 버려서 죄송한데 조금 다른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한일 양국의 저널리스트, 지식인이 모이는 장이라서 아무래도 「국가대표」가 된 기분으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회의를 더 진전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대표」로서의 한계는 물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 되어 버립니다.

「국가대표」로서의 사명감, 속박의식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테마는 한일관계의 개선인데 정상회담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얘기하고 있으면 끝일까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안정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떠한 가치를 제시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하며, 논의가 그러한 방향이 되면 유용한 결론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지금 양적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아베노믹스가 실패했으니까 또 돈을 찍어 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견해를 하는 사람이 많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아베노믹스로 성공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일본의 양적완화에 의해 일본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기업이 악영향을 받는 부분도 물론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베노믹스가 실패하면 결국은 세계경제에도 한국경제에도 악영향이 확대될 테니까 「성공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도 과거의 역사를 생각하자면 한국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싹트는 부분은 확실히 있지만 현실의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대두를 생각하면 어떠한 형태로에서든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면, 제도적인 면도 있는 것입니다.

즉, 국가의 관점이라든가 민족의 관점에 얽매이지 않고, 이 지역 전체를 어떻게 조화시켜 갈 것인가가 보다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본측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제3시대의 주도를 생각하는 데에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오후, 또 내일도 이야기를 나눌 것이지만, 그러한 관점에 서야만이 생산적인 이야기가 가능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코멘트이고 그리고 질문이라고 해야 할까요, 부탁이 있는데 사람은 역시 외국보다도 자신의 나라,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의 상황에 관해서 알고 있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상대국의 이러한 부분이 나쁘다,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나라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 지적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표자 두분에게 한국측 선생님에게는 한국측의 문제점과 과제를, 일본측 선생님에게는 일본의 이러한 점을 바로잡는 것이 좋다는 같은 부분을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세션 1 사회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도 회답은 마지막으로 돌리기로 하고 다음 분 부탁드립니다.

한국측 참가자: 감사합니다. 저는 중국을 주요 관심분야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한일 양국의 차원에서 벗어나 보면 해법이 조금 보이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정치학 용어 중에 현실주의적인 접근이라는 것이 있는데,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사물을 생각하는 것인데, 그러한 방식으로 양국 정부도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현실을 염두에 둔 위에서 손에 넣을 수 있는 것, 실현 가능한 것, 그리고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모색한 결과가 현재의 양상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모색에서 무엇을 얻었나하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 됩니다. 즉, 현실주의적인 접근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일 양국의 정책결정자, 최고지도자 또는 정책결정에 관여한 사람들은 관성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한일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상력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APEC 정상회담 때에 저는 마침 베이징에 있었는데, 뉴스에서도 화제가 된 이른바 「APEC 블루」를 직접 보았습니다. 매우 맑고 파랗게 갠 하늘이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것은 나라의 체면을 위해 APEC 에 맞추어 연출된 것으로, 결국 나라가 폭력적으로 환경을 조정한 결과였습니다. 즉, 지금의 중국이니까 가능한 것인데 향후 중국에서 다시 APEC 이 열리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과 같은 일은 불가능하겠지요. 즉,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에서조차도 시민사회라는 것이 확대하고 있고 국가가 폭력적으로 무엇가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적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한국과 일본에서는 국가가 무언가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여지, 국가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더욱 적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한일 양국 모두 국가가 무언가 해야 하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정부라는 생각에 물들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도 그 「국가가 어떻게 해야 하는」이라는 부분을 조금 민간에 「내려주는」, 지적공동체라든가 공론의 영역에 맡기는 역할을 늘리도록 해야 하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식으로 시선을 바꾸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중요성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상회담을 한다, 혹은 하지 않는다는 양자선택과 같은 사고방식에는 반대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 달에 이루어진 일본과 중국의 정상회담은 마침 세계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자료가 있어서 보고 있는데, 매우 좋은 사진을 써서 양국이 좋은 관계라는 것을 어필하려고 하고 있지만, 중국 외무성의 보도에서는 일본이 요청해 왔기 때문에 중국이 만나 준 것이라고 말하려는 듯이 중국의 신문에 게재된 사진에서도 매우 딱딱한 표정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즉,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의 의미부여가 애매한 정상회담이라고 해야 할 것이 조금 전의 일본과 중국의 정상회담이라서 어쨌든 만나야 한다, 아니 만나도 의미가 없다라는 이분법은 이에 해당하는 않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되돌리자면 정상회담을 할지 하지 않을지는 제쳐 두고, 동아시아에 필요한 것은 패키지딜입니다. 패키지딜이라고 하는 것은 패키지에 「묶어서」 협상하는 것이지만, 정작 중요한 나라에는 패키지를 묶을, 즉 「패킹」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성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널리스트라는 것은 국민의 여론에 가장 가까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의 관성과는 다른 패킹의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금 전에 지적이 있었던 한중관계, 이것은 실은 MB(이 명박)정권 때나 박근혜 정권의 현재도 안보구조라는 면에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마찬가지로 존재했었고, 중국이 부상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당시부터 있었고, 또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에 대한 불안의 소리도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즉, 안보구조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지금의 한중관계가 이전에 비해 매우 양호하게 보이는 것은 이것은 이른바 착시현상에 가까운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보는 방법 하나로 인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착시현상이 일본과의 관계변화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한일관계를 보다 좋게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가는 것이 동아시아 전체의 착각을 없애고 구조의 문제까지도 생각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션 1 사회자: 다음도 한국측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측 참가자: 감사합니다. 이 다음에 발표자 두분의 회답이 있으니까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측 발표에서 양국의 문제를 한마디로 정곡을 찔러 요약하신 것에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무신경하고 무관심, 한편으로 한국은 일본에 과잉하게 반응하고 과잉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에 저도 이것은 정확한 묘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일본측 발표에서는 한국에 대한 실망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언뜻 보기에는 상반되는 생각처럼 여겨지지만, 저는 이 「한국에 대한 실망감」은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무신경·무관심」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즉, 일본인의 실망감이라는 것, 일본인이 한국을 떠올릴 때에 그리는 그림이 너무 구식이라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동아시아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전에는 저랬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되었는가 실망했다라는 감각—이 생기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한국에 대해 무신경, 무관심이라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일본측의 노력이라 할까, 인식의 공유, 확장과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한일관계는 90년대 이후에 흔들리기 시작했고, 도중에 한류붐 등도 있어서 어느 정도 완화되었으나 최근에 갑자기 냉각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면 냉전종결 후 자신의 이상이나 비전이 흔들린 것에 대한 초조함이 거기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초조함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가 열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해야 할 일도 있고 민간이 해야 할 일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기에서 보다 근본적인 이슈 쪽에 눈을 돌리고 싶은데, 누구나가 공통되게 한일관계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중군위안부문제나 징용공에 대한 배상문제에 대해서는 실은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신경과 무관심에서 온 것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예를 들면 위안부문제의 경우, 위안부들에 대한 배상을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해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이 김 영삼 정권 때에 있었고, 그 다음인 김 대중 정권 때에는 한국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국가배상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흐름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제안으로 아시아여성기금이 만들어진 것도 그러한 김 영삼 정권의 대응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여성기금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흐름 속에서 짜여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노력은 크게 평가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징용공의 배상문제에 대해 일본분들에게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에 대한 배상에 관해서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들고나오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즉, 1965년에는 국가 간에 협상해서 한국정부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받을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그 후의 책임은 한국정부에 귀속된다. 그래서 1975년에는 민간보상의 시도가 있었고, 노무현 정권기인 2005년에는 제2차 민간보상을 한다는 선언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제 위에서 재판소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법률이나 과거의 조약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위안부의 배상문제, 징용공의 배상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답해야 하는 부분이 큰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49년 전에 만들어진 기본조약을 파기할 것인가, 해서는 안될 것인가, 또 파기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라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인 것이고, 이런 오래된 것은 이제 필요 없다, 버려야 된다는 것과 같은 단순한 사고에서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되돌려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초조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열쇠라는 부분으로 되돌아가겠는데, 한국측 분으로부터 발표자 두 분이 자국의 과제에 관해 꼽아 주었으면 한다는 요망사항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힌트를 얻었는데, 그것을 조금 더 비틀어서 상대측의 좋은 점, 잘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일본정부라든가 시민사회라든가가 한 좋은 것을 일본은 한국정부 및 시민사회의 좋은 부분을, 이라는 식으로 말이죠. 이러한 사고법도 인식의 차이를 좁혀 가는 데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세션 1 사회자: 발표자 두 분은 갑자기 여러 가지를 답해야 되게 되었는데, 때마침 추가로 또 한 분 거수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마이크를 건네겠습니다. 그러면 부탁드립니다.

한국측 참가자: 시간을 벌려고 한 것은 아닌데 두 분의 발표자에게 짧게 코멘트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과거의 회의부터 참가하고 있는데 최근의 몇 번은 회의에 출석함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일한관계를 좌우해 온 것은 아니지만, 회의가 진행되어 온 이 기간 동안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한일관계의 분위기가 오히려 악화되어 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측의 발표에서는 한일관계가 최악의 시기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상황인식이라는 점에서는 동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아이디어도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지금까지의 전개를 생각하면 결국 탁상공론으로 끝나 버렸던 것은 아닐까라는 무력감에 가까운 느낌도 동시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더더욱 건설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 자신은 무엇보다도 대처방안이나 아이디어를 찾기 전에 먼저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양국은 서로의 메커니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며, 그 오해에서 여러 가지로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작년 회의 때에 일본인의 한국방문자수가 급감하기 시작했다는 그래프를 보고 참가자가 쇼크를 받아서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를 주고받았는데 그 후의 1 년 동안 더 감소한 것 같아서 어제였던가 그제였던가 명동에서 일본어가 사라졌다는 기사도 나와 있었습니다. 즉, 그러한 상태가 실감으로서 느껴지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인데, 이것은 균형이라는 면에서 생각하면 매우 우려해야 할 상황이고 전략적으로 풀어 가는 지혜가 요구되고 있는 데에도 그것이 보이지 않는 우울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측의 발표 중에 이 「원인분석」이라는 점에 관련해 한 가지 느낀 것이 있는데, 박근혜 정권이 매우 강경한 대일자세를 취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분석으로-물론 이것 하나만은 아니겠지만-대통령선거 때를 비롯하여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박 정희의 또는 친일파의 딸이라는 비판 때문에 좌파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는 압박이 강경대일노선의 근거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측면이 완전히 없다고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보아 버리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켜 버리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대일정책의 직접적인 원인을 반대파에게 보이기 위한 반일 제스처와 같은 것으로 가볍게 보아 버리는 것은 문제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산케이신문 지국장의 사건, 저로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러한 과거에 없었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러한 반대파에 대한 의식이라는 요인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보수정권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에 관해 깊이 파고 들어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노 무현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이 되면서 보수정권이 탄생했을 때에, 혹은 그 후의 「한일관계 정상화에 힘쓰는 박 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에 일본에서는 항상 「이것으로 과거와 같은 관계에 돌아갈 것임에 틀림없다」라는 기대가 선행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오산이었으며, 과거에 이랬다, 그런데 지금은 그 라인을 벗어나 버렸다는 것과 같은 식으로 현상을 분석하려고 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는 메커니즘이라는 것에 눈을 돌려서 정확하게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세션 1 사회자:그러면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두 분 발표자에게 드리겠습니다. 발표순으로 한국측 발표자부터 부탁드립니다.

한국측 발표자:많은 코멘트와 질문을 받았는데 대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일본측이 지적하신 헌법재판소의 문제인데 일본의 한국인식에서 결여된 부분이 실로 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 특히 일본측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권위주의적인 과거에서 급속히 민주화한, 시민사회가 급속히 고양되고 있는 사회입니다. 따라서 인권의식이라든가, 민주주의, 법치에 관한 관념이 조금 앞질러 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을 타성적으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 오늘날의 한국사회를 보려고 할 때에 직면하는 격차가 점점 더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일본이 한국에 대해 느끼는 실망감이나 좌절감이라는 것도 거기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일본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안부 판결, 대법원의 징용공 판결로 이것은 그러한 문제가 한일문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한국인들은 한국사법부가 지금까지 해 온 것, 특히 1980년대, 1990년대 이후에 내려 온 여러 가지 판결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민주항쟁도 복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광주사태라고 불렸지만, 명칭이 바뀐 것만이 아니라 국가권력과 국가의

폭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많은 단체들, 현대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 단체가 복권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인들은 그러한 움직임의 연장선상에서 위안부문제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그것이 사법의 판결을 통해 표면화되었다. 그 많은 사례 중 하나로서 위안부문제에 대한 판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의 사례인데 북한의 인권이 대북정책의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행정부 입장에 서서 보자면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일본과의 외교관계에 있어서도, 또 국내통치의 국면에서도 한국시민사회의 민주화, 한국의 인권의식의 고조라는 요소를 토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그래서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라든가 하는 것이 한국측의 인식이고, 그것이 일본측으로부터는 위안부문제가 과도하게 큰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또 그것이 왜 한국은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위안부문제에 집착하는 것인가라고 일본인이 생각하는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즉, 한국사회 및 정치의 민주화 흐름과, 그리고 사법이 과거의 권위주의시대와는 다른 방법으로 자기주장을 하게 된 것이 서로 얽혀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위안부판결은 그 하나인 것이라는 식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은 그 글 내용만을 보면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자세하게 읽어 보면 잘 알겠지만, 판결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전쟁시의 여성의 인권문제로서의 위안부문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즉, 부작위의 위헌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한국정부가 그러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노력하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고, 한일관계를 파탄시키라든가 일본에 강경하게 주장을 하라든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의 정신을 기본으로 하여 한국정부와 외교당국이 어떻게 대일외교를 하고, 문제를 풀어 갈 것인가라는 과제를 단지 제기하고 있는 것이며, 한일관계 전체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라고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대법원의 판결 쪽에도 비슷한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대일관계에 대한 영향이라는 점에서는 이쪽이 중대할지도 모릅니다. 65년 체제하에서 상당 정도 수습되었고, 2005년의 문서공개에서도 밝혀졌듯이 징용공에 대한 피해자문제를 한국정부가 예산조치를 통해 하나하나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을 때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판결내용을 잘 보면, 이것도 대일외교와는 양립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식민지로부터 독립하여 해방된 국가로서 나라의 정통성의 원칙을 명확히 한 것이고, 대일외교를 그것에 따라 행하라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일본과의 외교는 나름대로 일관성을 가지고 행해져 온 것인데, 그것을 더 추진해 가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과 양립하지 않는다고 봐 버리는 것은 너무나 단락적이라는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정부나 외교부에 있어서는 징용공의 문제나 위안부문제에 대한 정책은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법부의 판결이나 대법원의 판결을 마치 한일관계 파탄의 원인처럼 해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측 분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에서 최근 표면화하고 있다는 이른바 보수국가주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인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지라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복원력, 즉 복원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라는 화제가 나왔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베 정권 등장 후의 일본이 극단적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측면이 다소 존재한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일본사회가 과연 복원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지, 즉 한국이 우려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방향으로 간 경우에 그것을 스스로 되돌릴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어떤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복원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베 정권이 제기하고 있는 논의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원자력정책, 안전보장정책, 역사인식에 관한 입장에 대해서는 일본국민의 절반은 어느 것에 대해서도 성격적인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높고, 장기정권을 구축하고 있는냐하면 저는 그 원인의 대부분이 야당의 분열, 야당의 지리멸렬한 상황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아베 정권의 노선의 비판을 담을 수 있는 정치적인 그릇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정당정치의 현실에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보면 일본국민 전체가 우경화를 지지하고 있다든가, 아베 정권이 하려고 하고 있는 극단적으로 보이는 노선을 일본국민이 전면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든가, 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매우 어긋나 일본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군사정책, 안전보장정책에 대해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걱정을 떨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저는 이와 같이 답하고 싶습니다. 아베 정권이 안보정책을 바꾸고, 군사대국화로

가려고 하는 의지가 아무리 강했다고 하더라도 그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만큼의 재료가 과연 일본에 있을지의 여부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라고 말합니다. 인구구조, 산업, 재정 등 누가 보아도 일본의 재료는—일본이 외교정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재료라는 의미입니다—한정되어 있고, 21 세기의 일본은 그와 같은 재료의 제약을 위해 다른 길을 걷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전제로 한다면 한국이 일본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해질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일본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일본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중국과 함께 일본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리고 일본과 어떤 방향으로 협력을 모색해 갈 것인가. 그것은 한국과 중국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외부와의 관계와는 상관없이 독립해서 군사대국화와 군국주의화할 일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한국과 북한과 중국이 일본을 치려고 한다면 일본이 군사대국화로의 지향을 가지게 될 것이고, 아무리 재료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지향성을 가지고 일본이 행동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션 1 사회자: 그러면 일본측 선생님도 부탁드립니다. 되도록 정각에 마치고자 하오니 죄송하지만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일본측 발표자: 원정게임이라는 것인가요... 어쨌든 그것은 접어 두고 한국측으로부터의 코멘트와 의견에 답을 했으면 하므로 저의 발표에서는 한국측에 관해 굉장히 여러 가지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일본에 관해서는 어떠냐라고 하면, 저는 역시 일본은 세계의 동향이라는 것을 보고 일본이라는 나라를 어떠한 방향으로 가지고 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글로벌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정부나 기업 혹은 시민들은 과감하게 도전하고 성공했습니다. 그것을 질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국이 성공한 분야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본받고 일본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발표 중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의 건국과정에 관해 제 나름으로 조사와 인터뷰를 하고, 민주화와 산업화에는 깊은 경의를 표하고 있지만, 그러면 그 결과 사법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었고, 여기에서는 한국측 발표자의 의견에는 찬성하기 힘들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세션 1 사회자: 감사합니다. 아직 더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후의 세션에서 논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전의 세션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옆방이 점심식사 장소이므로 여러분, 이동을 부탁드립니다.

기조연설: 박 준우 · 前 대통령 정무수석

박 준우(前 대통령 정무수석): 오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한국측은 물론이며 일본측 참석자 중에서도 구면인 분 혹은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을 특히 기쁘게 생각함과 동시에 이 「한-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가 양국 사이를 오가는 형태로 개최되어 이미 네 번에 걸쳐 한일 양국의 언론인이 만나고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약간 어쩐가 있는 말일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최근의 한일관계가 악화의 일로를 걷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역사문제를 비롯한 양국 간의 여러 현안이 복잡하게 얽혀서 이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일면으로는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양국의 미디어가 본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쌍방의 국민들 사이의 오해와 감정적 대립을 부추기고 침소봉대하여 전하는 방법을 취해 온 것이 그 원인이 된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지금까지의 50 년간을 되돌아본다면 양국관계의 절정은 1998 년 10 월의 김대중 · 오부치 양 정상에 의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해에는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도 아직 채 식지 않은 가운데 연초에 한일어업협정이 파기되고, 많은 한국어선이 나포되는 등 양국관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10 월의 김 대중 전 대통령의 방일을 거쳐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발표되고, 그때까지 금지되어 온 한국에서의 일본문화 개방도 실현되고 양국관계는 비약적으로 호전되었습니다. 또, 청소년교류를 포함한 각종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짐과 동시에 양국 미디어 간에도 편집국장회의, 정치부장회의, 논설위원회의 등 각종 대화의 채널이 열리게 되고, 그 결과로 당시에는 양국 미디어가 서로 상대를 비난하고, 또 상대국의 국민에 대해 왜곡을 하고 국민감정을 상처 입히는 것과 같은 일은 적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러한 양국미디어 간의 대화의 장은 줄어들고, 그러한 탓도 있는지 일부 극단적인 색을 띤 미디어가 선두에 서는 형태로 양국 국민 사이의 전통적인 우의를 손상시키고, 양국관계를 악화시키기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매우 마음이 아팠고 이 「한-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와 같은 훌륭한 대화의 장이 4 년간이나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저와 한일관계와의 인연은 1990 년 4 월 게이오대학에서 일본어연수를 받기 시작한 이후부터인데 올해가 마침 그때로부터 사반세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의 제가 일본어를 배울 때에 가장 도움이 되는 「교재」로 활용한 것이 일본의 방송과 신문이었습니다. 그때의 습관이 인연이 되어 저는 지금도 일본의 신문을 애독하고, 또 방송도 종종 시청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려 제가 이 25 년간 계속 품어 온 일본미디어에 대한 신뢰와 존경은 최근에 이르러 꽤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2, 3 년의 양국 미디어의 태도나 논조에는 객관성이 결여되고, 또 사실관계에 입각하지 않고 왜곡된 사실에 근거하여 상대국과 국민을 감정적으로 자극하고 공격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많이 포함되게 되었으며, 그 상황은 미디어가 처해진 환경이 해마다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라는 한마디로 정리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하고, 저는 이 점을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매체와의 경쟁 속에서 자극적인 보도, 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보도에 대한 유혹이 강해지고 있는 것은 아마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보도자세로 인해 서로 협력하고, 우호와 친선을 다져야 할 이웃나라와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지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 기회를 통해 이번 회의에 참석하신 한일 양국의 언론인 여러분에게 두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한일관계에 관해 보도하실 때에는 단순히 양국관계의 차원에 그치지 말고 동북아시아 정세, 나아가서는 세계정세의 큰 틀 안에서 이것을 보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급격한 대두에 따라 동북아시아 정세는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0 년에는 일본을 앞질러 GDP 세계 2 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지금은 미국조차도 능가할 기세를 보이며 축적한 경제력을 토대로 미국과 함께 G2 로 칭해지게 되었고, 동북아시아의 주도권을 초월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1894 년의 청일전쟁 승리 이후 유지해 온 동북아시아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더욱 연장시키기 위해 중국과의 경쟁도 마다하지 않고 「보통국가」화를 통한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의 보유와 군비증강, 일미방위협력지침의 개정을 통한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2 차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동북아시아 질서에 책임을 다해 온 미국은 「피벗 투 아시아」로 불리는 아시아 중시정책을 통해 아시아문제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려고 하는 한편, 국내외적으로 국력저하에 따라 해가 지날수록 유일한 초대국으로서의 지위가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일본-한국과의 동맹관계가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가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에 관한 전문가이기도 한 미국의 어느 저명한 언론인이 며칠 전 신문 칼럼에서 「미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아시아에서의 2 국간 관계는 중국과의 관계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중국과의 사이에서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미국 사활의 이익이 걸려 있다」고 쓰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글에서도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가운데 역사적으로 이웃나라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해 온 한국은 지금은 세계 10 위권으로 신장한 국력을 기반으로 대국세력이 경쟁하는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안정, 협력과 번영을 초래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에 들어서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동북아시아협력구상을 제창하고 지역 내의 각국에 대해 참여와 협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010 년에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힘의 과시로 인해 표면화하기 시작한 중일 간의 갈등과 경쟁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며, 2008 년 이후 정례화 및 제도화하고 있던 한중일의 정상회담도 작년부터는 개최하지 못하는 채로 있습니다. 중일 양국의 갈등으로 인해 동북아시아의 협력이 나빠지고, 강대국끼리의 세력다툼이 이 지역에서 상시화하게 된다면 동북아시아의 역사는 수십 년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 버릴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와 같은 사태가 생기는 것을 좌시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더 적극적으로 두 번의 세계대전과 그에 앞선 수백 년의 분쟁의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는 특히

전쟁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전략물자로서의 석탄과 철강을 공동관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60 여년의 일관된 노력 끝에 전쟁 위협의 제거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의 시장과 단일통화의 사용을 거쳐 통합을 이룬 EU의 성공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한일 양국의 언론인들은 이와 같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협력, 그리고 번영이라는 미래의 비전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 실현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며, 일부 정치가들이 국내의 정치적, 전략적 의도에 편승하여 편협한 국가주의나 일국이기주의의 선봉에 서서 이웃나라와의 관계, 나아가서는 지역과 국제사회의 협력과 번영에 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국과 그 국민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들은 이웃나라와의 관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따르면 수만 년에 이르는 역사 중에서 인류가 기아로부터 해방된 것은 겨우 최근 50년 간의 일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만성적인 식량부족으로 인해 「이웃사람」은 항상 약탈의 대상이 되었고, 또 국가도 그렇게 행동함에 따라 이웃나라와의 관계도 어려운 것이 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일 양국 간에는 수천 년에 걸친 긴밀한 교류와 협력의 역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7년 간의 임진왜란을 경험하면서도 그로부터 10년도 지나지 않아 통신사를 통해 쌍방이 필요로 하는 물자는 물론이며 학문과 문화, 기술을 서로 전하게 되었으며, 그 후 270여년을 평화롭게 지낸 역사도 공유하고 있지만, 이것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의를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야말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약 300년 전, 조선과의 외교를 풀이하면서 「성신외교(誠信外交)」를 스스로 실천한 일본의 유학자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의 모습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많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제 한국의 미디어에는 교토대학 오구라 키조 교수의 인터뷰기사가 게재되었는데, 그중에서 오구라 교수는 일본사회에서의 혐한감정의 뿌리에는 한국에 대한 「실망감」, 즉 한국이 중국에 접근해서 중국으로 치우치고 있는 것에 대한 섭섭함과 같은 감정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견해에는 일부 오해의 여지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국인으로서 일본에서 나온 이와 같은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일본에 대해 「인정해야 할 것은 인정」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일본측도 한국에 대해 과도하게 일면적이고 일방적인 견해로부터 탈각하여 최근 50년 동안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중견국으로서 영향력을 신장시킨 한국의 국력과 한국인의 저력을 인정하며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할 시기에 들어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노력을 거듭함에 있어 미디어의 역할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극단적인 사고에 빠진 일부 사람들이 이웃나라에 대해 근거도 없이 비방증상할 때에 미디어가 같이 되어서 그것을 부채질하는 것과 같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미디어의 사명을 내던진 부끄러워해야 할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에 시선을 주고 상대국과 그 국민들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자국민에게 정확하게 전해 가는 것이 서로가 win-win 하는 이익을 거머쥐면서 국제사회의 존경을 받는 길이며, 또 그것을 이루어 내는 것이 격조 있는 미디어, 나아가 품격 있는 국가, 훌륭한 국민의 증거가 아닐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양국에서 모인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가슴에 새기고 각자의 입장에서 직무를 다하실 것을 빌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점심식사 후에 알찬 논의가 계속될 것을 크게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션 2: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한-일 양국의 시각」

세션 2 사회자:그러면 지금부터 제 2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한-일 양국의 시각」이 되겠습니다. 물론 아시아 혹은 동아시아라는 것은 매우 넓은 지역입니다. 그곳의 정치경제, 혹은 안전보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관해 일한 양쪽의 의견을 먼저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아시아를 보면 정치, 경제, 안전보장, 각각의 분야에서 매우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정치에서는 무엇보다도 각국의 국내정치가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정권의 기반이 어느 나라나 반드시 강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동북아시아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도 포함하여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가운데 모종의 포퓰리즘이라고 할까 왜곡된 내셔널리즘이 생기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경제에 눈을 돌려 보면, 한편으로 경제적인 상호의존관계가 아시아 국가 사이에서 긴밀해지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끼리의 경제적인 경쟁은 날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즉,

아시아의 여러 나라는 경제적 파트너십과 동시에 라이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최근의 국가끼리의 새로운 결속의 형태를 낳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시아에서는 지금 2 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혹은 지역적인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움직임이 매우 급속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동아시아를 기반으로 하는 큰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으며, TPP 와 같은 태평양 전체를 커버하는 큰 자유무역협정체결의 움직임도 있는 것입니다. 더 이야기를 하자면, 아시아의 경제적인 성장을 지탱해 온 유럽과 미국의 경제가 반드시 좋다고는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은 꽤 회복했다고도 하지만 유럽의 경제를 보면 전망이 매우 어두운 상태입니다. 이것이 아시아의 수출주도 경제성장노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향후 큰 과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안전보장은 어떠냐 하면, 20 수년 전에 냉전이 끝났을 때에 아시아는 앞으로 대립과 경쟁의 시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되었습니다. 즉, 아시아의 장래는 유럽의 과거다라고, 냉전에 의해 봉인되어 있던 아시아 고유의 대립이 격화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20 년 정도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가 지속되어 왔지만, 그것이 최근에 와서는 다양한 대립이 현저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래 아시아의 여러 나라 사이에서는 꽤 대규모로 군사력의 근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동북아시아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공통된 움직임입니다. 많은 나라가 해군력, 공군력 등 군사력을 밖으로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람들에 따라서는 아시아에 지금 꽤 대규모의 군비확장경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아시는 바와 같이 북조선의 핵개발 혹은 미사일개발은 여전히 이 지역의 큰 문제입니다. 게다가 근래 영토 혹은 해양의 권익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동중국해 혹은 남중국해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시아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고, 또 그것과는 정반대로 냉전 직후에 얘기되던 백투더퓨처, 즉 아시아의 장래는 유럽의 과거다라는 시나리오가 현실화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금 이야기한 모든 것이 일본과 한국의 장래에 깊이 관여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세 시간 있으므로 듬뿍 시간을 써서 아시아의 지역정세에 관해 일한 양국의 다양한 견해를 논의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발표자 두 명에 의한 프레젠테이션으로 시작하고 오전의 세션과 마찬가지로 일단 짧은 휴식을 하고 나서 토론으로 옮기는 흐름으로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일본측, 그리고 한국측으로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변화하는 아시아 질서와 한일」

일본측 발표자: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이전부터 구면인 분들과 새로운 멤버 분 등 많은 분과 만나 뵙게 되어서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동아시아 지역정세라는 테마를 받았는데, 저는 이 문제에 관해 생각할 때에는—오전의 회의에서 비슷한 지적이 있었지만—일본과 한국의 관계만 생각하고 있는 것도 향후의 힌트는 얻어지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세계 속에서의 일본과 한국의 진로를 생각한 후에 공통항목, 혹은 공통이 아닌 부분을 서로 응시하여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운 좋게도 지금까지 아시아를 포함한 몇 개의 나라에서 근무할 기회가 있었고, 나름으로 현지의 맥락이라는 것에 접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도 토대로 하면서 「일본인의 시점」이라는 견해에서도 조금 거리를 두고 이 동아시아의 정세에 관해 관찰한 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에 따라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이야기가 있었듯이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당연히 일본과 한국은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스크린에 자료를 비추겠는데 먼저는 이쪽 파워포인트를 봐 주십시오. 이것은 미국의 중립적이라고 이야기되는 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올해 봄에 실시한 조사입니다. 영어로 되었는데 견해는 간단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중국을 보다 지지하고 중국에 호감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빨강, 그리고 미국에 대해 보다 호감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파란색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론조사를 토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분명 지난 번 회의에서 중국이 대두되면 아시아는 파란색과 빨간색의 나라로 나뉘진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것에 대해 그것은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식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 퓨리서치센터의 조사결과를 보면—우연하게도 색깔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아시아가 중국에 대한 인식을 둘러싸고 나누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은 역시

압도적으로 미국의 지지율이 높은 파란색. 또, 한국도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나 태국, 그리고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은 빨강계 되어 있고, 파키스탄도 빨강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실지 않았는데 세계적으로 보면 중동 등에서도 색깔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상황을 「일부 잘라 내어 온」 것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중국이 점점 더 커지면 이 빨강과 파랑이 분열하게 된다고나 할까요, 지금까지 파랑이었던 것이 빨강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핑크로 변해 가는 현상이 아시아에서도 일어날지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보다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의 중심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앞으로 진행해 가겠습니다. 먼저 자료 앞부분의 내용인데, 이 뷰리서치센터의 내용을 토대로 만든 첫 번째 표를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지도의 내용을 표로 변환한 것인데, 중국과 미국에 대한 각국의 호감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아시아 중에서는 파키스탄이 압도적으로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습니다. 또, 말레이시아도 그렇네요. 그런데 한국도 인도네시아 정도는 아니지만 인도네시아에 가까운 형태로 의외로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져 있습니다. 자료로 인쇄는 하지 않았지만 한국은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56%이고 미국은 82%로 되어 있었으며 일본은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7%이고 미국이 66%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역시 같은 파란색이라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중국과 미국에 대한 거리감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 뿐만 아니라 한국일보와 요미우리신문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자국에 있어 중요한 나라는 어디냐는 물음에 대해 일본은 미국이 74%로 1 위.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 거의 46~47%로 대략 같은 비율입니다. 여기에서도 같은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어쨌든 한국이 중국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 어떤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상황을 이야기하자면 이렇다는 것은 인식해 두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흥미 깊은 것이 다음 표인데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신뢰할 수 있는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것은 중국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높는데 92%입니다. 일본은 그에 비해 6%입니다. 매우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디쯤에 위치하느냐 하면 첫 번째 표에서 중국을 미국보다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파키스탄보다도 한국에서의 시진핑 주석에 대한 신뢰도는 더 높은 것입니다. 한국은 57%, 파키스탄이 38%입니다.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면 수치에 10 배 이상의 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베 수상은 신뢰할 수 있는나라는 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표입니다. 내용이 재미있는데 시진핑 주석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베 수상에 대한 신뢰도가 높습니다. 표로 이야기하자면 베트남이나 일본입니다. 그리고 역시라고나 할까요, 한국이 가장 숫자가 낮은 5%입니다. 15%의 중국보다도 아베수상은 한국에서는 인기가 없고 신뢰받지 못한다는 결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역시 좋다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한국의 중국에 대한 인식과 일본의 중국에 대한 인식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는 일본이나 태국, 혹은 일본이나 말레이시아와의 차이보다도 크며, 어떤 의미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중국에 대한 인식과 비교해 보면 일본과 한국에서 가장 큰 격차가 있다고조차 말할 수 있는 결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 점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국과 일본의 인식차이는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생기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인데 자료의 (2)에 이어집니다. 이것은 오전 중의 세션에서도 나온 내용인데 냉전이 끝나고 냉전시대로 끝맺어진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변화되어 오고 있다는 것이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소련이 있고, 그 소련이 북조선을 지지해 온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게다가 1992년에는 한국에 있어 또 하나 불안의 씨앗이었던 중국과의 국교수립도 성립했고, 그에 따라 아마 위협감이라는 면에 있어서의 골이 일본과 한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다음 표입니다. 이것은 요미우리신문과 한국일보가 5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인데 표를 봐 주시겠습니까. 군사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는 나라는 어딘가라는 질문에 대해 일본은 중국이 82%, 다음은 북조선, 다음은 러시아라는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당연히 북조선이 1 위, 그런데 2 위에 왜인지 일본이 군사적 위협으로 되어 있고 중국이 3 위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에 대한 위상의 차이는 위협감의 차이에서도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비슷한 경향은 아사히신문이 올해 2월부터 3월에 실시한 일중환 세 나라의 여론조사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일본은 1 번이 영토문제, 2 번이 중국의 군사력, 3 번이 조선반도정세, 즉 북조선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1 번은 당연히

영토문제이고 2 번이 북조선·조선반도정세, 그리고 세 번째에 일본의 군사력이 나와 있습니다. 미소냉전이 한창일때 일본과 한국이 합의를 주고받은 1965년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위협감이 이와 같은 차이가 생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강조해 두고 싶은데, 이 위협감의 차이는 특별히 일본과 한국만의 차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고, 게다가 경제적으로 아시아의 나라들이 의존하게 된 상황은 아시아 각국에 인식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음의 표인데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최대의 위협은 무엇이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조금 전에도 보았듯이 일본은 중국, 한국은 북조선이었는데, 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미국의 사례가 표에 나와 있지만 최대의 위협이라는 것은 나라에 따라 전혀 다릅니다. 인도에 있어서는 파키스탄이고, 태국에 있어서는 캄보디아이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지요. 따라서, 일한 양국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냉전구조가 무너지고 중국이 부상하면서, 또 아시아 자체가 다국화하는 흐름 속에서 각국 간에 인식의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극단적으로 인식이 다른 나라와 나라도 있고, 그러한 일례가 일한 양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한 양국은 왜 중국에 대한 인식, 그리고 위협인식이라는 것에 차이가 있는나라는 것인데 (3)에서 몇 가지 내용을 꼽아 보았습니다. 다섯 가지 정도 요인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한국과 일본의 외교당국자 혹은 안전보장 전문가 십수 명에게 같은 질문을 한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답으로 꼽은 원인 중에서 많았던 내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답을 했느냐 하면 먼저 첫 번째가 입지조건과 영토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였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일본은 당연히 한국과도 영토문제를 안고 있지만, 특히 지금은 센카쿠 열도의 문제로 중국과 평상시에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도—이것은 방위백서에 자주 사용되는 지도입니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지도는 지구모형을 거꾸로 해서 중국측을 아래로 해 본 그림인데 일본과 한국의 차이로서 중국군의 배가 일본열도를 빠져나가 활동하고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일본의 입지라는 것은 중국이 점점 군사적으로 팽창하는 가운데 중국이 태평양을 빠져나가는 통과로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중국이 위법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공해 사이를 통과해 대외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지만, 역시 자국의 사이를 중국선이 빈번하게 오고 간다는 것은 한국에게는 없는 입지조건인 것입니다.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센카쿠 문제의 존재도 있습니다. 한국도 중국과의 사이에 작은 암초를 둘러싼 영토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센카쿠와 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도 일한 두 나라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고 한국분들이 자주 강조한 것인데, 국가의 통일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였습니다. 분단국가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입장차이가 근래 일한 두 나라의 차이를 넓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분들은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므로 간단하게 얘기하겠는데 한국에 있어서는 북조선과의 분단상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큰 과제, 최대의 과제 중 하나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 경우에 역시 미국의 협력을 얻으면서 북조선의 위협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없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통일을 위해 중국의 협력을 얻으면서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한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과 중국 양쪽과 균형을 취하면서 양쪽과 사이 좋게 지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그런 문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①의 입지조건에서 오는 중국의 군사팽창이나 센카쿠 문제에서의 도발과 같은 행동에 대응함에 있어 일미동맹을 한국 이상으로 스스로없이 중국에 신경 쓰지 않고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즉,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에 열중하기 때문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일미동맹을 강화하고 있다는 얘기보다는 일본의 입지조건에서 분단국가가 아니라는 입지조건에서 일본은 중국에 대해 일미동맹을 사용하여 한국 이상으로 대담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사정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역사문제.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일본과 중국 및 한국 사이에 역사문제가 있고, 한국도 중국과의 사이에 역사문제는 있지만 일한·일중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오전 중에도 나온 중국에 대한 의존도입니다. 한국의 GDP 는 수출이 50%를 차지하고, 수출국의 약 25%가 중국, 직접투자를 받고 있는 것도 올해 1-9 월로 보면 중국으로부터의 투자는 38% 증가, 미국이 6%증가, 일본은 17% 감소로 되어 있는데 더욱더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수출에 대한 중국의존도는 18%에 불과합니다. 중국으로부터 일본에 대한 투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그 외에 다섯 번째로 몇 가지 나열했는데 일한 두 나라의 경제력의 차가 줄어들고 있다라든가 내셔널리즘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차이에 대해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굳이 한국이 중국으로 기울어져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봐 온 것처럼 한국의 입지조건이나 한국의 분단국가로서의 상태를 생각하면 한국이 중국과 절충하면서 미국의 동맹도 유지하고 자신의 국익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고,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인간의 DNA 와 같은 것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일본은 조금 전에 말한 바와 같은 상태로 인해 한국과 같은 대중국정책, 대외정책은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엇갈림이 있더라도 일본과 한국은 이웃나라이며, 민주국가이고, 경제관계도 그나름으로 강하니까 협력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의 다음 부분인데, 그렇다면 일본과 한국은 어떻게 하면 협력관계를 쌓을 수 있을 것인가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3 개 정도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대로 항목을 세워 보았는데, 요컨대 일한 양국 각각의 우선권을 생각해 보고 거기에 맞추어 조정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일본의 외교안전보장에 있어서 우선도를 생각하면 이러한 순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번이 역시 영토, 현재 상황으로 이야기하자면 특히 센카쿠 열도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센카쿠 열도와 표리일체의 관계가 되겠는데 중국군의 증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선 일본만이 자조 노력을 해서 영토를 지키고자 하는 수비를 강화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단,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당연히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베 정권이 아니더라도 일본의 입장에서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조금 전의 위협인식으로 두 번째에 꼽힌 북조선의 위협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것은 역시 일미한 세 나라의 연대 등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가 해양의 안전보장입니다. 남중국해와 그러한 문제입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호주나 ASEAN 에서 협력한다고. 다섯 번째로는 나아가 사이버와 우주공간의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새롭게 생긴 국가안전보장정책도 거의 이와 같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제가 틀렸다면 나중에 꼭 가르쳐 주셨으며 하는데-제가 보는 바에 따르면 한국에 있어서의 우선도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다음의 내용입니다. 1 이 북조선에 대한 위협의 대응 및 남북통일. 이 해결을 위해 미한 양국, 그리고 괄호를 했는데 미한일의 연대와 그리고 역시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두 번째가 영토문제. 타케시마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은 협력상대가 아니라 대립상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후는 순서를 모르겠어서 물음표로 했는데 중국군의 증강이나 사이버, 해양의 안전보장 등이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한국이 일본의 안전보장상의 우선순위를 해결하려고 생각한다면, 한 가지 중요한 옵션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함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 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아마 남북통일 등에서는 일본의 협력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최종적으로 통일이 실현된 후, 혹은 실현될 듯한 때에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토대로 한 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나타낸 것이 ③으로 일한 양국에서 협력하기 쉬운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를 분류하였습니다. 요컨대 큰 전략에서 협력하는 것이 좀처럼 어렵다면 방법이 없으므로 작은 전술적인 테마로 협력하거나 혹은 win-win 의 협력을 강화하여 거기에서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협력하기 쉬운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를 표로 만들어 보면 먼저 중국군의 증강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은 협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는 △ 또는 ×로 적어 두었습니다. 즉,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입장의 차이에서 중국이 더욱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크게 되면 될수록 일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북조선의 위협은 협력할 여지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북조선의 군사력이나 통상 병력이 계속 약해진다는가, 한국이 자신의 힘으로 어느 정도 대응할 능력이 늘어나면 일본의 필요성은 없어지는 않더라도 줄어들 것입니다. 즉, 표로 말하자면 ○에서 △가 되어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북통일은 처음에는 미중과 협력하여 발판을 만들고, 그 후에 일본의 자금원조와 같은 것이 필요하게 되므로 △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좀처럼 협력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능성이 될 수 있는 것은 해양의 안전보장이라는 것이 되는 것일까요. 지금 일본은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안전보장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과는 이러한 것으로 협력할 여지가 있을지 없을지. 있다고 한다면 협력 가능한 분야 중 하나가 될까요. 또, 나머지는 예를 들면 사이버나 우주 등 나아가서는 여기에는 적지 않았는데 역시 경제입니다. 그리고, 문화교류 등과 같은 것을 꾸준히 쌓아 올려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가장 필요하고 지금 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사전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규칙으로 되어 있어서, 이 다음에 한국측 선생님의 자료를 미리 읽었는데, 거기에서는 꽤 역사문제가 외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한마디만 코멘트하고 싶은데, 저는 여기서 역사문제에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문제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대립하거나 관계가 나빠지는 원인이지만, 동시에 그것 이상으로 관계가 나쁘니까 심각화한다는 것이라고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지 좋은 예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100 년 혹은 몇백 년이나 이웃에서 살고 있는 가족, 집을 나란히 하고 있는 이웃에 살고 있는 가족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한 집이나 이웃들이 몇백 년이나 같이 살고 있으면 정원위치가 어떻다거나 이웃소리가 시끄럽다거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다툼을 안고 있게 됩니다. 혹은 정원의 경계선을 둘러싸고 싸움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웃집의 토지를 멋대로 사용한다든가 심각한 대립도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한 것이 쌓여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 즉 이웃에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웃끼리의 관계가 좋을 때에는 50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라든가, 100 년 전에는 이랬다라든가, 마음 속으로는 결코 용서하지 않고 마음 속에서는 화가 나더라도 매일매일 그것을 전면에 내세워 싸움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꼬투리로 이웃끼리의 관계가 험악해 졌을 때에는 그렇고 보면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잖아라는 이야기가 전면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의 일한 양국에 있어서의 역사문제라고 하는 것도 역사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관계가 악화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략적인 거리가 넓어지는 가운데 관계가 소원해지게 됨에 따라 역사문제에 「불이 붙기 쉽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실은 후자인 것인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역사문제에 대한 일한관계의 내구성 쪽에 눈을 돌린다, 즉 일한관계를 건물에 비유한다면 지진에 대한 내진성이 낮아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이와 같이 발표하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션 2 사회자: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국측 발표자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동아시아의 정세에 대한 한-일 양국의 시각」

한국측 발표자:감사합니다. 일본측 선생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저도 이 자리에서 이전부터 알던 친구, 지인들과 재회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옛날에 일을 함께한 분도 참가하셔서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또, 올해에도 이 「한-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에 참가할 기회를 얻은 것과 배려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점심식사 후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대라서 약간 불리한 처지가 되었는데, 그만큼 보충하기 위해서라고나 할까, 일본측의 발표보다도 조금 논쟁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게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직설적인 이의 제기도 불쾌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점 미리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오전 중의 세션에서는 한국측 참가자로부터 한일관계에 관한 회의가 대체적으로 같은 전개가 되어 버린다는 「쓴소리」가 나왔는데 개인적 경험으로도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저도 일본문제에 관해 조사하던 중에 한국쪽이 도쿄에 가서 이야기하는 자리에 참석하거나, 또 일본의 연구자가 서울에 왔을 때에는 이야기를 들으러 가는 식으로 여러 장소에 참석하는 기회가 늘었는데,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내용은 비슷한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컨대 바하의 변주곡 같다고나 할까요, 비슷한 이야기가 오가는 것이었는데 문제의 해결은 조금도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동심원을 빙빙 돌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를 준비함에 있어서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여러 가지 고민해 봤는데, 한 가지 방책으로 그 동안 일어난 것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거기에서부터 문제의식의 공유라는 것으로 이어갈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을 잘 알고, 그리고 양국에 잘 알려진 해외전문가의 이야기를 「제재」로 삼고 있으므로, 여론조사와 앙케이트를 구사하신 일본측의 발표와 약간 모양이 다른 형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주어진 테마인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한-일 양국의 시각」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하루하루 역사를 기록하고, 보도하고, 그것을 해설한다는 저널리즘적인 방식에 따라 올해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어났느냐에 관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작년 회의 때에는 아베 총리가 731이라는 기체번호가 쓰여진 비행기 앞에서 엄지손가락을 세우고 포즈를 취하는 그런 사진이 많은 미디어에 보도되었고, 731 부대까지도 미화하는 것인가라는 소리가 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금년은 어떨까요. 1월부터 돌이켜 보면 1 월에는 다보스포럼에 주목이 모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다보스포럼에 많은 저명인이 참가했기 때문인데 이 회의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아베 총리도 참가하였습니다. 그때에는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하는 자리에 초대되지 않았다는 일화가 보도되기도 하였지만, 주목을 모은 것은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아베 총리의 기자간담회에서의 발언이었습니다. 영국 Financial Times 의 인터넷판이 자사 기자의 질문에 대한 회답으로서 보도한 것이었는데, 중일관계를 한때 대전 전야의 영국과 독일에 비유하면서 충돌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반응한 것이 이안 브레머 씨, 저명한 정세분석가로 유라시아그룹의 회장인데, 그 장면에 관해 New York Times 에 기사를 썼습니다. 다보스포럼에서의 아베 총리의 발언을 바탕으로 하여 2014 년은 중일관계의 갈등이 글로벌사회에 있어 가장 불안하게 여겨야 할 정치경제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연초에 영국 Economist 지의 2014 년 정세분석 보고서에는 없었던 내용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하버드대학 명예교수인 에즈라 보겔 씨—새삼스럽게 설명이 필요 없는 일본을 숙지하고 있는 사회학자입니다—가 자신의 등소평 평전 출판기념으로 한국에 오셨습니다(일본도 같은 시기에 방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때마침 다보스포럼 직후였던 것도 있어서 중일관계에 대해서도 물어 보았습니다.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에 대해서나 일본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는 것을 알고 싶어서 과거사문제가 한일 간에서나 중일 간에서나 현안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라고 질문을 했더니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 어떻게든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물었더니, 등소평 연구를 했을 때에 탐독했다는 삼국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중국의 고전인 삼국지를 인용하면서, 위기가 극한까지 달하면 지도자가 모여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사례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한중일의 지도자들이 상황을 잘 고려하여 정상들 사이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역사문제를 둘러싸고 한중이 「과거사동맹」을 맺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이 있는 것 같다는 지적도 하신 후에 한국이 일본에 대해 과거사의 일로 분노하고 있는 사정을 자신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국가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이해관계를 생각하여 냉정함을 찾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 중국의 압력을 극복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하였고 매우 흥미로운 인터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접어 두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안 브레머 씨도 3 월에 한국에 오셨기 때문에 재빨리 그 기회를 붙잡아서 브레머 씨가 왜 중일관계를 올해 최대의 위기로 생각하고 있는느냐는 질문을 해 보았는데, 브레머 씨는 개인적으로 아베 총리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 정책이나 아베노믹스를 꼽으면서 일본을 장기불황으로부터 탈출시킬 수 있는 것은 아베 총리 외에는 달리 없다라는 높은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훨씬 아베 총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브레머 씨였는데, 다보스포럼 건에 관해서 만큼은 말실수라고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총리로서 해야 할 이야기는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의 반일감정과 아베 총리에 대한 불신감—중국이 북한의 김 정일과 일본의 아베 총리가 동아시아 최대의 문제아라는 표현을 듣고 놀랐다는 것이었습니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와서 기억에 남는 인터뷰가 되었습니다. 또, 부연하자면 브레머 씨는 미국인은 「역사는 역사, 과거는 과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시아에서도 과거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를 두고 보면 좋은 것이 아닐까라는 발언도 하셨습니다. 역사문제나 종교문제는 당국자가 만나는 자리에서 끄집어 낼 화제가 아니다, 결국 그렇게 해도 결론은 나오지 않으니까 긴 안목으로 풀어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저는 공감을 했고, 역시 인식이 어긋날 때에는 제3자의 눈을 통해 깨닫는 것이 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이 참고로 해야 할 조언을 많이 얻을 수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나온 한국과 중국의 「과거사동맹」이나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같은 이야기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한국이 주도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다고 하기 보다는 일본에 의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것, 또 시진핑 체제의 중국측이 「역사전쟁」을 전면에서 부각시키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 또 중국도 한국과 역사동맹을 맺기 위해서라고 하기 보다는

「위대한 시진핑시대」의 연출이라는 의도를 위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은 1월에 베이징의 외국인 기자단을 만주사변에 관한 자료를 모은 라오닝성의 「9·18 역사박물관」에 초대하는 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한국, 그리고 일본에서도 많은 저널리스트가 참가했다고 하는데, 그 후에 난징시의 난징대학살관 투어도 실시하여 당시의 사진 등도 그 자리에서 공개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움직임 속에서 일본측에 특히 충격을 준 것이 안중근기념관이 헤이룽장성의 하얼빈역에 오픈했다는 뉴스였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중국방문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작은 비라도 좋으니까 세울 수는 없을까라고 요망한 것에 대해 시진핑 주석이 매우 규모가 큰 기념관을 건설한 것으로 답했다는 경위도 쇼크를 주었을 것이고, 일본은 안중근에 대해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있으므로 더욱 갈등이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놀란 것은 그 후의 전개였습니다. 오전 중의 제 1 세션 중에서도 일부 언급되었지만, 중일 간의 국교정상화 때에 역사는 후대가 평가하는 것에 맡기자라는 방침에 근거하여 과거사 이야기를 일단락시켰습니다. 국교정상화에 동반되는 배상도 논의하지 않고 그 대신이라고나 할까, 일본은 그 후 오랜 세월이 걸쳐 중국에 막대한 ODA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역사를 덮어 두고 경제원조와 개발에 매진해 온 중국이 7월 3일부터 8월 16일까지 하루에 한 명 꼴로 45명의 일본인 전범의 진술서를 공개한 것입니다. 매우 적나라한 내용으로 예를 들면 최근의 인터넷게임보다도 자극적인 표현이 많은 것이었는데, 그것은 중국이 날조한 것이 아니라 일본인이 진술해서 쓴 것이므로 일종의 역사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마침 어제 뉴스였던 것 같은데, 난징사건에 관한 진술서의 공개가 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개를 보고 있노라면-조금 전에 중국의 「역사전쟁」은 국내용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일본으로서는 한중의 「과거사동맹」을 걱정하기 이전에 중국과의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것은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은 방대한 수의 기록물을 가지고 있으므로 역사문제가 이슈가 되면 될수록, 아베총리가 역사수정주의를 취하면 취할수록 중국이 방대한 자료들을 공개하게 됩니다. 즉, 한국이 중국편이 된 것이 아니냐라든가 중국과 역사동맹을 맺으려고 한다고 하면서 실망감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역사문제에 대해 화해든 타협이든 이야기를 매듭지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범의 진술서와 같은 것은 순수하게 역사적 자료 및 연구자료로서 보존해야 하는 것이고, 민심을 자극할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므로 그를 위해서도 타협은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어쨌든 한중의 역사동맹은 한국이 바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일본에 대해 새로운 관계를 요구하는, 즉 이른바 「신형대국관계」를 동북아시아에서 실현하기 위한 압박용으로 전면내걸고 있고, 또 그 도구로 역사적 사실의 공개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1972년의 중일국교정상화의 합의에 어울리는 행동인지 그렇지 않은지, 또 새롭게 보완해야 할 것이 있는지 어떤지. 문외한인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일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을 수정하려고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일본이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만이 한국과 일본의 문제에도 좋은 시사점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중일관계, 한중일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했는데, 지금부터는 한일관계에 화제를 옮겼으면 합니다. 저는 이른바 재팬스쿨이라고 하나요, 일본문제를 전공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조금 전의 일본측 발표자와 마찬가지로 한미관계를 생각하면서 일본을 분석하고 글을 써 왔으므로 그러한 시점에서 일본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른바 386 시대라고 불리는 세대에 속합니다. 1960년대 태어나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세대라는 뜻인데, 그러한 세대의 특징 중 하나는 일본에 대해 반일 일색은 아니고, 일본과의 화해나 객관적인 관점과 같은 것을 중시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저 자신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회의와 같은 곳에서는 일본의 군국주의화라든가, 과거사의 왜곡과 같은 화제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때마다 주위로부터는 「일본에 대해 너무 관용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저는 그러한 비판에 대해 양보하고 싶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특별히 제가 비판을 받아서 오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한국과 일본 사이에 여러 가지 다툼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있다는 공통사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탈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가 있는 이상, 또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있는 이상 한일관계는 극단적으로 폭주할 수 없으며, 물론 독도를 둘러싸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균형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의 정세에 있어서 한일관계에 대한 미국의 접근은 두 가지 트랙이라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사문제에 대해, 위안부문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 즉 보편적인 인권의 시점에서 미국은 한국측에 서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이 헌법의 해석을 바꾸어 집단자위권을 강화했을 때에는 일본측에 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한국과 일본이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올해 3월 헤이그에서 한미일정상회담이 열렸는데, 그 영상을 보고 제가 떠올린 것은 작년의 「한-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에서 나온—아마 일본측 참가자로부터였다고 생각하는데—한일관계의 「캠프 데이비드식 해결」이라고나 할까요, 미국을 중재자로 하는 형태로 해결책을 모색하면 어떻까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때에도 매우 탁견이라고 생각했는데, 헤이그에서의 정상회담이 실로 그러한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이 온 것입니다. 그 한미일 정상회담은 오바마 대통령의 주도로 실현되었습니다.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지 않으니까 사이에 들어가서 만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미디어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판 쪽으로 향하고 있는 사진이 게재되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도리어 나빠졌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한국어로 말을 걸려고 하는 아베 총리라는 식의 기사가 나왔는데, 결국 한국도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호전되지는 않고, 한일관계에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는 미국의 중재방법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도 자국의 입장이나 기대가 있으니까 완전히 중립적인 중재자는 될 수 없습니다. 너무 한일 두 나라의 입장이 동떨어져 있으면 안전보장이나 가치관 등의 공통항목을 강조하여 중재하는 방법도 통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초래한 것이 무엇이나라고 하면, 제가 한국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한국에 있어서 대일관계의 중요성을 다른 사람의 배는 이해하고, 또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아베 총리의 역사수정주의가 너무 강하지는 않을까, 위안부문제에 대해서도 아베 총리의 드라이브가 너무 강하지는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 1개월 후의 오바마 대통령 국민방문시에도 표면화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국민방문을 둘러싸고 한일 간에 「외교전」이 벌어졌습니다.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에는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을 몇 번이나 방문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괜찮겠지라고 하고 있었는데, 현지의 문맥을 잘 아는 전문가 리처드 아미티지 씨와 빅터 차 씨, 마이클 그린 씨 등이 Washington Post 지에 칼럼을 써서,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만 가고 한국을 방문하지 않을 경우 한국에 불필요한 오해를 부르고, 또 일본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오해를 초래한다와 같은 주장이었고,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한일 양국을 방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에서 아베 수상과 내각 멤버 등이 야스쿠니 신사의 춘계 예대제에 봉납하였고, 이것이 문제시되었습니다. 당시의 New York Times 를 보면 물론 아베 총리 자신은 참배하지 않고 제물을 봉납하기만 했지만, 이 타이밍에 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의 의의를 손상시킨 일이 되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공인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었는데, 이것은 매우 불충분한 설명으로 저는 그것이 순수하게 개인으로서의 행위였다고 보는 것은 어려우며 신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되었든 오바마 대통령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한일관계는 평행선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불과 며칠 되지 않았는데 중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도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 미디어의 보도에서는 대체로 「아베 총리가 악수하려고 손을 내밀고 있지만 그것에 응하지 않는 시진핑 주석」이라든가 「미소 지으며 말을 걸고 있는 아베 총리에게 굳은 표정을 풀지 않는, 혹은 눈을 감고 듣는 시진핑 주석」과 같은 사진을 전면내보냈습니다. 또, 정상회담을 한 것에 대해 일본 국내에서는 아베 총리의 행동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보여졌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회담에 대한 평가나 대일감정은 그대로 낮은 수준이며 QQ.com 이 회담직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83%가 일본은 매우 싫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없는 이상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은 해소될 수 없고, 또 아베 총리가 역사수정주의를 시정하지 않는 이상 일본은 과거사를 둘러싸고 창피를 당하게 된다고나 할까, 선진국으로서의 이상을 살리는 데이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일관계로 이야기를 되돌리면, 한일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위안부문제입니다. 일본에서는 아사히신문의 보도를 둘러싸고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여러 번 인터뷰한 적이 있는 레인 에번스 전 미하원의원—불과 며칠 전에 파킨슨 병으로 인해 돌아가셨는데—의 이야기로 파킨슨 병의 증상에 괴로워하면서도 위안부문제가 여성의 인권문제임을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또, 1999년부터 에번스 씨가 계속 제기했던 위안부문제 결의안이 병으로 인해 의원직에서 물러난 직후인 2007년 에 미하원에서 채택된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번스 의원의 뒤를 잇는 형태로

마이크 혼다 미하원의원이 위안부문제의 공론화에 힘쓰고 있는 것도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즉, 위안부문제에 대해서는 일전에 요시다증언이 왜곡된 것이라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하고 아베 총리도 이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평가는 정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본통 대표주자로 알려진 리차드 아미티지 전 국무 부장관도 이 문제는 UN 에서도 인정한 여성인권문제가이므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미일동맹에도 상처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미국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래리 닉쉬 씨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미하원 위안부 결의안을 작성한 멤버 중 한 명으로 저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분이 10 월에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의 인터뷰에 응했을 때에 요시다증언이 왜곡된 것이었다고 하고, 아사히신문이 사죄를 하고, 이것에 대해 아베 총리의 지지파가 요시다증언이 왜곡된 것인 이상 위안부의 강제성은 입증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까지 비약시키고 있지만, 자신이 2007 년에 하원에서 결의안을 작성했을 때에는 요시다증언을 전혀 인용하지 않았다. 참고로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요시다증언은 아사히신문에 의해 왜곡되었다는 발표가 있더라도 위안부의 강제동원이나 결의안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워싱턴의 아시아정책포인트라는 작은 싱크탱크의 대표를 맡고 있는 민디 카트라 씨가 New York Times 에 「위안부와 일본의 전쟁에 대한 진실」이라는 칼럼을 써서 아베 총리가 위안부에 관련해서 계속 역사왜곡을 하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이것을 막아야 한다. 미국 외교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므로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매우 장문이고 대단히 객관적인 내용이므로, 만약 읽으시지 않았다면 한 번 보시는 것이 어떻가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인용만 계속하고 있어서 슬슬 결론으로 옮겨가고 싶은데, 저는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한국의 지식인, 일본의 지식인의 코멘트는 피해 왔습니다. 이 지식인은 한국인 또는 일본인이니까 어차피 말하는 것도 한국편, 일본편일테니까라는 인상을 미리 배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미일동맹의 한 축인 미국 지식인들의 이야기를 인용했는데, 레인 에번스, 마크 혼다, 리차드 아미티지, 래리 닉쉬, 민디 카트라 씨 등의 이야기에 공통되는 것은 위안부에 관한 진실을 부정하면 한일관계는 물론이고 미일관계에도 균열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저는 만약 그것이 미일역사전쟁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해도 이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쓰나미와 같은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해 일본의 여론주도층이 판단을 정확하게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다크호스로 주목받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나 낸시 펠로시 미하원 원내대표 등 여성의 인권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정치가가 다수 존재하고 있으므로 미국측의 이와 같은 자세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되는 것이 내년의 일한국교정상화 50 주년, 그리고 한국의 독립 70 주년을 어떻게 맞아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이 「한-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는 원래 그 테마를 파고들기 위해 가동된 것이므로 참가하신 여러분 각자에게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저 나름의 아이디어를 넣으로 해서 회의에 공헌하고 싶습니다.

먼저 위안부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중앙일보의 김 영희 대기자가 8 월 1 일자 지면에 실은 칼럼 「위안부문제, “사사에 모델”이 답이다」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칼럼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명박 정권 말기에 당시의 사사에 켄이치로 외무사무차관으로부터 문제해결을 위한 세 가지 항목의 제안이 있었다는 일화가 다시 소개되어, 일본의 총리가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인도주의의 관점에서 배상을 하며 주한일본대사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 사죄함과 동시에 그것을 전달한다는 방식, 이것으로 양국이 타협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위안부문제라는 전쟁시의 여성의 인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것이 일본에게 있어서도 큰 이익을 주는 합리적인 길이 아닐까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저도 이 점에 완전히 동감입니다.

또, 야스쿠니 신사 문제에 대해서는 존 케리 국무장관, 얼마 전에 사임한 척 헤이글 국무장관이 작년에 2+2 회의를 위해 일본을 방문했을 때에는 야스쿠니 신사는 명확히 피하고 대안시설인 치도리가후치 전몰자 묘원에 갔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야스쿠니 신사 측의 설명은 한 번 합사된 것은 하나가 되어 있으므로 분사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만, 그렇다면 대체시설을 만들어 다른 외국·문명국의 지도자가 방문할 수 있는 곳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도, 센카쿠, 러일 북방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회의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다고 기억하는데, 일본이 독도, 센카쿠, 러일 북방영토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조속히 반환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선택했다면 그 대상에 전면적으로 집중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 해답은 일본측에 있다는 것이 되겠지만, 영토문제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도 여러 가지 공개되어 있고, 학계에서도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일본측의 전략적인 판단이 보다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마직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매우 좋아하고, 존경도 하고 있으며, 일본이 전후에 전 세계에서 해온 공헌과 수많은 ODA, 그리고 가난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 대한 기여를 존경합니다. 또, 일본의 지식인과 일반 여러분 등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도 많이 있는데, 한편으로 불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최근 읽은 중앙일보의 일본특파원 칼럼에 「내가 알던 큰 나라 일본은 어디에 갔나」라는 타이틀의 기사가 있어서 비슷한 감회를 가진 한국인이 적지 않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일본은 지금도 여전히 「큰 나라」이고, 일본 나름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일본의 길」과 「아베의 길」이 같은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가정적인 내력이라든가, 아베 총리의 역사수정주의에 투영된 이미지 등 향간에 이야기되고 있는 것 밖에 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아베 총리를 지지하는 소수의 인사들이 가지는 사상의 경향, 그리고 아베 총리 개인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일본의 고전적인 리더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과는 다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일본에 정통해 있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으며 결국은 일본 분들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적어도 「아베의 길」과 「일본의 길」이 다르다고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진정한 의미에서 「정상 상태」의 일본을 가슴에 그리시는 분들은 아베 총리가 생각하는 길이 과연 정말로 그것과 합치하는 것일지 어떨지 숙고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리더가 되려고 하는 과정에서 「아베의 길」에 관해서도 꼭 진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션 2 사회자: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보고를 받았으므로 지금부터 15 분 정도 커피브레이크를 가지겠습니다. 오후 네 시 조금 전에 재개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토론

세션 2 사회자:그러면 지금부터 다섯 시 반까지 한 시간 반 정도 자유토의를 하겠습니다. 발언을 희망하시는 분은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이름표를 세워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쪽이 빨랐던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일본측 참가자:감사합니다. 두 분의 프레젠테이션, 조는 일 없이 잘 들었습니다. 알찬 내용의 발표에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고백해 두고 싶은데, 저는 벌써 꽤 나이가 되었는데도 실은 서울에 제대로 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까지는 그다지 인연이 었었다고나 할까요, 자신의 인생 속에서 접점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제 자신을 오전 중에 이야기가 나온 요즘 일본의 무감각과의 한 사람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여론조사에서 일한정상회담을 빨리 하는 편이 좋으나, 초조해 하지 않아도 좋으나라는 설문에 대한 회답이 대체로 거의 비등비등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특별히 초조해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은가」라는 쪽에 속합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저는 오전 중에 제기되었던 지적, 일한관계를 개선하자는 소리가 한국에서는 큰데 일본에서는 작다는 것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 조금 비뚤어진 표현이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한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과연 정말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의 일본의 바른 역사인식이 전제되지 않으면,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는 어렵다라는 발언. 이 발언과 「일한관계를 개선하자」라는 주장은 실은 안팎에서 같은 것을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많은 일본인들이 느끼고 있는 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일한관계를 개선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일한관계를 개선하자고 한 순간 자신이 틀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상하다고 감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은 옳지만 당신들은 틀렸다고 했을 때, 아 그렇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까라고 생각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그러한 문제제기라고나 할까요, 그러한 것을 끄집어 내는 순간 요컨데 체로섬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이길 수 있지만, 당신들은 진다, 우리들은 옳지만 당신들은 옳지 않다라는 양자택일의 제기가 되어 버린다. 이렇게 되면 일은 전혀 진전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실은 1965 년의 일한기본조약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저는 옛날에 한때 관공서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1 년째인가 2 년째 정도 되었을 때의 일로 한 가지만은 지금도 선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 선배로부터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약정문서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문서가 아니다.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지만 한두 군데 어느 쪽도 아닌 중간적인 부분이 있는 문서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이지만 왜인지 매우 선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합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얽혀 있는 부분을 조정하여 합의한다. 서로가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정말 최대 한계점에서 찾아서 거기에서 타협을 한다. 그러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일중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회담의 전제가 된 네 항목의 합의문서라는 것도 실은 그러한 어느 쪽도 아닌 중간적인 부분이 남아 있는 문서로 각각의 외교당국이 여러 가지 교섭도 하고, 고생해서 종이문서로 한 것—관공서는 종이문서로 일을 하니 종이문서화하지 못하면 있었던 일이 아닌 것입니다—입니다. 그러한 외교문서를 만든 것을 보면 과연 정상회담이다, 전날까지 높은 수준에서 조정을 하고 공동으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한기본조약도 역시 1965 년 시점에서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조금 전에 일본측 발표자 선생님이 보여주신 당시의 신문지면에도 타케시마에 관해 적혀 있지 않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그것도 당시의 당사자 간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옳다·옳지 않다라는 논의를 조금만 더 하자면, 실은 위안부문제나 한국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도 바른 역사인식, 바르지 않다는 것을 일단 옆에 놓아둔다면, 저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존경의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것과 같은 대응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거기에 바른 역사인식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이야기가 같이 따라오면 힘들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또, 같은 경우가 사할린에 재류 중인 한국인이나 피폭한 사람들에 대한 대응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하자면 개인배상을 인정하라는 이야기는 특별히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냉전이 끝난 후, 그때까지의 동서의 벽이 없어지니까 독일도 예를 들면 폴란드로부터 전쟁 중의 개인배상을 요구당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추세라고나 할까요, 냉전구조가 무너진 하나의 효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작업은 아마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영원히 살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라고나 할까요, 그 조약을 맺었던 때에는 상정하지 못했던 사정의 변경이 필요해지는 일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과 한국의 기본을 만드는 새로운 국제약속이라는 것은 있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질서의 안정이나 국제관계의 안정 등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은 알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역시 새로운 것이 있어도 좋을지도 모른겠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때에 어느 쪽이 옳다, 혹은 이 입장이 바르다라든가 틀렸다라는 논의를 시작하는 순간 결렬, 아웃이 된다는 것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런 식으로 정치나 외교에 옳바름이라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혹은 원래 요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 각각이 우선 납득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가능함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션 2 사회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분.

일본측 참가자: 감사합니다. 저는 주로 중국을 보아 왔기 때문에 이 회의에서는 매번 신선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 발언은 매우 촌촌한 이야기인데, 먼저 한국측 발표자가 말씀하셨던 아베 총리가 비행기 앞에서 사진촬영을 했는데 기체번호가 731 이었다라는 건에 대한 보충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건은 저도 실은 신경이 쓰였고, 왜 그런 일을 했을까라고 여러 관계자에게 물어 보았는데, 실은 그것은 정식으로 35731 이라는 긴 번호인 것이 우연히 클로즈업했을 때에 731 만 보이게 된 일인 듯 합니다. 즉, 설마 실린 사진이 731 일 것이라고는 누구도 전혀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아베 총리도 포함해서 전혀 그런 의식도 없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우연이 빚어낸 일이었고, 실상은 그랬던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것이 진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731 이라고 적힌 비행기에서 포즈를 취해도 아베 수상에게는 일본의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득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국분들은 어쨌든 아베니까, 우익이니까 그런 짓을 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오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전부터 논의를 듣고 있어도 한국측의 발언에는 ‘일본의 이러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보다

‘아베의 이러한 부분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많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특별히 아베 총리가 혼자서 일본의 외교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또 그것은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아베 총리만 그만두면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측 발언자 중 많은 분들의 비판의 대상이 아베 총리라는 개인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좀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본론이 되겠는데, 제가 오전 중의 처음에 있었던 한국측 보고 중에 매우 흥미를 가진 것이 일한관계를 3 가지 단계, 냉전기, 탈냉전기, 그리고 미중 2 강체제, 즉 G2 로의 이행단계라는 식으로 나뉘고 있었던 것인데 발표 이외에도 한국측 분의 발언에서 G2 라는 체제가 이미 선행되고 있다고 할까, 현재도 G2 라는 전제로 말씀하시고 있는 그러한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이 G2 라고 하는 것은 중국측에서는 이른바 신형대국관계라는 표현으로 불리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작년 6 월에 제기되었고 얼마 전에 끝난 APEC 에서 이미 한 번 제기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시진핑 주석이 일곱 번 신형대국관계라고 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한 번만 「New type of relation」이라고 했을 뿐입니다. 또, 시진핑 주석이 이 말에 담은 것은 명확하게 군사나 안전보장까지 포함한 「새로운 미중관계」라는 뜻이었겠지만, 회의에서는 국제적 기후변동에 대한 교섭은 했었지만, 본질적인 군사부분에 관한 합의는 없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G2 라는 말이 정착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G2 시대」라는 말 대신 일본에서는 이것도 모두가 납득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신냉전」이나 「냉전과 같은」이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아시아의 질서에 대해 냉전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인데, 중국은 이것에 대응할 표현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며 시진핑 주석의 표현으로 하자면 「뉴노멀」이 이것에 해당합니다. 2008 년의 리먼쇼크 이후의 경제, 그리고 정치에 있어서 중국이 대두한 상태, 이것이 뉴노멀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표현의 문제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들의 무엇이 문제냐 하면, 거기에는 G2 내지 뉴노멀한 것이니까 중국이 마땅히 권리를 가지고 있다, 영토의 선긋기도 재검토해야 마땅한 것이다라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표현의 이행인 것입니다. 이것에 따르게 되면, 태평양 서쪽의 절반은 대국인 중국이 취하게 되고, 동남아시아 등도 아시아인의 아시아여야 한다, 즉 아시아로부터 미군은 나가라고 하게 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중국의 「신안전보장관」 중에 뚜렷하게 나옵니다. 조선반도에 대해 말하자면, 조선반도로부터 주한미군은 나가라고 하게 되고, 또 미군이 나가도록 한국과의 사이의 외교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진핑 정권이 되고 나서 확실해진 태도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실은 시진핑 정권 전이었던 2008 년의 단계, 즉 베이징올림픽 때였는데 베이징올림픽이 끝난 날 푸틴 수상이 베이징에 오고 금방 그루지야로 날아가서 남오세티아를 진격해 갑니다. 그리고 메드세데프 대통령이 특수권익권, 즉 특별한 권리를 가지는 지역이 있다는 발상을 발언하고 우크라이나, 구소련영이었던 지역의 주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불과 얼마 전 군사적인 병합소동이 일어났던 것이 유럽에서의 러시아와 유럽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도 그와 같은 생각을 시진핑 주석이 시작하게 되고 동중국해, 남중국해, 그리고 인도양까지 자신들의 특수한 권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태평양에 대해서는 서태평양 전체에서 미군을 배제하지 않으면 혹시 거기에서 미사일을 쏘고 그렇게 되면 큰일이라는 방어적인 발상이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권을 깔았다라는 것은 동중국해를 말하자면 성역화하여 거기에 미군의 활동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동중국해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고, 한국과 중국이 분쟁하고 있는 이어도, 그 이어도와 마라도라는 2 개의 섬 사이에 20킬로미터 정도의 수로가 있고, 거기가 청다오를 향하는, 혹은 서울, 인천을 향하는 항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방공식별권에 넣어서 완전히 재압하려고 해 왔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황해를 배타적 영해로 하고 싶다는 의사표시이며, 거기에다 그 앞에 있는 제 1 열도선 안을 성역화한다는 포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국이 대국으로 행동—「대국」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받아들이면 중국의 행동이 매우 잘 파악됩니다—하게 된 것이 현재 상황인데,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면 G2 의 시대라는 것은 좋은 시대인가, 나쁜 시대인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현실문제로서 중국이 대국으로 부상하여 G2 에 가까운 상태로 될 것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G2 에 있어서 전개되는 이론이라는 것이 19 세기형의 「강한 자가 차지한다」라는 이론으로 「모두가 사용한다」라는 이론이 아닌 것 같다는 점입니다. 즉, 지금의 세계라는 것은 조금 전의 일한관계에 대해 이야기된 바와 같이 정치나 경제의 글로벌화가 일어나는 시대라서 항토의 영해선을 긋거나, 거기에 구애받는 일은 있어도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대립점을 표면화시키지 않음에 따라 쌍방의 win-win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진핑정권에 된 후 갑자기—실은 그 전의 장쩌민 정권부터이지만—선을 긋는 것과 역사의 정당성을 관련시켜서 선국기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 일어나느냐하면 분쟁입니다. 이 지역에 아시아의 나라는 큰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나라도 많이 주변에 있으므로, 그 작은 나라와 큰 나라 사이의 지역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G2의 세상이 되면 될수록 분쟁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실은 헌팅턴이라는 분이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에 이미 오래 전에 쓴 내용입니다. 2010년의 시뮬레이션으로 우크라이나가 분열된다고 쓰여져 있는데 그 외에도 2010년에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진출에 대해 베트남이 대항하고, 미군이 사이에 들어가 분쟁처리를 도모하지만 결국 미국도 말려들게 되고, 미중전쟁이 시작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일본은 어떠한 대응을 하느냐. 이것은 헌팅턴의 예측인데 일미동맹을 버리고 중국에 붙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쪽이 강하니까라고 되어 있는데, 즉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면 일본이나 혹은 한국이나 미중전쟁이 시작됐을 때에 어느 쪽에 붙는 것이 득이냐는 판단을 강요당하면 아마 모두 중국에 붙을 것이라는 발상이 있는 것으로 헌팅턴의 책은 그것이 짙게 투영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의 지금 단계에서 일본의 여론은 일미동맹을 강화하자고 하는 쪽이 여론에 있어서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미동맹을 강화하지 않으면 G2형의 국제질서가 아시아에 부활되고, 그에 따라 일본만이 아니라 조선반도도 그렇고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모든 지금까지 봉인되었던 영토분쟁에 불이 붙어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한 번 더 글로벌리즘의 경제를 지탱하는 정치체제를 만들도록 미중 양국이 논의해 줄 것을 우리들로서는 기대하고 있지만, 그때에 중국이 이것은 의도적이라고 생각되는데 한국을 카드로 쓰고 있는 점이 신경이 쓰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려는 것은 요전번의 종군위안부문제라는 것은 원래는 한국측에서 제기한 일한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진핑 정권이 되고 나서는 명백히 중국이 한국의 종군위안부문제에 관한 외교를 지원하는 형태로 「중국의 종군위안부문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역시 중국의 국제전략이라는 것이 있으며, 조선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퇴시키는 것이라는 것이 큰 전략목표로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션 2 사회자:감사합니다. G2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조금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꽤 여러 나라에서 개최된 회의에 출석하거나, 직업상 여러 논문 등을 읽는데 기묘하게도 G2라는 말을 쓰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제가 아는 한 한국 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G2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사자인 중국에서도 G2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인들의 각 논문을 보면 G2의 시대에 있어서 무엇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G2의 내용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측 참가자: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측, 그리고 일본측 발표자에 대해 각각 코멘트, 그리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측 발표에 대해서인데,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 마지막에는 「일본의 길」은 과연 「아베의 길」인가와 같은 문제제기도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테마는 최종적으로는 미국이 보는 한일관계라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미국이 보고 있는 역사문제에 관해서 한국에 대해 미국이 동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인 중에서 순서는 다르지만 힐러리 클린턴, 리처드 아미티지, 래리 닉쉬, 레인 에번스, 민디 카트라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미국이 역사문제에 대해 동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고, 또 카트라 씨의 New York Times 칼럼을 인용하여—저도 읽었는데—일본이 이처럼 역사수정주의의 길을 간다고 미일동맹도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 섞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것들이 미국의 모든 시점을 대표하느냐라고 하면, 그렇게 해 버리면 오해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미국을 단순화하는 것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미국에는 조금 다른 시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비로소 미국을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고, 미국의 반응, 대응에 당혹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주당 사람들, 그리고 미국 진보파의 사고방식, 또 역사를 중시하는 사람들. 특히 아시아 태평양의 전략을 짜는 데에 있어서 미국은 일본보다도 중국을 보다 중심적인 파트너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이라는 것이 되겠지만—대체로 역사문제, 그리고 일본의 여러 행동에 대해 불만을 표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인 중에서 공화당 계열의 사람들, 보수적이 사람들, 안보를 중시하는 사람들, 혹은 미일관계의 지금까지의 오랜

동맹관계에 대해 매우 만족해 온 사람들. 그리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전략을 중국보다는 일본을 파트너로 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물론 역사수정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한국이 한일관계를 냉각시키는 것에는 반대하고 이것은 한국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동시에 직시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발표자 선생님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미국인과 회의를 하면 자주 실감하는데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에 동정적이고 일본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분위기, 또 역사수정주의는 좋지 않다는 위치는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안보문제에 바로 연결시키는 것에는 반대다라는 견해가 그것 이상으로 널리 퍼져 있는 듯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려 두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관점의 이야기도 소개해주셨으면 미국의 시각이라는 것을 보다 균형 있게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측 발표에 대해서인데, 처음에 발표 중에 세계지도를 보여 주면서 미국을 위협으로 생각할 것이냐, 중국을 위협으로 생각할 것이냐, 여론조사의 결과를 나타내는 순서로 이야기를 진행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새삼스러운 미국과 중국의 2 분법이라고나 할까, 2 항대립적인 인상을 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코멘트를 하고 싶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갈등적인 것이라고 볼지, 혹은 협조적인 관계로 볼지. 이 점에서 한국과 일본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표에도 적혀 있었지만, 일본은 중국을 위협으로 느낀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21 세기에 들어서 보다 위협으로 느끼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러한 일본의 입장도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문제라든가 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발표를 듣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그러한 중국에 대한 위협을 미국과 일본이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한국은 중국을 위협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중국으로 기울어져 있다, 한국은 미일동맹의 방향성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위태롭다라는 이론으로까지 비약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느꼈습니다. 물론 발표자께서 그렇게 확실히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저는 항상 일본의 많은 논조가 그렇게 흐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을 나타내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미국이 진작로 중국을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냐에 대해서는—이곳에 계신 여러분 자신이 전문가이므로 여러 의견이 있으시리라 생각하지만—다른 시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냉전시대의 미국과 소련의 관계처럼 미국이 현재의 중국과의 관계를 전개해 갈 것이냐고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전보장의 면에서 착목하여 밸런스 오브 파워, 세력균형의 관점에서 그러한 견해를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중관계는 매우 긴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이 중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중국도 미국의 경제질서 중에서 부를 이루고,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어 그와 같은 결과의 하나로서 중국의 외화보유액은 3 조 달러 정도 있으며, 미국의 국채도 8000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 사이의, 특히 경제관계는 상호의존 정도가 상당히 깊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상호의존도 깊은 양국관계를 갈등적인 관계로 볼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중 간의 지도자 차원의 대화는 매우 대대적이라서 시진핑이 미국에서 며칠 동안 체재하고 대통령을 포함한 지도자층과 깊이 토의를 하는 모습 등을 보면, 일본에서 보고 있는 정도로 미중관계는 대립적이지 않으며,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인식과 일본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공유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 일본측 발표자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션 2 사회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그쪽 분을 부탁드립니다.

일본측 참가자: 감사합니다. 1년만에 존경하는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전 중의 세션도 포함해서 개인적으로 감상에 가까운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 위에서 몇 가지 제언을 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먼저, 일한 양쪽 발언자의 발언을 듣고 있으면 인식이 매우 다르고,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그럴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느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1965년 체제에 대해 일본측은 1965년 체제는 타협의 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오전 중의 발표에서는 성공담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위안부문제나 징용공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문제이므로, 이제 옛날 일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갑시다라는 것이 일본정부의 입장이 되겠지요. 한편으로 한국측은 1965년 체제는 타협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결함이 있다, 재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극단적인 논의로는 백지화해서 재교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65년 체제가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같습니다.

또, 중국이 대두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위협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이것도 얼핏 보면 인식의 차가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중국이 초대국으로 대두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완전히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동전의 양면을 어느 쪽에서 보느냐, “Half full, half empty” 라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컵 안에 물이 반이나 들어 있다고 생각하느냐, 절반이나 비어 있다고 생각하느냐. 표현은 다르지만, 컵 안에 물이 절반 들어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남은 절반을 어떻게 채워 가느냐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절반을 향후 50년 동안 소주로 채울 것이냐, 맥주로 채울 것이냐, 위스키로 채울 것이냐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번 세션이 그러한 것을 고민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제언입니다.

다음으로 조금 전에 한국측 발표자의 발언을 인상 깊게 들었는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야스쿠니 참배의 문맥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발표자 선생님이 저는 한국인이어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발상을 앞으로 바꾸어 갈 수 없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주 지정학에서 지도 위와 아래를 뒤집으면 다른 풍경이 보인다, 새로운 발견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제가 일본의 저널리스트라면, 혹은 한국의 저널리스트라면, 프랑스의 저널리스트라면이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인식이나 다른 풍경이 보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오전 중에 한국측 선생님께서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국가라는 속박에서 벗어나면 어떨까라고 발언하셨는데 저도 그것에 완전히 동감이며, 저는 일본의 저널리스트이니깐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 버리면 거기에서 관계는 그 이상 깊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지도를 뒤집고, 국적을 버리고, 나머지 절반을 어떻게 채울까를 생각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션 2 사회자:이어서 발언해 주십시오.

일본측 참가자: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 전에 한 가지. 조금 전에 일본측 분으로부터 약간 사실관계점에서 보충이 있었는데, 저도 그것에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한국측 발표에 있었던 「다보스회의에서의 아베 발언」에 관해서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 다보스회의 전에 Financial Times의 기드온 래치먼이라는 칼럼니스트가 지금의 일중관계는 마치 1914년의 영독관계와 같다는 기사를 썼고, 다보스회의에서 그것을 거론한 아베 총리가 그러한 기사가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을 일부분만 잘라서 아베 총리가 지금의 일중관계는 1914년과 같은 상황이라고 발언했다고 Financial Times와 NY Times가 적었습니다. 그 NY Times에 관해서는 누가 썼느냐 등 여러 가지로 의심스러운 것이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사실관계입니다. 따라서, 아베 총리가 다보스에서 마치 지금의 일중관계는 1914년의 영독관계와 같다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로 조사했을 때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이번의 이 세션의 테마인 아시아의 안전보장환경의 현재 상황에 관해서인데 특히 안보,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국측의 안전보장이냐 외교를 주시하고 있는 분이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신문에서 어느 정도 지금 남중국해의 정세가 기사로 되고 있는지. 일본에서도 동중국해의 센카쿠의 정세와 비교하면 남중국해에 관한 보도는 그다지 많지 않은데, 제가 보고 있는 바로는 실은 동중국해보다도 남중국해 쪽이 매우 어렵고 또한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행인지 불행인지 동중국해에는 일본의 해상보안청이 버티고 있고, 그 뒤에는 해상자위대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한 해상자위대가 휘말리지 않는 상황을 해상보안청이 노력해서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른바 그레이존이라고 불리는 것과 같은 상황은 생기고 있는데, 남중국해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고,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 군도에 있는 Johnson reef south 라는 곳에서 중국은 활주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스트크로스, 세컨드크로스 같은 곳에 여러 가지 증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퍼스트 토마스 크로스, 세컨드 토마스 크로스도

지금은 여러 가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진행되고 여기에 2500 미터급의 활주로와 레이더가 설치되면 남중국해의 컨트롤은 중국이 완전히 가지게 됩니다. 거기에 격납고가 생기고 중국의 공군이 상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중국해 전체를 커버하는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방공식별구역)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중국도 그것이 노리는 바이겠지요. 하지만 그중에 한 가지 문제인 것은 중국의 ADIZ 의 인식은 마치 영공, 영해의 컨트롤이라서 거기를 통과하는 배, 비행기는 전부 중국측에 통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ADIZ 라고 하는 것은 정체불명의 것이 수도나 기지를 향하고 있을 경우에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의 중국의 운용방침은 거기를 통과하는 것 전부에 대해 통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중국해의 항공의 자유, 항해의 자유가 어디까지 안정적인 것이 되느냐. 하물며 이것은 일본 쪽에서 보면 매우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출발하여 인도양이나 페르시아만 연안 등으로 가는 배는 전부 여기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말라카해협을 통해서 말이죠. 이것과 같은 상황이 한국선적에게도 적용될 것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시고 있는지. 신문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최근에 「바다의 실크로드」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중국이 발표하는 「바다의 실크로드」 이미지도나 지도를 봐 보면 매우 흥미로운 것이 여러 새로운 항구에 우호관계를 만드는 항구가 나와 있지만, 중국이 균향으로서 만들고 있는 파키스탄의 과다르항 등은 완전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그림을 보면 「바다의 실크로드」의 전략적 의도가 엿보이는데, 그렇지 않아도 중국이 지도에 명기하지 않은 과다르항이나 스리랑카의 항구, 미얀마의 일부 항구 등 그러한 부분이 중국의 해양전략에 짜여지게 되면 일본으로서는 마음이 편치 않아지는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인데 한국측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국의 해상교통로(SLOCs: Sea lines of communication)를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한국의 신문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꼭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션 2 사회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질문에 누가 답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측 참가자: 그러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일본의 신문과 비교하자면 한국의 신문은 그 게재 빈도나 상세함이라는 점에서 그 보도량의 정도는 낮은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중국의 적극적인 해양진출, 중국이라는 나라는 14 개의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대륙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해양에 진출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계심은 강합니다. 하물며 지적하신 대로 해당지역은 한국에 있어서 해상교통로, 원유나 무역의 통로이므로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즉 스프래틀리 군도에 인공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도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적극적인 해양진출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필요한 것인가, 혹은 패권을 추구한 것인가. 이것도 한국에 있어서 관심대상이며, 해양진출 뿐만 아니라 접근저지·지역억지(Anti-Access/Area Denial: A2AD)와 같은 해군의 전략에 대해서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저의 코멘트인데, 일본측 발표자가 언급한 미중에 대한 호감도, 특히 한국에서의 그것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미국의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와 중앙일보사가 공동으로 11 개의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전략 엘리트라고나 할까요, 각국의 지식인 150 명을 대상으로 이 지역의 현재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150 명의 회답자는—전략적 지도자라고 해야 할 분들인데—한미동맹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지역의 통합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10 년 후에도 미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남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한국은 61%가 그렇다고 답했는데, 11 개 나라의 평균은 48%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미국이 10 년 후에도 강대한 나라라고 답한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도 많았다는 것이 됩니다. 또, 미국의 피벗 투 아시아를 지지하지 않은 한국의 회답자는 8%뿐이었었고 10 년 후에 중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답한 것은 3%뿐이었습니다. 이것도 11 개 나라 전체로 보면 53%이므로, 이것에서도 한국의 전략적 엘리트, 지식층은 중국의 미래에 대해 매우 거리를 두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호감도 조사와는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회답이었습니다. 47%가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회답한 것입니다. 한국이 중국으로 치우쳐 있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지만, 이러한 조사결과가 있다는 것도 꼭 소개해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진핑 주석이 서울을 방문했지만, 한국의 보도 양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시진핑 주석의 방한시에는 중국에 대한 경계감이 많은 미디어, 많은 신문에서 나타났고, 그러한 칼럼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도 첨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1965 년의 국교정상화, 일본측 발표자의 표현을 따르자면 1965 년 체제에 관해서인데, 이것을 성공담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면적으로 동감합니다. 1965 년의 국교정상화는 결국 한일 양국 쌍방에 있어 이익이었고, 아시아에서의 냉전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다했습니다. 나아가 아시아의 번영, 평화에도 공헌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측에서 한국의 사법부가 외교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음에 따라 1965 년 체제에 균열이 생겼다는 지적을 했는데, 저는 1965 년 체제는 한국 안에서 강고하며, 그것이 재고되거나 뒤집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 무현 정권 때에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계기로 주한미군의 성격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큰 논의를 부른 사건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1953 년의 한미상호방위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 안보논쟁이나 친미·반미의 분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 명백하므로 그것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위체제에 손을 대고 재배치와 같은 기술적인 측면에만 집중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아도 1965 년 체제의 인식기반은 견고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저는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된다고도 생각지 않는데, 한일관계에 있어서 상호전략적인 가치를 새로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전략적인 가치로서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한일관계의 독자적인 가치는 없는 것일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한 까닭은 미국과의 동맹, 중국의 대두, 그러한 프리즘을 통해 양국이 상대방을 보고 있기만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파워, 힘이라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한일 양국 사이에서만 가능한 새로운 비전이 있을 수는 없을까라는 것이 저의 지금의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일본측의 발표 중에서 한일 공통의 가치관의 가능성이라는 것으로 환경분야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재생가능한 클린에너지 등도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하자면 한일 양국의 Green alliance 라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협력분야로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출산화, 고령화와 같은 문제도 한일 양국에 공통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처에 관해 한국으로서도 배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며, 협력의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생활에 가까운 협력이라고 할까, 그러한 접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일의대수(一衣帶水)의 1 일생활권이므로 한일 양국민이 생활 속에서 한일관계가 좋은 것이 자신들의 이익이 된다,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생활유도형의 외교를 많이 일으켜서 향후의 한일관계의 개선에 유용하게 사용하며, 개선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이벤트를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중의원선거가 열립니다. 그리고, 내년 6 월에는 국교정상화 50 주년이 됩니다. 시간적 여유가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50 주년을 앞두고 한일 양국이 이 현안문제를 파고들어서 높은 차원에서 조정하는 작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총선거를 거쳐 새로운 내각이 발족하기까지 작업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준비를 함에 있어서 정상회담이나 1998 년의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새로운 버전과 같은 상징적인 것이 실현되면 50 주년은 매우 수확이 많은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션 2 사회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그쪽 일본측 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일본측 참가자: 감사합니다. 약간 뒤늦은 바람에 많은 선생님들이 이미 논점을 다 말씀하신 감도 있지만, 지금 한국측 선생님이 말씀하신 상호전략적가치라는 문제, 혹은 일본측으로부터 제기된 중국의 행동의 문제도 언급하면서 코멘트를 하고자 합니다.

아침의 세션에서도 있었지만, 일본의 정치리더의 수정주의적인 발언이 안전보장의 이익을 지역적인 수준에서 손상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일정 정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 미국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인 전략적 함의를 주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일본인들은 수정주의적인 발언을 우선 지지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을 먼저 한국분들에게 인식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역사문제에 관해서인데, 위안부나 징용공 문제나 즉, 1945 년 8 월 15 일 이전의 역사가 많이 이야기되는데, 역시 일한관계, 일미, 그리고 일한·일미가 놓여진 지역적인 틀에서의

1945년 8월 15일 이후의 발걸음을 우리들이 제대로 다시 한 번 더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미안보의 역사를 일미의 공문서, 그야말로 몇 만 페이지나 되는 자료를 해독하는 작업을 하면서 논문이나 책을 쓰고 있는데, 일미안보의 역사를 보고 있으면 몇 가지 전환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60년의 일미안보개정입니다. 지금의 아베 총리의 조부가 한 일미안보 개정인데, 이 일미안보 개정 중에 조선밀약이라는 것이 체결된 경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즉 조선의 유사시에 미군이라는 것은 UN 군을 겸하고 있으므로 조선의 유사시에는 일본의 제약, 즉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미군을 일본에서 파병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한 조선밀약을 일본이 받아들였다는 경위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다음 전환점은 오키나와 반환을 결정한 1969년 11월의 일미 정상회담입니다. 이것도 한국의 방위가 매우 큰 테마였습니다. 이때의 일미공동성명의 제 4항에 나오는 것이 한국의 안전은 일본 자신의 안전에 있어 긴요하다고 지금의 아베 총리의 작은할아버지에 해당하는 사토 전 총리는 명언했었습니다. 즉, 조금 전에 일의대수(一衣帶水)라는 말이 있었는데, 실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장의 측면에서 일한 양국은 운명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일본의 정상이 선언하고 그것을 미국의 정상이 지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1969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1990년대로 조금 건너뛰는데 또 전환점이 있습니다. 조선반도에 핵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주변사태에 대한 대응의 대비를 일본으로서도 해 가겠다고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정치주도로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특히 60년대 이후를 보고 있으면 한국의 안전보장을 끊임없이 연결시키면서 일미의 동맹관계가 발전해 온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키나와의 기지문제가 논의되고 있고, 며칠 전에 오키나와현 지사의 선거에 실로 그 결과가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것을 토대로 하자면 이것은 기지부담의 경감을 둘러싼 문제만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국민이 조금 더 오키나와의 부담을 제대로 공유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 한편으로 실은 오키나와의 부담이나 미군기지의 부담은 한국의 방위를 위해서이기도 하며, 즉 그것을 위한 비용을 지불해 온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깊이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논의를 듣고 있으면서 느꼈습니다.

나머지는 짤막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전략적인 상호의 이익, 상호가치를 앞으로 어떻게 규정해 갈 것이냐라는 문제에 일한 양국이 드디어 압박해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긍정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인데 조금 자극적일지도 모르지만, 역사문제는 역사문제로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45년 8월 15일. 많은 생존자, 피해자가 앞으로 짧은 여생을 보냄에 있어서 존엄을 어떻게 회복하느냐라는 것은 일본으로서도 힘껏 해야 하고, 많은 일본국민은 지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작업은 그 작업으로 숙연하게 해야 하고, 외무성 쪽에서도 열심히 지혜를 짜내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 작업은 확실히 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놓여진 동아시아의 전략환경을 제대로 분석, 인식한 후에 일종의 역사문제와 안보문제의 전략적인 탈동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슬슬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겠는데, 그 탈동조화는 결코 역사문제를 업신여긴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숙연히 계속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온 중국의 행동을 생각하면 역사문제가 계속 안전보장의 아젠다를 손상시키고 약화시키는 상황이 이 이상 계속되어도 좋을지. 그와 같은 여유과 과연 일한 양국에 있느냐라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행동이 불안을 부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즉, 힘에 의한 현재상황의 변경이 아니라, 법치, 국제법을 제대로 존중하고, 그러면서도 전후 근대사의 보편적 가치관을 존중한 위에서 win-win 하는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비전에 역행하는 움직임이라는 것을 중국은 취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부분은 냉철하게 제대로 중국의 움직임을 분석, 인식한 후에 중국의 행동이 그러한 식으로 되지 않도록 규정해 가야 하고, 그러한 중요한 국면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확실히 인식한 후에 동아시아의 전략적 안정, 그리고 게임의 규칙과 같은 것을 제대로 논의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역시 일한 양국이 중심이 되어 가야 할 것이며, 일미한 세 나라가 중심이 되어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세션 2 사회자: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분 부탁드립니다.

한국측 참가자:감사합니다. 저도 과거의 회의부터 계속 출석하고 있는데, 연속해서 참가하면서

오히려 모순적이라고나 할까 아이러니컬한 감각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이 회의가 시작되었을 무렵에도 한일관계의 냉각이 지적되고 있었고, 양국 정부가 어떻게든 해 보려고 여러 가지 회의나 이벤트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동안에도 영토문제나 역사문제 등이 있었고, 결국 양국 정부의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고 한일관계 매우 악화되어 버렸고, 거기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데, 모처럼 이렇게 참가의 기회를 얻었으므로 미력으로나마 지혜를 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금 전의 발표에 관한 코멘트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일본측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한일 양국이 미국과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한 인식의 차이에 대해 흥미 깊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의문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주변 나라들, 중국, 러시아, 한국과도 영토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 또 그뿐만 아니라 중국과 한국, 어느 정도 러시아까지 포함할지도 모르겠는데 역사문제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정부가 앞으로 미일관계를 축으로 한다고 강조하고, 다른 한편에서 아시아 각국과의 국가 간 관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어떤지, 이것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의 미국 자료나 유력인의 발언 등을 보면, 아시아에서 미국이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은 미중관계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작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측 발표자는 「아베 리스크」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은 지금까지 정치가가 어떠한 발언을 하던지 풀뿌리 민주주의 차원에서의 교류가 이만큼 활발해진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한일관계에는 큰 영향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간 가볍게 보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와서 과연 것처럼 대범하게 생각하고 있어도 좋을까라는 고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점에 대해서는 일본측 참가자 선생님 분에게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또, 저는 주로 한국의 국내정치를 봐 오면서 선거분석 등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 아베 총리는 이른바 믿기 힘든 타입의 선거를 하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당에 있는 자민·공명 연합정권이 30 의석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운데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라는 선택지를 택했다는 뜻에서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아베 총리가 정권을 오래 쥐게 됐을 경우에 한일관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와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가, 또 정치가라고 하면 표를 얻기 위해 선거를 하는 것인데 일본의 경우 실제로 투표에 가는 사람들은 연령층이 높은 보수적인 타입이 많고, 따라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필할 필요가 있게 되고, 정책적 주장이 그들의 「취향」에 맞춘 것이 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그 실태와 그와 같은 일본의 정치현상이 한일관계에—라고 하기보다는 한일관계를 보는 일본국민의 사고에—미치는 영향 등을 일본 분으로부터 실태에 관해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측 발표자가 끝에 소개하셨던 것이 중군위안부의 해결책으로서 이 명박 대통령과 노다 총리의 큐슈 정상회담 때에 사사에 외무사무차관이 끼집어 낸 세 개 항목의 에피소드인데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하면 어떨까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당시에 그 뉴스를 접하고 현재의 정권이라면 혹은 실현될지도 모르겠다, 적어도 그러한 의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지금의 상황에서는 일본정부로서는 이것을 「재이용」한다, 즉 그대로 계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베 정권 아래에서 위안부문제를 이 세 가지 항목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까 의문으로 생각합니다.

세션 2 사회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코멘트, 질문 등이 나왔으므로, 일단 마감하고 보고자 두 분의 각각을 답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발표순과는 거꾸로 한국측 선생님부터 부탁드립니다.

한국측 발표자: 많은 코멘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조언도 받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다 폭넓은 시점에서 의견을 받는 등 많은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내일도 논의는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간단하게 답을 드렸으면 합니다.

먼저 일본측으로부터는 G2 에 관한 지적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론의 성격에 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8 년의 글로벌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이 뉴노멀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그 후에 G2 라는 용어가 등장했는데, 그것은 한국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실은 다른 나라에서는 G2 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저도 이 점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형대국관계론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미국 CFR(외교문제평의회)에서 오래 키신저 석좌위원의 지위에 있었던 월터 러셀 미드 씨가 국제회의차 방한했을 때에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는데,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론이라는 것은 즉, 미국은 동북아시아를 중국에게 맡겨 줬으면 한다, 중국의 주도성을 인정해 달라라는 것으로 이것은 1930 년대의 군국주의 일본의 위치에 매우 흡사한 것이어서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또 중국 쪽도 그러한 주장을 관철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은 아직 없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 신형대국관계론에는 경계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국측으로부터는 미국이라고 해도 다 한결같지는 않다, 공화당·민주당 등 종합적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가까운 생각을 하는 것은 민주당이고, 공화당은 미일동맹을 강화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제 경험에서 납득이 가는 것이고, 중군위안부 하원결의채택 때의 공화당 관계자의 반응은 너무 공격적으로 대대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발표에서 이야기한 레인 에번스 의원은 민주당 안에서도 진보적인 입장의 분이었지만 공화당원의 설득에 힘썼다고 합니다. 어쨌든 공화당계의 안보문제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커버해 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측으로부터는 아베 총리의 다보스포럼에서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받았는데, 저도가 관방장관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아베 총리는 전쟁을 전제로 하는 듯한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2002 년에 당시 케리 국무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하여 강석주 외무차관과 고위급회담을 했을 때의 경우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강석주 차관이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있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큰 뉴스가 되었고, 그 후에 북한이 발언을 부정하여 그 진상을 둘러싸고 큰 논의가 일어났는데, 결국은 이때 강석주가 우라늄 농축을 인정했다는 것이 지금의 일반적인 이해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다보스회의의 건에 대해서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이안 브레머 씨에게 아베 총리가 한 내용을 다시 확인한 바 아베 총리의 발언은 분명 다른 매체의 내용을 인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발언의 취지는 기존의 보도된 바와 같더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현장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신뢰하여 그와 같이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또, 남중국해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 비중에 관한 건은 분명 한국이 반드시 높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도 주시해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력을 배경으로 강압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군사력이 해상수송로를 유지할 만한 부담을 견딜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또 지금의 중국에 그러한 의지가 있다고도 생각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월터 러셀 미드 씨는 중국의 당국자에게 만약 G2 라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부담, 미군이 하고 있는 질서유지의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냐라고 물었지만 중국측의 대답은 실로 「능력도 의지도 없다」 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아시아의 해상에서 미국 주도의 질서라는 것은 21 세기 중반 정도까지는 지금의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일동맹의 역사에 관한 지적, 매우 참고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측 발표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3 분 안에 이야기하자면 말이 빨라져서 통역분이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짧게 답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미중관계의 행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어느 정도 중국에 진심으로 대항할 마음이 있느냐, 일미동맹만 하고 있고, 일미동맹을 강화하여 중국에 대응한다는 방식이 정말로 오래 지속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베 정권의 선거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전 단계의 이야기인데 미국, 오바마는 분명 아시아에 와서 미중관계는 아시아전략의 핵심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요. 이것은 저도 완전히 그렇다고 생각하고, 일본정부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요」 라는 것은 그것은 특별히 중국을 가장 우대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무언가를 하면 매우 영향이 미칩니다. GDP 로는 세계 No.2 이며 매우 많은 인구도 가지고 있어서, 총계든 나쁘게든 영향을 끼치므로 매우 중요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즉 「총계든 나쁘게든 핵심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서 미국은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에도 센카쿠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도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미국이 미중관계를 우선시하고 일본을 경시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지 않아도 미중관계는 긴장되어 간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의 엇갈림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일본에게 쓸데없는 일, 즉 섬의 문제로 필요 이상으로 도발하는 것은 그만두었으면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이 일본보다 중국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반대되는 해석이 되어 버리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리 경제적인 의존이 깊어졌다고 하더라도, 또 깊어질수록—저도 경제적인 의존은 점점 더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미중 양국의 대립은 전체적으로는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외교와 안보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일해 왔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여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경제적인 상호의존이라는 것은 은혜도 가지고 오지만, 중국이 이만큼 큰 경제강국이 되면 그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정부가 매우 걱정하는 실업문제가 중국기업의 부진이나 도산 때문에 악화되는 일도 있을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미국기업과 중국기업의 경쟁도 늘어날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경제력을 강화하여 지금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한국은 지지하지 않았지만—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을 만든다는가, 혹은 IMF에 대항할 BRICS 은행을 만드는 것과 같은 움직임입니다. 원래 중국은 경제력을 가지고 미국 주도의 경제질서에 도전하려고, 대항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므로 중국의 경제성장은 반드시 은혜만이 아니라는 것이 됩니다. 게다가 사이버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이 경제력을 가지게 되면 될수록 물론 미국의 경제적인 은혜, 이익도 늘겠지만, 그것과 동시에 마찰도 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대답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령 경제적인 마찰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미중 양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한 경우에는 아무리 경제면에서 서로 돈이 벌리는 관계에 있더라도 차감하면 역시 마이너스가 됩니다. 전략적인 대립을 경제적인 협력으로 메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기업으로 생각하자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업, A 기업과 B 기업이 매우 득이 되는 협력관계, 비즈니스관계에서 매우 원만했다고 합시다. 서로 비즈니스에서 의존하고, 양쪽 모두가 매우 득이 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B 기업이 매우 커져서 A 기업의 시장, 상권에까지 진출해서 자꾸 가게를 만들고, A 기업의 시장에 침범하면, 아무리 A 기업과 B 기업이 서로 돈벌이에서 의존하고 있는 관계라도, 그것으로 인해 대립이 해소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이 여러 분야에서 영향력을 뻗으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마 그것에 가깝다는 식으로 미국측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일한관계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인데, 미국은—이것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조사를 하면서 생각한 것인데—태평양전쟁에서 일본과 싸우면서 엄청난 전사자를 냈고, 거기에다 한국전쟁에서도 큰 희생을 지불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을—좋은 나쁜건—유지해 온 것입니다. 그것을 중국이 A2AD 나 아시아인프라은행 등을 가지고 침식해 온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이론이 아닌 국가의, 대국의 생존본능을 자극하는 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국 혹은 대국의 DNA 라고 하는 것이 될 것 같은데, 대국에는 항상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역시 경제적인 타산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한관계를 미국이 왜 이렇게나 걱정하느냐라는 것을 미국인들에게 물으며 모두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위안부문제나 야스쿠니 참배문제에는 미국도 반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으로 하자면 당연할 것입니다. 야스쿠니 신사에도 미국과 싸운 A 급 전범이 있으니깐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이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한국전쟁을 통해 미국이 유지한 38 도선 이후의 조선반도의 세력권이라고 할까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세력권이 역사문제로 인해 일한 양국이 대립하고 있으면 점점 중국에 침식되어 버리고 그 지정학적인 위협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본에게도 마이너스인데 일본은 왜 그것을 모르느냐라는 답이 되돌아 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한국에게는 어쩌면 다른 설명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일본인인 저에게는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먼저 첫 번째 답입니다.

선거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아베 총리가 지지 않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단행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원전도 재가동해야하고, TPP 의 합의는 그다지 득이 되지 않고, 내정적으로는 플러스마이너스제로입니다. 게다가 내년 전반에는 한국에서도 매우 인기가 없는 집단적 자위권의 법안을 성립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일본 국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해산총선거를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불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선거를 하면 의석은 줄지만 과반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시아에 있어, 한국에 있어서의 의미는 어떨까라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일본인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베 정권이 바람직하냐 어떠냐와는 또 별도로 약한 일본의 정권이 아시아에 있어 좋으나, 그렇지 않으면 강한 일본의 정권이 좋으냐라는 것에 다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베 정권이 계속되는 것은 역사문제에서 또 강경한 일을 아베 총리가 하지 않는 이상—하면은 또 다르겠지만—일본에 있어서나, 또 한국에 있어서나, 모두에게 있어서도 좋을

것입니다.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대책도 안정적인 장기정권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플러스나 마이너스냐라고 한다면 좋은 타이밍에서 해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약간 유보해 봐야 하겠지만, 그것이 아시아의 안정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션 2 사회자: 그러면 다시 코멘트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쪽 분부터 부탁드립니다.

한국측 참가자: 지금까지의 논의를 쭉 들어 오면서, 또 과거 회의의 기억도 다시 상기하고 있었는데, 역시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시각적인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특별히 한국측 참가자와 일본측 참가자 사이에서만 인식의 어긋남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참가자 안에서도 각각의 생각은 천지 차이로 다를 것이고, 또 일본측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비교적 스스로없이 일본은 이렇게 생각한다, 한국은 이렇게 생각한다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서 사회의 방향성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의미에서 한국은, 일본은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거기에 사는 구체적인 개인 개인 사이의 사고방식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들은 어디에 눈높이를 맞추어야 할지, 초점을 맞추어야 할 내부를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무정부주의자는 아니지만, 국가라는 조직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보다 많은 개인의 행복을 지키는 데에 있어서 좋을 것이라고, 그 이외에 대해서는 국가나 정부의 관여는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쪽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한일 양국 간의 집합적인 인식의 차라는 것이 오늘 몇 번이나 언급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본에서 이해하기 힘든 것의 하나가 중국에 대한 한국의 인식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전쟁에서 싸운 관계입니다. 한국전쟁(조선전쟁) 때에는 서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보다도 후의 시대로 그만큼 새로운 일이었는데 왜 중국에 대해서는 친근감을 가지면서 반일감정은 수그러들지 않는 것일까 의문을 가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오랜 세월을 걸쳐 축적된 문화적인 인자라고 해야 할 것이 원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아 한국과 중국이 그만큼 좋은 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닌데, 한 번 나쁜 관계를 경험한 후에는 한국은 중국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동화되어, 중국보다도 중국적인 사고양식을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규정해 온 역사적인 전통이 있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관계도 역사적으로 우호 일변도였던 것은 아닐 것이고, 역시 한국과는 놓인 상황이 달랐으므로 이 역사적인 영향은 고려해 볼 가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조금 전에 대국의 DNA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중국도 「대국의 DNA」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DNA 운운은 수사적 차원의 의미이지만, 어쨌든 어떤 나라, 정치적인 단위로로서의 국가가 일정한 지위에 오르면 그 힘을 외부로 확대하려고 하는 예는 간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일본은 오랫동안 그러한 DNA 를 가진 적이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메이지시대 이후, 대외팽창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 것인데, 이른바 「예외의 시대」를 경험한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임진왜란은 있었지만, 그것은 일본의 내전의 연장선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와 같은 일본의 역사에 있어서는 「예외의 시대」인 시기에 대해 매우 구애되고 집착하는 이유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음으로 지금까지의 논의에서는 현실정치라고 할까 국제관계론에서 말하는 현실주의적인 시점과 사고방식이 많이 소개되었고, 저로서는 조금 식상했습니다. 특히 안전보장, 세력균형, 지정학 등 모두 현재의 주류를 이루는 테마 뿐이었는데, 제가 좀 별나서 그런지 저는 그러한 것들은 신기루와 같은 인식의 체계가 아닐까라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중에 덧붙여서 설명을 할 수는 있더라도, 그 식견을 살려서 사전에 대응하거나, 전쟁을 막거나 한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전 중에 흥미로운 지적이 있었는데, 일본의 의도가 무엇이든 혹은 아베정권의 의도가 무엇이든, 현실적으로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과거의 영향력을 되돌리거나 혹은 그것을 목표로 돌진하려고 해도 그렇게 하기 위한 자원-인구, 천연자원 등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저도 그 략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상투적으로 얘기되는 것이 일본의 우경화·보수화·군사대국화에 대한 불안인데 저는 꽤 오래 전인 20년 이상 전부터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일본에 대해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에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 온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 핵무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책적 수단이 될 수는 없다. 핵전쟁의 최종적인 승패는 2차공격, 3차공격을 할 수 있는 배후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본은

핵전쟁에 애초부터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현실주의에 근거하여 생각한다는 것이라면 「현실적인 한계」의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눈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막연한 이야기이지만 대안과 비슷한 것을 말씀드리고 코멘트를 마무리 짓고 싶은데,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 헤게모니를 둘러싼 분쟁이 종종 이야기되고, 영토문제도 그 일환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헤게모니를 추구하는 것이 국가의 습성이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그 헤게모니가 무엇을 가르키느냐를 생각해 보도록 하면 어떨까요. 현재의 헤게모니 다툼의 결과로서 과거처럼 중심국가·중간국가·주변국가와 같은 순위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역할분담의 새로운 형태나 분업—단순히 경제적인 분업만이 아닌 정치적, 문화적 분업—의 새로운 체계에 향하는 과정으로 보고 그 목표점으로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한 것인가를 생각하도록 하면 보다 발전성이 있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션 2 사회자: 그러면 시간관계도 있으므로 코멘트는 지금 손을 들고 계신 두 분까지로 하겠습니다.

한국측 참가자: 집중된 논의가 이어져서 피곤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회의라고 하면 지루하고 따분한 것도 있지만, 이번 회의는 내용이 깊어서 피곤한 것이 아닐까요. 그것은 접어 두고, 이 세션의 테마에는 저도 계속 관심을 가져 왔기 때문에 손을 들었습니다.

오전 중에는 오늘날의 한일관계가 제 3의 시기에 향해야 하는 시기에 접어들어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고, 또 조금 전에는 발상 자체를 바꾸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저도 큰 틀이라고 할까 사고의 틀 안에서 발상을 바꾸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중세역사가 아미노 요시히코 씨—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가 쓰신 저서에 『「일본」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어로도 번역된 책인데 그 앞부분에 동북아시아의 지도를 거꾸로 한 것이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섬나라가 아니고 한국과 일본은 내해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책의 주장을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데에 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렇구나라고 감명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서 한일관계가 단기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접어 두고, 큰 「그림을 그려 보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크게 그린다면 동아시아를 포함시킨 200년 정도의 감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0년의 시간대를 생각해 본다면, 중심적인 사건, 전기가 된 것은 아편전쟁입니다. 아편전쟁으로 인해 중국은 사실상 서구열강의 반식민지화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중일 세 나라의 근대화의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근대화는 한마디로 하자면 좌절된 근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그 근대화 과정에서 반식민지화 되어 버렸고, 한국은 근대화 과정에서 식민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경우는 잘되었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의 일본사 연구가 중에 윌리엄 제랄드 비슬리라는 분이 있는데 그의 주장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있어서 동아시아의 제국주의적인 형태는 협조적인 제국주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 동아시아에 군대를 파견하거나 지배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열강이 힘을 합쳐 중국을 공격하고 중국을 경영한다는 것으로, 그러한 가운데 일본은 협력적 제국주의의 일원이 됨으로 해서 종속적으로 제국주의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슬리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협조적 제국주의의 종속적인 형태가 자발적인 것으로 바뀐 것이 러일전쟁 이후, 구체적으로는 제 1차 세계대전 이후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좌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즉, 세 나라 모두 근대화에 좌절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한중일 세 나라가 근대화의 과정 가운데 매우 좌절된 근대화를 경험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좌절된 근대화의 경험, 세 나라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경험이 역사적 트라우마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트라우마는 현재도 발현되고 있으며, 쉽게 이것을 돌파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길어져 버렸는데, 즉 눈앞의 한일관계, 동아시아의 지금 현재만을 보지 말고 조금 더 지향의 폭을 넓혀 보면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반세기가 지나면 2040년, 아편전쟁 발발로부터 200년을 맞이합니다. 그때의 국제질서,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일관계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세션 2 사회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일본측 참가자: 그러면 간단하게 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의원선거에 대해 한국측으로부터 질문이 있었던 것에 관련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일본측 발표자 선생님이 답하셨지만 저도 정치방면에서 계속 일해 왔던 터라서....

먼저 해산의 타이밍입니다. 이것에 대해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의식이 줄어도 선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이상 계속되면 꽤 난관에 봉착하겠다, 보다 손해가 커지겠다고 판단했을 때 내리는 결론인데 그것은 독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연립 상대인 공명당의 양해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산에 대해 「아베노믹스 해산」이 아니라 「아베를 위한 해산」이 아니냐고 야유하는 농담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내용이며, 특히 아베 총리가 스스로 이름을 지어서 「아베노믹스 해산」이라고 한 것은 실로 선거의 쟁점을 싱글 이슈로 규정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가 선거전의 포인트가 되어 버렸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실은 이 타이밍에 한다면 내년은 전후 70 년이기도 하고 아베 총리의 총체 및 전체를 평가받을 수 있는 선거로 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이 유감스러운데, 하지만 흥미롭게도, 물론 아베 총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물어 본 바로는 이 선거를 했기 때문에 자신은 신임되었다는 상황, 앞으로 4 년은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상황을 만들어 두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손을 댄다, 즉 아베노믹스 이외에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아베노믹스가 실패하면 선거에 이겨도 아베 총리는 괴로운 입장에 몰리겠지만 한국에서도 이것은 신중하게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것을 보충해 두고 싶습니다.

또 하나 코멘트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나온 역사문제와 전략을 분리하는 시기에 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지적에 관해서입니다. 저도 바로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덧붙이고 싶은 것은 역사문제와 전략 각각에 기민하고 주의 깊은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략이라고 해도 한국과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다릅니다. 일본은 해양국가, 바다에 둘러싸인 국가이며, 한국은 대륙과 이어진 이른바 반도국가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일본측의 발표에 있었던 것처럼 입지조건이 처음부터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각이 전략을 생각할 때에 어긋남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로 그렇게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이미 주어진 조건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략론을 전개하고 같은 비전을 공유해 간다는 것, 그 자체가 큰 작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역사인식문제라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것」입니다. 역사문제 그 자체만 하더라도 역사학자가 치밀한 사실을 가지고 증명하고, 조사증언을 쌓아 가는 가운데 비로소 실제의 역사적 사실이 확정되는 것인데, 모호한 형태에서 조금 전에 나온 표현을 따르자면 half full, half empty 라는 동전의 양면처럼 언뜻 봤을 때는 비슷하지만 다른 견해가 상충하게 되면 이 작업도 꽤 지속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역사인식문제라는 이름 아래 역사문제가 전략론에 혼입되는 것은 상당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같은 지역의 같은 나라를 다루는 일이므로 이러한 「혼입」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 점은 충분히 주의해서 안전보장논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감상입니다.

세션 2 사회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논의는 마치겠으며 끝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자신은 오늘의 테마인 아시아의 국제관계를 공부해 오면서 하나의 결론을 얻었는데, 그것은 아시아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 이외의 나라의 움직임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관계의 역사에서 보면 꽤 이상한 일로 실제로 우리들도 마치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아시아의 장래를 정하는 것 같은 전제에서 있지만, 제가 보아 온 바에 따르면 아마 그 전제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에는 실은 미국, 중국 이외에도 유력한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유력한 나라들이 향후에 어떠한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진행시켜 가는나라는 것이 아시아의 장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점에서 일본과 한국 모두 유력한 국가입니다. 이 일본과 한국이 향후 우리가 발전시켜 온 자유롭고 열린 아시아, 혹은 자유롭고 열린 세계를 지지하느냐의 여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아시아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중관계에 끌려다니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본과 한국이 앞으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의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온 국제관계와는 다른 국제관계의 형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세션을 매듭 짓고자 합니다.

오늘은 세 시간에 걸쳐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발표자 두 분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이 다음 순서는 만찬회로 벅쇼 코로 대사님도 기조연설을 통해

합류해 주십니다. 내일을 위해 기운을 채우시고, 또 「연장전」이기도 하므로 논의도 심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석식회장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조연설:벧쇼 코로·주대한민국 일본국 특명전권대사

(한국국제교류재단 관계자):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최종행사인 만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에 걸쳐 「한-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만찬회에서는 특별게스트로서 벧쇼 코로 주한일본대사님을 모셨습니다. 벧쇼 대사님에게 기조연설을 부탁드립니다 그 후에 대사님도 참가하시면서 만찬회로 이동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박수로 벧쇼 대사님을 맞이해 주십시오.

벧쇼 코로(주대한민국 일본국 특명전권대사):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회의를 방청하지는 못했지만, 일한관계를 어떻게 잘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점에서 매우 뜨거운 논의가 전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또, 내일도 하루 종일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일한국교정상화 50 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해가 될 내년을 밝은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분을 통해 나오고, 결실이 많은 회의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회의의 뒤이기도 하므로 가급적 짧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대사로 한국에 부임하고 2년 정도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부임하기 위해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먼저 일한 양국의 미디어 관계자 분들에게 취재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린 것을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한관계라는 것은 일본에 있어서도, 한국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 또 그것 뿐만 아니라 지역전체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본과 한국 사이에 신뢰관계를 되돌리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상호이해가 필요하고, 저 자신도 한국의 여러 곳에 가 보기도 하고 여러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며 여러 곳에서 이 생각을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번에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라고 하는 것은 많아야 기껏해야 수백 명이고,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진심으로 이해받기 위해서는 비교적 소수의 분들, 제가 청중의 표정과 반응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곳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2년 동안 여러 사람들과 만났고, 그중에는 매우 높은 지위에 있는 분도 계셨지만,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의미에서는 그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그러한 만큼—일한관계를 좋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항상 생각하시는 분, 또 자가 나뉘므로 노력하고 계시는 분이 일한 양국에 매우 많다는 것을 그동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일한교류축제」라는 행사를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서울과 도쿄에서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일본과 한국의 문화교류, 혹은 퓨전이라는 것이 테마로 정해져서, 행사일의 마지막에는 일본인과 한국인 관객이 함께 춤을 추는 감동적인 피날레도 있습니다. 관객이 하루에 5만 명에 달한다는 것도 기쁘기 그지없지만, 무엇보다도 감격한 것은 대회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더니 천 명 이상의 한국의 젊은이들이 나서 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젊은이들에 대해 저는 큰 가능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창설하신 JENESYS 라는 청소년 교류제도를 이용하면서 고등학생 교류를 하고 있는 민간단체도 있는데, 이 고등학생 교류를 경험한 많은 학생들이 대학생이 되어서도 교류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해서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학생들 중 한 명인 여자대학생을 만나 보았는데, 그때에 들었던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른바 어른들이 말하는 것은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 일본인이나 한국인이나 그 점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교류에 참가한 한국인 친구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일본인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 자신들 나뉘므로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된다, 자신들 나뉘므로 결론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믿을 수 없는 어른」 중에는 저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매우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타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고 자신이 생각하는 이런 젊은이들이 있다는 사실에 매우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학 간의 교류에도 여러 가지 독특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큐슈대학과 부산대학에서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50 명씩 열흘 정도 서로의 캠퍼스에서 체재하는, 즉 일한 양국의 학생 100 명이 함께 생활하고, 수업도 받고, 사회체험도 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각 방면에서 여러 가지로 진력해 주고 계신데 보람 있게도 올해부터는 참가하는 대학이나 인원수를 늘려서 일한 양국에서 6 개 대학의 체제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올해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수업을 하나 담당했는데, 학생들은 기간이 끝나서 헤어질 때에는 울고 서로 껴안으며 이별을 아쉬워하는 혹은 재회를 기약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나라와 나라의 관계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방의 교류는 진전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한 시점에서는 151 건의 자매도시관계가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154 건이라고 하며 조금씩이기는 하지만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2 년 동안 저의 가슴을 뜨겁게 한 일의 내용으로서 몇 가지 일화를 말씀드렸는데, 유감스럽게도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서는 평범하게 생활하면서 일상적으로 듣는 뉴스는 나쁜 것 뿐이었습니다. 조금 전의 고등학생 교류에 대한 이야기에 등장한 여자대학생과는 달리 보통 국민들은 예를 들면 유명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이라든가, 신문, TV, 유명인의 블로그, 그와 같은 것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 쓰여진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어느 일본인 비즈니스맨이 최근 이야기한 말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와서, 보고, 해 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에 살면서, 일본에 있으면서 한국에 관해 듣고 있노라면 한국에 가서 관광을 한다든가 일을 하는 것이 두려울 것입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이 줄고 있는 것도 일부는 이러한 것이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일본인 비즈니스맨은 실제로 한국에 와 보면 일본인이 일이나 생활면에서 곤란을 겪는 일은 없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일본과 한국을 반대로 하더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이처럼 현실과 이미지의 격차를 메우는 것이 지금 양국 정부와 미디어에 깊어지어진 책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양국 간의 어려운 분위기를 좋은 방향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디어의 힘도 불가결합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한교류축제」 때에 한국외교부의 윤병세 장관이 현장을 방문하셔서 저와 나란히 웃으면서 답소하는 장면이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영상을 일본의 TV에서 본 모리 요시로 전 총리가 일본인으로서 안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2 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한 모든 노력을 더한 것보다도 미디어에 보도된 이 한순간이 보다 큰 임팩트를 주었다는 것, 즉 미디어의 위력을 나타내는 한 사례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한관계의 악화에 대해 미디어의 책임을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양국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미디어의 힘을 빌려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좋은 뉴스가 될 일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임일지도 모르겠지만, 미디어가 전해 주지 않으면 국민은 알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가끔 미디어의 기사에 불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국가에서 미디어는 언론의 자유 아래 정권을 감시하는 것이 주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미디어에 대해 반론할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미디어에 대해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미디어 관계자분들은 정부 관계자로부터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 듣는 것을 유쾌하게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굳이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일한 양국의 국민 사이에는 서로가 자신에게 있어 중요한 존재, 소중히 해야 할 존재라고 하는 의식이 너무나도 희박해져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귀찮다, 골치 아프니까 언급하지 말고 있자, 주위의 시선도 신경 쓰이니까 내가 행동하는 것은 그만두자라는 생각에 빠지기 쉬운 것은 아닐까요.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좋은 이야기」도 많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지적해 주시면서 서로 어떠한 공통이익이 있을까, 서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일반국민에 꼭 제기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의 국교정상화 50 주년을 위해 미디어가, 그리고 정부와 국민이 무엇을 하는 것이 요망되고 있는지에 관해 꼭 좋은 논의를 해 주시고 제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제 4 차 「한-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포함과 동시에 회의가 큰 성과를 거둘 것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션 3: 「양국 언론보도의 현상과 과제」

(한국국제교류재단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4 차 「한-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의 이틀째로 세션 3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션 사회자 선생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세션 3 사회자:안녕하십니까. 회의 이틀째의 시작이 되는 이 세션의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제 개회사에서 과거의 회의를 돌이켜 보면 왜인지 한국에서 개최할 때에는 「뜨거워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첫날의 논의는 매우 침착한 분위기 가운데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냉정한 논의와 논쟁을 피해서 지장이 없는 문안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이지만 오늘은 어제의 흐름을 이어서 냉정하면서도 뜨거운 논의를 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3 세션은 「양국 언론보도의 현상과 과제」라는 테마로 한일 양국이 발표하고 이어서 토론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한국측, 다음에 일본측이 하기로 하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발표 후에 휴식시간을 가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측 선생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산케이신문>의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보도를 둘러싼 한-일의 시각 차이」

한국측 발표자:안녕하십니까. 어제는 편안히 쉬셨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감기에 걸린 것 같아서 목소리가 크게 나오지 않는데 그 점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언론보도에 관한 발표의뢰를 받고 이 분야에서 일어난 큰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산케이신문을 중심으로 다루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때마침 오늘 서울지방법원에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첫 공판이 열린다고 하는데 본 세션에서 미디어의 존재방식에 대해 깊이 파고든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한국측 참가자의 모임이 약간 나쁜 것 같은데 차차 합류하실 것이니까 먼저 시작했으면 합니다. 배부해 드린 발표자료의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11 월 12 일에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했고 기자와의 일문일답을 가졌습니다. 중국의 정상이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일문일답에 응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미국측이 정상회담의 준비과정에서 계속 촉구해 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문일답에서 언론인으로서 주목해야 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New York Times 의 기자가 중국 지도층의 부패를 보도한 자사 특파원에 대해 중국정부가 취재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당초에는 회답을 피하려고 했지만 끝에 가서 「문제를 만든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답을 했습니다. 취재비자의 연장을 거부한 책임은 중국정부가 아니라 중국의 법을 무시한 신문사 쪽에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것에 대해 다음 날 New York Times 는 사설에서 New York Times 가 중국에 대한 비판의 논조를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표명했습니다. 그 요지는 이러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해외의 매스컴이 중국에 대해 비우호적, 논쟁적인 기사를 실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본지는 중국이건 미국이건, 또 어느 나라건 정부의 요구에 맞추어 기사를 쓸 마음은 없다. 기자들에게 정부가 바라는 기사를 쓰라고 요구하는 것은 권력자, 그리고 무언가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스스로를 세계의 지도국으로 생각하는 자신 있는 정부라면 진실의 취재와 성격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미중 양국 간에 일어나고 있는 언론 갈등의 사례를 소개한 것은 한국과 일본에서도 같은 문제가 실로 지금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양국 사이의 언론, 정부 사이에서 쟁점, 논의가 되고 있는 산케이신문의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일곱 시간」 보도를 둘러싼 문제입니다. 이 케이스는 조금 전의 미중 두 나라의 사례처럼 언론의 자유란 과연 무엇인가, 언론의 자유는 다른 나라의 제도, 문화, 감정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누릴 수 있는가, 보도를 둘러싼 의견대립이나 갈등을 바르게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와 같은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한일 양국 간에 논의되고 있는 산케이 보도가 나오기까지의 경과와 배경, 논점을 확인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과입니다. 문제가 된 것은 산케이신문의 카토 타츠야 서울지국장이 쓴 기사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나고 있었나?」로 8 월 3 일의 산케이신문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그 기사가 나오기 전 시점에서 조선훈보의 최보식 전임기자가 이미 7 월 18 일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이라는 칼럼에서 같은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카토 지국장은 최 기자의 칼럼과 증권가 찌라시를 토대로 자신의 해석을 더해 기사를 썼고, 이것에 대해 청와대와 한국 외교부가 비판적으로 반응했고,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가 기사를 쓴 카토 지국장을 고발하였으며, 검찰이 출국금지조치와 함께 조사에 착수하여 이번의 기소로 이어졌다는 것이 이 사건의 전말입니다. 시간순으로 이야기하자면 7 월 18 일자 조선일보에 최 기자의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이 실리고, 8 월 3 일에 카토 지국장의 칼럼이 산케이 온라인판에 게재되었습니다. 그날 중에 청와대의 관계자가 불쾌감을 표시하고 민·형사상의 대응을 한다는 방침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8 월 6 일부터 7 일, 독도를 사랑하는 모임 등 일부 보수단체가 카토 지국장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이 8 월 11 일 카토 지국장을 출국금지시키고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10 월 4 일, 검찰은 카토 지국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고 이것에 대해 산케이신문사는 사장 명의의 항의성명을 발표합니다. 미국 국무성의 쟈 사키 보도관도 이 조사를 초기부터 주시해 왔다, 미국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지지하고 있으며, 매년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관련법에 관한 불안을 나타내 왔다고 한국의 언론사정에 대해 이례적인 언급을 하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일본정부도 10 월 9 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한국정부에 대해 민주주의국가에서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할 언론의 자유에 대한 법의 집행은 최대한 억제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10 월 10 일 산케이신문은 김진태 검찰청 장관과 김남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취지의 항의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사히신문을 비롯한 일본의 신문도 사실과 보도를 통해 한국의 정권을 일제히 비판하였습니다. 이외에 국경없는 기자회, 서울외신기자클럽, New York Times, Wall street Journal, the Guardian, AP 와 같은 주요 미디어도 기소 뉴스를 크게 보도하였고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 논조는 대부분 비판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후 10 월 31 일, 검찰은 정윤희 씨, 즉 카토 지국장이 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밀회상대로 암시한 인물인데, 그 정윤희 씨가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대통령이 아닌 다른 인물과 만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사의 사실관계가 틀리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까지의 사건 경위는 대략 이상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도내용을 둘러싼 논점에 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저는 산케이신문의 보도를 둘러싼 논점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보도가 저널리즘의 원칙이라고 할까, 저널리즘의 품질에 어울리는 보도일까 아닐까. 이것은 순수하게 저널리즘의 관점에서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보도에 대해 사법의 칼날을 대는 것이 타당한가 라는 것입니다.

먼저 저널리즘의 문제, 첫 번째 논점에 관해서인데 산케이신문의 보도와 이미 나온 조선일보 기사와의 사이에 질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보도의 결점은 없는가와 같은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영역에 있어서는 검찰의 기소가 언론탄압이나 아니냐가 쟁점이 되므로 산케이신문의 보도와 조선일보의 보도에 차이가 있는나 없느냐가 기소의 공평성면에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점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 이 점에 대해서는 공평성과 외국특파원에 대한 치우친 탄압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세계의 매스컴 단체가 산케이신문의 기사는 조선일보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한데 산케이신문의 지국장만을 기소하는 것은 산케이신문이 한국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쓴 것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경없는 기자회는 9 월 8 일의 성명에서 산케이신문의 기사는 조선일보의 기사를 근거로 하고 있지만 조선일보는 고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측 논자의 주장은 이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산케이신문의 기사는 조선일보 이외에도 증권가 소식통의 이야기나 찌라시를 인용하고 있으며, 조선일보의 기사가 쓰지 않은 「남성의 관계」라는 표현이 들어 있다. 이것의 차이는 크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케이오대학의 이홍천 전임강사가 11 월 5 일의 한국기자협회보에 기고한 「산케이신문과 일본 미디어의 오해」라는 칼럼을 보면 이 강사가 출전을 숨기고 2 개의 기사를 나란히 학생들이—이 경우에는 일본인 학생들인데—에게 읽히고 비교시킨 바 학생 52 명 중 74%가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답했고 같은 취지라고 답한 것은 21%였다는 것입니다. 또, 74%의 학생은 조선일보의 기사에 대해서는 난무하는 소문을 제재로 삼아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를 비난한 것이라고 분석한 한편, 산케이신문에 대해서는 스캔들 쪽에 초점을 모으고 있고 풍문이 생긴 경위에 대한 글이 없다는 차이를 지적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문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점인데 산케이신문이 독신여성인 한국대통령의 약점이라 할 수 있는 남성과의 관계와 같은 매우 민감한 단어를 사용한 것은 분명히 악의라는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사의 완성도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케이신문의 카토 지국장은 기소 후인 10 월 18 일, 한겨레와 장문의 서면 인터뷰에서 자신의 기사는 뉴스가 아니라 칼럼이라고 강조하면서

날림 취재와 같은 비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풍문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을 취재부족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본문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칼럼은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에 관해, 풍문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한국의 일종의 사회현상으로 해석하여 진위가 불명확한 소문을 전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저도 그 인터뷰를 읽었는데 카토 지국장의 주장을 정리하자면 이 기사는 칼럼이니까 뉴스와는 성격이 다르다, 뉴스처럼 사실확인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한국의 기자나 연구자들은 기사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쿄특파원으로 근무했던 조선일보의 박 정훈 부국장은 10월 3일자에 「그래도 산케이신문의 지국장을 처벌해서는 안되는 이유」라는 칼럼을 통해 완성도에 관해 두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먼저 문제의 기사가 일본에서 최근 B급의-A급이 아닌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겠지요-언론이 한국을 비방하는 기사를 양산하는 가운데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의 박근혜 대통령의 행방을 교묘하게 스캔들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 또 하나는 그 후의 수사에서 밝혀졌듯이 기사의 내용과 사실이 엇갈린다는 것. 한국에서의 견해도 대체로 이 점에 집약되고 있고, 많은 한국의 필자들은 카토 지국장이 이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지적에 관해서는 일본측 언론인 중에서도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사히신문의 주필이었던 와카미야 요시부미 씨는 10월 23일자의 동아일보 칼럼 「명예훼손 기소에 의해 훼손될 명예」 중에는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주고 싸우기에 그 기사는 너무나도 허술했지만 한국정부의 기소에 따라 묘한 전개가 되어 버렸다는 일본기자들의 소리가 들려온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즉, 기사의 완성도에 대해서는 산케이와 비(非) 산케이의 대립축으로 논의가 전개되는 구도가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논점, 이 기사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기소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것에 대해 한국에서는 극단적인 대통령 지지세력을 제외하고는 무리한 법 집행이라는 공통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의 시선은 더 신랄해서 조금 전에 예를 든 국경없는 기자회, 서울외신기자클럽, Wall Street Journal, 아사히신문이 제기하고 있듯이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에 대한 침해와 탄압이라는 견해이고, 한국의 언론에서도 성격이나 성향과는 관계없이 산케이신문의 기사의 품질에는 문제가 있었고 명예훼손의 여지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도에 대한 형사처벌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자세가 일반적입니다. 한겨레의 8월 21일자 사설은 산케이신문의 보도나 검찰의 수사나 나라 망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 동아일보의 특파원이었던 심 규선 씨는 10월 13일자 칼럼에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기소는 패착(敗着)이다」라고 호소했으며, 조금 전에 소개한 조선일보의 박 정훈 부국장의 칼럼도 결론 부분에서 형사처벌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측이 산케이신문이나 일본에 대해 분노하고,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 기소를 계기로 일본측이 한국을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로 뭉뚱그리려고 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원수에 대한 일본의 이중적인 태도」(조선일보 10월 13일자 칼럼), 「언론의 자유로 감싼 카토의 꾀변」(중앙일보 10월 11일자 도쿄발 기사) 등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도 천황 등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를 충분히 행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 산케이신문의 기소 하나를 가지고 한국이 마치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내지는 충분히 행사할 수 없는 나라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정서를 반영한 의견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저 나름의 결론과 과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보아 온 바와 같이 산케이신문의 「공백의 일곱 시간」 보도와 이것에 대해 검찰이 명예훼손 용의로 기소한 것은 한일관계가 냉각되어 있는 상황과 맞닿아서 한일관계를 미디어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악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이 한일 양국의 언론계의 발전, 그리고 한일관계의 전반적인 관계 개선에 악영향만 초래했느냐 하면 저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교훈을 얻느냐에 따라 보다 좋은 관계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반면교사가 되겠지요. 구체적으로는 생각해야 할 포인트, 얻어야 할 교훈으로서 저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이번 사건은 양국의 보도기관이 상대국의 예민한, 섬세한 사안을 다룰 때에는 자국 내의 사안보다 더 신중하고 숙고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점. 두 번째는 이번 사건이 보도에 다소 결함이 있더라도 그것은 언론계나 학계 등 시민사회, 즉 여론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며, 사법당국이 나서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깊이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세째는 이번 사건이 양국에 있어 질이 높고 품격 있는 언론이란 무엇인가, 언론의 자유와 사법의 관여의 한계는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장되고 있는 미국의 언론의 자유를 유지시키는 기초는 미합중국 헌법의 수정 제 1 조입니다. 발표자료에도 인용했는데 40여개의 단어의 단순한 한

단락의 조항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조항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서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민주국가의 토대를 쌓았습니다. 이 조항에 있는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청원의 자유라는 5 개의 기본적인 자유, 이것이 미국의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지키는 최대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국의 예가 나타내듯이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언론 없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모든 민주국가는 자유로운 언론 없이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한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나라로서 세계로부터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양국의 언론이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강화라는 면에서 생각하고 토론하는 것은 양국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반드시 공헌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의 발표가 그와 같은 논의에 조금이라도 공헌되기를, 또 본 세션의 논의를 통해 양국의 인식이 깊어지기를 기원하면서 발표를 맺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션 3 사회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일본측 발표자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양국 언론보도의 현상과 과제」

일본측 발표자: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쪽이나 하면 한 발짝 떨어진 입장에서 무엇을 주장하랴기보다는 문제제기나 사실정리에 가까운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질문을 되풀이하기보다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비판해야 할 점이 있다면 지적해 주십시오. 또, 꽤 구체적인 미디어의 보도를 인용이나 소개하겠지만, 저 자신이 그 미디어에 대해 품고 있는 무엇가가 있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전부 큰 미디어이고 일개 일본인의 눈에 이렇게 보인다는 정도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를 중심으로 발표해 갈 것이라서 화면에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정보는 거의 발표자료에 따른 것입니다. 발표자료에서는 분량문제로 사진을 그다지 신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만큼을 슬라이드에서 보충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또, 문자로 된 정보가 모두 발표자료에 실려 있기 때문에 사진은 이 자리에서만 영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제제기를 한 가지 하고 싶은데, 제가 최근에 다른 곳에서 본 단어 중에 「규탄저널리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단어에 매우 강한 인상을 받았는데, 왜 그런지 생각해 보았더니 일한 양국의 저널리즘에 이러한 부분이 매우 많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대로 좋을까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 보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이야기하자면 올해 상반기에는 원전사고를 둘러싼 기사가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발단은 아사히신문의 기사였는데 이것은 어떤 기사냐 하면 동일본대지진이 있었던 4 일 후에 후쿠시마 제 1 원전에 있었던 직원의 90%, 650 명이 있었는데, 그 직원들이 당시의 요시다 마사오 씨라는 소장의 대기명령을 거스르고 10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제 2 원전으로 도망을 갔다는 보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요시다 씨가 정부의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이야기한 내용, 그 조서를 정리한 것을 아사히신문이 입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조서 자체는 이 시점에서는 비공개였는데 이러한 기사로 만들어서 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 그와 같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보였다는 사실로 인해 아사히신문의 사장까지 사퇴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에 대해 마이니치신문을 통해 오쿠 타케노리 씨라는 호세대학의 교수님이 「문제의 뿌리에 규탄저널리즘이라는 선입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발표자료에도 발췌해 두었는데 먼저 규탄해야 할 대상으로 도쿄전력이 있고, 아사히신문 사람들은 어디 그 재료가 없을까라는 시점으로 요시다 조서에 착목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조서 전체는 파악하지 않고 「제2원전에 갈 마음은 없었다」라는 진술의 한 부분만을 잘라 내 「가지 마라」라는 명령이었다는 식으로 멋대로 해석해서 기사를 써 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저널리스트 분은 여기에 「도쿄전력」이라고 쓰여진 부분 「한국」으로 바꿔 봐 주십시오. 또, 한국 저널리스트 여러분은 「도쿄전력」이라는 부분을 「일본」이나 「일본정부」라고 바꿔 봐 주셨으면 하는데, 이것과 흡사한 구도의 기사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규탄저널리즘」이라는 말은 일한 양국의 보도에서 꽤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덧붙여 얘기하자면 조금 전의 오쿠 타케노리 교수님은 이러한 어쨌든 규탄이 전체되는 자세라는 것이 프로 저널리스트에게 불가결한 사물의 도리라는 감각을 잃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이것도 올해의 저널리즘에서 큰 화제가 된 아사히신문의 위안부 보도를 둘러싼 부분인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듯이 아사히신문은 8월에 점검기사라는 것을 실었는데—검증이 아니라 점검기사로 되어 있고 사죄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이때의 양상을 보면 애초부터 아사히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규탄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저에게는 보입니다. 또, 이 아사히신문의 보도가 나온 후에 이것을 비판하는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일례로서 요미우리신문을 들어 두었는데, 아사히신문에 매우 비판적인 검증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듯이 네 개, 나흘 간의 연재로 상세한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이것도 저에게는 요미우리신문 안에는 「규탄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아사히신문」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식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또, 이것과는 별도로 논란이 있는데, 최근 요미우리신문의 판매점이 만든 팸플릿이 각 가정에 배달되었습니다. 요컨대 두 신문들의 보도를 비교검증하여 요미우리신문 쪽이 뛰어나다, 신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판매촉진용 팸플릿이었는데, 요미우리가 어떻게 전했느냐가 아니라 아사히신문이 어떤 실수를 했느냐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안부문제나 보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이 만들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경향이 일본의 저널리즘 속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 신문에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의 사례로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동아일보인데, 롯데호텔—이번 회의를 롯데호텔에서 했다면 재미있었을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다—에서 주한일본대사관이 주최하는 자위대창설기념일 파티가 열리게 되었다는 뉴스를 1면의 준 톱기사로 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행사인데 왜 여기에 실는 거냐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마 「규탄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일본정부」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상상합니다. 어쨌든 동아일보의 인터넷판을 보면 행사와는 전혀 무관하고 한국에서 평판이 나쁜 옥일기를 일부러 사진 앞에 내세워 이런 디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네티즌 보면 당연히 반발하겠지요. 이런 것에서부터도 「규탄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일본정부」라는 것이 동아일보에는 있는 거라고 저에게는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한국의 모든 미디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규탄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아베」라는 것이 최근 한국에는 트렌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은 아베 총리를 매우 싫어하고 전혀 좋아하지 않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이와 같은 보도가 매우 많은 것에는 비판적입니다. 예를 들면 사실면에서 보더라도 자위대를 언제 어디에나 과병한다든가, 전쟁할 수 있는 일본 등과 같은 단어—한국 미디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지만—는 실제로 아베 총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다. 게다가 그냥 「아베」라고 부르면서 경칭도 붙여 주지 않는 것은 과연 어떤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와 같은 보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동아일보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명예회복을 위해 이야기해 두는데, 같은 동아일보라도 5월 16일자 사설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을 반대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얻는 것보다도 잃는 것이 한국은 더 많다, 군국주의의 부활 등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균형 감각이 있는 주장으로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하며, 저는 동아일보나 특정 매체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더 부언해 두고 싶습니다.

한편, 일본의 미디어에서도 최근 규탄해야 할 대상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경칭을 안 썼다고 체포되면 안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해 두자면, 주로 주간지 미디어가 이와 같은 것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화면에는 석간 후지라는 신문을 실었는데 「박근혜, 아베에 항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일중한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한 기사였는데, 이러한 것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일본사회입니다. 물론 이쪽의 프라이데이라는 주간지 기사처럼 규탄해야 할 대상으로 아베 총리도 언급하고 있는 곳도 있으므로, 그 점에서는 균형이 취해져 있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이러한 규탄이 전제된 기사가 매우 많다는 것이 최근의 특징이며, 게다가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보도에서는 사실관계가 틀리거나, 침소봉대되거나, 내셔널리즘을 굳이 자극하거나 하는 것이 많습니다. 즉, 보도에 의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를 그다지 고려하지 않은 듯한 보도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이는 측이 재미있어 하지 않을까라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와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언급한 바와 같이 과연 이러한 규탄저널리즘은 양국관계에 정말로 도움이 되고 있느냐, 혹은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신문을 멀리하고, 미디어에서 멀어지는 현상을 초래하지는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예를 들면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의 「다툼」 등을 본 보통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은 「신문기자는 서로서로를 못살게 구는 사람이다」와 같은 인상일 것입니다. 미디어에 있어 이러한 것이 유익한 것이냐 아니랴라는 것을 조금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제기하고 싶은 것, 두 번째가 되겠는데, 우호관계를 위해 실제로는 일본정부나 한국정부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 이상으로 일반시민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냉정하게 보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상반기로 이야기하자면, 역시 코노담화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베정권 쪽에서는 코노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지금의 일본정부의 입장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코노담화가 만들어졌을 때의 과정에 관심이 모여서 여러 가지로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러한 상황을 한국이 알게 되었고, 한국정부 혹은 한국 미디어에서는 이와 같은 코노담화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여러 기사를 미디어에 내보냈는데, 그러면 과연 한국미디어는 코노담화가 발표되었을 때에 호의적으로 보도했었을까요.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의 신문을 뒤집어 보았는데, 예를 들면 이 경향신문에서처럼 「미지근한 조치」라든가 「애매하다」 등과 같이 도무지 그러한 느낌은 없습니다. 뒤에 한겨레신문과 동아일보도 끄집어내 보았는데 「작은 진전」과 같은 평가가 나옵니다. 일본이 무엇이 조치를 할 때에는 이와 같은 말이 매우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에 비춰지고 있는 것은 김 영삼 대통령이 방일해서 천황폐하와 만났을 때의 한국의 보도인데, 천황의 사죄발언에 관해서도 작은 진전이라고 계속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느낀 것은 한국 미디어는 과연 사죄하는 일본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일본이 뭔가를 해도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본의 혐한감정의 원천 중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00년 이후,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뒤늦게 한겨레신문, 연합뉴스가 일본어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한국에서 보도된 것이 금방 일본어로 번역되어 게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쁜 악순환이 계속된다고나 할까요, 한국에서 반일적인 보도를 하면 금방 그것이 일본 국내에 전해지고, 곧 혐한감정으로 확산되어 갑니다. 또, 마찬가지로 상황이 최근 일본의 한국보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일본의 혐한적인 보도가 결과적으로 한국 국내의 반일감정을 자극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디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은 그 자체가 해결에서 가장 동떨어진 마이너스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장본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코이즈미 총리는 재임 당시인 2001년 10월, 서대문 형무소에 가서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아베 총리였다면 아마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코이즈미 총리는 거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 서대문 형무소까지 가서 반성의 표현을 했지만 다음 날 한국 미디어가 보도한 것은—당시에도 역사문제와 공치조업 문제 등으로 인해 일한관계가 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전후관계를 참작할 필요는 있겠지만—모두 이런 식이었습니다. 「왜 왔는가」 그리고 「대사를 남기기만 했다」라든가. 이것을 저는 일본에서 보고 있으면서 왜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는가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코이즈미 씨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그다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비슷한 일이 최근 일본의 미디어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점점 더 한국에 대한 불신감을 강조하는 듯한 보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요미우리신문이 딱 1년 정도 전에 한 한국에 관한 연재기사 「완전히 식어 버린 일한 양국」입니다. 특집의 11 번째 기사로 개선을 위해 힘써도 요구가 자꾸 올라가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한국측에서 발표를 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기소를 둘러싸고는 모든 일본의 미디어가 사실에서 다루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논조입니다. 공인 중의 공인이니까 사람들로부터 여러 소리를 들겠지만, 공권력을 발동하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또, 한국 미디어만 예를 들어서 굉장히 불공평하고 죄송해서 일본의 미디어에 대해서도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데, 지금 비춘 것은 대신신문인 아사히신문으로 기사의 주제는 아시아여성기금입니다. 이것은 위안부였던 여성들을 위해 일본정부가 직접적인 국가보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사람들이 기부를 했고, 정말 성실하게 맡으셨던 분들도 많이 있었고, 또 일본정부도 열심히 생각해서 만들어 낸 것으로 하나의 답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은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매우 비판적인 보도를 했었습니다. 2014년 10월의 이쪽 기사에서는 이 역사적인 정신을 살려야 했다 운운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사히신문 자신이 1994년의 단계, 이 기금이 생겼을 때에는 계속 비판적인 보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과거의 기사를 검색하면 바로 알 수 있는 시대이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검색해 본 것인데 이런 기금을 왜 만들었느냐와 같은 사회부가 쓴 기사나 그러한 논조의 투서를 많이 게재하거나, 또, 예를 들면 「속임수의 민간기금에 반대하는 집회」라는 것의 개최에 관한 기사를 실거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국민에게 기금에 반대하는 감정을 불러 넣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사히신문이라는

것은 특히 진보적인 독자가 많으므로 여성운동이라든가, 혹은 반전활동가 등 이른바 양심적인 지식인에게 완전히 기금을 반대하는 논조를 불러 넣은 죄가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큰 세 번째 문제제기는 양국의 미디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볼 때에 중요한 것은 세 가지로 먼저 첫 번째는 자신의 언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따져질 수도 있다는 자각이 어느 정도 있느냐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라면 진보나 우파냐, 한국에서는 보수, 진보라는 색깔 나누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더라도 보도라는 것은 결과에 대한 책임이 따져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의 동아일보의 자위대행사에 관한 보도 등도 그러한 보도를 1 면에 가져가면 대혼란이 일어날 것은 뻔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어떤 식으로 결과책임을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아사히신문이 아시아여성기금에 계속 비판적이었던 것에 대해서도 만약 그때 아사히신문이 비판적이 아니었다면 더 빨리 문제가 해결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저널리스트 분들이 글을 쓸 때 결과책임을 생각하고 있는지 꼭 물어 보고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일본과 한국은 서로 다른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관해 근본적으로 사회가 다르다는 것을 참작해서 보아야 하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의문을 느낍니다. 특히 일본이라는 것은 오구라 키조 교수—한국에서도 매우 유명한 철학 연구자인데—의 말에 따르면 매우 법실증주의적인 것으로 반준법적인 행위는 생리적으로 혐오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이상한 사법판단 등을 보면 이것은 매우 이상하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한국은 거꾸로 도덕지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법적으로 해결한다고 일본인이 이야기해도 도덕적으로 당신은 바르지 않다고 느껴 버리고 그러한 일본의 방식에 대해 매우 혐오를 가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오구라 키조 교수의 지적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일본의 미디어는 도덕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는 한국사회를 매우 반준법적인 것으로 지나치게 규탄하고 있지는 않은지라고—물론 미디어이니까 규탄해도 되지만, 그것이 지나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라는 것입니다—생각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생각한다면 위안부문제에서 좀처럼 응어리가 풀리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러한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않고 법적으로 잘라 내려고만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또, ‘반대도 진실이다’(일견 정반대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본질은 같다는 뜻)라는 일본의 관용표현이 있는데 한국미디어도 법실증주의적인 사고방식이 강한 일본사회를 도덕적인 기준만 가지고 지나치게 규탄하고 있지는 않은지. 위안부문제 등에서도 일본정부로서는 법적으로 최대한의 선에서 타협하다고 했겠지만, 그것을 도덕적으로 재단해 버린다면 부족하다, 애매하다와 같은 것이 되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한 사람의 발언이 있으면 그것을 지나치게 규탄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상대방의 사회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디어는 양국의 관계개선에 있어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아가 그러한 움직임을 보도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정확히 1 개월 전에 서울에서 열린 이벤트를 보도한 것인데, 한국에서 유명한 정 이현 씨라는 젊은 작가와 일본의 에쿠니 카오리 씨, 츠지하라 노보루 씨와 같은 작가가 낭독회를 한 것입니다. 에쿠니 씨가 일본어로 낭독하고 한국의 팬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한국어로 번역된 것을 한글로 읽어 가는 식의 낭독회를 했습니다. 한국에는 에쿠니 카오리 씨의 팬이 많고, 특히 젊은 여성에게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에쿠니 씨가 한마디한 것만으로도 한국팬들은 마치 눈물이라도 흘릴 듯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절정에 이르고 에쿠니 씨가 좋은 이야기를 하면 정말로 우는 여자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은 이 낭독회는 동아일보 밖에 보도하지 않았습니니다. 진짜라면 서울에 있는 일본특파원이 이러한 것도 보도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일데모만을 보도하는 것이 일본의 서울특파원의 역할이 아니고, 이러한 보도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신문에서 보도한 곳은 동아일보 뿐이었습니다. 일본의 신문은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니다. 동아일보를 너무 비판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지금 동아일보가 잘한 것도 얘기해 두었습니다. 덧붙여 이야기하자면 그 전해에는 같은 낭독회를 요코하마에서 했는데 그때는 NHK 와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또, 일본의 신문을 보면 실은 매우 친한적인 보도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슈니치신문이라는 신문인데 이것은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한국이 좋아요」로 시작되고 있는 문장입니다. 지금의 혐한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것을 당당하게 쓰는 고등학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신문이 제대로 다루었습니다. 관할 한국총영사에게 이러한 기사를 썼으니까

뭔가 격려라도 해 주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신문에서 친한적인 것을 찾는 것은 의외로 쉽습니다. 또, 이것은 니가타일보에서 우연히 본 기사인데 한류붐을 나는 아직 즐기고 있다, 양국관계의 개선을 바란다라는 내용의 독자투고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나 투고가 있는 한편 한국의 신문에는 그다지 이런 기사나 투고기사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투고가 와 있는데도 신지 않는 것인지 그쪽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하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7 월의 마이니치신문에 나온 것인데 「양국의 소리 없는 소리를 들어라」라는 것에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논의는 많이 일어나지만, 일본에서도 헤이트 스피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친한적인 것도 있고, 한국에서도 동시에 있는 것이니까, 예를 들면 지금 원피스라는 행사, 애니메이션의 전시회가 서울에서 있었는데 중지될 뻔하다가 부활한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의 명령도 있었지만 그러한 것을 해야 한다라는 한국 내의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본의 신문, 마이니치신문인데 오른쪽에 실었지만, 이러한 사진만으로도 「한국인은 이런 것을 좋아한다」라고, 이것으로 한국에 대한 감정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후의 논의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션 3 사회자:감사합니다. 두 분께서 인상적인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회의전체에 좋은 자극이 더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랬듯이 여기에서 일단 커피브레이크를 가지고 토론을 위해 각자 생각을 정리할 시간으로 했으면 합니다. 정각에 세션을 재개할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토론

세션 3 사회자:그러면 제 3 세션을 재개하겠는데, 양쪽의 발표내용을 중심으로 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코멘트 등 이름표를 세우고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는 12 시 반부터니까 그때까지의 시간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는 시간을 재는 역할을 맡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곱 분이 거수하셨으므로 그 순서대로 발언해 주십시오. 먼저 한국측 분부터 부탁드립니다.

한국측 참가자:감사합니다. 일본측 발표자로부터 한국 미디어에 대해 여러 가지 혹독한 지적도 받았는데 처음에는 조금 화도 났지만 마지막에 잘 수습해 주셔서 균형감각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 주일 전이었나요, 직전에 회의장소가 변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했었는데 발표를 들었더니 아무래도 한국미디어와 회의장소의 관계도 미묘한 것 같아서 미디어의 일원으로 이번 회의장 변경에도 책임을 느껴야 하나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서울의 중심부였다면 한국측 저널리스트들에게는 좀 더 다니기 쉬웠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아쉽지만, 이것을 계기로 정치와 회의장소의 긴장관계라는 것도 해소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일관계는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한국의 주요 미디어에 있어 한일관계는 가장 중요한 테마 중 하나이며, 저희 회사에서도 사장이 연중 교류하고 있는 일본 뿐이라면서 매년 대표가 상호방문하고 있습니다. 또, 기자에게 보스인 역대 편집국장도 거의 대부분 일본특파원 경험자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이해는 가장 깊은 미디어 중 하나일 거라고 자부하고 있으며, 또 저 자신도 균형 있는 보도를 항상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잉하게 비판적인 보도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님이나 동료들도 동의하리라 생각하지만, 칭찬보다도 비판 쪽이 눈길을 끌고 그만큼 읽히기 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논조가 많아지는 부분은 확실히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 자신을 돌이켜 봐도 그러한 경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최근의 예로 하나, 리틀리그의 월드시리즈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한국과 일본이 준결승에서 대전하여 한국이 이겨서 결승에 진출했고, 마지막에는 우승도 했는데, 일본선수들도 결승전에 응원하러 와서 한국대표단의 유니폼을 입고 열렬한 응원을 보내 주었습니다. 이 건은 거의 모든 미디어가 다루었습니다. 어른보다도 어린이들 쪽이 앞서고 있다. 이러한 정신으로 한일관계를 진행해 가면 문제는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닐까, 문제는 어른들의 마음 쪽이 아닐까라는 식으로 보도되었는데, 개인적으로도 매우 시사하는 바가 많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 중에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보도, 특히 사실과 보도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제 자신을 돌아켜 보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 일본은 언제라도 전쟁을 할 수 있고, 중국의 대두에 일본이 무력으로 대응하게 되어서 충돌이 일어나고, 한반도도 안전하지 않게 된다는 극론에는 저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반대 입장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관해 제가 생각하는 것은 미디어의 보도라는 것은 그 당시의 양국관계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국관계가 양호하면 일본의 입장도 이해한다는 보도로 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양국관계가 최악에 가까운 상태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관해 거의 대부분의 신문이 의심의 눈을 가지고 이것을 보도하게 된 것입니다. 또, 집단적 자위권은 주권국가의 권리이며, 일본도 예외는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점은 어느 보도에도 공통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우려하는 코멘트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양국 간의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조였습니다. 이것은 특히 보수적인 미디어로서는 평상시의 논조에서는 조금 벗어난 것으로 용기 있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멘트의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양국관계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이 회의에 출석해 왔고, 내년도 가능하면 출석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자로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양 선생님의 지적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션 3 사회자: 그러면 다음은 그쪽 일본측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일본측 참가자: 감사합니다. 두 분의 발표를 흥미 깊게 들었습니다. 매우 균형 잡힌 평론과 구체적인 예가 일한 양쪽의 참가자에게 매우 참고가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미디어 관계자로서 역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미디어도 역시 자기비판을 하면서 항상 나날이 보도하고 있으며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한다는 부분은 항상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저널리즘의 문제. 어디의 신문이든, 아사히신문이나 요미우리신문이나 산케이신문이나 다 그렇지만, 역시 기업이고, 그 논조에 어딘가 상업주의와 꿇을래야 꿇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기업저널리즘에 관해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미디어에 언론으로서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문제. 즉, 기업저널리즘이라든가 포폴리즘이라든가, 혹은 인터넷 조회수를 신경 쓴다든가라는 것도 일본에서는 지적되고 있지만, 기사의 인터넷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포폴리즘에 다가서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매스컴은 이러한 점에서 고민하면서, 자중하면서, 기사를 쓰고 있다는 것을 한국 분도 꼭 알아 주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는 기자클럽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기자클럽제도에 의존한 취재활동이 획일적인 기사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속칭 발표저널리즘이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으로, 우리도 일본 미디어의 존재방식에 관해서는 반성할 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고민 위에 그러면 민주주의의 옹호자라고 불리고 있는 미디어에 있어서 직업으로서, 저널리스트로서의 일을 하면서 무엇을 앞으로 추구해야 하는가, 혹은 특히 외교와 관련된 국제보도에 관해 저널리스트는 어떠한 것을 생각해야 하는가와 같은 보다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일본 저널리스트들이라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례 중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사히신문의 위안부보도에 관해 전개를 조금 소개해 두고 싶습니다. 그 후에 한국 미디어 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사히는 8 월 5 일과 6 일에 검증기사, 위안부에 관한 요시다증언에 관해 오보라고 인정하는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그전에 조금 전에 일본측의 발표에 있었던 이른바 후쿠시마 제 1 원전의 요시다 조서를 둘러싼 오보도 드러나서 이 두 가지 큰 오보사건에 따라 키무라 사장이 사임하고 또 제 3 자에 의한 검증위원회를 만들고 지금도 지식인을 통한 검증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제언이 나온다는 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본의 저널리즘의 과제와도 관계되어 오는 것인데, 결국 사람이 쓴 것이니까 때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한 적이 있으며, 여러분도 어딘가에서 그러한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보라는 것은 아무래도 불가피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보 그 자체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문제로서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식으로 후에 처리해 가느냐라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위안부보도에 관해 이야기하면 첫 보도가 1982년, 최초의 요시다증언 보도가 1982년이었는데, 32년간에 걸쳐 오보가 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일본에서는 매우 문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세 가지로 아사히는 일본을 대표하는 신문사로서 국제여론에 큰 영향을 주어진 미디어이기 때문에 거기에 게재한 것의 의미는 큼니다. 요시다 씨에 관해 말하자면, 요시다 씨는 이 보도를 바탕으로 한 책도 쓰고, 한국에 와서 위안부 분들에게 사죄를 하고, 또 강연을 하고, 그리고 요시다 씨의 책에 근거한 책이 많이 나오는 식으로, 보도를 계기로 해서 증언이 사실로서 확산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실은 이 요시다 증언이 허위라고 제대로 보도한 신문이 훨씬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제주신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타 이쿠히코 씨의 현지조사에 협력해 준 신문사인데 이 제주도의 지방신문은 1989년 8월 14일자에서 요시다 증언이 허위라는 것을 검증해서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점에서 제주신문이 발단이 되어 한국에서도 다시 한 번 더 검증이 이루어졌다면 강제연행에 관한 논조도 조금 바졌으리라 생각하며, 그 후의 일본의 논조도 바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안부와 강제연행에 관한 한국측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 위에서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다른 전개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측의 발표에도 있었지만, 미묘한 문제에 관해 정확성을 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어떻게 커지는가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시다 증언보도에 관해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이 국제여론에 관한 보도의 영향, 그리고 또 하나는 아사히신문은 요시다 증언에 대해서 우에무라 타카시 씨라는 분이 쓰신 김학순 씨의 증언기사 문제, 즉 정신대로 연행되었다는 증언을 보도하고 정신대와 위안부가 혼동되는 계기가 된 기사를 지금도 오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규탄저널리즘」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아사히신문이 지금 일본의 다양한 곳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하나의 큰 이유는 자기 회사의 조금 전에 말한 기업저널리즘의 주장을 앞세우기 위해 이데올로기라고 할까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사를 정정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는 점입니다.

물론 아사히신문은 지금 자신들을 바로잡으려고 제3자위원회를 만들어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3자위원회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도 있지만, 그래도 검증작업을 하고 계시니까 그것에 관해 코멘트를 하려고는 생각지 않지만, 적어도 이 아사히신문의 경우의 교훈이라는 것은—일본의 미디어가 지금 누구든 모두 자문자답하고 있겠지만—의심을 받은 보도에 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라는 점. 그리고, 비판을 받은 것에 관해서는 비판은 지면에서 논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심을 받게 된 오보를 계속하는 것이 신문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며, 또 수정을 할 경우에는 진지한 태도로, 얼버무리지 않고 진지하게 정정해야 한다는 것. 이것도 또 특별히 아사히신문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가 자문자답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사히신문만 비난했는데 실은 저희들도 수년 전에 매우 큰 오보를 냈습니다. 그때는 사장 이하 처벌을 하고 처리를 하고 큰 소동이었는데 역시 잘못했을 때에 어떻게 사죄하느냐, 잘못했을 때에 어떻게 조처하느냐라는 것이 보도의 신뢰성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라고 이것은 저 자신도 명심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한국측에게 질문드리고 싶은데, 일본은 그렇게 해서 보도의 정확성에 대해 악전고투하고 있는 중인데 한국에서의 상황은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 나름 한국에 관한 보도에 오랫동안 접해 왔는데, 외부의 입장에서 보는 한 한국의 신문은 오보에 대해 그다지 자기검증을 했다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도의 신뢰성이라는 면에서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세션 3 사회자:문제제기라 할까요, 질문이 추가되었는데 일단 다른 분들의 코멘트를 일단 전부 듣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코멘트 중에 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분 부탁드립니다.

일본측 참가자:감사합니다. 중대한 문제제기 후에라서 약간 긴장하고, 또 더욱 진지하게 발언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발표자 두 분의 발언에 관한 코멘트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국측 발표자 선생님의 산케이신문의 이번 사건에서 건설적으로 교훈을 배우자고 한 자세, 매우 진지하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또, 일본측 발표자 선생님께서 일본의 미디어가 특히 근래, 3·11 이후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과제라는 것을 제언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는 일한관계의 이야기를 넘어선 저널리즘론 그 자체이며, 두 분의 이야기를 꼭 앞으로 저널리즘을 목표로 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먼저 잘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어느 정도 시니어에 가까워진 세대로서도 이것을 교훈으로 그날그날의 일을 제대로 해 가야겠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인식할 수 있어서 정말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위에서 약간 코멘트를 두세 가지 하고 싶은데, 먼저 산케이신문의 경우에 문제가 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이것은 한국 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으로도 연결되는데—일본에서는 특정비밀보호법이라는 것이 조금 있으면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2 월 10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약간 정권측이 논의를 지나치게 서둘러 충분한 공론이 없는 채로 법이 성립되어 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불과 3 개월도 안되는 심의에서 매우 중대한 법안을 통과시켜 버린 것인데 저는 저널리스트의 한 명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그 후의 수습이랄까, 언론의 자유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설계도 불충분한 채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꼭 한국 분들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명예훼손과 특정비밀보호법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번 특정비밀보호법에서 가장 우리에게 문제인 것은 「부당한 취재」가 벌칙의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명예훼손과도 관련되어지는 포인트로 명예훼손의 경우와 대조하여 이 규정이 어떠한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의 경우는 일본에서는 실은 특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인데, 명예훼손을 신경써야 되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글을 쓰는 쪽이 억제하게 될 우려가 아무래도 따르게 됩니다. 즉,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이 끊임없이 문제가 될 것인데, 그래서 특례로서 그러한 억제적인 효과, 즉 위축효과를 고려해서 공공성이 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죄를 묻지 않는다는 식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특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의 균형에 대해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라는 점, 즉 일본에서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특례, 즉 공공성의 관점에서 설령 그것이 명예를 훼손한 것과 같은 경우이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할 경우에는 이것에 반드시 죄를 묻지는 않는다는 경우가 한국에도 있는지, 혹은 어떤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측 발표에서 「규탄저널리즘」이라는 용어에 관한 해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널리스트가 된 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점에 관련되는 것인데, 이 일을 하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하면 역시 하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논의 중에 어떤 분이 말씀하셨던 권력감시. 이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으로서의 내가 부당한 공권력의 개입을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이며 이것은 많은 시민에 있어서도 같은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태어난 자유권, 생존권을 보다 잘 행사해 가기 위해 저널리즘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며, 권력감시가 가장 중요한 의미에서의 저널리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권력의 감시를 멈춘 미디어는 단순한 정보산업에 빠진다고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글로 쓰고 있는데, 그러한 의미에서도 조금 전의 특정비밀보호법에 대해 저는 매우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널리즘이 단순한 「규탄저널리즘」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으면 권력감시의 기능을 정당하게 다하느냐. 이 양자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생각해 보고 싶은데, 규탄으로 끝내 버리면 그냥 단순한 규탄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권력감시를 하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바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시 권력이 행하는 정책의 집행, 결정, 이것을 보다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권력감시를 위한 권력감시가 아니며 비판을 위한 비판도 아닙니다. 비판을 함에 따라 보다 좋은 정책을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정책의 입안, 결정, 집행, 그리고 평가라는 정책사이클—이것은 정책과정론에서 논해지는 개념인데—안에서 평가함에 따라 정책은 또 재입안됩니다. 보다 좋은 정책이 집행되어 갑니다. 정책은 살아 있는 것이며 끊임없이 비판이나 평가의 대상으로 노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디어의 권력감시라는 의미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규탄저널리즘」의 그 끝에 있는 것을 역시 미디어는 제대로 응시해 가야 합니다. 미디어가 보다 좋은 정책의 집행, 만인의 생존권을 보다 좋게 행사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의 분의 코멘트에 기업저널리즘, 조직저널리즘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널리스트도 역시 회사에 속해 있으므로 아무래도 회사의 간판을 등에 업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특히 통신사 등은—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신문이 중심인데—여러 신문에 실리게 됩니다. 또, 지면을 가지고 있는 신문사의 경우에도 여러 곳에 인용되니까 자신의 이름이 들어 있는 평론기사가 열 몇 개 신문에 실리게 되고, 인터넷에소도 확산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은 회사고 뭐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요컨대 저널리스트가 독자와 직접 마주 볼 수 밖에 없는 국면도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방신문에 통신사의 기사가 실립니다. 무슨무슨 회사의 누구누구라는 이름이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 기사에 대해 독자가 이견 말도 안된다고 생각한다면 먼저 그 지방신문에

전화를 하는데, 지방신문에서는 「이것은 무슨무슨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사의 집필자에게 전화가 들고 돌아서 오게 됩니다. 그때 그 집필자는 회사의 간판을 업고 있다기보다는 독자와 직접 대화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에는 물론 개인으로서 그것에 진지하게 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기업저널리스트이지만 역시 우리들은 한 명의 저널리스트로서의 인디펜던스라고나 할까요, 독립성, 이것을 잊어 버려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위치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독자 본위, 시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저널리스트로서의 원리원칙에 따라 직업의무를 수행해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것은 많은 동료 저널리스트도 공감해 주시리라 생각하지만, 역시 기사를 써 가는 데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나 하면 오늘도 논의가 있었지만, 「도리」와 「합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의 발표에서는 법적인 측면을 준수하는 일본과 도덕적 측면을 중시하는 한국미디어의 특질의 차이를 논하셨는데 이 양자를 겸비한 「도리」와 「합리」의 개념이 특히 권력감시를 해 가는 데에 중요하다는 것을 부언하면서 저의 코멘트를 마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션 3 사회자:그러면 다음 한국측 분 부탁드립니다.

한국측 참가자:감사합니다. 어제는 그다지 발언을 못했는데 오늘은 그만큼 만회할 작정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발표자 두 분의 상세한 분석에 대해서는 모두 매우 지당한 의견이시고 이견을 집어넣거나, 반론할 부분은 특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저널리스트, 일본 저널리스트라는 틀을 초월한 저널리스트로서의 독립성—바로 방금의 발언에 있었지만—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경우, 한국측 발표자의 산케이신문 관련분석에 대해 전면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또,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칼럼을 둘러싼 이번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제가 무엇을 생각했느냐라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희 회사는 중도보수를 자처하는 입장에서 신문사 전체로서는 산케이신문을 비난하는 측에 섰지만, 개인적으로는—부서의 차이로 인해 직접 지면을 만들 기회는 유감스럽게도 없었지만—그 사태를 보면서 제가 존경하고 롤모델로 생각하는 Washington Post 지의 기자셨던 돈 오버도퍼 씨를 떠올렸습니다. 퇴직한 후인 현재도 활약 중인 저널리스트인데, 오버도퍼 씨가 한국에 왔을 때에 한 말에 「잉크를 다루는 사람과는 싸우지 마라, 반드시 지게 될 테니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 무현 정권 때에 난발된 미디어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저희 회사도 꽤 당했는데—에 대해 말한 것으로 보도내용의 시비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스컴의 언론의 자유, 공정성과 같은 부분을 평가해야 한다. 즉, 권력자에게 불리한 기사더라도 그것을 명예훼손으로 규제하고 위축시키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개인적인 추억도 있어서 이번 산케이신문 건에 대한 한 저널리스트로서의 저 개인적인 견해는 이것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기소하는 것은 지나친 행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측의 발표취지에 찬동한다는 것도 그러한 의미에서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의사표명과는 또 달리 이번 건에 대해서는 기사를 쓴 것에 대해 공정했느냐라는 공정성의 문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케이신문의 많은 기사를 보고 영어에서 말하는 intention, 즉 특정한 의도가 기사이 근처에 질게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험한적이라고나 할까, 발표에서는 「남성과의 관계」라는 표현을 들었지만, 문장을 쓴 투에는 감정적, 게다가 조금 야비하고 속된 부분이 느껴져서 영어로 하자면 decency 의 문제가 된다고나 할까요. 기사의 공정성, 품위라는 부분에서는 균형이 결여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소에까지 이른 이번 사태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산케이신문이 써 온 수많은 기사에 대해 누적된 「피로도」의 반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논의 중에 레인 에번스 의원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에번스 의원이 1999 년에 미국하원에서 위안부결의안의 초안을 만들었을 때—에번스 의원은 파킨슨병에 걸린 상태여서 신체적으로 대외적 행동을 하는 데에 많은 핸디캡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다든가, 식사 때에 제대로 입을 움직일 수 없다든가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에번스 의원은 독신이었지만 항상 그 옆에는 서 옥자 씨라는 한국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작은 대학의 교수로 워싱턴정신대대책협의회 회장도 맡고 있었던 분인데, 그 분도 독신으로 이 두 사람은 남녀로서 서로 호감을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워싱턴의 대사관 관계자와 재미동포 분들에게서 들었는데, 일본의 산케이신문이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불륜관계라는 식으로 암시하면서 한국정부가 서 옥자 씨를 이용해 에번스 의원을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고 있다는 설을 만들고, 공화당 의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에번스 의원을 비판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위를 생각하면 썩인 「피로도」의 귀결이 이번 기소의 뿌리에 있지는 않았는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시지 않도록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번의 기소를 지나친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또 별개로 산케이신문의 기사에는 공정성이라는 점에서 의문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사의 공정성이라는 점에 관해 일본측 분들이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가라는 것은 저널리스트의 한 명으로서 꼭 여쭙 보고 싶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비판만 해도 생산적이지 않으므로 개인적인 하나의 경험-반성의 사례라고나 할까요-도 소개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 무현 정권기에 국가정보원의 원장으로 김만복 씨가 임명된 일이 있었습니다. 김 원장은 서울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공채직원으로 국정원에 들어가 오래 근무해 오신 분인데 당시의 기자들, 특히 외교부 출입기자나 외교안보를 다루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김 원장에 대해 걸출한 실력의 소유자라고하기 보다는 주어진 과제를 잘 처리하시는 타입, 즉 상관과 양호한 관계를 쌓는 조정형 실무가라는 이미지가 퍼져 있었습니다. 이것 등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intention 의 일종이 될 것인데, 당시의 제가 담당기자로써 「김만복 국정원장 임명」의 기사를 썼을 때에 그러한 부분이 나와 있었습니다. 북한전문가가 국가정보원을 맡아야 하는데라는 취지로 기사를 매듭지은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일인데 김 원장측으로부터 클레임을 받았습니다. 귀군의 기사에는 약간 의도성이 있는 것이 아닐가, 자신은 20년간 북한연구에 종사해 왔다, 그런데 이 이야기 투는 공정하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전문가가 아니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힘들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명예훼손으로 기소되는 일은 없었지만, 개인으로서 그 인물의 좋고 싫음에 어떠한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자라는 것은 공정함을 항상 의식해야 한다, 기자 개인의 intention 이 앞서서는 안된다고 실감했습니다. 그 후, 반성의 뜻을 담아서 설령 싫어하는 인물이어더라도 감정과 기사는 떼어 놓을 것, 즉 공정함을 확보하는 것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이력도 있어서 산케이신문의 카토 서울지국장의 글에 대해서도 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intention 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느끼며, 또 그것이 이번 건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션 3 사회자:이어서 다음 분 부탁드립니다.

일본측 참가자:감사합니다. 두 분의 발표 모두 훌륭했고, 이 두 분의 발표를 들은 것만으로도 이번에 서울에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덧붙여 한국측의 발표에 관해 약간 코멘트를 하고 싶습니다. 또, 그중에 일본측에서 나온 문제제기에 관련된 이야기도 했으면 합니다.

일본측 발표에 나온 오구라 키조 교수식의 표현으로 하자면, 저는 법실증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너무 강한 것일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디어는 특별취급 받고 있는 것을 당연하다는 식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좀 우쭐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산케이신문의 이번 문제에 대해 기소가 정당했느냐라는 논의는 물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기소편의주의의 나라입니다. 즉, 기소할지 아닐지는 검찰관의 재량에 맡겨집니다. 그러므로, 검찰관이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기소되어 당연한 것이며, 문제는 기소할지 아닐지의 판단기준으로 가벌적 위법성이 있느냐 없느냐, 즉 벌을 가할 만큼의 위법성이 있었느냐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한국의 형법이나 일본의 형법이나 그 기소를 면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나 할까, 기소하지 않을 요건으로서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공공성, 공익성, 그리고 진실성입니다. 공공성이 있느냐 어떠냐. 이것은 대통령이라는 공인의 동정에 관한 보도이므로 당연히 공공성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익성은 어떨까. 이것은 공익의 목적에 이바지하느냐 아니냐. 보도를 위해 한 것이라면 당연히 공익목적이 되겠지만, 지금 한국측의 코멘트에 있었던듯이 대통령을 폄하할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라면 공익성은 없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실성. 즉, 카토 전 지국장의 기사가 진실이었느냐 아니냐라는 것인데, 실은 이것은 진실이 아니라도 좋은 것입니다.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진실성이라는 것이 됩니다. 이 공공성, 공익성, 진실성. 이 세 가지가 전부 갖추어진 경우 기소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먼저 인식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형법에도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카토지국장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사정은 다를지도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형법의 이 규정을 쓰는 것이

한국의 법 운용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혹시 틀렸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법률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이번 문제는 대통령이라는 권력 자신의 명예훼손 사안에 대해 기소라는 공권력이 행사된 케이스로,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즉 권력이 대상인 명예훼손이므로, 거기에 공권력의 행사는 억제되어야 했다는 것이 일반적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억제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것은 비판되어 마땅하겠지요. 게다가 억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치목적으로 정치이용에 쓰여진 의심이 농후하다. 즉, 산케이신문이라는 일본의 알미운 우파 미디어를 공격해 주겠다는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역시 언론의 자유에 대한 권력의 횡포라고 비판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권력의 행사가 억제되지 않았다는 것, 미디어니까 혹은 외국미디어니까 무르게 봐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마스크 중사자가 스피드위반을 해도 체포되지 않는다, 음주운전을 해도 기소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미디어의 오만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일본이나 한국이나 미디어는 언론인이라고 해서 매우 으스스합니다. 특별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왜 으스스대냐하면 권력에 가깝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감시하는 입장인니까 가장 권력에서 멀리 있어야 되는데, 자신들이 권력에 가깝다고 왜 특별취급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이번 산케이신문의 문제에 관한 일본이나 한국 미디어의 보도를 봐도 저는 그러한 미디어의 오만, 특별취급은 당연하다는 착각이 여러 곳에서 보이는 것은 아닐까. 그것은 매우 슬픈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본측 참가자: 먼저 일본측의 발표에 대해서인데 매우 공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규탄미디어」라는 것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규탄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아사히신문」이라는 것이 있냐 어떠냐는 미묘한 부분이며, 좋은 경쟁상대이고, 좋은 라이벌이 아닐까요. 예를 들면, 아사히신문의 위안부보도에 대한 비판기사가 연재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어쨌든 뭐라도 좋으니까 아사히신문을 공격하고 규탄할 소재거리가 없는가를 찾아서 여기 있구나라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역시 아사히신문이 이번에 과거의 기사를 취소했다는 것에 뉴스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코멘트 중에 매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아사히신문의 보도가 위안부문제의 진전에 영향을 주어 왔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사히신문이 그것을 취소함에 따라 그에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왔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규탄이 아니라고 해서 아무것도 문제가 없느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신문에 대해 자주 지적되어 온 것은 서로 감싸 주는 부분으로 그쪽이 오히려 전통적인 일본에서의 신문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문이라는 곳은 모두 그럴싸한 이야기를 하지만, 자신들에 관한 일이 되면 서로 감싸는구나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규탄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지만, 문제인 부분은 제대로 서로 비판하는 그러한 뜻에서의 균형도 필요하고, 그것이 결국은 독자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것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번 건은 특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자신을 돌이켜 보는 자숙하는 자세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아사히신문 건-후쿠시마 제 1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보도와 위안부 보도 두 가지가 있었는데-을 보고 많은 신문이 자사의 조사보도에 관해 체크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지면을 통해 발표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조직으로서의 움직임과는 또 별개로 저 개인으로서, 조직에서 일하는 기자로서 생각한 것은 역시 신문사 간의 경쟁은 기사를 가지고 해야 하며, 가능한 좋은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며, 그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기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타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도 큰 오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지면을 통해 왜 그런 오보가 발생했느냐라는 것을 독자에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타인만 비판해서는 생산적이지 않다는 지적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을 부언해 둡니다.

그리고, 한국측 발표도 매우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주장하신 것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특히 미국의 사례를 들어서 미국, 일본, 한국이라는 세 곳에 대해 논함에 따라 일한관계라는 좁은 시점에서 벗어나 국제적인 시야에서 이 문제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접근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내용 위에서 굳이 저는 또 일한관계 쪽으로 이야기를 되돌리고 싶은데, 너무 과거의 일만

끄집어 내면 과거의 노스텔지어라는—어제의 논의에서도 현실, 즉 그 후의 한국의 상황변화를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이야기를 들을지도 모르겠지만, 과감하게 철저히 과거의 노스텔지어에 기대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나 하면, 일본 신문의 이번 산케이 전 지국장 기소에 대한 반응에서 간혹 보여진 것은 역시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의 군사정권시대의 보도, 한국에서의 한국의 매스컴 보도, 그리고 한국에서의 일본 신문사의 활동에 관한 기억입니다. 분명 저의 기억이 맞다면 아사히신문도 이번 건에 관한 사실에서 아사히신문의 서울지국장도 군사정권시대에 폐쇄된 일이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정권시대의 활동을 생각하자면 일본의 매스컴과 한국의 매스컴이 고생을 나누었다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공유하는 체험이라는 것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한겨레신문의 창설자 중 한 명에게 인터뷰를 한 일이 있었는데, 군사정권 당시의 고생담을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분은 한겨레에 가담하기 전에는 다른 신문의 기자였는데—당시의 신문이라는 것은 대규모의 반정부데모가 있어도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고 크게는 보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었냐 하면 동원된 경찰관의 숫자가 늘었다, 그렇게 하면 읽는 사람은 감이 오니까라는 일화 등이 있어서 저는 감탄한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일본의 신문사도 군사정권 아래에서는 고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1973년에 김 대중 씨가 도쿄의 호텔에서 납치되었을 때에 한국 당국이 관여했다는 것을 썼더니 그 신문의 서울지국이 폐쇄되고 지국원이 추방된 일이 있었고, 이때의 일화는 지금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한국 매스컴이 놓여진 상황에 관한 기억이라는 것은 꽤 일본의 매스컴 안에도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은 이미 민주화했고, 그 1987년 때부터 헤아리면 이미 30년 가까이 지났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화된 후 오랜 세월이 지난 한국에서 또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반응이 나온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본의 매스컴이라서 느낄 수 있었던 충격으로 한국 분들이 일본 매스컴인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 기소에 관한 반응을 보실 때 그러한 점도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션 3 사회자:순서로 하자면 다음도 일본 측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일본측 참가자:감사합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논의의 화제가 한쪽에 집중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어느 분인가의 코멘트에도 있었듯이 이 회의는 회사를 등에 업고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널리스트로서, 전문가로서의 개개인이 서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장이라고 저도 생각하므로 저 개인의 견해, 사고방식으로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두 분의 발표를 듣고 한마디로 언론의 자유라고 표현하더라도 보도에는 정말로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저는 가슴에 새기고 싶었습니다. 산케이신문의 카토지국장이 쓰신 칼럼 건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한국측에서는 기사내용의 증거가 되는 취재를 하지 않은 채로 기사를 썼다는 식의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이라고 한다면 분명 질적인 면에서 과연 그래도 되느냐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도 같은 미디어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공권력의 개입, 즉 불구속기소, 이것에 대해서는 지나쳤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또, 아사히신문의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도 저의 견해를 요약하자면, 먼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 1 원전 사고기사가 오보였다는 점에서 기사가 취소된 것, 이것은 그 시점 즉 소장이었던 요시다 씨의 증언을 입수한 시점에서는 특종이었겠지만, 그것을 재료로 어떻게 뉴스로 만들어 갈 것이냐는 단계에서 잘못된 판단을 해서 그것이 대오보가 되었는데, 잘못된 기사는 솔직하게 정정하면 되는데 이것은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또, 위안부의 보도에서 요시다 세이지 씨의 증언을 1982년에 다룬 건. 위안부를 제주도에서 강제연행한 것이라는 기사가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도 취소했는데, 이것은 왜 더 빨리 깨끗하게 기사를 취하할 수 없었느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취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 위에서 문제로서 하나 제기하고 싶은 것은 오보사고에 대한 반응이 일방적인 공격이 되기 쉬운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판은 있어야 마땅하겠지요. 하지만 특히 아사히신문에 대해서는 일부 주간지 등에는 「국적」이라는 단어를 써서 비판하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극단적이지는 않더라도 신문, 잡지, TV 도 그랬지만 모두 합세해서 아사히신문을 공격하는 구도가 생겼었는데, 과연 이것이 건전한 언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지 저는 계속 생각했었습니다. 또, 한국으로 눈을 돌려 보면 한국에서 일본의 아베정권의 이른바 우경화라는 것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제의 논의에도

나왔었지만 전투기에 731 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거기에 아베 총리가 타고 있었다는 것을 가지고 역사수정주의의 발로라고 하면서 문맥이나 배경은 돌아보지 않은 채 한국에서 보도되었습니다. 이처럼 일본과 한국 양쪽의 언론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극단적으로 언급해 버리는 그런 부분이 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역시 우리들은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보도의 결과책임이라는 것과 관련시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아랍의 봄이나 대규모 데모, 시리아내전과 같은 것에 세상의 관심이 모였을 때 기자가 중동에서 취재를 하게 되면 자폭테러가 있었던 현장 등을 보러 가게 됩니다. 그러면 실로 처참한 자폭테러현장 바로 옆에 평상시처럼 꽃집을 열고 있거나, 카페나 간식포장마차도 아무렇지 않게 영업하고 있는 광경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를 쓸 때에는 아무래도 처참한 현장, 불쌍한 희생자와 같은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쓸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로 독자에게 중동은 무서운 곳, 위험하다와 같은 이미지만 심어지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것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럴 때에 저널리스트로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은 특별히 중동에서 취재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특파원이나 기자가 항상 직면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가급적 다양성이라는 것을 전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칼럼 등을 통해 정치와는 관계 없는 이야기도 써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독자 쪽에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처럼 매우 고민을 하면서 기자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은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이 하시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로서 영원한 과제로 느꼈기 때문에 하나 제기해 두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션 3 사회자:그러면 다음은 한국측 부탁드립니다. 뜨거운 내용의 코멘트가 많았기 때문에 많이 기다리시게 했습니다.

한국측 참가자:순간의 차이로 명찰을 올리는 것이 늦어져서 굉장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도 나름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손을 드시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점점 더 부풀어 오르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뒤에 분이 기다리셔도 안되니까 가능한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발표,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흥미 깊게 들었습니다. 특히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 건에 관련해서는 매우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 점은 저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지난 달 한국에서 한중일의 기자가 참가하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정해진 테마는 세 나라의 언론이나 보도에 대해서로 특히 문화에 관한 보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었는데 지국장의 기소 직후였던 것도 있어서 화제가 그쪽으로 흘러서 분명 일본측 참가자로부터 산케이신문의 문제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조금 테마에서 벗어난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본래의 테마를 우선하기로 하면서 그곳에서는 그 이상 논의를 하지 않았지만, 세션이 끝난 후의 점심식사 자리에서도 화제는 자연스럽게 그 문제로 옮겨가 한국측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의 한국측 견해도 대체로 조금 전의 한국측 발표내용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기억합니다. 결국 그 세미나의 오후 세션에서 조금 전에 나온 이야기에 대해 보충하자는 형태로 그와 같은 내용의 회답을 했는데, 하지만 거기에서는 조금 전의 한국측 발표에는 없었던 점을 담았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느냐하면 언론의 자유 문제로 일본측 분들은 이 건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10 월 9 일에 일본신문협회가 낸 성명문-6 줄의 내용이었는데-에서도 기소는 지나치다, 빨리 처리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히신문의 위안부문제 기사, 특히 요시다 세이지 씨와 관련된 보도를 자기검증하고 취소한 것과 관련해서 일본사회에서는 그 당시에 기사를 쓴 기자였던 우에무라 타카시 씨에 대한 협박과 압박이 심한 것 같은데-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이것에 대한 것도 성명문에 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지적을 덧붙였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는 않았지만, 일본측에는 그 나름으로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았는데 그때의 일본측 참가자 분을 후일 만났을 때에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접어 두고 한국측 발표에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세 가지, 이번 건이 시사하는 바를 다루었는데, 모두 중요한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신중해야 했으며, 또 보도의 문제는 보도로 해결해야 하며 권력이 개입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품격 있는 보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특히 마지막 부분은 무턱대고 조금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차분한 보도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일본측 분으로부터 시행 직전의 특정비밀보호법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신문방송편집협회, 기자협회, 언론조합 등 크게 세 개의 단체가 있는데, 일본은 신문협회가

전체를 커버하는 기구로 되어 있고, 그 신문협회가 평론을 하거나 의견서를 내거나 하지만, 특정비밀보호법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작년에 한 번 내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과연 일본의 미디어가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추적하거나 구체적으로 일본정부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가, 또 비판할수 있는가, 조금 더 파헤쳐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기소문제로 이야기를 되돌리자면, 이것이 문제라는 것은 이미 인식이 일치하고 있는 바이므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회의를 통해 성명문을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제가 여기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부터 화제에 오르고 있는 자기검증에 관한 것입니다. 일본측으로부터 조금 전에 한국의 미디어는 자기검증을 그다지 하지 않는 듯한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 질문이 산케이신문 건의 기사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기사의 내용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조금 전의 공익성·공공성·진실성의 세 요건으로 기소 유무가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은 한일 양국의 법에 공통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자기검증을 한다는 것은 아무런 부끄러울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가령 자기검증에서 이것은 잘못된 사실에 의한 기사였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기소유예가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최선의 방법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기소되었다는 것 자체에서 문제가 출발한 것이니까 이미 기소된 현재의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며, 그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자기검증, 카토 전 지국장의 자기검증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일본측의 발표자는 뚜렷하게 규탄으로 편향된 보도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해 주셨고, 알찬 내용의 발표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약간 보충을 하고 싶은데, 그것은 예로 드신 것이 한국의 대형 신문사였다는 점에 관한 것입니다. 즉, 그 이외의 다른 신문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지면을 체크하는 입장에서 1 면에서 마지막까지 모든 기사를 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즉-일본관련 보도에서는 특히 그랬는데-조급해 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한 발짝 떨어진 신중한 보도를 명심한다는 방침에 따라 저희 회사에서는 자위대의 기념행사 등의 뉴스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즉, 기사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일 양국의 민간교류 뉴스도 실제로는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4 월의 세월호 침몰사고 후, 일본의 고등학생들이 사고의 희생자 지원을 위한 모금활동을 했다는 정보제공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상세하게 물어 보았더니 한국의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학교 학생이라고 했는데, 사고 소식을 접하고 무언가 도움이 됐으면 하고 모금활동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서둘러 기사로 게재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일본에서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만났는데, 그 분은 수년 전부터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합창회를 조직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더 발전시켜 일본 내의 가곡 콩쿨에서 입상한 일본인 학생들과의 합동합창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있고, 그 활동을 통해 얻은 감상 등을 취재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민간교류라는 것은 일정하게 보도되고 있는 것이며 반드시 규탄 일변도의 보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일 양국 사이의 문제는 특히 신중하게, 차분하게, 여유를 가지고 보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보충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사정이 있어서 오후에는 끝까지 출석을 못합니다. 따라서 발언의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를 빌어-여기까지의 논의의 흐름에서 벗어나고, 진짜라면 회의 결말에서 말해야 할 내용이지만-하나 코멘트를 덧붙이고 마치고 싶습니다. 이번 회의도 포함해서 현재의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내년의 국교정상화 50 주년을 어떻게 맞이하고, 또 거기에서 어떤 희망을 담을 수 있느냐가 자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50 주년이라고 해서 그것이 말로만 따로 분리되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50 주년이라 하더라도 너무 그것만 가지고 지나치게 요란을 떨 필요는 없다. 50 주년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고 되면, 그러면 51 주년에는 아무렇게 해도 되냐라고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원래 한일 양국은 좋고 싫음에 관계 없이 서로 위치를 옮길 수 없는 이웃관계로 지정학적 운명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양국관계를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폭넓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조금 더 큰 안목으로 그러한 상황을 인식해야 하며, 50 주년제에 잘되지 않았다면 51 주년에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는 시각-신중하고, 침착하게, 여유를 가지고라는 문구가 여기에도 적용되는데-도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션 3 사회자: 감사합니다. 세션의 종료 예정이 12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산하면 지금 이토타를 세우고 있는 네 분이 5분씩 정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 끝으로 두 발표자에게 마이크를 넘겨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정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전제에서 먼저 네 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일본측 참가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로 저널리스트 분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평상시에 독자로서 접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입장에서 논의에 끼어들어도 되는지 조금 고민도 되지만, 그러나 역시 독자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려 둘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특히 신문사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일 없이 여러분이 말했듯이 일한 양국 간에도 연대가 있었는데라고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신문 간에도 차가 그다지 없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거의 차가 없었고, 왜 일본의 신문이라는 것은 모두 비슷한 것을 쓰는 걸까, 어느 신문을 구독해도 다 같다고 생각했던 시기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매우 치열해졌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에는 그 치열한 경쟁이 보도의 내용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 혹은 논설을 왜곡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약간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위안부보도를 아사히신문이 취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오보인 이상 더 빨리 취소하거나 사죄하거나 했어야 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뭐라고 하면 좋을까, 강제연행은 없었다. 혹은 강제연행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되면 이번에는 반대파 신문이 어떻게 쓰게 될 것인가라는 것이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혹은 기타 미디어는 어떻게 보도하느냐. 이것에 대해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독자의 입장에서 특별히 아사히신문을 비난하기 위한 보도를 보고 싶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비난을 하기 전에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해 줬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실제로 일부 미디어, 특히 주간지류에서는 위안부는 거짓말이고 그녀들은 단순히 매춘부에 지나지 않았다는 식의 극단적인 논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만 보여지고 있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없어져 버리고 한가운데에서 논의되어야 할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잊혀져 버린 것, 이것을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역시 군사기지의 주변에 있었던 여성들과는 달리 전쟁터에 내몰려졌던 것이므로 분명히 전시동원인 것입니다. 집단적 기억이라는 것은 그러한 위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과거의 기억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저도 비슷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저것은 당시의 집단적 기억이었구나’라고 재확인한 바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식민지에 있어서 전쟁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인에게 있어서의 전쟁의 기억과는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시동원한 측, 당한 측에서 같은 것이 다르게 보이는, 다르게 기억되는 이것도 당연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것은 특별히 일본과 한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제 1차세계대전 때에 인도에서 몇 십만의 병사가 강제적으로 전시동원되어 유럽전선에 파견되었던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서 있는 것인데, 어쨌든 전시동원의 문제라는 것은 역시 중대한 문제로서 엄연히 남아 있고, 그리고 위안부문제의 보도를 아사히신문이 사죄했으니까 사죄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내지는 취소했으니까 이것으로 문제는 끝났다라든가 그러한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식의 결론이 나오는 것에 관해서는 역시 모종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즉, 신문사 간의 경쟁이 너무 격해진 결과로서 논의 그 자체가 왜곡되어 간다는 것을 독자로서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다른 분이 말씀하셨던 권력과의 거리라는 문제에 관해서도 저는 신문사에 따라서 거리가 다른 듯한 느낌이 역시 듭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부분도 서로 감시하면서 이것도 다른 분의 표현이지만 「보도의 내용으로 승부」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독자의 입장에서 드리는 부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측 참가자: 첫 부분에 일본측으로부터 한국측에게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요시다증언의 허위성에 대해 일본 국내에서는 옛날부터 주장되어 왔지만 실은 더 빨리 그것을 밝힌 것은 제주신문이었다, 그런데 왜 한국 미디어는 제주신문의 보도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냐라는 것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실제에 관해서는 한 개인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본 바로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한 관심 높지 않았다고 할까, 한국에서는 요시다증언 자체가 처음부터 그다지 중요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발언에도 있었듯이 아사히신문의 요시다증언에 관한 오보와 관련된 보도, 그 자체에 의해 강제연행의 증거가 모두 무너졌느냐라고 하면 전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보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은 문제를 너무나도 전체로 확대시키려는 오류가 빈번하게 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부 극단적인 미디어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특정 언론인의 태도만이 아니며, 어제와 오늘 논의되고 있는 아베정권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도 그러한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나온 질문은—이미 다른 분이 충분히 답하셨다고도 생각하지만—일본에는 명예훼손, 특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몇 가지 특례가 있어서 명예훼손으로 간주되지 않는 일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어떠한지였습니까. 이 점에 대해 저 나름으로 보충하면, 실은 명예훼손이 형법에 기재된 나라는 그다지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형법이 일본의 형법을 그대로 흉내 내서 만들었었다는 사정이 크지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명예훼손을 형사적인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일반불법행위 중에 이른바 명예훼손 부분 서면에 의한 명예훼손,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도 포함되어져 있어서, 민사상의 소송으로서 대체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접어 두고 한국에서 언론보도에 관한 명예훼손의 적용은 노 무현 정권기부터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것들은 형사사건으로서 문제가 되는 종류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산케이신문의 케이스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것으로 민사상의 명예훼손 부분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형사고발에 의해 행해지는 점에서 특이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어쨌든 명예훼손의 판정 자체가—실제로 했느냐 아니냐 이상으로 위법성을 채우느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기 때문에—매우 어려운 문제인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피할 수 없으며 관계자에게 있어서는 부담도 클 것이라는 것이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방법 또는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본측 발언 중에 한국의 언론의 자유에 관한 의견도 있었는데, 만약 언론의 자유를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로 해석하는 것이라면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에는 무한의 자유가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무슨 뜻이나 하면,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한국에서 비판을 가장 많이 받고, 또 비판하기 쉬운 인물은 박근혜 대통령이니까 최고권력자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을 다한다는 뜻에서라면 언론의 자유는 온전하게 확보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이것은 일종의 말놀이이며 권력의 개념부터가 다릅니다. 원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나 하면 타인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한 권력이라고 하자면 옛날에는 정치권력을 말했지만, 지금은 권력의 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민간분야에서 한국의 정치권력에 필적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도 있는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감시,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면 그러한 이동한 권력이 대상이 되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의 언론의 자유라고 했을 때에는 이것이 큰 과제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본측 참가자: 감사합니다. 이 세션을 들은 감상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이미 조금 전의 분이 말씀하신 것에 가까운데—미디어의 책임에 대한 것으로 먼저 일본의 미디어는 전쟁을 일으킨 책임의 일부를 면하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만주사변 현지에 특파원을 보내 판매부수경쟁으로 인해 점점 기사내용이 과격해진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어떤 의미에서 비슷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역시 심한 판매부수의 경쟁이 일본측의 발표에도 있었던 과격하 보도내용의 일부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히 경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는 모두 기자이고 판매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자 개인이 신문을 많이 팔고 싶어서 그러한 보도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로서는 수익을 올려야 합니다. 그러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어딘가 지면을 만들 때 다른 회사와 차별화해야 한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더 내세워야 한다는 식으로 됩니다. 그러한 노선을 각사가 달려 간 결과, 점점 첨예화되어 가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관한 논의를 들으면서 다시 생각해 봤는데, 저의 직장에서도 아사히신문이 정정하는 것을 보고 지면에서 비판 기사를 짚지 어떻게 할지가 논의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다른 신문 정도는 아니었지만 자숙을 담은 비판과 같은 내용으로 기사를 게재했는데, 저 개인은 일절 평론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분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로 감싸는 것은 말도 안되지만 역시 경쟁은 지면에서 해야 하며, 한 번이나 두 번이라면 비판도 좋겠지만 잡지에서 하는 것처럼 그것으로 시종해서는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덧붙이자면 그 한 건으로 인해 아사히신문을 구독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람은 대신에 요미우리신문이나 마이니치신문, 닛케이신문, 산케이신문을 구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문구독 자체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즉, 신문 자체가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아사히신문의 오보를 그냥 비판하고 있으면 된다는 것은 너무 안이하며 신문

자체가 신뢰를 잃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우리들도 자신들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점인데 조금 전부터 미디어의 역할은 권력의 감시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 저는 큰 틀에서는 찬성이지만 동시에 이제 그것만으로는 안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민당 1 당 지배가 계속 이어졌던 시대, 혹은 한국에서 1 당 독재가 계속됐던 시대는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이 하는 일을 야당처럼 전부 체크하는 입장에서 하면 됐지만, 예를 들면 자민당이 야당이 되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는 민주당을 비판하고, 민주당을 체크한다. 그리고, 또 민주당이 야당이 됐을 때에는 이번에는 자민당을 비판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역시 독자에게 신뢰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권력의 체크는 하더라도 거기에는 자신들이 권력에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안이 없다면 단순한 비판만하고 비전이 없는 야당과 같은 존재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원전 문제를 예로 들면 원전에 찬성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안전을 확보하느냐라는 설명을 보도 안에 해야 하며, 원전에 반대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에너지를 확보하느냐라는 것에 대해 미디어로서 대안을 제시해 가야 합니다. 그것을 못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신뢰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을 자숙의 뜻을 담아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일본측 참가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표자 두 분께는 매우 유익한 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더 많은 한국측 미디어 분이 들었더라면 하는 마음에서 유감스럽지만 굳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션에 대한 코멘트인데, 지금까지 꽤 문제점이나 혹은 여러 가지 답도 전부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지금의 언론보도가 놓여진 환경이 이른바 인터넷사회라는 것을 시점으로 가져 두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인터넷사회라는 것은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보소개의 수단을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모두가 저널리스트, 더 나쁘게 말하자면 파파라치와 같은 세계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언론, 보도를 어떻게 전개해 갈 것이냐라는 질문이 남게 되는데, 사회적 영향으로서 「규탄저널리즘」이라는 것이 나온 부분이 사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사회의 특징으로서 확실한 것, 즉 흑이나 백이나, 정의의 편이나 악당이나라는 단정이 선행된다는 점이 있으며, 매우 꺼림칙한 이야기이지만 그러한 것이 실제로 꽤 영향을 주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가운데 역시 그것이 거만하다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지만—프로로서의 저널리스트 의식을 역시 가지고 일하지 않으면 바른 언론은 펼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역시 모든 의미에서의 비평정신이 필요하고, 그것을 유지해 가는 것은 결국 견식과 양식과 하나의 개인으로서, 저널리스트로서의 사명감일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코멘트하고 싶습니다.

세션 3 사회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발표자 두 분에게 총괄과 추가 코멘트를 부탁하기로 하겠습니다. 각각 10분 이내에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측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측 발표자: 저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생각도 정리할 수 있었고, 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해 주신 질문도 논의 과정에서 거의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그 이외의 남은 것이라고나 할까 제가 답해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본측으로부터 제기된 질문으로 일본에서는 보도의 정확성을 위해 악전고투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검증부분이 약한 것처럼 생각된다, 보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나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일본보다는 한국의 노력이 약하며, 앞으로 한국이 더 강화해 가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New York Times 에서는 2003 년 일이었던가요, 기사의 표절과 날조가 밝혀진 제이슨 블레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기자가 쓴 수많은 기사가 날조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옴부즈맨 기능과 체크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 유사한 시도로 저희 회사에도 월 1 회 정도, 시민이 기사를 검증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모습을 신문의 거의 한 면을 써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학자, 독자, 기타 매스컴 경험자들이 모여 월 1회 정도, 특정한 테마에 관해 보도가 적절했는지 어땠는지, 독자의 관점은 어떤지를 논의하는 제도도 있으며, 그 모습도 공표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 하나의 기사, 특히 크게 다루는 기사의 오보에 관한 체크는 한국의 미디어는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인 압박을 느낄 때, 즉 기소되는 민사상의 당사자가 있을 때 그것을 면하기 위해 하는 정도이며, 그러한 면에서는 일본 쪽이 앞서 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사히신문의 오보와 기사취소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이 있지만, 그것과는 별도의 의미로 저는 32 년이 지난 후에 오보를 취소하는 것은 웬만해서는 하기 힘든 일이며, 또

그것을 스스로 크게 보도하는 신문사는 그렇게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의 자기체크 사례라는 의미에서 의의가 있는 케이스로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명예훼손 문제에 관한 지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특례조항이 있다고 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특례조항은 없지만 법원의 판례를 통해 비슷한 원칙이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점에서 한일 양국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아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산케이신문 건에 관한 일본의 한국비판의 배경에 이번 사건이 일본인의 과거기억을 불러일으켰다고 할까, 군사정권기에 미디어를 탄압한 선례를 상기시킨 그러한 사정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1970년대에는 요미우리신문사의 편집국장이 북한의 김 일성 주석을 인터뷰했다는 이유로 한국지국이 폐쇄된 일이 있었고, 1979년 1월에도 마이니치신문의 지국장이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추방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 1980년의 광주사태 보도와 관련해서 일본의 각 신문사가 박해를 받거나 추방된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선례에서 불안해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사회의 상황이나 그 발전경로와 같은 것에도 오랫동안 한국사회를 관찰하고 계신 입장으로서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고, 전문가로서 신중한 접근을 부탁드립니다. B급 신문이 아니라 A급 신문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대체적인 답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짚막하게 총괄을 말씀드리자면 저널리스트는 하나의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권력의 감시거나 좋은 기사를 쓰는 일이거나 저널리스트로서 종사한다는 의미에서 「같은 배」를 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어떤 의미에서 「동료의식」을 가질 것, 즉 한국의 저널리스트라든가 일본의 저널리스트라든가, 또 어디 어디 신문의 소속기자라든가와 같은 소속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널리즘이 독자에게 사랑받을 것인가라는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실감한 것을 말씀드리며 이야기를 맺고자 합니다.

세션 3 사회자: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본측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일본측 발표자:감사합니다. 한국측 발표자 선생님께서 「같은 배를 탄 사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어쩌면 이곳에 있는 전원이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접어 두고 논의 중에 몇 가지 지적을 받고 제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발표에서는 큰 신문이라는 점에서 요미우리나 아사히, 동아일보를 일부러 다루었지만 관대한 코멘트에 감사드립니다. 또, 충분히 담지 못했던 부분에 관한 지적에는 전면적으로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금 전에 나온 전원이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표현, 이것은 저 자신도 실감하고 있는데, 일한관계를 생각할 때 일한 두 나라 어느 쪽도 옳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고, 또 모르는 것도 매우 많습니다. 특히 역사문제나 영토문제는 일반 분들로부터 질문을 받아도 정말로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 이 역사문제나 영토문제를 다루는 저널리즘이 매우 각국의 내셔널리즘과 긴밀하게 이어져 있으며, 그 결과 무언가 저널리즘이나 혹은 일부 연구자도 나라의 위신을 걸고 사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도 나왔지만 어느 어느 나라의 저널리즘이라는 감각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저널리즘이라는 것은 본래 조금 전에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보다 좋은 정책의 실행이랄까, 사물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역할을 다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역사문제나 영토문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혹은 문제 그 자체의 구성요소가 되어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 탓에 쓸데없이 사태가 이해하기 어려워진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위안부문제를 둘러싼 아사히신문과 산케이신문의 논조 등을 보고 때때로 느끼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냉정한 사물의 사고나 해결을 방해하는 편견이 되어서 사회전체, 저널리스트 뿐만 아니라 전문가나 연구자, 결국은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매우 압력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압력이나 하면, 예를 들면 어떤 전문가가 일한관계에 대해 미디어로부터 코멘트 의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확실히 주장하는 타입의 사람이 아닌 이상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쪽도 옳지 않다라든가, 모르겠다든가 그런 느낌의 코멘트가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신문독자에게는 지향하는 컬러가 있기 때문에 그 독자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불만족스러운 코멘트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비판의 이메일이나 우편물이나 전화가 오게 됩니다. 이것은 상당한 압력이라는 것입니다. 즉, 어느 신문이든 자신의 색깔에 따르는 같은 방향의 논의나 회답, 의견 이외에는 미리 사양한다는 식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매우 좋지 않은 것입니다. 각각의 신문이 각각의 주장을 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지만, 그 이외의 견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독자분도 항상 100% 의도한 것을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독도 많습니다. 부분 부분만을 받아들여 읽으려고 합니다. 그 결과, 의도와는 정반대의 의미에서 다루어지는 일도 간간이 있으므로 압력은 점점 늘게 됩니다. 그러한 구조가 생긴 것도 꼭 말씀드려 두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션 3 사회자:정확하게 시간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3 세션 「양국 언론보도의 현상과 과제」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알찬 논의가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조금 유감스러운 것은 한국측 참가자의 출석이 바쁘셔서 그런지 적었다는 점인데 오후세션에서는 이 점도 개선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어쨌든 발표자 두 분, 그리고 참가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후의 중식회에서 오후세션을 위한 에너지를 비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방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세션 4: 「총괄토론」

(한국국제교류재단 관계자):그러면 지금부터 최종 세션인 「종합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션은 양국 공동사회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자 두 분 잘 부탁드립니다.

일본측 사회자:제 4 세션 「총괄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기본적으로는 자유토론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제 하루 종일 그리고 오늘 오전에 매우 좋은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좋은 논의를 토대로 하여 약간 시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지금부터 네 시까지 약 한 시간 반, 총괄토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테마, 전혀 다른 테마라도 자유롭게 발언해 주셨으면 합니다. 토의 개시니까 제가 이 세션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의 논의에 참가한 감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머리에 이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지금의 일한 상황에서 생각하면 꽤 어려운 논의라고나 할까, 서로 충돌하는 논의가 될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역시 이 「한-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라는 프레임의 효과라고 할까, 거의 같은 멤버로 회를 거듭해 감에 따라 매우 좋은 의미에서 논의가 mature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해 오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냉정함도 느껴집니다.

오전 중의 세션에서 한국측 분이 말씀하셨듯이 여유를 가지고 논의한다는 점이 이번 회의에서 느껴졌습니다. 어제의 제 1 세션에서 일한관계가 제 3 스테이지에 들어 있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이 자주 쓰는 유행어를 비틀면 이러한 비교적 냉정한 형태로 성숙한 논의가 이루어진 일한관계라는 것이 뉴노멀이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뉴노멀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차분한 거리감이지만 그 차분한 거리감이라는 것은 현안 사항을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열의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는 저해요인은 아니지만 큰 추진력은 안되는 부분이기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서로 성숙한 여유가 있는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안사항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열의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이러한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더 덧붙이자면 저는 매우 훌륭한 포인트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전의 발언에서는 왜 50 년이나. 51 년이면 안되느냐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여유,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가진 일한관계라는 점에서 보면 당연히 나올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50 년이니까 그때까지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은 엄연히 있는 것이므로 이 두 가지를 잘 링크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감상입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의 세션 등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역시 특히 정치, 안전보장 상황을 생각하면 일본측에서 봤을 때에 한국에 대해—이것도 과대한 기대일지도 모르겠지만—아무래도 일중관계가 일한관계에 매우 투영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 듯합니다. 일중관계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매우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줄리어스 시저는 아니지만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느낌이 약간 일본측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어서 큰 지역의 상황변화라는 것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대응이 보이기 때문에 일본측에서 이것에 대한 욕구불만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의 모순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어제 한국측 발표에 등장한 유라시아그룹의 이안 브레머라는 저도 알고 있는 매우 우수한

국제정치학자, 싱크탱크인데 올해 1 월에 매우 흥미로운 리포트를 냈습니다. 이것은 매년 유라시아그룹이 하고 있는 올해의 10 대위험이라는 리포트인데, 2014 년에 상정될 수 있는 10 개의 큰 위험이라는 것 중에 그들이 첫 번째로 꼽은 것은 동맹국의 위기라는 테마였습니다. 일본, 영국, 이스라엘과 같은 미국에 있어서의 Tier-1, 중핵적인 동맹국은 올해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만나다. 다른 한편으로 Tier-2—이것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이언 브레머의 말인데—즉, 한국, 호주 등의 동맹국은 아마 미국이 내정상의 이유와 기타적인 것으로 그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가운데 한국과 호주는 중국으로 이행해 갈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일한관계라는 것을 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가운데 어떻게 인식해 갈 것이냐라는 시점은 역시 중요하며, 이것은 단순히 내년의 국교정상화 50 년만이 아니라, 51 년에도 52 년에도 53 년에도 직면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지역균형 속에서 한국이 어떤 위치를 취할 것이냐, 일본이 어떤 위치를 취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한 양측의 동맹국인 미국은 이것을 당연히 관찰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각각의 나라의 위상이 어떻게 되어 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의 Wall Street Journal 등에 크게 보도되고 있는 것과 같은, 예를 들면 고고도 미사일 방위시스템 (THAAD)의 한국배치와 같은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향후 동맹관계, 안전보장관계, 일본과 한국과의 지정학적인 위치의 차이, 경제적인 입장 차이, 그러한 것이 있지만, 그것을 향후 어떤 식으로 「조절」해 갈 것인가로 바꿔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현재는 역사문제 등을 둘러싼 일한 간에는 문제가 있지만, 일본과 한국의 사이에 GSOMIA(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와 같은 협정을 맺지 못한 것과 같은 상황의 영향이라는 것이 향후 어떻게 크게 되어 갈 것인가. 그러한 점도 중장기적인 일한관계를 생각했을 때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총괄도의 때에 저로서 제기하고 싶은 문제의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저의 발언은 이 정도로 하고 한국측 사회자 선생님이 또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측 사회자:감사합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사회를 담당하는 것은 이전 세션에서 이야기 나온 공정성의 관점에서라는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또, 늦게 참가하게 된 것을 먼저 사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본측 사회자가 현안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참가하신 세션의 연장선상에서, 또 저널리스트가 주제인 회합이므로 양국 언론미디어에 접하고 느낀 감상을 말씀드리고 문제제기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현안에 관한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보도에 관한 것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일본측 발표자가 마지막에 제기하셨던 문제 중 하나와 관련되는데, 한일관계에 좋은 영향을 주는 보도는 과연 어려운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에서 보도되고 있는 뉴스를 보면 긍정적인 뉴스를 찾는 것이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한국측에서는 좋은 뉴스도 전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그것이 작은 목소리라는 것은 역시 부정하기 힘들며, 지면을 크게 장식하는 것은 정말로 부정적인 뉴스 뿐입니다. 저도 여기에서 한국과 일본 미디어에 접할 때, 서로 상대에 가지는 편견이나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지만 부정적인 뉴스만 넘쳐날 것 같습니다. 특히 정치외교분야에 있어서 그러한 현상이 뚜렷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이라서 저는 조금 전의 논의에 나온 「좋은 기사」를 많이 써야 된다는 말에 흥미가 끌렸습니다. 과연 미디어 관계자로서 한일관계에 관한 「좋은 기사」라고 한 경우, 그 기사의 가치판단기준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 이 소박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여러 곳에 가서 특히 부정적인 기사를 실는 주간지의 관계자에게도 그러한 기사를 쓰는 이유를 물어 본 적이 있는데, 그러한 때에 돌아오는 답은 대개 부정적인 기사를 쓰는 편이 팔린다는 안이한 것이었습니다. 가치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저널리스트로서 변화시킬 수 있느냐,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것은 언론의 본질에 맞지 않는 것인가. 지금까지가 첫 번째 문제제기입니다.

두 번째는 오전의 세션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됐던 언론의 자기검증이라는 문제에 관해서인데, 양국의 미디어에 접하고 느낀 것은 한쪽으로 한쪽으로 내뽐다고 할까요, 균형을 유지하기보다는 한쪽으로 기울어, 몰아가는 듯한 경향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양국의 불신감이 조장되고, 대단히 과민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뚜렷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사히신문을 변호할 마음은 없지만, 아사히신문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이번에 경험했는데, 기사를 철회한 후까지도 계속 비난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언론의 자기검증 비추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인상을 저는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정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미디어끼리의 경쟁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과 같은 양상은 공정성을 담보하는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 3 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약간 우려되는 바입니다. 조금 더 시점을 넓게 잡아서 한일관계 전체에 관한 보도를 보아도 일본으로 하자면 「한국에서 이해하고 있는 일본」은 실제의 일본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 한국에서 보아도 「일본에서 쓰여지고 있는 한국」과 실제 한국모습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즉 서로에게 상대의 모습을 새삼스럽게 그로테스크하게 그리려고 하고, 상상된 이미지를 증폭시키고 있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언론끼리 한일 양국에서 서로 리뷰를 해 보는 등 상호검증하는 방법은 있을 수 없을까라는 것도 두 번째 질문으로서 꼭 의견을 여쭙어 보고 싶은 바입니다. 진실과 사실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이미지에 의해 한일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여쭙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품격 있는 언론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또 프로로서의 저널리스트의 모습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는데, 실은 언론만이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도 품격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한국에서는 종합채널이라는 장르의 방송이 활발해지고 나서는 훌륭한 학자는 저런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또,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그렇게 양질이라고는 할 수 없는 코멘테이터를 그러한 종류의 프로그램에서 자주 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탓인지도 모르겠지만, 신문기자 분들에게 그 기사의 그런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라고 물으면 그건 벌써 인터넷에서 나돌고 있어서 어떤 주요 신문이라도 그것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와서 놀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가십성의 기사가 어느샌가 「정설」인 것처럼 정착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산케이신문 건도 산케이 자신의 오류보다는 찌라시와 같은 것의 내용이 지면에 실리고, 게재되었다는 것에 의해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이야기되고 있다는 초조감, 이것을 무시해서 다른 미디어에 뒤처져서는 안된다는 초조감, 그리고 쓸 수 있는 소재는 써야 된다는 초조감, 즉 조금 전의 여유 있는 미디어라는 표현과는 정반대의, 다른 회사가 썼으니까 우리도 써야 된다는 초조함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이미 옛날이야기가 되어 버렸는지도 모르지만 때로는 침묵도 하는, 또 침묵하는 방법을 아는 언론과 보도기관이라는 것이 실은 중요한 역할을 다해 온 것이 아닐까라고 느껴집니다. 모든 것을 최대한 빠짐없이 전하는 일도 언론의 역할이지만 동시에 non-decision making (무의사결정)이라고나 할까요, 침묵하는 것으로 방치하는 것도 보도기관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저는 줄곧 생각했었는데, 오늘날에 있어서 이것은 역시 실현 불가능한 꿈,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그러한 문제제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종합토론은 어떤 테마라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일본측 사회자가 하신 문제제기,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다면 이곳에 모인 다양한 입장의 참가자에게 있어서 자극이 되는 이야기가 실현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로부터는 이상입니다.

일본측 사회자:그러면 지금부터 자유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름표를 세우고 의사표시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그쪽 일본측 분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일본측 참가자:그러면 저는 지금 지적이 있었던 것도 포함해서 50 주년을 위해 매스컴이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를 몇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웬지 일본 기자 분에게 일본의 제가 이야기하는 듯한 상황이 되어 버렸고 한국 분이 적은 것이 유감스러운데, 먼저 하나는 지금 지적이 있었던 가치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관련된 것으로 매스컴의 상업주의에 대해 조금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이 경우에는 30 년 정도의 기간이 되었는데, 일본의 신문사에 있어서 상업주의는 이 동안 꽤 진행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기자가 출판물을 내거나, 사외의 잡지에 기고하는 등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조건을 붙이지 않았지만, 그것이 어느 사이엔가 신고제가 되고, 또 출판물의 경우에는 저작권이 회사에 귀속하게 되었습니다. 또, 잡지의 원고료에 대해서는 회사가 절반 가져가고, TV에 출연할 때에도—최근에는 기자의 TV출연이 늘고 있는데—출연료에 대해 회사가 절반 낸다는 식으로 되었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신문사 내에서 일어나는 언론통제다」 같은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생기고 있는 것은 어느 신문사나 대개 같거나 비슷한 상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 있는 것은 전체적인 경영기반의 약체화, 그리고 신문기자에 대한 관리통제의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광고수입에 대해 얘기하자면, 거품경제시대의 40%까지

감소하고 있으며, 판매수입과 광고수입의 비율은 옛날에는 50 대 50 이었던 것인 지금은 20%대까지 광고수입이 줄어들었고, 또 판매수입도 부수감소에 의해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원수도 줄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여 기업체로서 수익을 올려 살아남을까라는 측면과 그리고 저널리즘을 어떻게 체현해 갈 것인가라는 것이 과제인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1980년대까지의 경영과 저널리즘이 예상하는 흐름에 따르는 시대는 이미 끝나고 경영이 저널리즘에 우선되는 그러한 구조로 많은 적든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무엇이 보도되고, 어떠한 진로를 가질까라는 것이 외적요인에 의해 꽤 규정되고 있는 부분이 점점 더 강해졌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내년의 50 주년 보도도 포함해서 향후에도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신문사가 가지는 당파성에 대해서인데, 조금 전에 연구자나 일반인이 느끼는 고립과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2012 년의 총선거 후, 아베 내각이 발족했을 때에 고맙게도 어떤 신문으로부터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아베 내각에 대해 여러 가지 코멘트한 것이 실린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실린 직후부터 인터넷에 저를 개인공격하는 문장이 등장했습니다. 그때 처음 고립과 그리고 권력이 직접 공격해 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신문의 당파성이라는 것은 물론 유럽의 신문을 보아도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부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 있음에 의해서 어떻게 자신이 지켜지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통감하였습니다. 또, 그런 일이 있고 깨달은 것은 원래 저널리스트라는 것은 독립적이어야한다고 교과서 등에는 적혀 있지만 과연 그런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우파와 좌파가 제 1 차세계대전의 참호선과 비슷한 것을 하고 있는 즉, 안심하고 같은 편만 있는 곳이기만 한 언론의 결과물을 낳고 있으며, 또 때때로 얼굴을 드러내어 반대측을 공격하는 듯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러한 언론의 참호선이라는 것은 그다지 건강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파성은 물론 전제로 한 위에서 신문이라는 매스미디어가 가지는 포럼성이라든가 그리고 제언성, 그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독자는 신문을 여러 개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신문만을 보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든 공간이 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물에 대한 상대성이나 보다 다양한 견해, 가치관이라는 것을 인식할 기회가 신문에 의해 주어지지 않는 것은 신문의 신뢰성이 필연적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이 당파성을 가지면서도 독립성이나 포럼성 등을 생각해 가지 않으면 일한문제 한 가지를 보더라도 까다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한국 분에게 여쭙어 보고 싶은데, 글로벌화 시대에 있어서의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한국은 도덕지향, 일본은 법실증주의라는 오구라 키조 씨의 사고방식은 분명히 그러한 경향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글로벌 스탠다드의 관점에서 보았을 경우, 사회나 통치시스템을 성립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법과 정의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예를 들면 위안부문제에 대한 구미 여러 나라의 비판이라는 것은 역사문제로서의 비판이라기보다 인권문제로서의 글로벌 스탠다드한 가치관에 대한 정부와 일부 사람들의 주장의 어긋남, 이 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어난 이번 산케이신문의 문제는 대통령이 어떻고라기보다도 세계에서 보는 언론의 자유나 기본적인 인권문제라는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빼고 자국의 문화, 혹은 자국의 독특한 정의를 내세우고 앞으로의 국제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한국은 대학교육도 포함해서 국제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글로벌화를 매우 의식한 기업활동도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저널리즘의 세계, 혹은 위안부문제로 상징되는 듯한 여론이라는 것과 글로벌 스탠다드의 관계성을 어떻게 정리해 갈 것인가라는 것, 이것도 큰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하자면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해도 한국 분이 적으면 공허한 일이 되므로 내년에는 끝까지 모두 같이 자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일본측 사회자: 그러면 다음 분 부탁드립니다.

일본측 참가자: 2014 년도 거의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내년은 2015 년, 일한기본조약 50 주년의 해가 되는데, 50 년이라도 51 년이라도 괜찮지 않느냐와 같은 논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50 년의 해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논의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회의에서도 이미 논의했지만 2011년 8월의 한국 헌법재판소의 위안부에 관한 판결, 그것을 들었을 때 저는 이것은 일한기본조약체제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따져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2015년에 그 위기가 찾아올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을 느꼈고, 그것을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글을 써 온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 이후, 2015년문제라는 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그 책임도 느끼고 있는데 처음부터 일한기본조약의 위기라는 인상을 가졌느냐하면 결국 판결의 취지에 조약 체제 그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본질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식민지 통치의 정당성에 관해 일한기본조약에는 일한 쌍방에 합의가 없다, 따라서 그러한 상태 아래에서 맺어진 조약, 그 청구권협정에는 어떤 의미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다, 또 개인보상에 관해서도 그 효력에 관해 한계가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매우 골치 아픈 이야기가 된다고 그때 직감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어제도 여러 가지 논의되었지만, 저는 일한기본조약체제라는 것은 그만큼 엄격한, 짜임새 있는 것이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분이 말씀하셨듯이 아무튼 국교가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일본과 한국의 주장을 어떻게 충돌하면서도 결론을 내야 된다는 것에서 만들어진 타협의 산물이므로 그것이 화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타협의 산물이고, 그 타협에는 애매한 부분도 있고, 나중으로 미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케시마 문제는 일본측은 뒤로 미루었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측은 애당초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센카쿠열도와 같은 논법인데 그와 같은 형태로 처리된 것이며, 일한합병의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측은 합법이며 지배는 정당했다고 교섭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한편, 한국측은 불법이고 부당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 완전히 대립되는 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므로 애매한 표현으로 「이제와서는 무효」라는, 언제부터 무효가 되었는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무효와 같은 형태로 처리하는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러한 경위, 즉 일한조약개정이라는 것은 애당초 그렇게 짜임새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 한계를 가진 체제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 첫걸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이었나 하면 그것은 합법정당론과 불법부당론인 것입니다. 지금와서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한 느낌도 들지만, 일본측의 주장은 상당히 일관성이 너무 있을 정도로 있었던 것입니다. 즉, 구 조약 그 자체는 합법이었으므로 식민지배는 합법이었고, 따라서 그것에 대한 배상은 있을 수 없다는 형태의 것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논리상 훌륭한 일관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기억이 되겠는데 제가 한국에 있었을 무렵 한국 친구들로부터 들은 이야기 중에서 가장 괴로웠던 것은 일한조약을 맺은 것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당시에는 반대했지만 이제 와 생각해 보면 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후에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본은 한마디도 사죄하지 않았다, 한마디 정도 사과해 줬으면 좋았을 건데라고 얘기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는데 것처럼 일본의 합법정당론과 한국의 불법부당론의 대립은 일한기본조약체제 아래에서 계속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에서 그것은 합법이었지만 정당하지는 않았다는 이른바 합법부당론으로 일본측은 전환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일한조약에 대한 모종의 나름의 수정과 보충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 결과 김 대중-오부치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라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한기본조약체제를 생각하는 데에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보충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의견이 일치된 것은 아니고, 따라서 원점 부분이 합법이나 부당이나라는 것, 이것은 저의 표현으로 하자면 역사문제라기보다는 국제법의 문제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쟁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고, 그것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동안의 경위, 예를 들면 일한 양국의 역사공동연구 등의 경위를 생각하면 이 문제, 즉 그 당시에 그 조약이 합법이었나, 합법이 아니었나라는 논의는 꽤 형이상학적인 논의이며, 역사의 논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어떨지 잘 모르는 논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유교적이라고 할까요, 정의라든가 정당성을 주장하는 바, 게다가 그것을 끊임없이 과거에 해당시켜 논의한다는 것은 문언을 중시하는 일본에서는 좀처럼 따를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며, 한 번 서명한 것을 뒤집는다는 것은 터무니없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되어 버립니다. 논의가 맞물리지 않는 원인은 실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문제인 이상으로 전통, 문화적인 전통의 차가 전면에 나와 버렸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국의 전통은 도덕을 중시하고, 정의나 정당성 등을 중시하는 문화이니까 만약 틀렸다면 바로잡지 않으면 안된다. 몇

번이라도 바꿔 가지 않으면 안되는 문화이지만, 일본의 문화는 문언을 중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이 도덕적으로 바르냐 바르지 않냐라는 것에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문화적인 전통이 상당히 다르며, 법률을 둘러싸고 이것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도덕지향적, 일본은 법실증주의라는 오구라 키조 씨의 지적은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지나치게 과격하게 논의하는 것은 아마 그다지 의미가 없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동안에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점점 더 바뀌고 있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쌓는다면 그 내용에는 무엇이 담겨져야 하는가, 우리들 사이에 있는 공통분모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혹은 공통과제라도 좋은데 공통하는 것이 무엇이고, 공통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나라는 것을 구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는 다른 부분을 강조했지만, 그러한 눈으로 보면 저는 일한 양국 사이에는 공통되는 사항이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중국의 대국화라는 현상에 대해 여러 가지 형태로 대응하려고 필사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과정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면 매우 이상한 현상 같은 것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에 관해 한국이 여러모로 생각하고, 그리고 미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나라와의 관계와 더불어 균형을 가지고 생각해 간다면 도달하는 곳은 결국 전방위의 외교가 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일변도가 되는 일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냉전시대부터 계속 한국 속에 있었던, 혹은 100년 전부터 있었던 전통이라는 것은 결코 그 이전의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중국이 아시아의 중심이고, 거기 외에는 문명의 중심이 없었던 시대와는 다르므로, 한국이 중국의 조공국이 된다는 것은 그다지 현실적인 견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이 최근 백수십 년 동안 경험한 것은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에 둘러싸인 한국을 둘러싼 4 대국과 같은 균형의 세계에서의 국제관계이고, 그러한 점에서 생각한다면 아마 균형점을 찾아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러한 가운데 생존해 갈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우리들이 공통분모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중국과의 사이에 있는 것보다도 일본과 한국 사이에 있는 공통분모 쪽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이 일중 사이에서 선행되고 일한이 나중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일본에 있어서도 불행한 일이고, 한국에 있어서도 불행한 일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단락 짓겠습니다.

일본측 사회자: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한국측부터 부탁드립니다.

한국측 참가자:감사합니다. 먼저 손을 들고 있었던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회자로부터 가까운 순이라는 이유에서 저에게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저는 기자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취재상대의 말을 끄집어 내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터뷰 등에서도 이야기를 듣는 역할에 집중하는 일이 많았고, 오늘 이 회의와 같은 곳에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게다가 저명한 선생님과 자리를 같이한 터라 매우 긴장해 있는데 논의의 허리를 자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감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일본측 사회자로부터 소개가 있었던 이언 브레머에 의한 2014년의 지정학상의 10대 위협에 관한 보고, 한국, 호주 등 Tier-2의 나라가 중국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관해서입니다. 올해도 약 11개월이 지났는데 최근에 한국과 중국, 호주와 중국의 FTA 교섭이 타결되었다는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언 브레머의 예측이 어떤 의미에서는 맞았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한편으로 한국은 미국과 전시작전통제권의 반환교섭을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기하였으며, 이것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작용을 초래하였고, 또 호주는 미국의 해병대를 받아들여 아시아에 있어서의 일본, 호주, 미국을 잇는 민주주의의 곡선이라고도 불려야 할 것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예측이라는 것은 좀처럼 깨끗하게 그대로 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한-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를 이전부터 계속 참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와 이번은 분위기가 바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도쿄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의견이 나뉘지는 부분이 적지 않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상의 견해에 대해 수렴이 꽤 진척된 것처럼 여겨집니다. 요전에 큰 현안이 된 산케이신문 건에 대해 그것을 정면으로 다룬 한국측 발표도 예정되었고, 또 당사자에 가까운 입장의 분도 출석하신다고 해서 특히 이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 실제로는 훨씬 온화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서로를 알면 익숙해지고 정(情)도 생긴다는, 오래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즉 계속하면

언어지는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또, 오늘 같은 수준의 대화가 가능하다면 한일관계도 진전하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또, 원래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언론의 자유를 함께 견비하고 있으므로 장기적 안목에서 본다면 한일관계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구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본측의 시각과 한국측의 시각에서 다른 부분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일본측 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이 일본측 발언의 여기저기에서 보이는 중국에 대한 혐오감 내지는 공포감과 같은 것었는데 그것 때문인지 중국에 대한 공격이 이전에 들었을 때보다도 훨씬 강하다는 점입니다. 저에게는 조금 지나치게 중국을 두려워한다, 중국을 너무 비판한다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을 벗어나 중국에 붙는 것이 아닐까. 또는, 한국이 일본보다도 중국을 중시하고 있다와 같은 의견과 상통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 최근 10 년을 되돌아본다면 노 무현 정권 때에는 동북아시아균형자론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반미감정이 강한 가운데 한국의 외교를 지나친 미국중심, 즉 친미에서 동북아시아 중심으로, 즉 중국 쪽으로 조금 옮겨야 한다는 균형론자가 많았던 것을 반영한 것으로 분명히 그것은 중국중론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현재는 제가 보는 바 주류 언론이나 주류 지식인들 중에 그러한 견해를 가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측 분으로부터 한국이 중국 중심으로 편향되고 있다, 기울고 있다라는 의견을—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보다도 훨씬—많이 듣게 되어서 약간 놀람과 동시에 조금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이미 시진핑 주석과는 5, 6 회 회담했는데 오바마 대통령과는 2, 3 회 밖에 회담하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역시 대중국편향론을 과잉하게 강조하는 경향은 시정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론을 포함해도 좋은데 왜 이처럼 중국을 두려워하는지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2010 년에 GDP 총액으로 중국이 일본을 초월했기 때문인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과대하게 공포로 여길 필요는 과연 있을까라는 것이 솔직한 인상이므로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측 분들로부터는 반드시 2012 년 8 월에 이 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것이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식사회의 자리 등에서도 그러한 지적을 받았는데, 저는 한국의 저널리스트이기 이전, 그 이전에 한국의 국민으로서 한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방문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한편으로 역시 외교적으로 매우 민감한 면이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의견은 접어 두고 일본측 분은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으로 이 독도방문을 꼽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같은 시기에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지금도 수상이지만—은 북방영토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일본측 반응을 뉴스에서 다시 보면 그렇게까지 강경하게 항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대해서는 한일관계 악화의 주범으로 다루는 한편으로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북방영토에—저는 홋카이도를 방문해서 전방대에서 북방영토를 본 적도 있으며, 이것은 분명히 일본의 영토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갔을 때에는 비판하지 않는 것은 이중적인 잣대, 이중기준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일본측의 의견을 여쭙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되겠는데, 조금 전에 일본측으로부터 한국은 전통, 정의를 중시하지만, 일본은 법실증주의로 일단 서명한 문서를 중시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 저도 감각적으로 그러한 측면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바로는 어느 쪽이냐 하면 한국인은 전체를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일본은—이화여대 교수에서 후에 문화부장관이 된 이 어령 씨가 일찌기 지적했듯이—축소적으로라고 할까, 세부를 이상하리만큼 중시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쪽이 기준을 바꾸어 더 큰 시각에서 사물을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만약 일본이 정말로 법실증주의, 법을 중시한다고 하면 센카쿠열도 문제에서 중국어선의 선장이 불법상륙했다고 해서 체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중일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등등 협박적인 언사를 늘어놓자 곧 석방해 버린 경우 등은 분명히 그것과는 어긋나며 법치주의의 나라에서 이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법치주의로 법의 결과를 중시하는 한편 한국측은 정서적이며 정의를 중시한다고 하고는 감정적으로 행동한다는 구분은 조금 다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한마디 덧붙인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측 사회자: 발언의 앞 부분에서는 인식의 수렴을, 또 후반부분에서는 차이를 지적함에 따라

논의를 자극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손을 든 순서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 번갈아가며 발언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일본측부터 발언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측에서 먼저 손을 드신 분은 그 다음에 부탁드립니다. 양해바랍니다.

일본측 참가자: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 실은 이번에 식사자리가 옆이어서 거의 한 시간 정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북방영토에 갔을 때의 반응인데 일본정부는 물론 강하게 항의했고 미디어도 매우 엄중하게 썼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타케시마 상륙 쪽을 더 심하게 비난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면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결국 대국이니까 일본이 강하게 못 나가니까라고. 한국 정도로 세계 나갈 수 없다는 사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나라가—적당한 사례인가에 대해서는 일단 제쳐 두기로 하고—예를 들면 부탄과 같은 나라가 한국이나 일본에 반발하는 것 같은 일을 했다면 그때의 부탄에 대한 한국의 반응과 중국 어선이 한국에 접근해서 한국의 해양경찰을 죽였다고 했을 때의 한국의 반응이라는 것은 역시 상대에 따라 확실히 다르다는 것은 솔직히 말하자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 뿐만 아니라 역시 한국은 일본에 있어서 우호국이므로 우호국의 대통령이 한 행동, 즉 타케시마에 간 것에 대한 실망은 그만큼 큰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와는 결코 우호국이 아닙니다. 평화조약도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감정적인 반발이나 실망감은 이 명박 대통령의 타케시마 상륙 쪽이 큼니다. 왜 우호국인데 그런 짓을 하느냐라는 반발도 있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질문에 나온 중국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바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일본측 사회자가 통괄테마로서도 제기한 중국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것이 일본과 한국 각각의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실은 저는 이번에 여기 오기 전과 지금은 다소 그것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오기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는 만난지 않는데 시진핑 주석과는 저렇게 많이 만나고 있고 해외에 갈 때마다 일본의 역사에 대해 여러 가지 발언한다는 보도만 보고 있었던 일도 있어서 웬지 한국은 중국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행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중국을 일본보다도 우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와서 생각한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도 미한동맹을 굳게 유지하고 있고 즉, 미국의 세력권 안에서 미국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 위에서 중국에 대응해 간다는 기본은 변함없지만, 역시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중국에 의존도가 크고, 또 국경도 접하고 있는 점에서 일본과는 놓인 상황이 다르다.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에서—이것은 좋다 나쁘다의 이야기가 아니라—한국은 일본 정도로는 중국과 대립할 수 없는 입장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도쿄에서 봤을 때에도 상상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역시 이야기해 보고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즉, 이행이라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중심을 지탱하는 다리는 미국에 두고 있더라도 중국에 대한 대응에 차이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국측 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데, 지금은 중국이나 미국 중 어느 쪽인가를 택하지 않으면 안되는 국면은 아니어서 한국은 경제나 북조선문제에서는 중국과 협력하고, 그 위에 미한동맹을 유지하고 안전보장을 지킨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양쪽과 잘 균형을 취하면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중국이 굉장히 크고 강대해지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힘히 약해졌을 때에 언젠가 어느 쪽인가를 선택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즉, 나라의 기본방침 운운과는 관계없이 선택해야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진심을 드러내야 하는 과제가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했던 미국의 미사일방위시스템인 THAAD, 주한미군은 그것을 배치하고 싶다고 하는데 주한중국대사는 반대라고 견제한다. 그렇게 되면 한국으로서는 어느 쪽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미사일 배치를 인정하느냐, 중국을 배려하느냐. 혹은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설립을 중국은 검토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것에 반대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미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어떻게 할 거냐고 진심을 드러내라는 압력이 하나 하나 아젠다로 던져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것이 향후에 점점 더 늘었났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역시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입지조건도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일미동맹에 중심을 두는 것이 해매는 일 없이 행동하기 쉽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그것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 부분은 어떤가라는 것이 저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국측 사회자: 감사합니다. 한국측 분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측 참가자: 조금 전에 한국측 출석자가 적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후에 약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현재의 한일 간의 경제력 차이가 1:4~5 라고 하는데 참가자 비율이 거기까지는 차가 나지 않은 듯해서 조금 안심했습니다. 다만, 한국측 참가자가 이러한 회의에 조금 더 많이 참가해야 한다—특히 멤버로서 참가했다면—고 하는 것은 이러한 회의에 참가할 때에 종종 느끼는 일이며 주최자측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 면밀히 체크하고 참가할 수 없는 분들은 리스트에서 빼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뼈아픈 지적인데 올림픽은 아니지만 참가하는 데에 의의가 있는 회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회의과정에서 언론의 존재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되었는데, 여기까지는 시간관계로 그것에 대해 자신이 얘기하고 싶은 것을 충분히 얘기하지 못한 채 끝나 버렸기 때문에 먼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좋은 기사가 무엇이나, 좋은 언론, 미디어란 어떤 것이냐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의견에는 화합하는 기사라든가 좋은 면을 보도해야 한다와 같은 식으로 주로 제재 부분이 염두에 두어진 듯이 여겨지는데, 저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무엇을」 보다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산케이신문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백의 일곱 시간」에 관해 쓰는 것, 그 자체는 특별히 비난할 일은 아닙니다. 기사로서 다루기에 충분한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과연 그 제재가 기사가 되는 과정에서 기자—즉, 우리들—가 이 정도라면 문제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기사가 써졌는지 그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사라는 것은 실은 완벽한 자신감 아래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쓴 기사는 항상 맞다, 완벽하다와 같은 기사는 실제로는 나쁜 기사일 수도 있고, 그것보다는 자신이 쓴 것은 반드시 공정하다고만은 할 수 없으며, 객관성을 잃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기본적인 대전제 아래에서 자신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대단한 노력을 해 왔는가. 그 결과가 기사의 평가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특별히 저 혼자 생각이 아니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아니라 투명성이 문제라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읽은 책에서는 미국 주요 미디어 논조의 흐름이나 저널리스트 수백 명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현 시대의 언론은 아무리 노력해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 그러면 무엇에 근거해야 하느냐라고 하면 결국은 투명성이다라는 결론을 이끌고 있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이러한 기사를 썼느냐가 평가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좋은 기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항목, 어떠한 것을 다루어도 좋지만 납득이 가는 기사, 독자도 그렇고 상대도 납득이 가는 기사를 쓰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더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던 ‘좋은 기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논의를 돌아본 감상인데, 어제 발표 중에 일본측에서 1965 년 체제에 관한 언급이 있었고, 특히 1965 년 체제는 성공적인 타협의 산물, 성과이고, 또 그와 같은 성과를 흔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한국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와 같은 취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틀린 지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965 년의 한일기본조약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가라는 시대적인 배경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크게 보면 냉전의 해체, 한국의 경제력 상승, 한국의 민주화와 같은 각 요소가 지금까지 억압되고 있던—한국인의 관점에서 보아서—과거사 해결을 언급하지 않은 1965 년의 기본조약, 평등이 결여된 조약에 기인한 불만에 대한 문제제기를 표면화시켰다는 것이 실제적인 부분이며, 그것이 법률적·정치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본적인 흐름이라고 해서 그것은 조약을 백지로 되돌리고 새로 다시 만들자고 하는 움직임과 반드시 같지는 않다라는 것도 덧붙여 두고 싶습니다. 백지철회·파기와 같은 근본적인 주장도 이론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일본측 분이 말씀하셨듯이 현실적으로는 한일기본조약체결 후에는 그 아래에서 여러 가지 수정 및 보충의 시도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어업협정도 다시 체결했고, 코노담화, 무라야마담화도 생겼으며, 1998 년 에는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도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한일기본조약을 부가적으로 개선해 온 노력의 일환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현재 떠오르고 있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상황을 개선해 가는 것도 1965 년 체제의 보강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조금 전부터 중국문제에 대해 여러 분이 언급하시고 있는데, 저 자신의 관심사 중 하나이기도 하므로 저도 이것에 대해 한마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단순화하면 이러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애당초 왜 한국이 중국에 접근하느냐 하면 먼저 전반적으로 경제면에서의 연대가 강화되었기 때문이고, 또 북한에 대해 실질적인 압력을 가한다면 미국과 더불어 중국의 존재가 중요하고, 중국을 통해서야 비로소 북한을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중국대륙과 한반도의 문화적 유대라는 배경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면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표면화하고 있는 것은 한국측이 한미동맹에 의해 여러 가지 대외적인 위협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로 인해 일본과는 조금 다투어도 되지 않을까와 같은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이 강하지 않으면 일본과 대립해서 갈등을 초래하는 것과 같은 여유는 한국에는 없었겠지만, 그렇지 않고 한미동맹이 강하고 한미동맹에 의해 충분히 북한의 위협을 퇴격할 수 있고, 억제할 수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저 나름의 최근의 인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자면 조금 전에 일본측으로부터 질문이 있었던 한국은 중국과 미국 중 어느 쪽인가 한쪽의 선택을 강요받았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점에서도 자연스럽게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의 상황에서는 한국은 당연히 미국측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에서는 일반적인 것으로 지식인들도 이 점에서의 균형은 잃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음식보다도 목숨 쪽이 중요하니까요.

절대적으로 한국의 지식인들이 그 균형을 잃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음식보다도 중요한 것은 생명이니까요. 예를 들어 쌀이나 목숨 중에 택해라는 이야기를 듣고 쌀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목숨이 없으면 아무리 쌀이 있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한국에 있어서 최후의 안전판이며, 중국에 접근하는 데에 있어서도 기반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견해에 선다면 마찰은 일본 방면에서 생긴다는 인식도 생깁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일 간의 문제는 향후 협의를 거듭함에 따라 충분히 접점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정적으로 한국이 중국의 편이나 어떠한를 둘러싸고 논의하기보다는 양국 간의 현안사항에 집중하는 편이 생산적이지 않을까하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약간 아이러니컬한 표현이 되겠는데, 한국에서는 충분한 후원자가 있으니까 충분한 후원자를 가지지 않는 상대와는 싸울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발언을 마치고 싶습니다.

한국측 사회자: 감사합니다. 남은 인원수의 관계로 양국이 교대로 발언하는 형태가 잘되지 않는 것 같아서 다음은 일본측 두 분이 발언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측으로 하겠습니다.

일본측 참가자: 감사합니다. 어제 오후의 세션에서는 한국 분으로부터 여러 번 미국에게 있어 중요한 관계는 중국이라는 지적과 소개가 있어서 저는 그것을 듣고 ‘아, 그런 부분에 반응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좀 의외성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새삼스럽기는 하지만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이라는 것에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큰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미국의 장래의 번영은 아시아에 있다는 이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장래의 국가적 위협도 아시아에 있다는 이유. 이 두 가지 이유에서 미국은 아시아와 관여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발전의 중심은 향후 꽤 장기에 걸쳐 아시아이고, 미국에 있어 군사적인 위협으로서도 장래적으로 중국의 비중은 점점 더 늘어갈 것이므로 지금부터 체크해 두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아시아 회귀전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중국이 지금의 속도로, 특히 남중국해에—어제 일본측에서 지적이 있었지만—진출하고, 군사적으로도 활주로 등을 만들어서 진출해 오게 되면, 만일의 경우에 미국으로부터 동남아시아 혹은 인도양 방면에 대한 접근도 지장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생기는 것을 역시 미국으로서는 체크할 수 밖에 없으므로 아시아 회귀전략이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특별히 오바마정권의 세일즈포인트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도 미국은 그러한 기본정책을 가지고 외교를 해 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것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게 있어서의 번영과 위협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향후 동아시아지역에서—상대적으로 힘이 약해진다고는 하지만—빠져나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향후 30년, 40년, 적어도 제가 살아 있는 동안은 미국과의 관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해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생각하면 기회와 위기가 중국에 있으니까 중국이 미국에 있어 가장 소중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중국이 첫 번째고 일본은 두 번째입니다, 안됐습시다라는 것과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을 포함해서 동아시아의 번영과

안전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일본과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과도 함께 해 가고 싶다. 틀림없이 미국은 그와 같이 생각하고 있을 것이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으로 또 하나, 이것은 여담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번 오바마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열 시간 정도 시진핑 주석과 이야기를 했다, 한편 아베 총리와는 25 분이었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원래 작년 캘리포니아에서 여덟 시간 정도 했던 미중회담의 답방이니까 시간이 긴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여덟 시간, 베이징에서 열 시간 이야기한 결과, 결국 가치관 부분이 역시 서로 다르다라는 것도 확인되었고 극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즉, 중국과 미국이 의거하는 가치관 부분은 역시 그것을 지도자가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했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역시 자유주의경제이며, 이른바 민주주의이며, 보도의 자유도 포함해서 기본적 인권이 있다는 것을 자신들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나 혹은 한국으로서는 그러한 근원적인 부분, 그리고 향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계속해 간다는 원칙 부분에서의 차이를 의식하면서 사물을 생각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측 사회자:남은 발언 희망자는 일본측·한국측 각각 한 분씩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코멘트 사이에 또 손을 든 분이 있어서 나중에 손을 든 분은 약간 짧게 발언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일본측 참가자:그러면 중국문제에 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홍콩에서 학생들의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홍콩 사람들이니까 중국인입니다. 게다가 참가하고 있는 것은 모두 젊은 사람들로 홍콩 반환으로부터 17년이 지났으니 그 후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해서 어렸을 때부터 중국국민으로서 자란 사람들이 「중국 NO」라는 데모를 한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33년 후에 홍콩은 중국에 완전히 반환되는데 그때까지 민주시스템을 만들어 두고 싶다—중국이 싫다는 것은 아니고—라고 하면서 데모를 했습니다. 봄에 대만에서도 학생들이 입법원을 점거하는 과격한 행동을 했는데, 그 뿌리에 있는 것도 중국에 삼켜질 것 같은 경제협정은 NO 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특히 아시아의 중국 주변국은 서로 다투어서, 한국도 포함해서 중국으로 중국으로 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경제적인 이득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한편으로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어떤 의미에서는 중국인 자신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NO 라고 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제 싫다면서요. 거기에는 역시 체제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중국이 그렇게 두려운 존재인가. 그것은 다른 지역의 사례, 예를 들면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위기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러시아가 특수권익권이라는 개념을 끼집어 내서 지금까지 독립해 있던 우크라이나 동부를 병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에게 있어서의 특수권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저는 이 우크라이나는 혹은 한국이 아닐까, 혹은 대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전후의 질서 속에서 그어진 선을 다시 그을 권리가 대국에는 있다는 것이 중국이 말하는 뉴노멀이지만, 이것은 바꿔 말하면 중국은 대국이 되었으니까 큰 영토를 취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나라에 있어서는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진핑 씨가 내걸고 있는 외교이론, 이것을 일본에서는 「주변국외교」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변외교」입니다. 중국이라는 제국의 주변을 안정시킨다는 외교이론이고, 거기에서 말하는 중국의 주변이라는 것은 유라시아대륙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다를 사이에 둔 나라는 적대국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기도 한데, 어쨌든 유라시아대륙에 있는 육지로 연결된 나라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중국의 주변으로 보고, 거기와는 싸움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지 않도록 할 때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장해제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 대해서는 시진핑 주석이 7월의 방한시에 THAAD의 설치에 대해 신중하게 하라는 공갈로도 여겨질 수 있는 발언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지만—이것은 조선일보에서 읽은 뉴스입니다—지금 중국은 아마 한국에 대해 조선반도의 통일권을 인정하는 대신 무장해제하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것이 결국 중화제국입니다. 이것에 관해서도 흥미로운 뉴스를 접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며칠 전에 개막된 사중전회 전에 당정치국 학습회라는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정치는 덕을 스승으로 하고 법률을 보좌한다’는 내용으로 강의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춘추전국시대의 법가사상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즉, 중국은 시진핑체제가 되고나서 나날이 제국화, 뉴제국주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국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 대신 주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안정시키기 위해 육지의 주변에 대해서는 우호관계를 인정하지만, 그곳의 독립권의 절반은 인정하지 않는 즉, 독자적인 무장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자신의 주변 바다에 대해서는 출입금지라고 하고 적성국을 내쫓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나아가 인도양에서까지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에 있어서도 해상수송로이고, 한국에 있어서도 해상수송로이므로 직접 영향이 미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제도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결국 중국의 공포라는 것은 가치관이 전혀 다른 곳에서 온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일본에 있어서 한국의 대응이라는 것은 매우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일본은 한국에 대해 강한 기대를 품고 있으며—실망도 기대의 반대면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기대감은 잘 이해되리라 생각합니다—아시아의 주변에서 가장 가치관이 가깝다고 생각하는 나라이니까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근본에 있어서는 전후의 같은 가치를 누리고, 민주화로 향하는 것을 정의라고 믿고 함께 걸어온, 그것이 일본에 있어서의 한국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옆의 분명히 다른 가치관을 가진 나라가 대두해 왔을 때에 한국과 자신들(일본)의 대응이 갈라져 버리게 된다면 역시 일본으로서는 조금 무서운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강조해 두고 싶은 것이 지금 중국은 언뜻 보기에 한국에 대해 매우 친절해 보이지만, 지금 중국이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청나라의 체제이며, 게다가 청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영토의 범위를 자신의 도판에 설정하고 있습니다. 청나라 때에 서울의 왕궁에는 위안스카이(袁世凱)라는 인물이 한국을 담당하는 대신으로서 와 있었습니다. 또, 비슷한 지위에 있었던 것이 티베트였는데, 티베트의 라사에는 티베트 담당대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즉, 청나라에 있어서 이 두 가지는 특별하게 집착하는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청나라 건륭제 시대의 영역을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생각한 것이 10년 전의 동북공정문제, 즉 고구려를 둘러싼 역사문제였는데, 어쨌든 장래에 조선반도에 대해서는 그러한 관계를 쌓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홍콩, 대만의 경우를 보면 같은 민족이면서도 체제가 다르다는 것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떼어 놓는구나라고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싶다는 마음을 들게 하는 원인이 체제, 그리고 가치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인과 중국인은 꽤 가까운 민족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민족이기도 하므로, 일본인으로는 민족의 차이를 느끼는 것 이상으로 체제와 가치관의 차이 쪽을 무섭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경제성장을 계속하는 가운데 체제의 차이가 좀 무서운 쪽으로 향해 버리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공통의 규칙을 모두가 서로 인정하는 방향에서 나의 규칙을 따르라고 하는 방향으로 변해 왔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일본인들 중 많은 사람이 지금 중국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측 사회자:시간이 매우 늦어지고 있으므로 각각 가급적 짧막하게 부탁드립니다.

한국측 참가자: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질문, 즉 장래의 어느 시점에서 중국과 미국 중 어느 쪽인가를 택해야 하는 경우에 한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이것은 실제로 한국에 있어 고민의 씨앗입니다. 물론 현시점에서는 동맹국인 미국 쪽이지만, 이미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반환이나, 실질적으로 무기한이 되는 연기냐로 국내 의견이 나뉘었고, THAAD 를 둘러싸고도 국내에 논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THAAD 문제는 한반도 방위와 그다지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한국에서는 반대의견이 많은 것 같지만, 미중 어느 편에 붙느냐라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그때」에 고민해야 할 것으로 미리 고민해 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본측 참가자:조금 전의 한국측 답을 듣고 왜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그렇게까지 자신이 있을까라거나 할까, 낙관적일까라는 것에 대해 이해가 된 느낌이 듭니다. 즉, 미한관계가 원만하고, 미한동맹이 강화되고 있으니까 취할 수 있는 행동의 폭도 넓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에 관한 것인데요. 하지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미한동맹은—어제의 세션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일미동맹의 진화와 한국방위가 항상 연동되어서 생각되어져 왔다는 경위를 참작하자면 「일미동맹=미한동맹」이라는 프레임 안이 아니면 기능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해도 반유사시에는 주일미군도 움직임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미한동맹이 굳건하다, 그러므로

일본과는 다투어도 좋다고 하는 이론은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 질문에 대해 직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바로 밤급 한국측으로부터 「그때가 되고 나서 생각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지만—항상 동아시아의 요충이었던 조선반도의 경험, 즉 러시아의 남하와 중국의 영향, 혹은 일본이 공격해 온 경험에서 한국이 직감적으로 영락해 가는 초대국인 미국, 상승조를 타고 있는 거대국가 중국이라는 구조를 인식하고, 그것이 행동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사족이므로 이 점 발언하였습니다.

일본측 참가자: 좋은 기사란 어떤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인데, 저는 역시 기초 중의 기초는 팩트를 확인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신문기사로 할 만큼의 수준에 이르는 팩트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때로는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것은 물론 기자에게 있어서는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자신에게 항상 타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사실을 많이 나열해서 거기에서 구도를 만듭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해진 구도에 들어맞는 팩트만 골라내는 위험성도 있으니 팩트를 모으고 구도를 만들어서 자신의 지금까지의 시야에 들어있지 않았던 팩트가 있을 경우에는 구조를 바꾸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65년 체제에 대해서 제가 위험성을 느끼는 것은 이미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인데, 병합조약이 유효하다라든가 무효하다라든가 거기까지 다시 문제로 삼는 논의가 되어 버리면 그것은 매우 비생산적일 것이라는 겁니다. 혹은 마이너스의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제가 특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대법원이 낸 징용공문제에 대한 판단입니다. 신닛테즈스미킨에게 배상명령이 나왔는데,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고등법원까지 그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적인 논의에서 이상할 뿐만 아니라, 1965년에 협정과 조약이 맺어졌고, 그것에 근거해서 일본이 지원을 하였으며, 또 박 태준 씨의 리더십 아래에 한국인들이 매우 노력해서 포항제철소를 만들었고, 그리고 신닛테즈의 관계자들도 헌신적으로 협력한 경위까지도 부정하는 것이 되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이름을 꼽았던 사람들은 그때는 외부적으로 드러날 수 없었지만, 제가 추측하기에 일한관계가 발전해 가면 자신들의 공적도 언젠가는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현실은 신닛테즈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론일지도 모르겠지만, 자주 한국사람들은 국민정서라는 말을 쓰는데 다른 한편으로 일본인들도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본측 참가자: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미중관계에 대한 일본의 견해에 대해서인데, 제가 보면 매우 기묘하고 일본의 미중관계에 관한 견해는 속되게 예를 들어 본다면 남편의 바람기를 걱정하는 부인과 같은 부분이 있어서—남편과 부인의 위치가 반대라도 상관없는데—미중이 오래 이야기를 하면, 어쩌면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하고, 미중 사이에 애기자 잘 되지 않으면 남편은 괜찮다라고 안심하는 식으로 매우 굴절되었다고 할까 기묘한 반응이 미디어에서도 많이 보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생각하면 미국이 중국의 문제에 큰 세력을 쏟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중국에 대응하는 데에 있어서 일본은 미국의 사활면에서 중요한 문제라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조금 오래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이 습성을 이제 슬슬 졸업하고 끝내면 어떻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아시아를 보는 시각에 관해서인데, 아시아의 국제관계는 중국이 이대로 대국화하고 미국이 쇠퇴한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제 또 분명히 아시아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은 미중 이외의 나라라는 식으로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상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우리들은 속설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더 현실을 봐야 될 필요가 역시 있는구나라는 것만 거듭 이야기해 두겠습니다.

한국측 참가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일 양국 모두 제로섬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아직도 제로섬적인 발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특히 미디어의 보도는 항상 누가 틀렸더라든가, 어느 쪽이 틀렸더라든가, 그러한 제로섬적인 발상의 영향이 짙은데 시간관계도 있으니 중요한 포인트로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을 보는 견해가 과대평가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한국이 중국과 가까워지면 일본과는 멀어진다, 한미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단순한 공식이 상식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은 1965년 체제조약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국은 법률을 지키지 않는 문제 있는 나라다’라는 이론이 퍼지고 있는데, 실제로 한일관계의 역사는 1965년 협정의 불안정한 측면을 점차로 개정하고 수렴시키면서 발전해 온 것이고, 이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65년 기본조약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도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 정상회담을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일본측은 정상회담을 하지 못하는 것은 박 근혜 대통령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측은 아베 총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보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상대방의 탓으로 하는 생각이 상식화되고, 고착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상식」이 결국은 보도에도 투영되어서 국민의 여론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팩트에 근거하여 보다 다양한 측면의 논의를 해야하고 보다 다양한 측면을 보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측 사회자: 그러면 그쪽이 마지막 분입니다. 짧막하게 부탁드립니다.

일본측 참가자: 감사합니다.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의 저널리즘 분류라고 생각하는데, 저널리스트는 세 단계를 거쳐 저널리스트가 된다고 합니다. 입사하면 짐꾼으로, 그 다음에 리포터가 되고, 10년 정도 수행해서 겨우 저널리스트가 된다고 합니다. 혹은 그 사이에 라이터가 들어갈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에 모여 계신 여러분은 저널리스트로서 이렇게 성숙한 논의가 가능한 것이라면 일한관계의 반한·반일보도는 없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번에는 매우 온화하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서도 아직 양국 미디어의 존재방식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보도라고 부르는 것을 한국에서는 언론이라고 하는 식으로 말이지요. 그러한 미묘한 차가 있고, 한국도 물론 팩트를 중요시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어느 쪽이냐 하면 언론공간, 그리고 일본은 이른바 보도공간이라는 식으로 그 장의 성격이 다른 이유로 인해 중시하고 모아진 팩트를 어떻게 처리할까에 차이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한국의 경우 일정한 「각도」가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래도 데스크로부터 거부당하는 현상이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것이 한국 언론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은 문제다, 이상 끝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4 회나 회의를 거듭하면서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의 성과라고 생각하는데—일본의 보도가 놓인 입장이 점차 한국의 그것에 닮아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즉, 일본과 한국의 미디어 모두 서로 「각도」를 붙여서 반한과 반일을 등에 업고 보도해야 하는 식으로 압력을 느끼면서 그날그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것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며 자신이 옳다, 당신은 옳지 않다고 말다툼하고 있으면 되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들은 어떻게 양국에게 좋은 기사를 써 가야 하느냐라는 공통의 과제를 가지게 된 것을 이번 논의를 통해 인식할 수 있었고, 그것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수확이기도 하며, 또 향후를 위한 과제를 인식하는 데에 있어서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그런 감상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측 사회자: 감사합니다. 자유토론·총괄토론에서는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유롭게 토론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문제의식의 방향성을 꽤 좁힐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저로부터는 이상인데 한국측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한국측 사회자: 그러면, 세션 중에 그다지 발언을 못했기 때문에 사회자의 황포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약간 이야기할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세계에는 알려져 있는데 한국만 모르는 한국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농담이 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를 외국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지만 한국만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또 북한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위협으로 한국을 협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만 멍하니 북한을 보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은 지위에 걸맞는 대국인데 한국만은 일본을 깔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좁은 시야를 다룬 농담인데, 저는 한국과 일본이 너무 가까운 탓인지 일본측에서도 한국의 여러 가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할까, 당연시해 온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는 문화적 차이, 역사적·전통적 차이에 관한 지적이 일본측에서 나왔는데, 한국에 왜 일본을—조금 전의 농담에 있었던 것처럼—깎보는 부분이 생기는가 하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항상 강국에 둘러싸여 있고 대국에 대항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버릇, 습관이 되어 있어서라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즉, 이웃 대국에 무릎을 꿇은 순간 목이 잘리니까 싸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던 그러한 국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이 여러 가지 주장하고, 소리를 높이는 측면을 역사적인 전통에서 이해해 주었으면 합니다.

또, 한국이 분단국가이면서 미국과의 동맹국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한국측 참가자의 발언에 있었지만,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가 강하므로 일본과 문제를 일으켜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발상이 나오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옛날에는 북한이라는 위협이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북한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한미일이 협력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북한은—핵과 미사일은 가지고 있지만—우리들을 쳐서 패배하게 할 정도의 국력은 전혀 없는 나라라는 여유가 나온 것도 일본을 보는 시각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어느새 새우가 아니라 돌고래라는 것—이 표현을 최초로 쓴 것은 저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저작권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도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은 네 개의 대국에 둘러싸인 약소국이며, 속담에도 있듯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이미지가 오래 한국인의 뇌리에 새겨져 왔지만 저는 한국은 이제 새우가 아닌, 19세기 말 당시의 힘도 없고 외국 사이에서 꾀작도 못하던 존재가 아닌 고래까지는 아니더라도 돌고래 정도로까지는 성장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돌고래의 강함은 머리가 좋고 헤엄도 빠르다는 이 두 가지인데 그것을 잊어버린 순간 한국은 위험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으로서도 한국을 새우가 아니라 또 고래와도 다른 존재, 돌고래 정도의 나라로서 인식해 주면 일본측이 제기하신 가치관의 공유문제도 풀어진다고, 즉 함께 바다를 헤엄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관계자): 그러면 이상으로서 총괄토론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공동사회자 분들 감사합니다.

폐회사

노가미 요시지(일본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 아젠다에 따르면 폐회사가 이 다음에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측의 마지막 한마디가 거의 폐회사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일본측의 정리는 되었다고 생각하므로 저는 폐회사를 패스하고, 개최국측 대표로서 오늘의 이 회의를 세팅해 주신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전 이사님에게 넘기고 싶습니다.

전 남진(한국국제교류재단 경영이사):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전 남진입니다. 노가미 이사장님을 비롯한 일본측 저널리스트 여러분, 그리고 다망한 가운데 출석해 주신 한국 참가자 여러분, 이번 제 4회 「한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를 매듭짓는 이 자리를 빌어서 한국의 주관기관인 국제교류재단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 한일 간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솔직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주재했을 때에 느낀 것은 해외에서는 한국국민과 일본국민이 굉장히 친한 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해외에 주재할 때에는 중국, 미국, 유럽 등 다양한 분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관계를 쌓았던 것이 일본 분이었고, 외국의 환경에 몸을 두면 양국의 정신적인 유대는 이렇게나 긴밀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했던 바입니다. 그러나, 양국이 직접적으로 마주할 때—특히 한국인이 일본에 가거나 혹은 일본분이 한국에 왔을 때—에는 반드시 그렇게는 되지 않아서 저는 항상 평상시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거의 모든 분들이 많은 적든 비슷한 감회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하고 추측합니다. 한일 간에는 역사적인 경위로 인해 거기에서 다양한 문제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이웃관계인 만큼 부담을 느끼는 부분도 있으니까 상대방을 보는 시각은 복잡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디어가 주워 담아서 전달하는 그러한 구조가 양국관계에는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구조에 주요

관계자로서 관여하는 미디어의 역할, 이것은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 이상으로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한-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는 실로 그와 같은 기본인식 아래에서 한일 양국의 저널리스트 여러분에게 그 미디어로서의 관점, 전문적인 지식 아래에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을 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장으로서 기획된 것으로 네 번째가 되는 이번 회의가 그와 같은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었다면 주최자로서 그 이상의 기쁨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는 다음 번이 최종회의가 되지만 다음 회의가, 그리고 무엇보다 회의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이 양국 국민의 보다 좋은 이해를 심화하며, 양국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회의를 성공리에 끌어 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충분히 발언해 주셨다고 하셨지만, 마지막으로 노가미 이사장으로부터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노가미 요시지(일본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감사합니다. 제 4 회 「한-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는 이른바 「정면승부」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걱정했지만, 매우 성숙한 논의가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의 논의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내년의 일한국교정상화 50 주년은 50 년이라는 기념이 되는 해라는 사실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물론 기념이 되는 해는 중요한하지만—그 해에 양국이 「무엇을 공동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느냐」가 중요하며, 그 점을 생각하는 시점, 시각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0 년째라서 큰일이 생긴다,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가 아니라 그 앞에 놓여진 무엇을 찾는냐라는 관점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명확히 하고, 어떻게 의견을 수렴시키고,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는 그러한 작업이야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까지 4 회 개최해 온 「한-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는 인적구성이나 세션의 테마에 지속성을 가지게 한다는 고민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꾸준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자기평가를 해도 좋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내년에는 드디어 5 년계획의 최종해로 우리 주최자측으로서도 한층 전력을 다해 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참가자 및 관계자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폐회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션 5: 「학생들과의 대화」(특별세션)

(한국국제교류재단 관계자):그러면 모든 세션을 끝내고 특별세션으로 「학생들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세션은 한일 공동사회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사회자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한국측 사회자:감사합니다. 본 세션에 학생 여러분의 참가를 환영합니다. 본 세션에서는 먼저 한일 양국의 대표에 의한 발표—이것은 양국에서 활약하는 저널리스트의 입장에서 학생 여러분에 대한 메시지가 되겠는데—를 하고, 그 후에 여러분들로부터 질문이나 코멘트를 받게 되겠습니다. 또, 발표자 이외의 양국 출석자 선생님들도 이 토론 파트에 참가하시므로 여러분들의 발표자 두 분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에 대한 질문도 물론 환영합니다. 또한, 이 세션에서는—조금 전까지 열렸던 회의와 마찬가지로—채팅하우스 룰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기록하여 공개도 하지만, 발언자에 대해서는 즉 누가 어느 발언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비밀로 하는 것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기탄 없는 논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규칙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발언하신 내용은 기록되고, 후일 작성되는 보고서에도 그 발언내용이 게재되지만, 여러분 중에 어느 분이 어느 발언을 했는지, 그 비밀은 엄수되므로 과감하게 솔직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규칙은 출석자 전원이 비밀을 지킨다는 신뢰 위에서 성립되므로 본 세션에 참가하는 여러분도 이 규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정도로 하고 일본측 사회자님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일본측 사회자: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세션은 조금 전까지 열렸던 일한국교의 저널리스트 및 지식인들의 회의 「한-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의 특별세션으로 과거에도 2 회, 한국과 일본에서 같은 형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일본에서 열린 회의에서 일본인 학생들, 그리고 일본에 유학 중인 한국인 학생들도 참가해서 매우 의의 있는 세션이

실시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한국 서울에서 열린 이번 본 세션도 꼭 일한 양국이 모두 참가하는 형식으로 하였으면 해서 한국인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한국에 유학 중인 일본인 학생들도 참가하시게 되었습니다. 학생 여러분도 각각 학업 중에 혹은 생활 중에 일한관계나 그것을 전하는 미디어의 보도 양상, 혹은 미디어의 바람직한 모습 등에 관해 여러 가지 생각이나 느낀 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장에서는 발표자 두 분을 필두로 일한 양국의 미디어, 혹은 연구 및 실무의 최전방에서 활약하시고 있는 분들이 모여 계시므로 꼭 생각하는 바를 질문으로 던져 주십시오. 그 결과로 여러분과 양국의 출석자들 사이에 공통의 이해가 생기는 것이 주최자로서 저희들의 소망이며, 또한 그렇게 되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규칙은 한국측 사회자님이 이미 설명하셨기 때문에 서둘러 발표를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측 선생님부터 부탁드립니다.

「한일관계와 언론의 자세」

한국측 발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젊은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할 기회를 얻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번 발표 이야기를 직전이 되어서야 알게 되어서 발표자료를 새로 작성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제가 쓴 것을 정리하는 형식이 되었습니다. 언론계에서 이야기하는 원 소스 멀티 유즈가 되겠는데, 그 때문에 내용이 조금 길어져 버렸습니다. 따라서, 발표자료를 따라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시간관계상 특히 1 번, 3 번, 4 번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한일기본조약을 맺고 국교정상화로부터 50 주년에 해당하는 해입니다. 기념이 되는 해답게 사람으로 하자면 환갑이나 팔순처럼 성대하게 축하하고 싶은데, 실은 한일관계는 그다지 좋다고는 할 수 없는 상태로 최악의 상태라고 표현하는 사람 조차 있습니다. 그와 같은 평가가 나오는 큰 이유로서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 제대로 얼굴을 마주하고 만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의 한일관계가 굉장히 견고했던 것도 있어서 양국의 정치지도자가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고 양국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양국관계의 냉각화가 심각해지고 있고, 역시 정상이 만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기에 있는 양국의 저널리스트나 전문가들 자신들의 예측이 너무 낙관적이었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으며, 조금 전까지의 회의에서도 그 이야기가 꽤 오갔었습니다. 어쨌든 한일관계는 차가워지고, 이전에는 작동되던 관계개선의 방향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복원력」도 작동되지 않고, 경제관계에도 조금씩 그림자가 드리우며 양국국민의 상호방문도 줄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여행은 엔저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인의 일본방문은 늘어나고, 일본인의 한국방문이 줄어든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만이 원인은 아닌 더 구조적인 양국관계의 악화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국내의 혐한감정 고조도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개최된 회의에서는 일찌기 한국에 친근감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의 지식인, 그리고 한국에서 일본에 친근감을 가지고 있었던 지식인 사이에서도 분화가 일어나고,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는데 이것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지식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도 상황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일보와 요미우리신문의 공동여론조사, 혹은 동아시아연구원이 올해 5월부터 6월에 걸쳐 일본의 시민단체 언론 NPO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양국의 서로를 보는 시선이 변화하고 있는 것, 상대국의 이미지가 악화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상호인식 악화의 원인 중 하나가 역사문제입니다. 한국에서는 일본이 제대로 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문제시하고, 또 일본은 한국이 너무 과거사에 집착하는 것에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컨대 현안과 인식의 차이가 상호로 작용해서 양국관계 전체를 나쁜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그러한 구도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인식에 관한 것인 만큼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라는 의미에서는 머리가 굳은 기성세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젊은 여러분에게 기대가 커지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모든 책무를 떠맡기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상호작용이라는 말을 썼지만, 여러분이 취하는 태도가 어쨌든 세대 간, 그리고 양국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한일관계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상대를, 그리고 사물을 보는 것일까요. 물론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중에는 자신이 실제로 본 것만을 믿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경험도 결국은 미디어(언론)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미디어와

어떻게 접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대부분이 여기에 관한 것입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미디어는 특별히 신문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신문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매우 슬픈 일이지만, 젊은 사람들 중에는 신문을 전혀 읽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TV의 뉴스프로그램도 보지 않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면 인터넷만 하는 사람은 미디어로부터 분리되어 있느냐하면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구사하여 자유자재로 정보를 모으고 있는, 실은 그 행위 자체가 바로 미디어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는 「미디어(언론)」는—직업상 신문을 사례로 들고 있는데—꽤 넓은 것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발표자료에는 언론은 사회를 보는 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언론이라는 창을 통해 사회를, 거기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론은 무조건 창역할을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에 먼지가 묻어 있거나 창이 울퉁불퉁하면 사회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처럼 불투명하거나 휘지 않은 유리여야 합니다. 그러면 한국의 언론이 일본을 볼 때 창에는 깨끗한 유리가 끼워져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발표자료에 길게 적혀 있으므로 나중에 참조해 봐 주십시오. 한국의 미디어가 일본문제를 보도할 때 작용하는 왜곡이나 편견과 같은 것, 또 그러한 것들이 발생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미래지향에 대해 원인보다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을 중시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의 미디어 상황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후에 일본측 발표자께서 언급해 주시리라 생각하므로 여기에서는 한국의 미디어에 한정시켜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조금 전의 비유로 이야기하자면 창에 붙은 먼지를 깨끗이 하고 유리창을 매끄럽게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언어, 즉 보도할 때의 표현입니다. 같은 대상이라도 어떻게 하면 보다 신중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 항상 의식해야 합니다. 미디어에는 각각 특유의 과장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이한 사건을 평이하게 보도해서는 독자의 관심이나 인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의 미디어에는 어쨌든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미디어에는 「확실하게 표현하는 경쟁」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독재정권기부터의 전통인데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거나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을 경쟁하는 경향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도 한국 언론계의 현실의 일부가 되겠는데, 이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비판할 대상이 없을 때에는, 더 속되게 얘기하면 짓어댈 상대가 없다면 북한에게 짓으면 된다고 말이지요. 아무도 거기에 관해 얘기하지 않으니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북한도 맹렬히 반응해 오고는 있지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짓을 수 있는 상대」로 되어 있었던 것이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을 비난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한국은 옛날의 주사파(주체사상파)는 쇠퇴했을지언정 최근에는 한국 내에 북한을 지지하는 그룹도 있고, 또 한국 내에서도 북한에 관한 의견이 여러 가지로 갈리게 되었기 때문에 결과로서는 내부적인 검열이 강해졌습니다. 즉, 불필요하게 북한을 비판하거나, 사실의 뒷받침 없이 비난하거나, 또는 북한을 보는 눈이 왜곡되어 있는 것 같을 때에는 금방 지적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 일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잣대를 대는 기능이 그 정도로 강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먼저 표현, 언어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인데, 저희 회사에서는 내부에서 몇 번이나 논의를 해 왔으며 조금씩 그 성과가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필요하게 가치관이 포함되어 있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자는 시도입니다. 일례를 들면 일본에 대해 「군사대국화」라는 말을 쓰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회사의 기사, 특히 사설 등에서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또, 「보수화」는 객관적인 인식이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워딩을 정리하는 실천을 하고 있고, 가치중립적이지 않은 표현을 과장해서 쓰는 것이 조금씩—적어도 저희 회사에서는—줄고 있습니다.

또, 어제와 오늘도 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한국과 일본의 언론이 범하고 있는 주요한 잘못 중에 대표적인 것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식으로 즉, 서로 상대의 말에 반응해 가서 과격화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특히 민족주의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듯한 보도가 상대의 반작용을 일으켜서 소동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발표자료 중에 「적대적인 공생관계」라든가 「민족감정의 캐치볼」 등이라고 쓰여진 부분에 상세하게 적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쪽인가 한쪽에서 그 연결고리를 잘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확하지 않은,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왜곡된 보도가 나돌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미디어 환경의 변화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한국에서 신문이나 방송에 의한 뉴스로 첫 보도를 접하는 사람은 며칠 전의 조사에서는 14%라는 결과였는데, 이것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이 역할은 더 낮을 것입니다. 즉, 예를 들면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가정에서도 신문은 아버지만 보는 것이고 아이들, 즉 학생들이 그것을 손에 들고 읽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집 아이들도 신문을 읽지 않고 SNS 나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그러한 라이프스타일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뉴스도 원래는 신문, 통신, 방송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론을 접하고 있지 않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해서 정보가 도는 과정에서 실은 자신의 시각이 매우 좁혀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편리하게 재빨리 정보를 접하고 있다는 것이 실은 제 3 자의 관점을 경유한 좁혀진 정보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문이 전하는 뉴스나 평론도 제 3 자의 의견을 통한 것이지만 출처를 명확하게 해야 하는 만큼 기사의 글은 신중해집니다. 즉, 독자로서는 찬찬히 읽으면서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할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Twitter 나 Facebook, 블로그 등에 많이 보이는 짧고 직접적인, 단락적인 평론은 그러한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흘러들어 옵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판단이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어 봅시다. 저는 오래 기자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때의 일인데, 배 안에 아직 사람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구출하지 말라는 지시가 구조작업의 현장에 내려졌다는 뉴스가 지금 TV 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송에서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봤더니 인터넷 TV 였던 것입니다. 이름도 들어 본 적이 없는 곳이었는데, 거기에는 이상한 유언비어 같은 이야기가 동영상과 함께 마치 뉴스프로그램 같은 형식 아래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간담이 서늘해지는 일이었는데 이처럼 미디어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기존의 미디어, 알기 쉬운 것으로 신문일 들자면, 그 경우에는 뉴스를 접하고, 읽고, 자신이 판단을 내리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Twitter 나 Facebook 이나 인터넷도 그렇지만 그러한 매체는 그냥 제목 한두 줄 읽는 것만으로 지나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점을 선택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생긴 이미지, 그것만으로 사건에 대한 견해가 굳어져 버리고, 또 그렇게 해서 굳어진 인상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선택적보유라는 것인데 한 번 이미지가 굳어 버리면 그것을 부인하는 정보를 아무리 입력해도 선입관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자신의 가치관—그 가치관 자체가 이미지로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으로 여과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험성에서 젊은이들이 빠져나와 주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으며, 빠져나와야만이 위에서 소개한 미디어가 한일관계를 악화시켜 온 구조의 영향도 배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앞으로 진행시키겠습니다. 발표자료로 하면 5 번입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대일보도의 사용설명서」라는 타이틀을 붙였는데, 그 마음은 한일 양국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만이라도 이와 같은 기울어진 시각, 왜곡된 관점에서 자유로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언론환경 최전선의 환경변화에 대해 방금 막 말씀드렸지만, 실은 여러분이 노력하면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균형 잡힌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므로 그 비결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먼저 첫 번째로 정보와 관점의 소스를 다양하게 가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SNS 를 통해 날라들어 온 짧은 뉴스에 대해서는 신문과 대조해서 보도록 합시다. 또, 한마디로 신문이라고 해도 한국의 신문은 정말 다양합니다. 극우적인 신문도 있는가하면 극좌적인, 급진적인 신문도 있고,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반대 주장을 하는 신문도 함께 보도록 하면 좋을 것입니다. 적어도 2 종류에서 3 종류의 신문을 봐야지만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경험입니다.

다음은 거기에서 한발 더 나서서 지금은 일본의 보도에 직접 접하는 것도 꽤 용이해졌는데—일본의 교도통신도 그렇고 그 외에도 기사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신문이 많이 있습니다(마찬가지로 한국의 뉴스도 일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보도에서 무언가가 보도되면 같은 건에 관한 일본측의 보도도 조금 보도록 해 봐 주십시오. 물론 그때에도 요령은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입장이 다른 신문을 여러 개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는 편견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에 대해 겸허해지자는 것입니다. 여전히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역사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에는 자국·자기 민족에 대한 긍지, 자부심을 역사에서 찾으려고 하는 생각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에는

성공한 역사든 실패한 역사든 각각에 교훈이 있습니다. 성공한 역사나, 또 실패한 역사나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자신의 시각에 맞추어 비틀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 일본 쪽에서 당시의 식민지 지배는 잘못된 국책이었다는 관점을 취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됐다면 한국측에서는 식민지화에 대해 한국에는 식민지화에 아무런 책임도 없었다라고 하고 있으면 될까요. 한국은 모든 것에 있어서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본이 쳐들어 와서 식민지가 되었느냐라고 하면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역사를 있는 그대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왜 한국은 그때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느냐. 어떠한 과정을 거쳐 독립했는가. 그것을 「옆으로 늘어세우고」 봐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국의 긍지를 손상시키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며, 이렇게 해야 비로소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게 되고, 인간으로서도 성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이든 한국이든 과거의 일은 여러분이 한 일이 아니라 과거의 어른들이 한 일이니까 여러분은 거기에 너무 사로잡히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얽매이기에는 여러분은 너무나도 젊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은 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인생에 있어서 길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도 덧붙이면서 발표를 마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측 사회자: 감사합니다. 스스로를 돌이켜 본다고 할까요, 용기 있으면서도 많은 것을 함축한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일본측의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미디어는 국경을 넘을 수 있는가?」

일본측 발표자: 감사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젊고 우수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데도 이렇게 재미없는 이야기 밖에 못하느냐는 이야기를 들을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피드백을 받아서 저도 새로운 자극을 얻는 그러한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에 「미디어는 국경을 넘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바로 지금 스크린에는 이 회의의 명칭인 「The 4th Korea-Japan Journalist Dialogue」라는 글자가 나와 있는데, 이 Korea 와 Japan 사이에 있는 선(하이픈), 여기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국과 일본, 또는 Korea or Japan. 어쩌면 Korea vs. Japan 일지도 모르겠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 선을 지우는 것은 불가능할까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가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도 아시는 두 명의 한국인이 나왔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반 기문 UN 사무총장. 어쩌면 차기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김 용, 현재 세계은행의 총재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두 명 모두 한국 출신으로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활약을 하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다음으로 두 명의 일본인이 나옵니다. 아십니까. 이쪽 분은 나카무라 슈지 씨. 청색 발광 다이오드를 발명한 분으로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이쪽 분은 도날드 킨 씨입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의 교수로 계속 재직했던 일본문학과 일본연구의 전문가입니다.

이 네 명, 두 명의 한국인과 두 명의 일본인에 관해서인데 반 기문 씨는 한국인이지만, 김 용 씨는 미국 국적의 미국인, 즉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그리고 이 나카무라 슈지 씨는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성인이 된 후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국적은 미국인입니다. 한편 이 도날드 킨 씨는 그다지 일본인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동일본 대지진 후에 일본 국적을 취득하여 일본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두 명의 한국인과 두 명의 일본인을 열거했지만, 실은 진짜 한국인은 반 기문 씨, 진짜 일본인은 도날드 킨 씨 뿐입니다. 그러면 다른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아나 미 아렐스레브 씨로 덴마크 코펜하겐의 시장입니다. 코펜하겐에는 시장이 7 명 있다고 하는데, 그중 한 명입니다. 또 한 명이 플뢰르 펠트랭 씨. 이 사람은 한국계로서는 처음으로 프랑스 정부의 각료가 된 사람입니다. 이 두 명 모두 태어난 곳은 한국이지만 두 명 다 덴마크 혹은 프랑스인입니다. 한국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한 명은 이쪽 스즈키 무사시 씨입니다. 일본의 축구선수입니다. 며칠 전 인천에서 열린 아시아대회에도 출전했습니다. 어머니는 일본인이지만, 아버지는 자메이카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여러분도 아시는 아사쇼류입니다. 일본 스모의 요코즈나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본명은 돌고스렌

다브바돌지라고 한다고 합니다. 몽골 국적의 몽골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봐 보면 여기에 열거된 것은 덴마크인, 프랑스인, 일본인, 몽골인입니다. 우리들이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일본인과 한국인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을 여기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다음 미디어에 국적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미디어를 몇 가지 내 보았습니다. 요미우리신문, 마이니치신문, NHK,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는 이름에 「일본」이 들어 있는 것도, 또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NHK 는 일본어로는 일본방송협회라고 합니다. 또, 닛케이 는 일본경제신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경제신문이나 일본방송협회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에 거점이 있고 일본을 대상으로 보도하고 있으니까 일본미디어, 닛케이 미디어라고 불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국적의 미디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의 한국미디어도 같습니다. KBS 혹은 한국일보에는 「한국」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지만, 이것도 한국에 거점을 두고 한국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 뿐이지 특별히 한국 국적의 미디어는 아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국 미디어의 보도를 보고 있으면, 일본의 미디어는 섬의 이름을 독도가 아니라 타케시마라고 부르며 일본 고유의 영토로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미디어 쪽에서는 섬의 이름을 타케시마가 아니라 독도로, 독도는 물론 한국의 영토로 일본이 그것을 침략하려고 하고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왜 일본의 미디어는 그와 같이 주장하고, 한국 미디어는 그와 같은 기사를 써야 하는 것일까요. 그 부분을 오늘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유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럽은 아시는 바와 같이 EU 를 만들어 통합의 길을 걷고 있는데 여기에 나온 것은 일본어라서 죄송한데 1980 년에 유럽 의회에 제출되었던 빌헬름 한이라는 사람이 쓴 리포트로 「한 리포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한 구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사회에 있어서 정보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며 유럽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도구는 미디어이며, 그중에서도 시각과 청각 모두에 호소하는 통신수단인 TV 는 매우 중요하다」.

이 한 리포트라는 것이 유럽 방송의 장래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다했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리포트로 말미암아 1982 년에 유리콘(Eurikon)이라는 실험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참가한 것은 보시는 5 개 나라인데 이것은 1 주일씩, 각각 5 개의 나라가 이 주는 영국, 이 주는 이탈리아라는 식으로 돌아가면서 방송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실험방송이었는데 잘 성공했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을 통해 이번에는 유로파(Europa)라는 방송, 이것도 위성방송인데 1985 년부터 86 년에 걸쳐 1 년간 실행되었습니다. 이때 참가한 것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입니다. 실은 여기에 영국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은 꽤 중요한 요소로 영국이 여기에서 빠져 버린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적어도 이 4 개 나라에 의해 유로파라는 방송이 실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989 년에 유럽위원회에서 「국경 없는 TV 지령」이라는 선언과 같은 것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어느 나라에 있든지 유럽공동체(EC) 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어떤 가맹국의 방송도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것으로 그것에 대응하도록 각국에 지령이 내려졌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독일의 TV 방송국은 지금까지는 독일 국내에서만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EC 내에 거주하는 사람, 예를 들면 프랑스인도 독일에서 나오는 방송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나오는 방송도 볼 수가 있고,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탈리아에서 TV 방송을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TV 방송국은 이탈리아 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영국에 대해서도 방송할 수 있는 식으로 된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온 것이 이 「국경 없는 TV 지령」이라는 것으로 이것에 의해 유럽에서의 TV 의 국경초월이라는 것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3 년.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본방송인데 유로뉴스(Euro News)라는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본부는 프랑스의 리용에 있습니다. 10 개의 방송국이 돈을 내어서 13 개의 언어로 TV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그리스어, 러시아어, 폴란드어, 우크라이나어, 터키어, 아랍어, 페르시아어의 13 개 언어입니다.

왜 이런 것을 유럽이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바로 이 시기, 1980 년대의 마지막에 위성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까지의 TV 라는 것은 지상방송이라고 해서 마이크로웨이브라는 전파를 전선 같은 것으로 보내서 선으로 묶어서 방송을 내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 안의 지역에서만 방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성방송이라는 것은 위성에서 전파를 보내니까 국경에 관계없이 넓은 범위에 확 전파를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성방송의 기술적인 진보, 확대. 이것이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보셨던 한 리포트에 있는 것처럼 유럽의 통합이라는 정치적인 동기입니다. 이 유로뉴스가 생긴 1993 년이라는 것은 바로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발효한 해, EU 가 생긴 해입니다.

일본에서도 바로 이 무렵부터 위성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유럽의 사례를 들었느냐. 화면은 유럽의 시도를 한 장으로 정리한 것인데 이처럼 한 리포트가 나오고, 유리콘의 실험방송이 시작되고, 그것이 국경 없는 TV 지령으로 이어져서 유로뉴스가 시작되었다는 흐름을 알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유로뉴스라는 것이 유럽의 뉴스, 즉 독일의 TV 도 아니지만 프랑스의 TV 도 아닌, 유럽의 뉴스를 전달하자는 실천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걸프전 때에 CNN 이 미국의 뉴스니까 미국의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그것에 대항해서 알자지라라는 것이 생기고, 아랍어권의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의 뉴스도 필요할 것이라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 이 유로뉴스인 것입니다. 지금은 위성방송에서 나아가 스마트 TV 라고 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TV 방송이 더욱 보급되고 있습니다. 즉, 보다 기술적으로는 국경을 넘기 쉬워졌습니다. 방송은 더 국경을 넘기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유로뉴스도 Google 로 검색하면 바로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동영상도 나옵니다. 그리고, 유럽의 뉴스만이 아니라 미국의 뉴스, 아시아의 뉴스도 볼 수 있는데, 역시 독일의 방송도 프랑스 방송도 아닌 유럽의 뉴스라는 것이 그들의 세일즈포인트입니다.

동아시아에서는 과연 이러한 것을 할 수 없나라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라는 것은 아직 남북조선의 분단상태도 이어지고 있고 냉전구조가 남아 있어서 중국, 한국, 일본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EU 와 같은 통합이라는 것은 아직 멀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 간의 미디어, 신문이나 TV 를 예로 들자면 인재교류, 즉 서로 기자를 파견하거나 혹은 소재와 프로그램, 기사교환, 혹은 TV 로 하자면 공동제작 등등 그러한 시도는 실제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유로뉴스와 같은 것이 동아시아에서 가능하다면 유럽과 비교했을 때에 언어는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영어를 집어넣어도 4 개면 됩니다. 13 개나 필요 없습니다. 가장 친근한 커뮤니케이션을 서로 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것을 장래에 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나름의 나이를 먹어서 제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무리일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저널리스트가 되었을 때에는 실현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약간 선구적인 대응으로 소개하고 싶은데, 이것은 「TeSORO(테소로)」 라는 타블로이드지입니다. 작년 11월 정확히 1년 전에 도쿄에서 간행되었습니다. 서울신문이 일본어로 발행하고 있는 무료 타블로이드지인데, 이것이 가장 최신인 11 월호입니다. 조금 무서운 사진이 나와 있는데 한국의 인터넷 우익 「일베」 에 관해 상세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며칠 전 베이징에서 열린 APEC 의 중국외교에 관한 매우 강경한 기사입니다. 이것은 유 명환 전 외교부장관의 인터뷰로 일한관계에 관한 인터뷰입니다. 또, 이런 매우 딱딱한 뉴스만이 아니라 서울에는 이렇게 맛있는 소고기요리가 있다는 소개 등도 나와 있습니다. 또, 지면배치도 특징적인데 하나의 테마에 대해 예를 들면 지면의 이쪽에는 한국인 기사가 쓴 기사, 이쪽에는 일본인기사가 쓴 기사라는 식으로 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해 한국인기사가 쓴 기사는 여기에 싣고 일본인기사가 쓴 기사는 이쪽에 싣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면배치도 하고 있습니다. 이 TeSORO 라는 것은 서울신문이 만들고 있는 신문인데 한국미디어, 일본미디어라고 하기 보다는 꽤 국경을 뛰어넘은 미디어의 실천적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디어가 국경을 뛰어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금방은 실현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디어가 국경을 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읽는 사람들은 간단하게 국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독자, 시청자는 국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한국측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본에 있으면 한국미디어의 신문, 혹은 TV 의 보도를 간단하게 무료로 인터넷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상대측 나라의 보도를 보면, 반일이라든가 한국에 매섭다든가 읽고 있으면 화가 나서 더 감정이 나빠지는 마이너스의 측면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한 측면은 물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일본인이 한국미디어의 기사를 통해 위안부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다. 혹은 한국분이 일본의 미디어를 통해 타케시마/독도문제에 관한 기사를 읽는다. 그렇게 하면 자신은 그 기사에 찬성은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다른 사고방식도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서로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미디어는 지금은 국경을 넘을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독자, 시민은 미디어를 통해 국경을 간단하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상호이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루이스 파스퇴르라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프랑스 세균학자의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과학에 국경은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

자주 교과서 등에서 쓰이는 것은 「과학에 국경은 없다」라는 앞부분이지만, 저는 이 뒷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에 국경은 없다. 하지만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 그러므로,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특별히 자신의 나라를 배반하는 일도 아니며, 자신의 나라에 대해 아이덴티티를 버리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고,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지키고, 문화를 소중히 하고 그 위에서 국경을 넘는 것이 더 미디어의 세계에서나, 혹은 미디어를 사용하는 여러분 속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한 것에 따라 서로의 상호이해가 깊어진다는 것을 기대하며 저의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토론

한국측 사회자: 감사합니다. 이야기의 실마리는 달랐지만, 발표자 두 분의 결론은 같은 곳에 당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미디어를 통해 균형 잡힌 관점을 가질 수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또, 유로뉴스의 아시아판을 젊은 분들을 향한 꿈으로 쏘아 주셨는데, 저도 언젠가는 반드시 가능해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금 전의 발표에 대한 질문이나 코멘트를 받는 토론 파트로 하겠습니다. 물론 발표자 이외의 분에 대한 질문도 환영합니다. 발언희망자는 거수로 의사표시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쪽 분 부탁드립니다.

한국인 학생 1: 두 분의 발표를 듣고 굉장히 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한국측 선생님의 이야기는 제가 평상시에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즉, 어떻게 하면 자신의 주체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 실은 어제 일본의 유명한 작가 시바 료타로의 한국인식에 대한 양극화된 관점에 관해 리포트를 썼습니다. 시바 료타로에 대한 한국의 학자들의 평가가 극단적으로 나뉘져 있었고 그것들을 참조하면서 자신 나름의 의견을 담아 리포트를 써야 했기 때문에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발표에 있었던 팁을 즉시 활용해 보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신 것에 감사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일본측 선생님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있고 지금은 세계화(글로벌화)에 관한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글로벌화는 국경이 있는 가운데 국가 간의 교류의 증가였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글로벌화는 국경 자체가 없어지고 전 세계 시민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들이 활약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신문에 여러 나라의 기자가 참가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더욱 나아가 반 기문 사무총장처럼 자신의 국적보다는 세계시민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진 기자가 함께 하는 미디어가 생기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표하신 내용 안에서 거기까지 의도하시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시아뉴스의 탄생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시아뉴스가 생기면 동아시아의 관계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 나름으로 상상해 보고 싶은데 먼저 생각하시는 것을 들려 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측 발표자: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발표 중에서 EU 의 예를 들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EU 라는 것은 통합의 길을 계속 나아간 것이며, 그 과정이 역시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의 하나가 아시는 바와 같이 EU 의 통합이라는 것은 경제통합에서 정치통합으로 진행되어 갔는데, 그 통합의 프로세스 중에서 경제나 정치가 하나가 되어 가는 것만으로는 안된다는 의식, 즉 미디어나 혹은 유럽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도 공유해야 한다는 동기에서 이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아시아에서 이러한 것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는 FTA 와 같은 경제통합도 필요하겠고, 장래적으로는 안전보장을 포함한 정치통합도 해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아시아인으로서의 혹은 동아시아인으로서의 문화, 아이덴티티의 공유라는 것을 해 가지 않으면 통합도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의 동아시아 상황을 생각하면 현단계에서는 꿈의 또 꿈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본인과 한국인, 혹은 중국인, 혹은 범위를 더 넓혀서 아시아라는 것에서 이야기하자면, 우리들에게는 역시 공통의 역사와 문화, 아이덴티티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공유해 간 결과로서 아시아뉴스라는 것이 탄생하면 그것은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경이 없어진 세계시민이라는 방향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면 지금 유럽에서는 스코틀랜드나 카탈루냐처럼 거꾸로 자꾸 독립해 가는 방향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통합과 이산이 양쪽이 되풀이되고 있고 EU 의 통합이 반드시 성공사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고 그것은 동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통합한다고 해서 각각의 아이덴티티라든가 국민으로서의 긍지를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동아시아인」이 되는 것은 한국인이라는 것을 버린다는 것과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으로서의 긍지, 문화, 역사를 소중히 한 위에 동아시아인로서, 혹은 세계시민으로서 살아 가는 양쪽을 실현할 수는 없을까라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일본측 사회자: 그러면 다른 질문, 코멘트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인 학생 2: 감사합니다. 저는 일본측의 발표를 듣고 미디어가 국익을 반드시 반영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의견에 찬동하는 한편, 그러면 도대체 미디어는 무엇을 담으면 좋을 것인가라는 의문도 느낍니다. 한국측의 발표에 있었던이 기사거리가 없으면 북한이나 일본을 비난하면 된다는 경향, 그것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신문이나 뉴스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일방적인 미디어보다는 한일 양국에서 SNS 를 통해 주고받아가는 일반대중이 가지고 있는 의견도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터넷도 만능은 아니고, 일본의 인터넷 우익처럼 극단적인 의견이 있어서 한일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즉, 국익이 아닌 대중의 의견이라고 해도 입장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는, 변화시킨다고는 하지 않겠지만, 특히 한일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실천이 필요한지 여쭙 보고 싶습니다.

일본측 발표자: 지금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을 통해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를 발신하는 것은 미디어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정보를 발신해 가고, 그 정보를 공유합니다. 여러 정보를 토대로 자신의 생각을 결정해 가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지금 인터넷 우익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인터넷에 넘쳐나고 있는 정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옳은 정보만은 아닙니다. 악의가 있는 정보나 사실이 아닌 정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정보는 거짓이라든가, 이 정보는 신용할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자주 인터넷 우익처럼 매우 왜곡된 정보를 온전히 믿고 잘못된 판단을 해 버리는 위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정보를 어떻게 선별하고, 어떻게 흡수해 갈 것인가, 혹은 그 정보를 판단해 갈 것인가라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미디어, TV 나 신문, 큰 TV 방송국이나 큰 신문사의 정보가 모두 맞다고도 할 수 없으며, 인터넷 정보가 모든 나쁘다고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 정보도 역시 여러분이 판단해서, 이 신문의 이 기사는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혹은 이 신문의 이 기사는 거짓이 아닐까라는 판단도 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작업이지만 개개인이 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양국관계를 악화시키는 것 같은 극단적인 의견을 극복해 가는 것이 일한관계를 밑에서 받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측 사회자: 지금까지 미디어에 관한 질문이 집중되고 있는데, 한일관계 전반에 관한 질문도 상관없습니다. 한일관계의 현재 상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것을 좋게 하기 위해 학생분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지 아마 일본에서 오신 저널리스트 분들도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디어에 대해서도 좋지만, 한일관계 전반에 대해 자신의 생각도 담아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분 부탁드립니다.

한국인 학생 3: 감사합니다. 먼저 저는 한일관계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적한 ‘아시아 파라독스(Asian Paradox)’의 패턴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양국의 상호의존도가 날로 깊어가는 한편으로 군사, 외교상의 갈등은 첨예화하는 그러한 역설적인 상황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한편으로 소프트파워나 네트워크 거버넌스라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 및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 점은 저도 다행이라고 느낍니다.

그 위에서 한국과 일본의 갈등에 대해 양국의 현재와 같은 담보상태를 어떻게 탈피해야 할

것인가 자신 나름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자주 언급되는 것이 경제적인 협력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단기간에 집중해서 발생하겠지만 장기적으로 확보 가능한 편익은 보다 크다고 생각하므로, 저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법학을 전공하는데 전공에 끌어 붙여서 생각하는 버릇이 생겨서 그런데, 역시 한국과 일본 양국의 법제는 매우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 제도적인 통합을 먼저 한다면 정치적 통합도 일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동의 재해 및 위기관리능력이나 상호경제개발, 투자 등이 복합적이고 다층적으로 이루어져서 확산되면 얻어지는 이익도 상승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장점에 눈길이 가는 반면, 한국과 일본이 서로 역사와 영토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 저는 큰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변국가와의 민족주의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이 부분이 큰 갈등요인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청년, 시민사회언론자, 미디어가 어떠한 실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일본에서 오신 선생님분에게 생각을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일본측 참가자: 감사합니다. 지금 발언자의 분석 자체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 표현도 포함해서입니다. 실로 그 아시아의 괴뢰독스에 빠져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양국의 국민, 혹은 정치가에 보다 깊게 이해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쌍방의 공통이해의 첫걸음이 될 것이니까 그 「돌파구」로서 이야기에 나온 재해의 공동관리 등 실질적인 혹은 상징적인 것이라고 해도 좋겠지만, 그러한 분야를 겨냥하는 것은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측 참가자: 발언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사문제에 대해 양국이 빠져 있는 어떤 의미의 텃에 대해 제가 매우 존경하는 한국의 국제정치·안전보장 전문가인 윤 덕민·국립외교원장님이 매우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일본인은 역사를 잊어서는 안된다, 또 한국인은 현대의 일본을 더 이해해야 한다라는 말이었는데, 즉 한국은 역사에 얽매어서 지금의 일본은 이제 평화국가라는 것을 잊고 있고, 또 일본은 전후에 변한 일본이라는 의식에 지나치게 얽매어 있어서 과거를 너무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인은 일본의 과거의 역사라는 것에 직면해야 하며, 한국 사람들은 현대의 일본을 더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저는 훌륭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즉, 지도자이거나 시민사회이거나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 밖에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일본인측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역사로부터 눈을 돌려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내년은 국교정상화 50년이고, 또 내년은 제2차세계대전 종료로부터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50년, 70년에 얼마 만큼의 의미가 있는가는 별도로 하고, 역시 일본인으로서 이야기하자면 역사로 기억에서 지워서는 안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다시 한 번 더 전후 일본이 걸어온 길이라는 것을 조금 더 세계 속에 알려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국가로서의 일본이라는 이미지를 말합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국측의 발표에 있었던 감정을 앞세운 말, 예를 들면 「군사대국화」 등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소개를 듣고 이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인의 눈으로 보면 일본이 군사대국화한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외국을 둘러보면 일본에 대해 그러한 식으로 말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한국분이 보면 일본의 젊은이들은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도 역사를 모른다. 그러한 상황의 책임은 물론 정부에게도 있고, 미디어에게도 있고, 그리고 연구교육기관에도 있지만, 역시 젊은 세대의 사람들이 그러한 의식을 가지는 것, 요컨대 과거의 역사와 현대의 일본을 더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활동에 관한 아이디어와 같은 이야기가 되지 못해서 미안한데,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아직도 지금 이야기한 것과 같은 매우 큰 엇갈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젊은 분들에게도 이것을 여러 곳에서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것은 약간 변명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일본의 역사, 한국의 역사는 같은 시간축 안에서 겹쳐지면서 존재하고 있지만, 동시에 각기 다른 역사인 것입니다. 즉, 각각의 역사에서 각각의 국민은 살아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다, 나쁘다와는 또 다른 차원으로, 완전히 같은 역사감각을 가지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바른 역사관이라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저렇게 통합되어 있는 유럽에서조차 역시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직 차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무리하게 같이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서로 한발 물러나서 바라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른 하나의 역사관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꽤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일본인으로서 보자면 일본에 대해 반성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 또, 한국분이 보더라도 한국의 역사에 대해 반성해야 할 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작업에 있어서 젊은 분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라는 것은 한국측의 발표자가 말씀하신 대로이며, 나이를 먹으면 사물이 유연하게 보이지 않으므로 가급적 지금 유연하게 사물을 생각해 주셨으면하고 생각합니다.

일본측 발표자:발언자가 말씀하셨던 것에는 저도 찬성합니다. 우리들은 이틀간 계속 논의해 왔고 그 속에서 미디어는 양국관계의 개선을 위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보다 격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가차없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그 비판을 받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라는 것을 더 열심히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측 사회자:감사합니다. 아직 시간이 20 분 정도 있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한국인 학생 4:질문이 아니라 코멘트인데 일본측 발표의 마지막 쪽에 시민은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 즉 미디어가 국경을 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시민은 자유롭게 국경을 넘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또, 일본에 사는 사람, 또는 한국에 사는 사람이 상대국의 보도를 접하고 그것을 상호이해에 유용하게 쓰면 통합을 위한 발전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에 공감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측의 발표에도 있었지만—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신문을 그다지 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학생이 한국의 신문도 잘 읽지 않는데 일본의 신문을 읽는다는 것은 좀처럼 용이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아이디어인데 NAVER 라는 포털 사이트에는 뉴스스탠드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국의 신문이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직접 기사를 신거나 혹은 링크를 시켜서 일본의 신문도 읽게 하면 어떨까요. 또, 일본에도 혹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비슷한 포털 사이트가 있다면 한국의 신문을 거기에 신도록 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측 사회자:지금의 제안 속에 나온 NAVER 의 뉴스스탠드에는 일본의 지지통신이 거기에 기사를 신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본어로 실려 있기 때문에 그 점은 향후에 기대해야 되는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분 부탁드립니다.

한국인 학생 5:두 분의 발표, 흥미 깊게 들었습니다. 저는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볼 때 반드시 긍정적으로 보는 것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특히 시사하는 바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독도영유권 문제, 역사문제, 또 동해·일본해의 표기문제나 국기문제 등 현안사항에 대해 여러 뉴스는 보고 있었지만 지적하신 대로 종이매체의 신문보다는 온라인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아버지가 종이신문을 구독하고 있지만 저 자신은 종이신문을 읽지 않은지 오래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표를 듣고 깨달았는데 역시 온라인신문이라는 것은 자극적인 소재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산이 멀지 않은 큰 배를 하고 쓰러져 있는 옛 위안부들의 모습이라든가, 수요집회의 현장에 서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사진, 그런 것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일도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만 일본에 대해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8 월에 어떤 대학에서 NGO 가 주최한 교류행사에 참가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일본의 학생들과 2 박 3 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다음 9월에는 3박 4일의 스케줄로 같은 NGO의 이벤트로 후쿠오카에 가서 일본의 친구와 함께 숙소에서 머무른 교류를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만난 일본의 학생들은 제가 상상하고 있었던 조금 치우치게 생각하고 있었던 일본인의 모습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우 사이가 좋아져서 카카오톡이라든가, Facebook 이나 SNS 로 교류를 계속하고 있는데 일본의 친구들과 친해지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문화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류나 연예인의 이야기로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일본의 애니메이션 이야기로도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의 생각은 편중되어 있었구나라는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한국측 발표자 선생님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온라인매체라는 것은 클릭수, 즉 구독율을 올리기 위해 자주 자극적인 타이틀이

붙여지고 있습니다. 또, 사진이나 동영상도 마찬가지이며 내용도 눈이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극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자정 노력이 어딘가 미디어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한국측 발표자:답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온라인에서 클릭수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부정적인 방법이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회사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지만, 최근 어떤 신문의 온라인부서에서는 대학생인턴과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하루 종일 컴퓨터에 달라붙어서 NAVER 라는 포털사이트의 검색어 순위가 나오면 그 1 위부터 10 위까지의 단어가 들어 가는 뉴스를 그자리에서 만들게 했다고 합니다. 그 작업만 하다가 자살한 사람도 있는데, 기자가 되려고 입사했는데 취재도 시켜 주지 않고 온라인 검색순위에 오르고 있는 단어를 넣은 기사를 쓰라는 명령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기사의 클릭수도 오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뉴스와 관련해서 나오는 검색순위는 신뢰하지 않는 것이 득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신문 중에 항상 순위가 탑에 있는 신문은 그러한 작업만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NAVER 에서도 그것을 규제하려고 하고 있지만, 교묘하게 그 규제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 번 그렇게 되면 그 노하우가 전해져서 다른 매체에서도 같은 것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최근 온라인뉴스 페이지의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선성적인, 낚시성 타이틀의 기사는 일절 내지 않도록 방침이 개정되었는데, 다른 대형 신문사도 비슷한 대처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이라면 자주적인 규제만이 아니라 법적이 제재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한국측 참가자:조금 각도를 바꾸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끔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에 와서 토론에 참가한 학생들에게는 꼭 앞으로 종이신문을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신문은 분명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신문은 만들 때에는 수백 명의 기자가 하루를 투입해서 만들어 낸 모든 것이 집약된 지식이 거기에 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문이 어떤 뉴스를 픽업해서, 또 어떻게 다루었느냐라는 것은 인터넷신문에서는 절대로 흉내 낼 수 없는, 살 수 없는 지식입니다. 즉, 인터넷신문에는 값싼 기사나 낚시성 기사가 많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 불평을 하거나 매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정품」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정품」을 쓰고 무엇이 싸구려, 모조품이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스스로 판별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를 가진 「정품」의 가치를 읽는 독자가 자라지 않으면 언젠가는 「정품」도 싸구려, 또 모조품에 내쫓기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도 여러분은 꼭 자신의 신문의 구독형태를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온라인에서 읽는 것은 인터넷 서핑이지 구입한 기사가 아닙니다. 사서 읽어 주십시오.

한국측 사회자:감사합니다. 방금 하신 지적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정보의 홍수라는 것은 실은 정보가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조금 전에 「정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매체마다의 근본적인 성격의 차, 지면구성이나 기사내용 이전의 제도권 안에서의 미디어와 그 이외라는 분류에 대해서도 젊은이 여러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일본측 학생분 말씀해 주십시오.

일본인 학생 1:두 분 선생님, 귀중한 발표 감사합니다. 한국측의 발표 중에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나빠지면 처음에는 민간 사이의 관계는 나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나쁜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민간의 사이에도 영향이 미친다는 그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한국에 유학 와서 그 생각이 바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학 중에 1 개월 정도 인턴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었느냐 하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이나 유학생에게 한국인 선생님이 자원봉사로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활동이 있었고, 그것을 도와 드린다고나 할까 한국인 선생님과 일본인 사이에서 세팅 역할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수업을 받고 싶다는 일본인보다도 한국어를 가르쳐 주고 싶다는 한국인의 응모가 굉장히 많아서 놀랐습니다. 100 명 이상 응모, 그것도 선생님의 응모가 많이 왔습니다. 일본어를 할 수 있는 분이 정말로 많은 것에도 놀랐지만, 일본인과 그러한 활동을 통해 교류하고 싶어하는 한국인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역시 아직 민간끼리의 사이는 나쁘지 않고 좋은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저도 혹시 일본에서 그러한 활동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일한 양국의 사이가 좋아지도록 공헌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한편으로 그러한 시민 간의 활동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라와 나라 관계의 영향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렇게 해서 열심히 사이를 좋게 하고자 하는 그것을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의견을 들려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측 사회자:감사합니다. 사회의 실수로 시간이 이제 5 분 밖에 남지 않았는데, 가급적 학생이 발언해 주었으면 하므로 마지막으로 한 명 더 마이크를 건네 드리겠습니다.

한국인 학생 6:두 분 발표자의 발표를 매우 흥미 깊게 들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때부터 한일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고등학교 3 년간 양국 고등학생의 교류캠프나 학교에서 운영하는 홈스테이 활동이나 일본에서 보내는 단기체제 프로그램 등에 참가했고, 그러한 과정 중에 일본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워 왔습니다. 그런 경험도 다시 떠올리면서 두 분의 발표를 들었는데 발표에 있었던 젊은이들이 미디어를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일관계 개선의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이야기하자면 상호이해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교류활동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체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언론상에서 보도되고 있는 민간교류라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고, 혹은 학생들 간의 활동도 그다지 보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활동의 많은 경우가 단기적이고 계속적이지 않은 것도 다루어지지 않는 이유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하는데, 거꾸로 그러한 활동이 지속적·장기적으로 실행되기 위해 언론이 밀어주는 힘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교류활동과 언론의 상호관계, 쌍방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이기에 대해 한국측 발표자에게 여쭙 보고 싶습니다.

한국측 발표자:두 가지 질문에 동시에 답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은 정부 간의 관계악화가 민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 민간 관계는 의외로 좋았다, 또 시민 차원의 활동이 정부 간의 관계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민간의 교류는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꺼워지면, 튼튼해지면, 정부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 악화되어도 그것을 원래 위치로 되돌릴 수 있는 복원력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가령 확실한 형태가 아니더라도 이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국의 분위기가 나쁘면, 두 번째 분이 경험하셨듯이 한국에 와서 한국어연수를 하거나, 일본에 가서 일본학생과 교류하거나 하는 그러한 움직임자체가 적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미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하면서 떠올렸던 것도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분인데, 왜 고등학생의 교류캠프도 활발한데 이런 보도가 되지 않느냐, 또 장기적·지속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입장에서는 후반 부분에 대해 관여하는 것은 힘들다는 것이 솔직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전반부분, 즉 보도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한 교류는 한일 간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은 지면, 방송은 시간이라는 식으로 제약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시면서 느낀 의의,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 하나하나를 다 담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보다 중대한 의미가 있는 다른 사안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 프로세스 중의 하나의 결과로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측 사회자:감사합니다. 약간 보충 비슷한 이야기를 하자면, 최근 인터넷에서 일본의 대학교에 유학한 대학생들의 블로그를 발견해 읽은 적이 있는데, 그와 같은 블로그도 한국과 일본의 사이에서 하나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또, 보다 큰 눈으로 보면 이것은 과거의 정부 간 합의의 성과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98 년의 김 대중—오부치의 일한파트너십 공동선언의 행동계획에는 한일 간의 청소년 교류, 혹은 일본의 이공계 대학에서 한국인 학생을 받아들이는 것 등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직접적으로 명문화된 것 이외에도 청소년 교류, 혹은 도시 간의 교류와 같은 활발한 교류프로그램이 이것을 계기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활동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비로소 지금의 한일관계가 정부 간의 관계가 양호하다고 할 수 없는 가운데에도 그 영향이 전체에 미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방과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설령 하나하나가 신문에서 다룰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의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특별세션이 그 작은 계기로 기능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져 버렸는데 끝으로 일본측 사회자로부터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본측 사회자: 감사합니다. 12 명의 학생 여러분이 참가해 주셨고, 7 명의 학생 여러분으로부터 코멘트, 질문, 제언을 받았습니다. 5 명의 학생 여러분은 시간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작년에 일본에서 열린 회의에서도 시간이 부족하여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도 역시 여러 가지 질문, 코멘트를 받아서 매우 저희로서도 참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하신 것은—채텀하우스 룰이므로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이러한 제언을 학생분으로부터도 받았다는 기록으로서 남겨 가겠습니다. 그러한 학생 여러분의 문제의식도 토대로 우리들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기회를 조직화해 갈 것이며, 또 이곳에 있는 전원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고, 각각의 입장에서 업무에 임한다, 이것을 학생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도 오늘 두 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자기자신의 진로를 생각해 가는 일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관계자): 이것으로 제 4 차 「한-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의 특별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주최의 환송만찬회를 열고자 하오니 한일 양국 참가자 여러분, 그리고 학생분들은 만찬장소로 이동해 주십시오.